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349-10

2018. 12.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총 목 차

◇ 제1부. 전국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 항목)

□ 총괄	1
------------	---

◇ 제2부. 각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 강원도	73
□ 충청북도	117
□ 충청남도	155
□ 전라북도	201
□ 전라남도	241
□ 경상북도	315
□ 경상남도	377
□ 제주도	411

- 제1부 -

전국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 항목)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 용 욱 부 연구 위원
민 경 찬 연 구 원
박 지 숙 연 구 원

차 례

제1장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및 현황

-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1
- 2.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현황 3

제2장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 1. 핵심 항목 주요 내용 7
- 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통계자료 10
- 3.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결과 15

제3장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평가

- 1. 항목별 이행실태 평가 38
- 2. 지역별 이행실태 평가 42
- 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개선 방향 50

부록 1 2018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 54

부록 2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계부처 협조자료 목록 57

부록 3 2018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59

참고문헌 69

표 차례

제1장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현황	6
---	---

제2장

<표 2-1> 핵심 항목 및 목표치	8
<표 2-2>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10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12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12
<표 2-5> 중요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16
<표 2-6> 중요과목별 이행실태	17
<표 2-7>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18
<표 2-8> 응급서비스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18
<표 2-9>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이행실태	20
<표 2-10>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20
<표 2-11>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이행실태	21
<표 2-12>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21
<표 2-13>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이행실태	22
<표 2-14>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23
<표 2-15> 농어촌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	23
<표 2-16> 평생교육시설 이행실태	24
<표 2-17> 평생교육시설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25
<표 2-18>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26

<표 2-19> 상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27
<표 2-20>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27
<표 2-21> 도시가스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28
<표 2-22> 광대역통합망 이행실태	30
<표 2-23> 광대역통합망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31
<표 2-24>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이행실태	32
<표 2-25>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공연 프로그램 개최 이행실태	33
<표 2-26>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34
<표 2-27> 하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35
<표 2-28> 방범용 CCTV 설치 이행실태	36
<표 2-29> 방범용 CCTV 설치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36
<표 2-30> 소방 출동 이행실태	37

제3장

<표 3-1> 핵심 항목 이행실태의 변화	40
<표 3-2> 핵심 항목 목표달성 시·군 현황	42
<표 3-3>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45
<표 3-4> 2017-2018년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비교	48

제 1 장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및 현황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공표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함.
 -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 5년(2005-09) 간 139개 과제를 대상으로 22.3조 원의 투융자 지원을 시행함.

-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공공서비스는 낙후성을 면치 못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무름.
 - 기존 삶의 질 정책은 농어촌의 특수성, 농어촌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급자·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투입이 이루어져 효율성 및 효과성 저하를 초래하였음(김광선·민경찬, 2016).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삶의 질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함.
 -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송미령·박시현·성주인·김광선·권인혜, 2009),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김광선·송미령·김용렬·권인혜·윤병석, 2010) 등의 연구 수행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기틀을 마련함.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독일의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 조건 확립’ 등 농촌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외국 사례를 조사를 진행함.

참고: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¹

- 1985년 발생한 광우병이 영국을 휩쓸면서 영국의 농촌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쇠퇴라는 문제 심화
- 이후 영국은 정부는 광우병 이외에도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 문제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
- 농촌의 양극화, 사회적 배제, 지역서비스 공급 부족, 일자리 부족, 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모든 부처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
- 그 결과 영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구축하려는 정책 일환으로 2000년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를 발간하고 농촌 발전의 비전 제시
- 특히 「농촌백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농촌발전의 비전과 관련하여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Rural Services Standard)을 공표함.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을 의미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간소화됨. 즉 2000년 처음 발표된 것은 14개 부문 35개 기준이었지만, 2004년에는 11개 부문 35개 기준, 그리고 2006년에는 8개 부문 13개 항목으로 간소화됨 - ① 교육 및 아동 서비스, ② 광대역 통신망(학교), ③ 사회적 돌봄, ④ 우체국 서비스, ⑤ 보건, ⑥ 인터넷 접속, ⑦ 긴급서비스(구급·소방·경찰), ⑧ 교통.
- 영국은 2007년부터는 중앙정부차원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중단하고, 기준 설정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 그 이유는 첫째, 국가 최소 수준 측면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임. 둘째, 농어촌 지역의 다양성 및 지역 간 상이한 여건과 차별성으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공통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더 이상 운용하는데 한계가 따랐기 때문임.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삶의 질 정책 실효성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농어촌영향관리가이드라인 운용) 중 하나로 포함됨.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를 의미하며, 초안은 8개 부문의 30개 서비스기준 항목으로 구성됨.
 - 농어촌서비스기준(안)은 전문가 검토, 지역별 공청회, 국회 토론회, 관련 부처 실무자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2009년 말 8개 부문 31개 항목의 최종(안)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됨.

2.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현황

-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과정에서 농어

¹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참조.

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도 계획, 시·군·구 계획에서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참고: 현행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주요 내용

- 제3조 제6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의
 -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
- 제5조 제1항 제10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범위)
 - 5년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
- 제8조 제1·2항: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조사해야 하며,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제44조 제1항~제5항: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음.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함.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음.
 -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한차례 항목 보완과 한차례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짐.

- 2011년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시작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3년 '안전' 부문과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확대 변경됨.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 부터는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7개 부문 17개 항목의 ‘핵심 항목’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개편하여 운영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현황
 -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영한 2015년부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핵심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선택 항목’은 9개 시·도연구원이 해당 지역의 선택 항목에 이행실태를 점검·평가를 수행함(2016년, 2017년 7개 시·도연구원 참여, 2018년 8개 시·도연구원 참여).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개선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 협의와 연구를 추진함.
 - 2017년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농어촌 주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개최하여 통계자료 구득이 어려운 주택, 경찰순찰 항목의 개편 방안을 논의함.
 - 2018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에서 주택 항목의 개편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음.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현황

개편 이전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2011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② 핵심 이행지수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① 기본계획 분석 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 ③ 시도계획(충남), 시·군계획(화천군·장흥군) 심층분석 (4) 사례지역 심층조사 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 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 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
개편 이전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2012		(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 (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가능성 조사 ② 농어촌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 (5)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총괄팀'의 별도 자료집 발간
2013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문화 부문 심층연구 (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문가 평가 조사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조사 (5)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방향 제시
2014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3)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① 개편안의 핵심 항목 및 선택 항목 구성 (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 방안
개편 이후	국가 관리 '핵심 항목'	지자체 자율 '선택 항목'
2015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9개 시·도 연구원 (2) 주요 업무: 선택 항목 제정 및 이행실태 점검분석
2016 ~ 2018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7개 시·도 연구원('16~'17) 8개 시·도 연구원('18) (2) 주요 업무: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분석

제 2 장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1. 핵심 항목 주요 내용

- 핵심 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이며 동시에 농어촌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으로서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함.
- 핵심 항목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핵심 항목 세부항목별 국가 최소 기준으로서의 서비스기준을 명시하여 현재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함. 또한 개별 시·군의 달성 정도도 함께 점검함.
- 중기 목표치는 제3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2015-19) 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나타냄. 아래 <표 2-1>은 핵심 항목의 2014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수치와 중기 목표치를 나타냄.

- 2014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향후 5년 동안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기준치 (baseline)로 삼음.
-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에 따라 개별 항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됨. 예를 들면,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의 항목의 경우, 2014년 수치는 중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했음. 또한 정주생활기반의 난방 부문의 경우 기존에 세부기준으로 삼았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을 2015년도부터는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로 변경함.

〈표 2-1〉 핵심 항목 및 목표치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14년(%)	'19년 목표(%)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한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76.8	80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97% 이상으로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71.8	97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74.1	8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71.0	80
2. 교육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98.1	100
	6)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	21.1	40
3. 정주 생활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한다.	88.3	95
	8)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2% 이상으로 한다.	62.9	82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14년(%)	'19년 목표(%)
3. 정주 생활기반	9)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5%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50.8	65
	10)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90.4	100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90% 이상으로 한다.	77.3	90
4. 경제활동 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00
5.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 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92.0	100
6. 환경· 경관	14) 하수도	하수도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79.4	85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32.7	60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0	100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45.4	55

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통계자료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의 7대 부문 17개 핵심 항목은 내용 상 2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 가능함.
- 핵심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기준별 점검 방법 및 수단이 필요함. 점검 방법은 아래 <표 2-2>와 같이 설정하며, 각 세부기준 점검에 해당하는 통계는 공식통계와 지자체 행정조사 및 중앙행정기관 협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구득함.

<표 2-2>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보건 복지	1) 진료 서비스	(일반 병의원, 한방병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공식통계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실	행정조사
	2) 응급 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협조자료
	3)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공식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공식통계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행정조사
	4)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i)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	공식통계
			ii)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식통계
2. 교육	5)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협조자료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협조자료
	6)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지자체 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협조자료 행정조사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통계청 협조자료	협조자료
	8)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공식통계
	9)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자료
	1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공식통계
		도시지역 여객선 운항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실적	협조자료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행정조사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협조자료	
4. 경제 활동 일자리	12)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사군별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i) 창업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iii)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행정조사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사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공식통계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 / 12 * 10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조자료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0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협조자료
6. 환경·경관	14) 하수도	(사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사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통계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지자체조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행정조사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 마을 별 1일 1회 이상 순찰 여부	경찰청: 범죄취약지역, 마을별 순찰 횟수	협조자료
	17) 소방 출동	(사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사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협조자료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28개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며 공식통계로 구득 가능한 통계는 9개, 중앙행정기관 협조자료는 13개, 지자체 행정조사가 필요한 통계는 총 6개 항목임<표 2-3>.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단위: 개

7개 부문	서비스 기준	세부 기준	통계 확충 범위	구득 가능 통계	통계 보완		기타
					중앙행정기관 협조	지자체 행정조사	
보건·복지	4	4	8	5	1	2	-
교육	2	3	4	0	3	1	-
정주생활기반	5	7	8	2	5	1	-
경제활동·일자리	1	1	1	0	0	1	-
문화·여가	1	3	3	1	2	0	-
환경·경관	1	1	1	1	0	0	-
안전	3	3	3	0	2	1	-
계	17	22	28	9	13	6	-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의 기준연도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인 2017년으로 설정하지만 경우에 따라 아직 공표되지 못한 통계는 2016년도 통계를,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2018년도 통계를 사용함. 덧붙여 5년 단위 공표 통계의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의 통계는 2015년이므로 이를 사용하도록 함. 이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음.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여부
보건 복지	진료서비스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1차 진료 현황	2018	○ (공식통계)
		시·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현황	2018	○ (지자체조사)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여부
보건 복지	응급서비스	각 응급출동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혹은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2018	○ (소방청협조)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현황, 급여자 현황)	2017	○ (공식통계)
		노인복지시설현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2017	○ (공식통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수혜자 현황	2018	○ (지자체조사)
	영유아	주민등록인구: 만 5세 이하 영유아 현황	2017	○ (공식통계)
		읍·면·동별 보육시설현황(보육통계)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현황	2017	○ (공식통계)
교육	초·중학교	시·군별 초·중학교 현황	2018	○ (교육부협조)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2018	○ (교육부협조)
	평생교육	각 시·군, 읍·면별 평생교육기관 현황(비형식기관)	2017	○ (교육부협조)
		비형식 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 수	2018	○ (지자체조사)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시·군·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	X (통계청협조)
	상수도	환경부 상수도통계: 상수도현황	2016	○ (공식통계)
	난방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2017	○ (산업통상자원부협조)
		시·군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현황	2018	○ (산업통상자원부협조)
	대중교통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대중교통은행 횡수별 마을 수	2015	△ (공식통계)
		도서지역(시·군)별 본도(읍·면) 현황 및 여객선 운항 현황	2017	○ (해양수산부협조)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2018	○ (지자체조사)
광대역 통합망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관련 사업이 종료되어 2018년 자료는 구득 불가)	-	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	
경제 활동· 일자리	창업 및 취업컨설팅·교육	i)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 센터 등 취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센터 유무 iii)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 전문인력 고용 여부 iv)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횟수(연간)	2018	○ (지자체조사)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여부
문화·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2017	○ (공식통계)
		시·군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관람 가능한 문화행사프로그램 수	2017	○ (문화체육관광부협조)
		시·군별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수	2017	○ (문화체육관광부협조)
환경·경관	하수도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현황	2016	○ (공식통계)
안전	방법설비	행정리별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2018	○ (지자체조사)
	경찰 순찰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	-	X (경찰청협조)
		행정리별 일일 순찰계획 또는 실적 현황	-	X (경찰청협조)
	소방 출동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 (혹은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2018	○ (소방청협조)

3.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결과

3.1. 보건복지 부문

3.1.1.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 가능한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진료 서비스 항목은 각 시·군 내에서 주요 과목의 1차 진료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실태를 파악함.
 - 시·군별 내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을 조사하였으며, 5개 과목에 대한 1차 진료가 모두 가능해야 해당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 본 항목의 점검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공개된 과목별 병의원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전국의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중요과목의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98개 시·군으로 이행실태는 71.0%로 조사됨.
 - 군 지역 중에는 43곳(52.4%), 도농복합시 중에는 55곳(98.2%)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모든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함.
 - 작년보다 1개 군(옹진군)의 이행실태가 개선되었지만 2개 군(횡성군, 하동군)에서 산부인과 진료가 불가능해짐.

〈표 2-5〉 중요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조건 충족 지역		비고
	조건 충족 시·군 수	조건 충족 시·군 비율	
군	43 / 82	52.4	-
도농복합시	55 / 56	98.2	-
전체 농어촌 시·군	98 / 138	71.0	-

-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은 대부분 지역에 1개소 이상 입지하고 있음.
 - 내과병의원은 2개 군 지역(울릉군, 산청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개소 이상 입지해 있고, 한방병의원과 치과병의원은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 입지해 있음.
 - 정형외과는 9개 군 지역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정형외과가 없는 군에도 물리치료실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

- 작년에 비해 산부인과가 있는 시·군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운영하는 시·군 둘 다 줄어들어 농어촌 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작년 보다 두 곳이 증가한 39개의 시·군(28.2%)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은 66개 시·군(47.8%)에 달함.
 - 보완책으로 31개의 시·군(22.5%)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시·군 내 산부인과가 없으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이 19곳이 있지만,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으며 관련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이 44개임.

〈표 2-6〉 중요과목별 이행실태

단위: 개, %

구분	내과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형외과	산부인과	분만 가능
진료 가능 시·군 수	136 / 138	138 / 138	138 / 138	129 / 138	99 / 138	72 / 138
달성률	98.6	100.0	100.0	93.5	71.7	52.2

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무는 공식통계가 없어 행정조사를 통해 조사함.

3.1.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97% 이상으로 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응급서비스 항목은 시·군 단위별로 (도착소요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응급출동 건 수) × 100 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소방청에서 협조받은 ‘소방서별 119구급대 소요시간’ 데이터를 통해 전체 138개 시·군 중 소방서가 위치한 117개 시·군(작년과 동일)에 대한 응급서비스 점검·평가가 가능하였음.
- 농어촌 117개 시·군의 2018년 총 응급서비스 출동 건수는 약 58.5만 건으로 그 중 58.1만 건에 해당하는 99.4%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군 지역 98.9%, 도농복합시 99.5%로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가 조금 높게 나타남.

〈표 2-7〉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99.9	96.4	98.9	-
도농복합시	99.9	98.2	99.5	-
전체 농어촌 시·군	99.9	96.4	99.4	-

- 중기 목표치에 해당하는 97%를 달성한 시·군은 117개 시·군 중 114개 (97.4%) 시·군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은 61개 중 58개(95.1%)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도농복합시는 56개 전체 지역이 중기 목표치를 달성함.

〈표 2-8〉 응급서비스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58 / 61	95.1	-
도농복합시	56 / 56	100.0	-
전체 농어촌 시·군	114 / 117	97.4	-

3.1.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노인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²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²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는 해당 연도 상반기 통계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를 사용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총 인원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위 식을 산출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정의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정의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이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를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간주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시설)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이 있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 138개 시·군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작년보다 약 4만 명 증가한 약 46.3만 명이며 이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3.7만 명 증가한 약 33.9만 명으로 나타나 이행실태는 73.3%로 소폭 상승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는 2016년 23.9만 명에서 27.1만 명으로, 재가노인종합서비스 이용자는 3.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는 2.4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증가함.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은 74.5%, 도농복합시 72.5%로 군 지역에 다소 높음.

〈표 2-9〉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33.8	55.0	74.5	-
도농복합시	93.9	61.4	72.5	-
전체 농어촌 시·군	133.8	55.0	73.3	-

- 중기 목표치에 해당하는 80%를 넘은 시·군은 28개로 작년 19개 대비 소폭 증가함.

〈표 2-10〉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20 / 82	24.4	-
도농복합시	8 / 56	14.3	-
전체 농어촌 시·군	28 / 138	20.3	-

3.1.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영유아 항목은 읍·면 단위별로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3명 이상인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함.
- 2017년 기준 1,403개 읍·면 가운데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3명 이상 거주하

는 읍·면의 수는 총 1,395개로 이 중 읍·면 내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962개가 해당함.

- 본 기준의 이행실태는 약 69.0%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이행실태는 61.9%,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는 79.1%로 도농복합시의 보육 여건이 군 지역보다 양호함.

〈표 2-11〉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12.5	61.9	-
도농복합시	100.0	33.3	79.1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12.5	69.0	-

- 영유아 항목의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인 80%를 달성한 시·군은 총 61개 시·군(44.2%)으로, 전년도 달성 시·군 비율(45.7%)에 비해 소폭 감소함.

〈표 2-12〉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30 / 82	36.6	-
도농복합시	31 / 56	55.4	-
전체 농어촌 시·군	61 / 138	44.2	-

3.2. 교육 부문

3.2.1. 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초등학교·중학교 항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학교가 운영되어야 함.
 - 2015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부터는 해당 읍·면 지역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1개 이상 운영되고 있을 때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 전체 1,403개 읍·면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둘 다 1개교 이상 모두 유지되고 있는 곳은 986개 읍·면으로 이행실태는 70.3%임.
 - 참고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둘 중 하나라도 있는 읍·면의 수는 1,375개 (98.0%)로 집계됨.
 - 군 지역의 이행실태는 69.7%,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는 71.1%로 지역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표 2-13〉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27.3	69.7	-
도농복합시	100.0	33.3	71.1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27.3	70.3	-

-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에 해당하는 100%를 달성한 지역은 20개 시·군으로, 전체 시·군의 14.5%가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13.4%, 도농복합시의 16.1%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표 2-14〉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1 / 82	13.4	-
도농복합시	9 / 56	16.1	-
전체 농어촌 시·군	20 / 138	14.5	-

-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초·중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수단 서비스 제공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3,932개 학교 중 2,367개 학교(60.2%)에서 각종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 지역은 67.6%의 초·중학교가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의 경우 51.9%가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표 2-15〉 농어촌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15.6	67.6	-
도농복합시	100.0	7.1	51.9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7.1	60.2	-

3.2.2.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

- 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항목은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농어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는 비형식 시설³이 적합하여 위 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읍·면별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함.
- 전국 농어촌 지역 1,403개 읍·면 중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 수는 286개 지역으로 이행실태는 20.4%로 조사됨.
 - 군 지역은 146개 읍·면(17.6%)에서 도농복합시는 140개 읍·면(24.3%)에서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음⁴.

〈표 2-16〉 평생교육시설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66.7	0.0	17.6	-
도농복합시	71.4	0.0	24.3	-
전체 농어촌 시·군	71.4	0.0	20.4	-

3 평생교육시설은 준형식과 비형식으로 구분됨. 준형식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및 대학교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학교 시설을 의미하며,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외의 시설을 의미함.

4 상기 수치는 비형식시설 중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한 것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별도 조사한 결과, 주민자치센터에서의 평생교육을 포함한 이행실태는 86.2%로 높게 나타남.

- 평생교육 항목에 대한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인 40%를 달성한 시·군은 138개의 시·군 중 23개(16.7%)로 조사됨.
 -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5곳으로 작년(8곳)에 비해 소폭 감소함.

〈표 2-17〉 평생교육시설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 / 82	12.2	-
도농복합시	13 / 56	23.2	-
전체 농어촌 시·군	23 / 138	16.7	-

3.3. 정주생활기반 부문

3.3.1.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항목은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시·군별 총 가구 수) × 100의 기준을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함.
- 통계청의 2015년 주택총조사 방식 변경(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으로 통계자료 구득이 불가능함.

3.3.2.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2% 이상으로 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상수도 항목은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인구 수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2016년 기준 전체 농어촌 면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503만 명이고, 이중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인구는 367만 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72.9%로 집계됨.
 - 군지역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7.4%,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7.8%로 도농복합시의 여건이 좀 더 양호하였음.
- 작년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행실태가 1.6%p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항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표 2-18〉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22.2	67.4	-
도농복합시	99.5	40.3	77.8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22.2	72.9	-

- 138개 농어촌 시·군 중 중기 목표치인 82%를 달성한 곳은 43개 시·군으로 전체 시·군의 31.2%에 해당함.
 - 지역별로는 군 지역 19곳(23.2%), 도농복합시 24곳(42.8%)이 중기 목표치인 82%를 만족함.

〈표 2-19〉 상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9 / 82	23.2	-
도농복합시	24 / 56	42.8	-
전체 농어촌 시·군	43 / 138	31.2	-

3.3.3.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5%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 난방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방법은 (읍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지역 전체 가구 수) × 100으로 측정함⁵.
- 읍지역이 없는 3개 시·군을 제외한 총 135개 농어촌 시·군의 읍 지역 전체 가구 수는 약 204만 가구이고 이 중 도시가스가 보급된 가구 수는 약 129만 가구로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63.1%임.
 - 지역별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군 지역은 52.7%, 도농복합시는 71.7%의 이행실태를 보임.

〈표 2-20〉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98.8	0.0	52.7	-
도농복합시	113.0	0.0	71.7	-
전체 농어촌 시·군	113.0	0.0	63.1	-

⁵ 난방 항목은 읍지역만을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함. 따라서 읍지역이 없는 용진군, 계룡시, 거제시는 난방 이행실태 점검에서 제외함.

- 서비스기준 목표치(도시가스 보급률 65% 이상)를 달성한 지역은 40개 시·군으로 29.6%를 차지함.
 - 군지역 15곳(18.5%), 도농복합시 25곳(46.3%)이 중기목표치를 달성함.

〈표 2-21〉 도시가스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5 / 81	18.5	-
도농복합시	25 / 54	46.3	-
전체 농어촌 시·군	40 / 135	29.6	-

-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마을에 소형 LPG저장탱크를 공급하여 난방비를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보완지표로서 소형 LPG저장탱크 공급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마을 가구 수를 파악함.
 -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가구 수 / (읍·면지역 총 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가구 수)) × 100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 중 소형 LPG저장탱크 공급을 받는 가구 비율은 0.22%에 그치고 있음.
 - 2018년 기준 총 5,981호에 소형 LPG저장탱크 공급이 이루어짐. 현재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가 약 268만 세대임을 감안했을 때 극히 적은 수치에 불과함.
 - 아직까지 소형 LPG저장탱크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예산 투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3.3.4.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대중교통 항목의 이행실태는 5년 단위로 공표되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활용하여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로 점검함.
 -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도입여부와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 관련 기준은 보완 세부기준으로 별도로 점검함.
-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공표되므로 당해 연도 대중교통 이행실태는 작년과 동일함.
- 보완지표인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시행 여부를 살펴본 결과, 138개 시·군 중 127개 시·군(92.0%)이 다양한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82곳 중 78곳(95.1%), 도농복합시가 56곳 중 49곳(87.5%)로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 지역에서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음.
- 또 다른 보완지표로 도서지역의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 운항 여부를 조사·점검함.
 - 행정기관(읍·면사무소)이 위치해 있는 본도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지역은 138개 시·군 중 군이 8곳, 도농복합시가 3곳으로 총 11개 시·군이며, 본도의 수는 총 34개임.
 - 34개의 본도 중 1일 1회 이상 왕복 여객선이 운항되는 곳은 33개(연평도 제외)로 본 기준의 이행실태는 97.1%임.

3.3.5. 광대역통합망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90% 이상으로 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 광대역통합망 항목의 이행실태는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된 행정리 수 / 구축 대상 행정리 수) × 100으로 점검함.
 - 광대역통합망 항목은 2017년에 이미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사업과 통계 자료 생성을 종료하였음.
 - 2018년 광대역통합망 항목의 이행실태는 ‘완료’로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2017년 자료를 참고로 제시함.
- 2017년 기준 광대역통합망 구축 대상 행정리 총 36,104개 중 34,802개 행정리(96.4%)에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되어 있음. 중기 목표치인 9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⁶.

〈표 2-22〉 광대역통합망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66.5	96.5	-
도농복합시	100.0	71.1	96.3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66.5	96.4	-

- 중기 목표치인 90%를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118개 시·군(85.5%)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군지역은 70개(85.4%), 도농복합시는 48개(85.7%)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⁶ 참고로 설치 대상 세대 수를 기준으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살펴보면, 전체 386만 세대 중 96.9%에 해당하는 374만 세대에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됨.

〈표 2-23〉 광대역통합망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70 / 82	85.4	-
도농복합시	48 / 56	85.7	-
전체 농어촌 시·군	118 / 138	85.5	-

3.4.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이행실태

3.4.1.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의 이행실태는 시·군 내에서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실태를 파악함.
- 이를 위해 지자체별 1) 창업보육 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지원 센터 유무 2)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3) 창업 및 취업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전담 인력) 유무 4)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연간 운영 횟수를 조사하였음.
 - 본 항목의 이행실태는 ‘시·군에서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연간 1회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함.
- 조사 결과, 전체 138개 시·군 중 101개의 시·군(73.2%)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은 53개, 도농복합시는 48개의 시·군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음⁷.

〈표 2-24〉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조건 충족 지역		비고
	조건 충족 시·군 수	조건 충족 시·군 비율	
군	53 / 82	64.6	-
도농복합시	48 / 56	85.7	-
전체 농어촌 시·군	101 / 138	73.2	-

3.5. 문화·여가 부문

3.5.1.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은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실태를 파악함.
- 이를 위해 시·군별 1)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2) 문화예술회관의 전문 공연 프로그램 현황 3)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하는 문화 행사 프로그램 자료를 조사함.⁸

⁷ 그러나 시·군 간 프로그램 실시 횟수에서 큰 편차가 있음. 예를 들어 연간 20회 이상의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25개(18.1%)인 반면, 5회 이하로 실시한 시·군은 74개(53.6%)임.

⁸ 부처 협조자료 중 지방문화원의 문화 프로그램 횟수는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

- 각 시·군별로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이 있는지, 그리고 각 시설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문화예술회관)과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지방문화원)이 있는지 살펴봄.
- 본 항목의 이행실태는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의 지난 1년 간 공연 및 전시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월 1회 이상인지를 검토함.
 -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 설치·운영 현황,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참고 자료로 제시함.
- 점검 결과, 용진군을 제외한 137개 농어촌 시·군에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이 있으며 해당 시설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관람 가능한 시·군은 124개 시·군으로 이행실태는 93.5%임⁹.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이행실태는 90.2%, 도농복합시는 98.2%로 나타남.

〈표 2-25〉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공연 프로그램 개최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조건 충족 지역		비고
	조건 충족 시·군 수	조건 충족 시·군 비율	
군	74 / 82	90.2	-
도농복합시	55 / 56	98.2	-
전체 농어촌 시·군	129 / 138	93.5	-

를 활용함. 지역문화행사에는 제향, 세시풍속, 연례행사, 축제, 공모전, 공연, 경시대회, 전시회 등을 포함함.

- ⁹ 참고로 문화예술회관의 전문 공연 프로그램 분기별 1회 이상과 지방문화원에서의 문화프로그램 월 1회 이상 관람 가능 여부 둘 다 만족하는 시·군은 52개로 이행실태는 37.7%로 나타남.

3.6. 환경·경관 부문

3.6.1.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 환경·경관 부문 하수도 항목의 이행실태는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시·군별 총인구 수) × 100으로 점검함.
-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한 결과, 2016년 기준 전체 농어촌 시·군의 인구 약 2,076만 명 중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인구는 1,720만 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2.9%로 집계됨.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67.9%, 도농복합시는 87.0%로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2-26〉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96.1	1.7	67.9	-
도농복합시	98.1	59.8	87.0	-
전체 농어촌 시·군	98.1	1.7	82.9	-

- 중기 목표치인 85%를 달성한 시·군은 작년대비 2개 지역(달성군, 정선군)이 증가한 40개 시·군(29.0%)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군 지역은 9개(11.0%)에 불과하여 지역간 격차가 두드러짐.

〈표 2-27〉 하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 / 82	11.0	-
도농복합시	31 / 56	55.4	-
전체 농어촌 시·군	40 / 138	29.0	-

3.7. 안전 부문

3.7.1.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법용 CCTV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 안전 부문 방법설비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은 (방법용 CCTV가 설치된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을 통해 점검함.
 -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수급한 행정리별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활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함.
- 2018년 기준, 농어촌 지역 총 36,933개 행정리 중 19,811개 행정리에 방법용 CCTV가 설치되어 53.6%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군 지역 이행실태는 57.9%, 도농복합시 이행실태는 48.2%로, 군 지역에서 이행실태가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28〉 방법용 CCTV 설치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4.1	53.5	-
도농복합시	100.0	11.3	44.1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4.1	49.3	-

- 중기 목표치인 60%를 달성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57개 시·군으로 전체 41.3%의 시·군이 중기 목표치를 달성함.
 - 군 지역은 37.8%, 도농복합시는 14.3%의 지역이 중기 목표치를 달성함.

〈표 2-29〉 방법용 CCTV 설치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42 / 82	51.2	-
도농복합시	15 / 56	26.8	-
전체 농어촌 시·군	57 / 138	41.3	-

3.7.2. 경찰 순찰(경찰청 자료 미제공)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경찰청 자료 미제공으로 점검 불가

3.7.3.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 소방 출동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은 (도착 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출동 건 수) × 100으로 점검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5분 대응론¹⁰’에 입각하여 ‘소방 출동’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2018년 10월 기준기준, 138개 시·군에서 총 14,408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했으며,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 건은 2,705건(18.8%)에 불과함.
 - 군 지역 이행실태는 22.0%, 도농복합시 이행실태는 15.7%로 나타나 도농복합시보다 군 지역에서의 이행실태가 다소 높음.

〈표 2-30〉 소방 출동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48.1	0.0	22.0	-
도농복합시	43.0	4.3	15.7	-
전체 농어촌 시·군	48.1	0.0	24.6	-

- 소방 출동 항목의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인 55%를 달성하고 있는 농어촌 시·군은 전무하였음.

¹⁰ 화재 발생에 대한 대응 이론은 ‘5분 대응론’과 ‘8분 대응론’이 있으며, 이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5분 또는 8분이 지나면 거의 전소(全燒) 단계에 이르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기에 그 이전에 화재 진압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함.

제 3 장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평가

1. 항목별 이행실태 평가

- 보건·복지 부문은 응급서비스 항목과 노인 항목의 달성도가 소폭 증가함.
 - 통계 자료 분석 결과, 대부분의 농어촌 시·군에서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수가 증가하여 노인 항목의 달성도가 증가함.
 - 진료서비스 항목은 2016년부터 감소 추세이며, 영유아 항목은 작년과 달리 소폭 감소하였음.

- 교육 부문은 전체적으로 달성률이 증가함.
 - 전국 농어촌 읍·면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둘 다 유지하고 있는 읍·면 비율은 70.3%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함.
 - 학생들을 위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중학교 비율은 약 60%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 비율은 감소 추세를 꺾고 2017년 대비 1.5%p 높은 20.4%로 집계됨.

- 정주생활기반 분야의 기준 달성률은 전반적으로 향상됨.
 - 상수도, 난방 항목 모두에서 기준 달성률이 전년에 이어 소폭 향상되었음.
 - 광대역통합망 항목은 '17년 중기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사업과 통계 생성이 종료되었음.
 - 대중교통 항목은 5년마다 공표되는 통계를 사용하여 전년과 이행실태가 동일하였음.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기준 달성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문화·여가 부문, 환경·경관 부문은 증가함.
 -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증가 추세였으나 소폭 감소함.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문화·여가 부문)은 소폭 증가하였고, 하수도 항목(환경·경관 부문)은 매년 꾸준히 달성률이 향상됨.

- 안전 부문은 방법설비 항목을 제외하면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방법설비 항목은 기준 달성률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인 반면, 소방 출동 항목은 꾸준히 감소함.
 - 경찰 순찰 항목은 작년에 이어 경찰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못함.

- 위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2017년 대비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비교하여 목표 달성률의 향상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17개 항목 중 향상된 항목 수는 9개, 하락한 것은 4개, 그리고 비교가 불가능 것은 4개로 나타남.
 - 목표 달성률의 향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13개 기준 항목 중 목표 달성률이 향상된 항목의 비중은 69.2%이며, 하락된 항목의 비중은 30.8%임.

〈표 3-1〉 핵심 항목 이행실태의 변화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7	2018	17-18 증감
1. 보건 복지	1)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80	71.7	71.0	\
	2)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	98.6	99.4	/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71.1	73.3	/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80	69.6	69.0	\
2. 교육 여건	5) 초·중 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0	70.2	70.3	/
	6) 평생 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	18.9	20.4	/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	-	X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71.3	72.9	/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70	60.0	63.1	/
	10) 대중 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88.6	88.6	-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96.4	완료	
4. 경제 활동 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75.4	73.2	\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100	91.3	93.5	/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5	82.0	82.9	/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49.3	53.6	/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	-	X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24.6	18.8	\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하락한 경우 \,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X로 나타냄.

- 기준 항목별로 2019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시·군의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항목별로 큰 편차를 보임.
 - 진료서비스, 영유아, 경제활동의 3개 기준 항목에서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농어촌 시·군의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과 일부 항목(응급서비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지역이 많지 않음.
 - 이행실태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항목(상수도, 난방, 하수도 등)일지라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아직 소수에 불과함

- 전년 대비 군 지역의 이행실태가 다소 저하되었음.
 - 군지역의 경우 진료서비스와 영유아, 경제활동의 3개 항목에서 중기 목표 달성 지역이 감소한 반면, 도농복합시는 모든 항목에서 중기 목표 기 달성 지역의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하였음.
 - 도농복합시에 비해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군 지역의 비율도 현저히 낮아 군 지역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표 3-2〉 핵심 항목 목표달성 시·군 현황

부문	핵심 항목	군(82개)		도농복합시(56개)		전체 농어촌 시·군(138개)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44	43	55	55	99	98
	2) 응급서비스*	49	57	55	56	104	113
	3) 노인	14	20	5	8	19	28
	4) 영유아	32	30	31	31	63	61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11	11	9	9	20	20
	6) 평생교육	8	8	12	12	20	20
3. 정주생활기반	7) 주택	-	-	-	-	-	-
	8) 상수도	16	19	23	24	39	43
	9) 난방*	9	15	24	25	33	40
	10) 대중교통	0	0	1	1	1	1
	11) 광대역통합망	-	-	-	-	-	-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56	53	48	48	104	101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73	74	53	55	126	129
6. 환경·경관	14) 하수도	7	9	31	31	38	40
7. 안전	15) 방법설비	31	42	13	15	44	57
	16) 경찰순찰	-	-	-	-	-	-
	17) 소방 출동	0	0	0	0	0	0

주 1) 음영 표시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임.

2) 응급서비스의 경우 소방서가 입지한 117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3) 난방 항목은 읍지역이 없는 3개 시·군(웅진군, 계룡시, 거제시)을 제외한 135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4) 주택, 광대역통합망(완료), 경찰순찰 항목은 데이터 부재로 점검 불가능

2. 지역별 이행실태 평가

-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은 대부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부산시 기장군은 노인과 초·중학교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대구시 달성군은 방법설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울산시 울진군은 노인, 방법설비와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은 측정 가능한 14개 항목 중 8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경기도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방법설비,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11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평생교육 항목과 위 3개 항목은 중기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이행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 강원도는 총 8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상수도, 난방 등 총 8개 항목의 이행실태가 전체 평균보다 저조하며, 특히 진료서비스, 난방 항목의 이행실태가 크게 저조함.
 - 반면, 노인, 교육 부문에서 타 시·군 보다 높은 이행실태를 보임.
- 충청북도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9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노인, 초·중학교, 상수도, 경제활동, 하수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충청남도는 충청북도와 같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9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노인, 초·중학교, 상수도, 난방, 하수도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거나 응급서비스, 소방출동 항목이 9개 도 중 가장 높은 이행실태를 보임.

- 전라북도는 총 8개 기준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 실태를 보이고 있음.
 - 평생교육, 문화 프로그램 항목에서 9개 도 중에 가장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반면, 상수도, 방법설비,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은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는 총 10개의 기준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 실태를 보이고 있음.
 - 노인, 초·중학교, 교통 항목과 경제활동 부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이행 실태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 경상북도는 방법설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 실태를 보이고 있음.
 - 경상북도는 9개 도 중에서 이행 실태가 가장 저조하며, 특히 보건복지 부문에서 매우 낮은 이행 실태를 보임.
- 경상남도는 총 8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경상남도는 교육 부문의 이행 실태가 저조하며 특히, 방법설비, 영유아, 초·중학교 항목의 이행 실태가 9개 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제주도는 총 6개 기준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 실태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안전 부문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환경·경관 부문, 교육(초·중학교), 보건복지(진료서비스, 영유아)의 일부 항목은 9개 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표 3-3〉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구분/ 중기 목표	1. 보건복지				2. 교육			3. 정주생활기반				
	진료 서비스 80%	응급 서비스 97%	노인 80%	영유아 80%	초·중학교/ (통학수단제공학교) 100%	평생 교육 40%	주택 주택 95%	상수도 82%	난방/ (LPG저장탱크) 65%	대중 교통 100%	광역 통합 90%	
부산(기정)	100.0	99.5	68.7	100.0	60.0 (28.6)	40.0	-	100.0	90.4 (0.6)	96.4	-	
대구(달성)	100.0	99.8	88.6	100.0	100.0 (22.4)	33.3	-	100.0	94.3 (1.3)	93.3	-	
인천(강화옹진)	50.0	99.5	65.8	80.8	66.5 (78.9)	3.8	-	50.5	66.7 (0.6)	92.0	-	
울산(울주)	100.0	99.6	73.1	83.3	83.3 (25.5)	41.7	-	79.8	98.8 (0.2)	96.6	-	
경기도	93.3	99.7	75.0	95.7	76.6 (39.3)	36.2	-	83.0	82.9 (0.2)	92.3	-	
강원도	53.3	98.7	81.9	85.0	78.2 (100.0)	23.5	-	66.0	21.7 (0.3)	87.3	-	
충청북도	90.9	99.6	73.2	68.6	60.8 (64.9)	24.5	-	64.9	63.7 (0.3)	92.5	-	
충청남도	86.7	99.8	72.0	75.8	70.2 (68.5)	22.4	-	65.5	60.0 (0.2)	93.4	-	
전라북도	61.5	99.3	71.1	57.9	73.0 (86.2)	13.8	-	85.5	44.0 (0.2)	93.5	-	
전라남도	57.1	99.0	73.5	64.6	74.7 (55.0)	15.3	-	70.6	43.2 (0.2)	88.9	-	
경상북도	60.9	98.9	71.0	61.3	66.0 (48.5)	18.1	-	68.9	59.5 (0.2)	82.1	-	
경상남도	72.2	99.4	70.8	53.1	60.7 (55.1)	15.3	-	73.4	61.6 (0.2)	81.2	-	
제주도	100.0	99.5	74.6	100.0	100.0 (21.7)	41.7	-	46.5	0.0 (0.1)	36.0	-	
농어촌 시·군	71.0	99.4	73.3	69.0	70.3 (60.2)	20.4	-	72.9	63.1 (0.2)	88.6	-	

〈표 3-3〉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계속)

구분	4. 경제활동일자리		5. 문화여가		6. 환경경관		7. 안전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10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00%		하수도 85%	방범설비 60%	경찰 순찰 100%	소방 출동 55%	
부산(기장)	100.0		100.0		90.2	99.4	-		27.9
대구(달성)	100.0		100.0		85.0	27.1	-		25.4
인천(강화옹진)	50.0		50.0		46.7	77.4	-		10.3
울산(울진)	100.0		100.0		96.1	25.3	-		18.4
경기도	100.0		93.3		88.2	47.0	-		11.1
강원도	60.0		100.0		85.7	46.1	-		14.4
충청북도	72.7		100.0		81.7	68.4	-		25.0
충청남도	73.3		100.0		76.8	61.9	-		25.4
전라북도	76.9		76.9		78.8	76.9	-		23.8
전라남도	81.0		90.5		73.4	41.1	-		17.4
경상북도	52.2		91.3		73.5	58.6	-		16.0
경상남도	77.8		100.0		89.3	34.8	-		13.4
제주도	50.0		100.0		92.4	48.8	-		14.8
농어촌 시·군	73.2		93.5		82.9	53.6	-		18.8

주: 음영 표시는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이행실태가 낮은 항목임.

- 2017년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비교가 가능한 총 13개 기준항목 중 2018년에 9개 도 전 지역에서 모두 이행실태가 향상된 기준항목은 3개 항목임.
 - 응급서비스, 노인, 난방 항목의 경우 9개 도 모두에서 이행실태가 향상되었음.
 - 이 외에도 평생교육, 상수도, 문화 프로그램, 하수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의 도에서 이행실태가 유지 또는 향상되었음.
- 보건복지 부문의 영유아 항목과 경제활동 부문, 소방출동 항목은 다수의 도에서 전년 대비 이행실태가 감소함.
 - 소방 출동 항목은 7개 도에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낮아졌으며, 영유아 항목과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은 4개 도 지역에서 달성률이 감소하였음.
 - 방법설비 항목은 3개, 진료서비스 항목은 2개 도 지역에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낮아짐.
-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는 1~4개 항목의 이행실태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경상북도는 모든 항목의 이행실태가 유지 또는 향상되었음.
 - 경기도는 방법설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이행실태가 유지 또는 향상되었음.
 -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는 가장 많은 4개 항목의 이행실태 감소가 나타나 이행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표 3-4〉 2017-2018년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비교

부문	항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1. 보건 복지	1) 진료 서비스	93.3	93.3	60.0	53.3	90.9	90.9	86.7	86.7	61.5	61.5	57.1	57.1	60.9	60.9	77.8	72.2	100.0	100.0
	2) 응급 서비스	98.9	99.7	97.8	98.7	99.0	99.6	99.5	99.8	98.7	99.3	97.5	99.0	98.3	98.9	98.4	99.4	99.1	99.5
	3) 노인	73.5	75.0	81.5	81.9	71.8	73.2	66.8	72.0	70.0	71.1	68.0	73.5	70.9	71.0	68.4	70.8	74.1	74.6
	4) 영유아	94.2	95.7	84.1	85.0	68.6	68.6	77.0	75.8	58.5	57.9	65.1	64.6	60.9	61.3	58.7	53.1	83.3	100.0
2. 교육 여건	5) 초·중 학교	76.6	76.6	78.2	78.2	60.8	60.8	70.2	70.2	73.0	73.0	74.7	74.7	65.5	66.0	60.7	60.7	100.0	100.0
	6) 평생 교육	35.5	36.2	21.8	23.5	22.5	24.5	18.0	22.4	14.5	13.8	15.3	15.3	14.7	18.1	15.3	15.3	41.7	41.7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	-	-	-	-	-	-	-	-	-	-	-	-	-	-	-	-	-
	8) 상수도	81.9	83.0	62.5	66.0	62.5	64.9	63.2	65.5	83.3	85.5	68.3	70.6	67.2	68.9	71.7	73.4	100.0	46.5
	9) 난방	80.0	82.9	21.0	21.7	60.4	63.7	55.2	60.0	41.3	44.0	42.0	43.2	56.0	59.5	57.9	61.6	0.0	0.0
	10) 대중 교통	92.3	92.3	87.3	87.3	92.5	92.5	93.4	93.4	93.5	93.5	88.9	88.9	82.1	82.1	81.2	81.2	36.0	36.0
	11) 광대역 통합망	99.9	-	93.1	-	96.5	-	92.4	-	98.7	-	97.8	-	94.0	-	97.3	-	75.6	-

부문	항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4. 경제활동 인사면	12) 창업 및 취업 감염·교육	100.0	100.0	66.7	60.0	90.9	72.7	80.0	73.3	76.9	76.9	81.0	52.2	52.2	77.8	77.8	100.0	50.0	
5. 문화· 여가	13)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86.7	9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6.9	76.9	90.5	87.0	91.3	100.0	100.0	100.0	100.0	100.0
6. 환경· 경관	14) 하수도	88.2	88.2	84.6	85.7	82.3	81.7	74.2	76.8	78.0	78.8	73.4	72.5	73.5	88.6	89.3	91.4	92.4	92.4
7. 안전 (생활안 전)	15) 방법 질비	50.3	47.0	41.1	46.1	56.7	68.4	47.0	61.9	69.1	76.9	42.5	50.6	58.6	37.0	34.8	48.8	48.8	48.8
	16) 경찰 순찰	-	-	-	-	-	-	-	-	-	-	-	-	-	-	-	-	-	-
	17) 소방 출동	10.4	11.1	20.5	14.4	28.3	25.0	32.4	25.4	30.1	23.8	17.4	16.0	16.0	43.9	13.4	24.2	14.8	14.8

주: 음영 표시는 전년 대비 감소한 항목임.

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개선 방향

3.1.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수정·보완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항목과 광대역통합망 항목 제외 필요
 - 주택 항목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95% 이상 달성’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왔음.
 - 해당 통계 조사가 주거실태조사로 바뀌면서 조사 방식의 차이로 시·군별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없게 되었기에 해당 항목을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핵심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촌형 주거기준을 제정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촌 주택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주택 항목 또한 지자체 선택 항목으로 전환을 추진 중임.
 - 광대역통합망 항목의 경우 ‘17년 목표 달성률이 이미 중기 목표(90%)를 초과 달성(96.4%)하였으며, 관련 사업과 통계 생성이 종료되어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항목 자체를 제외할 예정임.

참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변경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6호(시행 2015.12.29.)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의 부칙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함.

- 일부 기준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보완 필요
 - 보건·복지 부문 응급서비스 항목의 경우 현재 소방서(119 구급대)가 설치된 곳을 기준으로 117개 시·군에 한해 이행실태가 점검되고 있어 이행실태가 과대평가될 수 있음. 향후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포함한 138개 농어촌 시·군 전체에 대한 응급서비스 현황을 응급서비스를 요청한 농어촌 주민이 위치한 시·군을 기준으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안전 부문의 ‘경찰 순찰’ 항목은 순찰 방식의 변경 때문에 경찰청에서 범 죄 취약 지역 및 마을에 대한 순찰 자료를 생성하지 않아 이행실태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임.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탄력순찰제도를 이용하여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방식 및 목표 설정을 경찰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 탄력순찰제도

- 온라인 제보 등 주민 요청 지역과 112신고, 범죄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 매일 순찰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리적 특성이나 해당지점의 위험도에 따라 도보·차량순찰, 순찰범위 경력 종류, 반복거점 순찰 등을 결정하여 순찰서비스 제공
- ‘17년 주민요청지역 19만개소 중 7만8천개소 순찰계획 반영, ’17.9부터 제도 운영 (’18 경찰청 정부업무보고)

3.2.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개선 방향

-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제4차 기본계획부터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

행 부진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개선을 위한 사업 내용 추가 할 수 있음.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국공립) 등의 ‘생활 SOC 복합시설’의 확충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중앙부처 사업 부재 항목과 관련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항목(진료서비스, 노인, 초·중학교, 주택, 방법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등)의 경우, 농촌 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지역개발 사업(신활력플러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추진 시 국고보조율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 분권 기조에 대응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 필요
- 2015년 KREI에서 작성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표준조례(안)을 활용하여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촌협약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촉진 협약제도’ 도입하고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컨설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활성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근거해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운영하여 매년 1~2회씩 동 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음.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 기간(2015-현재) 동안에는 동 협의회의 개최 횟수도 줄고 역할 또한 유명무실해짐.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는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과 관련된 부처의 과장급 실무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고 전문가와 농어촌 주민이 함께 참여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나, 최근 오랫동안 동 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농

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대한 부처 간 의견교환이나 전문가들의 자문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음. 그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해와 협력 부족, 문제점 발굴과 개선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을 초래하였음.

-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개최를 보다 정례화 하여 (년 2회) 개최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필요한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전문가 및 농어촌 주민의 조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함.

부록 1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

※ 모든 조사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보건 복지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능하다	시·군내 물리치료실 현황 * 보건(지소) 및 일반 병원내 물리치료실 포함(단, 물리치료사 상근하는 곳에 한함)	() 개소	()실과 성명 : Tel :	년 월	(5)개소
			시·군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여 / 부		년 월	여
			시·군내 분기가능한 산부인과 수	() 개소 분기 가능		년 월	(1)개소 분기 가능
보건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등)를 받을 수 있다.	시·군내 분기가능한 노인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A, B 대상 수혜자 현황	()명	()실과 성명 : Tel :	년 월	(403)명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교육	평생 교육	평생교육 기관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동 지역 제외)	비행식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 읍면의 수 ※ 평생교육01란, 장년교육과정을 제외한 학 려노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직능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 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평생교 육단) ※ 비행식 평생교육시설01란, 학교 부설 시 민사회단체부설 인문기반부설 평생학 습관, 주민자치센터 등 비행식 기관과 관련됨	()개 읍면 성명 : Tel :	()실·과	년 월	()개 읍면 (10)개 읍면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모든 분포에 1일 왕복 1 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시군별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해당 프로그램 명 (예, 지자체 자체 운영순환버스, 콜택시 비 용 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등) * 복지노선 손실보상 등 교부사업 제외	()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 -	()실·과 성명 : Tel :	년 월	(5)개 프로그램 - 지자체 자체 운영버스 - 콜택시 비용 지원 - 마을택시 운영 - 키포드 조직 지원 - 미니버스 운영 등등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경제 활동일 지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	사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군내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유 / 무	()실·과 성명 : Tel : ()명	년 월	무
			사군내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유 / 무			유
			사군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전문인력) 고용 여부	여 / 부 ()명			여 (2)명
			사군내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횟수(연간)	연 ()회			연 (7)회
안전	범죄 예방 장비	범죄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한다.	범죄예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행정리) 수 (동지역 제외)	()개 행정리	()실·과 성명 : Tel : ()명	년 월	(225)개 행정리
			사군 내 전체 범죄예방 CCTV 개수 (동지역 제외)	총 ()개			총 (320)개

부록 2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계부처 협조자료 목록

부문	관련항목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	구축 기관
보건복지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30분내 응급현장 도착	소방서별 119 구급대 소요시간(건 별)	소방청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 육성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읍면별 초등/중학교 현황 읍면별 각 초등/중학교의 통학수단 제공 현황	교육부
교육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비형식 평생교육 시설 운영 읍면 비율 40% 이상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현황(주소록)	교육부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기초자치체 원수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	기초자치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 관리 현황	환경부
정주생활기반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장치를 추진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70% 이상	사군별 읍면부 도시가스보급률	산업통상자원부
			LPG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사군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추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부문	관련항목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	구축 기관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에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항	도서지역(사군)별 본도(읍·면)현황 및 여객선 운항 현황	해양수산부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IPTV 시청을 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90% 이상	사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개최(관람 가능)	사군별 지방문화원의 관람 가능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수(월별)	문화체육관광부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프로그램 개최(관람 가능)	사군별 문화예술회관(문화예술회관) 공연프로그램 수(분기별)	문화체육관광부
안전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5분 내 도착 비율을 55% 이상으로 함	화재출동시간 현황(읍·면·동 단위)	소방청

2018년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구분	1. 보건복지				2. 교육			3. 장우생활기반				관대면 통합양 동량양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양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시·군명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물리 치료실 운영 여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운영 여부	응급차량 30분 이내 간수비율(%)	현장도착시간 97% 이상 (소양서 없는 시·군은 -표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중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취자 비율(%) 80% 이상	영양아 3명 이상 급우 대리 도우미 7개소 이상 있는 급우 비율(%) 80% 이상	총급우중 초중학교 운영학교가 있는 급우 비율(%) 100% 이상	진체중학 교수중 통학수단 공하는 학교 비율(%)	총급우중 비행시 평생교육시설 이 있는 급우 비율(%) 40% 이상	총급우중 평생교육시설 이 있는 급우 비율(%) 40% 이상	총급우중 평생교육시설 이 있는 급우 비율(%) 40% 이상		
부산	1	22	0	2	99.5	68.7	100.0	60.0	28.6	40.0	90.4	0.56	96.4	0	-
대구	1	48	0	2	99.9	86.6	100.0	100.0	22.4	33.3	94.3	1.25	93.3	1	-
인천	0	6	0	1	99.4	67.8	61.5	61.5	81.3	7.7	66.7	1.27	94.6	0	-
울산	1	4	1	0	99.6	56.2	100.0	71.4	76.5	0.0	0.00	0.00	85.3	1	-
충청	1	37	0	0	99.6	73.1	83.3	83.3	25.5	41.7	98.8	0.23	96.6	1	-
경기도	1	86	0	7	99.9	82.6	100.0	77.8	24.4	11.1	98.8	0.52	95.7	1	-
충청	1	97	0	6	99.6	79.1	100.0	100.0	11.1	33.3	90.2	0.22	97.6	1	-
충청	1	39	0	3	99.8	75.1	100.0	100.0	12.5	71.4	74.9	0.00	94.8	1	-
충청	1	3	0	3	99.9	66.1	81.8	69.2	34.8	30.8	68.0	0.31	97.1	0	-
충청	1	38	0	2	99.8	71.9	100.0	80.0	27.3	50.0	78.9	0.00	90.5	1	-
충청	1	29	0	1	99.7	76.3	100.0	41.7	68.3	41.7	81.9	0.94	81.5	1	-
충청	1	67	0	4	99.9	76.0	100.0	100.0	28.6	50.0	83.1	0.00	94.8	0	-
충청	1	85	0	7	99.5	74.0	100.0	78.6	44.9	35.7	85.1	0.12	93.2	1	-
충청	1	42	0	4	99.7	70.9	100.0	71.4	12.5	57.1	87.1	0.00	96.0	1	-
충청	1	21	0	1	99.8	69.3	100.0	60.0	72.2	60.0	93.9	0.00	97.0	1	-
충청	1	17	0	4	99.6	69.6	100.0	75.0	35.7	8.3	81.1	0.10	88.8	1	-
충청	1	23	0	0	99.6	84.5	88.9	88.9	74.2	22.2	68.1	0.67	83.2	1	-
충청	0	8	0	0	99.7	77.3	70.0	60.0	78.9	20.0	92.9	0.00	93.6	1	-
충청	1	18	0	0	98.2	74.5	100.0	83.3	59.1	66.7	52.0	0.00	94.4	1	-
충청	1	16	0	1	99.0	78.8	100.0	83.3	54.3	33.3	62.4	0.00	92.9	1	-
충청	1	44	0	6	99.0	76.1	70.0	60.0	100.0	40.0	79.1	0.00	90.6	1	-
충청	1	61	0	6	99.7	75.7	100.0	77.8	100.0	33.3	54.0	0.57	96.1	1	-

구분	1. 보건복지				2. 교육		3. 장우생활기반				대중교통	광역교통망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난방	도로15년내 장문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미들 비율(%) 100% 이상							
시도명	모든 주민이 1차 진료 가능	본인 가까운 산부인과 운영 여부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간수비율(%) 97% 이상 (소방서 없는 시·군은 -표시)	영유아 3명 이상, 영아수 17명 이상 있는 읍면수 비율(%) 80% 이상	총합면수중 초·중학교 운영인구가 있는 읍면수 비율(%) 100% 이상	총합면수중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수 비율(%) 40% 이상	총가구수중 최저주거기준이 넘는 가구수 비율(%) 95% 이상	면적역주민 등인구중 급수인구 비율(%) 82% 이상	읍면도시설 보급률(%) 66% 이상 (읍이 없는 시·군은 -표시)	읍면도시설 보급률(%) 66% 이상 (읍이 없는 시·군은 -표시)	도로15년내 장문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미들 비율(%) 100% 이상	광역교통망 구축률(%) 90% 이상					
	강릉시	1	37	0	4	99.4	81.6	87.5	50.0	100.0	25.0	68.5	0.0	0.00	95.9	1	-
삼척시	1	15	0	1	99.2	93.9	75.0	75.0	100.0	0.0	57.2	16.6	0.78	84.4	1	-	
홍천군	1	11	0	0	97.5	61.6	80.0	90.0	100.0	20.0	-	48.0	70.7	80.6	1	-	
횡성군	0	17	1	0	98.3	84.7	88.9	100.0	100.0	11.1	-	55.6	49.7	0.00	82.9	1	-
영월군	0	7	0	1	98.4	115.2	44.4	88.9	100.0	11.1	-	53.7	39.5	0.43	91.2	1	-
평창군	0	10	0	0	96.4	79.7	100.0	100.0	100.0	25.0	-	77.1	0.0	0.00	71.1	1	-
정선군	0	8	1	0	96.8	89.1	100.0	100.0	100.0	11.1	-	63.5	0.0	0.31	81.3	1	-
철원군	1	9	0	0	98.1	58.8	83.3	36.4	100.0	18.2	-	72.9	0.0	0.23	97.3	1	-
화천군	0	3	0	0	-	133.8	100.0	80.0	100.0	40.0	-	50.1	0.0	0.73	86.9	1	-
양구군	1	3	1	0	-	84.3	100.0	100.0	100.0	20.0	-	64.2	0.0	0.38	98.8	1	-
인제군	1	7	0	0	96.9	70.1	100.0	100.0	100.0	50.0	-	81.1	0.0	0.52	83.3	1	-
고성군	0	7	1	0	99.3	98.5	100.0	66.7	100.0	50.0	-	84.7	0.0	0.37	89.1	1	-
양양군	0	4	1	0	98.0	96.6	66.7	66.7	100.0	16.7	-	79.2	0.0	0.00	91.9	1	-
홍주시	1	56	0	4	99.6	66.8	76.9	61.5	73.3	15.4	-	62.9	0.0	0.25	93.4	1	-
제천시	1	38	0	3	99.2	80.6	75.0	87.5	55.6	50.0	-	59.9	28.7	0.00	88.5	1	-
청주시	1	161	0	12	99.8	74.5	100.0	69.2	58.7	38.5	-	66.4	96.2	0.00	98.3	1	-
보은군	1	17	0	0	98.9	66.2	27.3	36.4	85.0	18.2	-	22.2	21.3	0.27	88.7	1	-
옥천군	1	23	0	0	99.5	67.0	44.4	44.4	63.2	11.1	-	66.2	52.6	0.58	94.1	1	-
영동군	1	19	1	1	99.4	72.7	63.6	72.7	60.9	18.2	-	63.6	37.9	0.52	84.3	1	-
진천군	1	12	0	1	99.6	74.1	85.7	57.1	77.3	28.6	-	81.3	56.0	0.23	90.9	1	-
괴산군	1	7	0	0	99.2	73.9	54.5	54.5	63.6	9.1	-	48.1	30.6	0.14	93.2	1	-
음성군	1	31	0	0	99.6	79.3	88.9	77.8	66.7	44.4	-	78.4	56.5	0.42	89.9	1	-
단양군	0	4	0	0	98.4	75.1	62.5	50.0	57.9	12.5	-	47.4	20.6	0.25	94.0	1	-
증평군	1	5	0	0	99.8	65.3	100.0	50.0	28.6	50.0	-	99.3	79.8	0.86	96.2	1	-
천안시	1	122	0	16	99.8	76.0	91.7	50.0	71.1	41.7	-	48.9	72.1	0.89	95.9	1	-
공주시	1	31	0	3	99.9	72.5	100.0	80.0	74.1	30.0	-	61.4	0.0	0.00	94.3	1	-
보령시	1	21	1	1	99.9	71.4	72.7	63.6	71.9	9.1	-	53.9	0.0	0.16	94.0	1	-
아산시	1	49	0	3	99.8	73.2	90.9	90.9	57.8	54.5	-	90.6	86.7	0.27	96.0	1	-
서산시	1	36	0	2	99.8	74.2	100.0	100.0	58.1	10.0	-	81.5	77.1	0.00	91.6	1	-
논산시	1	53	0	1	99.8	62.2	84.6	53.8	73.0	15.4	-	46.4	13.9	0.10	94.1	1	-

충청북도

충청남도

구분	1. 보건복지				2. 교육				3. 장우생활기반				광역 통합만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시·군명	모든 주민이 1차 진료 가능	물리 치료력	찾아가는 상급의료 운영 여부	본인 가능한 상급의료 운영 여부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간수비율(%) 97% 이상 (소방서 없는 시·군은 -표시)	노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자 비율(%) 80% 이상	영유아 3명 이상, 영유아 대비 보육시설 17개 이상 있는 읍면수 비율(%) 80% 이상	초·중학교 총면적중 초·중학교 면적비율(%) 100% 이상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수 비율(%) 40% 이상	총기구수중 화장실기구수 비율(%) 95% 이상	상수도 면적중 상급수 공급률(%) 82% 이상	읍면도시설 보급률(%) 66% 이상 (읍이 없는 시·군은 -표시)	읍면도시설 보급률(%) 66% 이상 (읍이 없는 시·군은 -표시)	광역 통합만 90% 이상	
	계룡시	1	6	0	0	99.6	62.8	100.0	66.7	33.3	-	94.9	-	0	-
당진시	1	35	0	2	99.9	70.4	81.8	81.8	70.3	27.3	61.0	77.9	0.15	94.6	1
금산군	1	16	0	1	99.8	65.1	80.0	60.0	76.0	30.0	62.4	62.8	0.00	86.7	1
부여군	1	28	0	0	99.8	77.2	56.3	62.5	77.1	12.5	52.1	36.8	0.30	95.2	1
서천군	1	17	1	0	99.8	74.1	53.8	53.8	66.7	7.7	58.8	51.6	0.22	92.4	1
청양군	0	13	0	0	99.9	71.7	60.0	60.0	73.7	20.0	27.7	0.0	1.36	92.9	1
홍성군	1	22	1	1	99.9	80.1	81.8	72.7	64.7	18.2	72.8	68.6	0.23	90.0	1
예산군	1	19	0	0	99.8	72.7	50.0	83.3	71.4	16.7	36.5	55.1	0.00	90.9	1
태안군	0	23	1	0	99.2	62.7	62.5	87.5	68.8	25.0	74.5	41.0	0.00	94.7	1
군산시	1	68	0	4	99.7	74.1	90.9	72.7	79.4	18.2	88.5	3.1	0.00	94.9	1
익산시	1	74	0	5	99.9	72.7	66.7	66.7	87.8	0.0	95.9	0.0	0.17	96.4	1
정읍시	1	54	0	2	99.6	65.9	53.3	73.3	85.7	13.3	95.2	0.0	0.00	95.3	1
남원시	1	40	0	1	98.2	70.5	56.3	62.5	100.0	6.3	71.3	0.0	0.00	98.2	1
김제시	1	30	0	2	99.4	70.5	33.3	46.7	88.9	0.0	99.4	0.0	0.00	96.7	1
완주군	1	29	0	0	-	82.3	76.9	76.9	79.5	38.5	63.8	67.1	0.98	96.0	1
진안군	1	14	0	0	-	84.6	36.4	81.8	91.3	18.2	62.9	0.0	0.00	90.8	1
무주군	0	8	1	0	-	64.2	83.3	100.0	100.0	16.7	67.2	55.8	0.11	90.0	1
장수군	0	2	0	0	98.1	84.4	42.9	100.0	81.3	14.3	82.1	0.0	1.87	97.0	1
임실군	0	15	0	0	-	85.8	25.0	75.0	87.5	33.3	81.8	44.0	0.28	93.4	1
순창군	0	18	0	0	-	67.3	81.8	45.5	90.9	9.1	62.1	68.8	0.00	82.1	1
고창군	0	20	0	1	99.5	65.5	57.1	92.9	80.0	14.3	99.4	65.6	0.00	87.3	1
부안군	1	23	0	0	98.9	58.0	61.5	84.6	80.6	7.7	99.8	48.6	0.00	92.9	1
여수시	1	85	0	3	99.3	70.4	100.0	100.0	36.7	28.6	57.9	0.0	0.34	75.5	1
순천시	1	51	0	2	99.4	73.3	81.8	72.7	43.8	18.2	86.2	0.0	0.00	97.0	1
나주시	1	53	0	0	99.5	72.0	76.9	76.9	64.0	15.4	57.1	21.4	0.00	86.8	1
광양시	0	34	0	1	99.5	70.9	71.4	71.4	72.7	28.6	64.9	83.7	0.00	97.0	1
담양군	1	23	0	0	99.1	66.8	25.0	50.0	71.4	16.7	69.9	49.4	0.00	97.0	1
곡성군	0	12	1	0	-	63.2	45.5	27.3	100.0	18.2	70.2	29.3	1.46	91.5	1
구례군	0	9	0	0	-	67.0	12.5	50.0	50.0	12.5	35.8	33.1	0.73	94.7	1
고흥군	1	45	1	1	-	76.9	75.0	87.5	66.7	6.3	56.1	10.3	0.00	95.0	1

구분	1. 보건복지				2. 교육				3. 장우생활기반				광역 통합만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시·군명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물리 치료 가능 여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본인 가능한 산부인과 운영 여부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간수비율(%) 97% 이상 (소방서 없는 시·군은 -표시)	응급도착시간 30분 이내 간수비율(%) 97% 이상 (소방서 없는 시·군은 -표시)	노인 보호가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자 비율(%) 80% 이상	영유아 영양 이상 율(%) 대체 보육시설 17% 이상 있는 읍면수 비율(%) 80% 이상	초·중학교 총합면수 중학교 운영학교 있는 면수 비율(%) 100% 이상	진체중학교 교수 통학수단 공하는 학교 비율(%)	총합면수 비율(%) 평생교육시설 이 있는 면수 비율(%) 40% 이상	총기구중 회차주거 기문이상 가수 비율(%) 95% 이상	면적역주민 등원구중 급수구 비율 (%) 82% 이상	읍면 도시(%) 보급률(%) 66% 이상 (읍이 없는 시·군은 -표시)	읍면도시가스 미보급세비중 상월PG 재정합크 공금 기구 비율 (%) 100% 이상	도로15년내 장단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미비 비율(%) 100% 이상	대중교통 중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광역 통합만 구축률(%) 90% 이상
경상 남도	성주군	0	17	1	0	98.5	69.0	60.0	70.0	30.4	10.0	-	60.7	0.0	0.00	41.6	1	-
	철곡군	1	15	0	0	99.5	68.5	87.5	75.0	15.6	62.5	-	75.5	91.8	0.25	70.9	1	-
	예천군	1	17	1	1	-	69.7	58.3	58.3	55.0	8.3	-	70.2	44.8	0.00	82.3	1	-
	봉화군	0	2	1	0	-	62.0	60.0	60.0	66.7	10.0	-	49.8	22.3	0.43	72.0	1	-
	울진군	1	13	1	1	98.0	72.5	90.0	80.0	40.7	10.0	-	54.7	26.4	0.32	87.2	1	-
	울릉군	0	1	0	1	-	55.0	33.3	100.0	22.2	33.3	-	71.3	0.0	0.00	96.0	0	-
	창원시	1	78	0	8	99.7	63.0	100.0	87.5	28.6	37.5	-	80.7	85.5	0.24	97.6	1	-
	진주시	1	17	0	3	99.8	74.1	75.0	43.8	71.4	6.3	-	99.5	30.9	0.00	95.5	0	-
	통영시	1	36	0	2	99.7	81.6	42.9	100.0	47.8	14.3	-	96.4	0.0	0.45	80.6	1	-
	사천시	1	35	0	0	99.7	71.8	75.0	75.0	57.9	12.5	-	93.9	83.2	0.00	81.5	1	-
	김해시	1	104	0	5	99.7	66.8	85.7	71.4	10.6	28.6	-	80.7	99.2	0.00	95.6	1	-
	밀양시	1	28	0	1	99.1	66.9	63.6	63.6	60.0	27.3	-	48.0	0.0	0.16	78.5	1	-
	거제시	1	33	0	3	99.6	82.1	77.8	88.9	51.9	11.1	-	89.1	-	0.27	96.5	1	-
	양산시	1	45	0	5	99.5	61.4	80.0	80.0	7.1	40.0	-	85.1	86.5	0.37	80.5	0	-
	의령군	0	14	1	0	99.0	68.5	15.4	38.5	94.7	7.7	-	53.1	40.8	0.00	62.2	1	-
	함안군	1	17	0	0	99.2	67.6	60.0	70.0	51.9	20.0	-	83.9	61.6	0.21	75.3	1	-
	창녕군	1	23	0	1	98.9	63.3	50.0	50.0	82.1	28.6	-	98.7	18.3	0.00	84.6	1	-
	고성군	0	12	1	0	99.2	66.7	21.4	42.9	67.9	7.1	-	62.0	46.3	0.00	90.9	1	-
	남해군	1	26	0	0	98.9	81.9	60.0	90.0	58.3	10.0	-	57.9	0.0	0.30	89.2	1	-
하동군	0	23	0	1	98.9	83.4	53.8	61.5	55.2	7.7	-	43.9	16.6	0.19	64.9	1	-	
산청군	0	13	1	0	98.4	74.2	54.5	63.6	71.4	27.3	-	41.4	0.0	0.15	53.1	1	-	
함양군	0	15	1	0	98.4	78.7	45.5	45.5	78.9	9.1	-	35.2	46.3	0.00	83.0	1	-	
거창군	1	20	1	1	98.5	92.7	33.3	50.0	74.1	8.3	-	33.5	63.0	0.58	92.1	1	-	
합천군	1	10	0	0	98.0	67.3	29.4	47.1	89.7	5.9	-	35.0	0.0	0.52	67.0	1	-	
제주시	1	115	0	7	99.7	75.3	100.0	100.0	16.7	28.6	-	46.5	0.0	0.16	47.9	1	-	
서귀포시	1	51	1	1	99.2	73.3	100.0	100.0	28.9	60.0	-	46.5	0.0	0.13	21.1	1	-	

2018년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계속)

시도명	구분	4. 경제활동, 일자리			5. 문화, 여가			6. 환경, 경관		7. 안전		소방활동 소방출동반대도 차별률(%) 55%이상	
		시군내강연보유지 원센터등강연및시 합체등연출유한지 원센터유무	시군내강연보유지 원센터등강연및시 합체등연출유한지 원센터유무	시군내강연보유지 원센터등강연및시 합체등연출유한지 원센터유무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예회관)	하수도	하수도보급률 (공공하수처리장 연간보급률 (%))	범범설비	경찰소찰 행정리1회이상 강찰소찰실시 비율(%) 100%이상		
부산	시·군명	기장군	0	1	14	1	1	1	0	90.2	99.4	-	27.9
		달성군	0	1	2	1	1	1	1	85.0	27.1	-	25.4
		강화군	0	1	0	1	1	1	0	48.4	54.8	-	11.9
		양산시	0	1	0	0	0	0	0	45.0	100.0	-	8.7
		울주군	1	1	1	1	1	1	1	96.1	25.3	-	18.4
		평택시	0	1	23	1	1	0	1	83.6	21.0	-	12.8
		남양주시	1	1	18	1	1	0	0	97.3	12.7	-	13.5
		용인시	1	1	28	1	1	0	1	92.9	22.71	-	9.0
		파주시	0	1	21	1	1	1	1	93.5	100.0	-	14.0
		이천시	1	1	19	1	1	1	1	91.0	100.0	-	15.9
		인성시	0	1	14	1	1	0	1	77.5	54.5	-	5.5
		김포시	0	1	19	1	1	0	1	84.4	21.7	-	14.9
경기도	시·군명	화성시	1	1	32	1	1	1	1	83.2	30.5	-	7.0
		광주시	0	1	16	1	1	1	1	94.3	100.0	-	5.7
		양주시	1	1	13	1	1	0	1	91.1	35.6	-	11.4
		포천시	0	1	13	1	1	0	1	65.6	20.7	-	13.7
		여주시	1	1	10	1	1	0	1	81.2	34.5	-	7.4
		연천군	0	1	3	1	1	0	1	86.8	38.5	-	11.5
		가평군	0	1	6	1	1	0	1	78.2	77.8	-	15.1
		양평군	0	1	12	1	1	1	1	78.0	92.6	-	11.6
		춘천시	1	1	3	1	1	0	1	93.4	28.0	-	18.4
		원주시	1	1	3	1	1	1	1	90.2	28.3	-	8.5
		강릉시	1	0	0	1	1	1	1	91.5	19.7	-	14.0
		삼척시	1	1	5	1	1	0	1	88.8	26.1	-	12.0
홍천군	0	1	1	1	1	0	1	73.8	83.8	-	7.5		

구분	4. 경제활동, 일자리		5. 문화, 여가		6. 환경, 공간		7. 안전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활동
시도명	사군내장안보육지원센터유무	사군내장안보육지원센터유무	월1회이상사군내장안보육지원센터유무	월1회이상문화시설운영(자비문화원)	하수도보급률(공공하수처리장 여인구보급률(%))	행정리CCTV설치비율(%)	행정리(월1회)이상경찰순찰시비율(%)	소방활동비내도차비율(%)
	사군내장안보육지원센터유무	사군내장안보육지원센터유무	월1회이상문화시설운영(자비문화원)	월1회이상문화시설운영(자비문화원)	85% 이상	60%이상	100%이상	55%이상
시·군명	사군내장안보육지원센터유무	사군내장안보육지원센터유무	월1회이상문화시설운영(자비문화원)	월1회이상문화시설운영(자비문화원)	85% 이상	60%이상	100%이상	55%이상
홍성군	0	3	1	1	55.0	27.3	-	18.1
영월군	0	1	1	1	72.7	100.0	-	21.7
평창군	0	1	2	1	68.1	23.6	-	10.6
정선군	0	1	1	1	85.8	56.0	-	16.0
철원군	0	1	1	0	79.5	26.3	-	20.4
화천군	0	1	0	0	68.4	34.1	-	22.7
양구군	0	1	0	1	84.1	84.3	-	18.8
인제군	1	1	1	0	80.3	81.2	-	20.7
고성군	0	0	0	0	85.7	53.9	-	21.2
양양군	0	1	0	1	63.7	37.1	-	4.2
충주시	0	5	1	1	87.9	98.8	-	14.3
제천시	0	4	1	0	94.9	59.9	-	15.6
장주시	1	20	1	1	92.2	32.9	-	18.4
보은군	1	2	1	0	71.2	44.9	-	22.4
옥천군	1	2	1	1	87.3	100.0	-	32.8
영동군	0	1	0	1	67.8	100.0	-	29.0
진천군	0	1	1	0	76.6	41.4	-	17.6
괴산군	0	2	0	1	47.8	83.3	-	27.0
음성군	0	1	0	0	53.1	69.2	-	40.2
단양군	0	2	1	1	74.2	98.7	-	21.6
충병군	1	2	1	0	94.5	93.5	-	17.2
청양시	1	7	1	0	96.1	60.1	-	17.9
공주시	0	0	0	1	69.4	38.7	-	12.2
보령시	0	2	1	0	66.7	99.6	-	16.0
아산시	0	19	1	0	83.5	81.3	-	13.5
서산시	1	11	1	0	71.6	50.8	-	19.8
논산시	0	0	1	1	65.7	70.0	-	43.0
계룡시	0	2	1	0	96.0	55.9	-	13.3
당진시	0	3	1	0	62.4	40.4	-	28.0
금산군	0	1	0	0	76.0	100.0	-	48.1
부여군	0	0	0	0	52.0	23.2	-	26.6
서천군	0	1	1	1	53.1	54.0	-	14.9
장영군	1	2	1	1	50.5	85.2	-	30.1

충청남도

충청남도

구분	4. 경제활동, 일자리		5. 문화, 여가		6. 환경, 공간		7. 안전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하수도	방범설비	경찰순찰	
전라북도	시·군별	시·군별	월 1회 이상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관람 여부 (자비문화원)	월 1회 이상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관람 여부 (자비문화원)	분기별 1회 이상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예회관)	하수도 보급률 (공공하수도만) (%)	행정의 CCTV설치 비율 (%)	행정리(일회) 이상 경찰순찰시 비율 (%)	소방활동 대비 대비율 (%)
	홍성군	0	1	1	1	69.7	80.6	-	31.2
	예산군	1	1	1	1	54.8	47.4	-	34.2
	태안군	1	1	1	1	51.3	50.0	-	22.9
	군산시	0	1	1	0	92.6	21.5	-	34.2
	익산시	1	2	1	0	87.3	91.2	-	27.5
	정읍시	1	6	1	0	77.5	25.2	-	15.8
	남원시	0	1	1	0	80.1	91.2	-	16.9
	김제시	0	1	1	1	59.8	85.8	-	27.8
	완주군	1	5	1	1	80.6	71.9	-	23.7
	진안군	0	2	1	0	70.4	100.0	-	13.3
	무주군	1	0	1	0	74.0	100.0	-	45.9
	장수군	0	8	1	0	76.3	100.0	-	23.4
	임실군	0	0	1	0	63.2	71.5	-	16.4
	순창군	0	3	1	0	48.9	94.2	-	22.4
	고창군	0	2	1	0	65.5	100.0	-	28.6
	부안군	0	3	1	0	67.3	77.0	-	19.1
	아주시	0	1	1	0	84.0	84.9	-	11.1
	순천시	0	2	1	0	91.5	18.2	-	9.8
나주시	1	7	1	0	68.2	19.6	-	6.8	
광양시	0	1	1	1	92.7	11.3	-	29.9	
담양군	1	6	1	0	73.3	66.1	-	16.1	
곡성군	0	1	1	1	77.5	72.1	-	19.2	
구례군	1	1	1	0	89.2	23.9	-	24.4	
고흥군	0	1	1	0	57.5	25.4	-	12.6	
보성군	0	1	1	0	57.3	40.5	-	10.7	
화순군	0	2	1	1	78.8	17.4	-	11.5	
장흥군	1	0	1	0	59.7	85.0	-	22.4	
강진군	0	0	1	0	60.3	53.2	-	22.0	
해남군	0	1	1	0	51.5	73.5	-	30.4	
영암군	0	3	1	1	72.8	31.5	-	20.8	
무안군	0	1	1	0	65.0	7.7	-	20.4	
함평군	0	1	2	0	63.9	16.2	-	12.0	

전라남도

구분	4. 경제활동, 일자리		5. 문화, 여가		6. 환경, 공간		7. 안전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활동
시도명	사군내장안보육지원센터유무	사군내장안보육지원센터유무	시·군·구별 문화예술·관광·체육·여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자비문화원)	분기별 1회 이상 (공공)수자라구 여인구보금률 (%)	행정리 CCTV설치비율(%)	행정리(월1회) 이상 경찰순찰시 비율(%)	소방활동비내도 대비율(%)
	사군내장안보육지원센터유무	사군내장안보육지원센터유무	시·군·구별 문화예술·관광·체육·여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자비문화원)	분기별 1회 이상 (공공)수자라구 여인구보금률 (%)	행정리 CCTV설치비율(%)	행정리(월1회) 이상 경찰순찰시 비율(%)	소방활동비내도 대비율(%)
영광군	1	1	1	1	55.9	16.1	-	13.4
장성군	1	8	1	1	60.3	100.0	-	12.0
완도군	0	0	1	0	58.8	89.1	-	28.6
진도군	0	1	1	1	59.9	28.9	-	36.0
신안군	0	1	1	0	31.2	19.5	-	25.0
포항시	1	1	1	1	82.5	34.8	-	18.4
강주시	0	1	1	0	90.8	27.7	-	14.4
김천시	1	6	1	1	79.0	100.0	-	5.7
안동시	1	1	1	1	78.4	67.8	-	4.3
구미시	1	3	1	1	98.1	46.7	-	11.3
영주시	1	4	1	1	86.7	43.0	-	15.3
영천시	0	2	1	0	72.2	56.7	-	8.6
상주시	1	0	1	0	69.2	41.9	-	10.0
문경시	1	0	1	0	81.8	45.8	-	4.8
경산시	1	2	1	0	91.3	48.3	-	16.1
군위군	0	0	1	1	37.9	100.0	-	3.7
의성군	0	1	1	0	44.2	45.8	-	11.1
창녕군	1	1	1	1	42.8	74.3	-	17.9
영양군	0	1	1	1	54.5	67.0	-	31.3
영덕군	0	1	1	0	74.1	88.7	-	21.7
창도군	0	0	1	0	43.6	45.3	-	13.7
고령군	0	1	1	1	60.3	67.3	-	23.8
상주군	0	0	1	1	37.3	100.0	-	11.8
칠곡군	1	8	1	1	76.0	28.8	-	18.5
예천군	1	4	1	1	53.0	71.5	-	4.7
봉화군	0	0	1	0	61.8	96.2	-	8.9
울진군	0	1	1	1	66.3	49.7	-	13.9
울릉군	0	0	1	0	1.7	84.0	-	0.0
장원시	1	5	1	0	96.3	25.0	-	25.4
진주시	1	1	1	0	91.9	17.5	-	40.7
통영시	0	2	1	0	82.7	18.1	-	28.1
사천시	0	1	1	1	93.6	36.6	-	27.1

경상북도

경상남도

구분	4. 경제활동, 일자리				5. 문화, 여가		6. 환경, 경관	7. 안전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업기술센터 등 창업상담을 위한 지원센터유무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유무	시군내창업보육사업 운영, 창업상담을 위한 취업지원센터(신인력)고용여부	월1회이상시군내 창업,사업제안, 창업관련전문가로 취업지원(멘토링)그랜트유무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역문화원 운영 여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자비문화원)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예회관)	하수도	행정의CCTV설치비율(%)	행정리(일1회)이상경찰순찰비율(%)	소방출동
시도명	시·군명	1	1	7	1	1	0	1	96.6	30.2	-	31.1
	김해시	0	1	1	1	1	1	1	73.1	37.6	-	8.9
	밀양시	0	1	1	1	1	1	1	85.9	83.9	-	16.3
	거제시	0	1	3	1	1	0	1	96.5	25.2	-	25.0
	양산시	1	1	15	1	1	0	1	63.2	13.4	-	28.2
	의령군	0	1	1	1	1	0	1	52.9	49.0	-	27.3
	함안군	0	1	3	1	1	0	1	69.2	29.8	-	22.1
	창녕군	0	1	2	1	1	0	1	59.2	46.8	-	35.0
	고성군	0	1	1	1	1	1	1	74.9	23.0	-	29.7
	남해군	0	1	1	1	0	0	1	70.1	4.1	-	28.4
	하동군	0	1	1	1	1	1	1	64.0	78.7	-	39.1
	산청군	0	1	1	1	1	0	1	76.1	14.3	-	32.0
	함양군	0	1	1	1	1	1	1	81.0	65.9	-	29.6
	거창군	1	1	1	1	0	1	1	58.6	35.9	-	31.3
	합천군	0	1	1	1	0	0	1	92.2	45.8	-	12.1
	제주시	1	1	1	1	1	0	1	93.0	52.6	-	17.9
	서귀포시	0	1	0	0	0	0	1				

제주도

참고문헌

- 김광선·민경찬. 2016.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송미령·김용렬·권인혜·윤병석. 2010.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 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박시현·성주인·김광선·권인혜. 2009.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2부 -

각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2018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조 근 식 부연구위원
박 재 형 부연구위원

차 례

제1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선정

1.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기본방침 77
2.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배경 78
3. 선택 항목 지표 선정 82
4.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82

제2장 강원도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1. 교육여건 85
2. 정주생활기반 94
3. 경제활동·일자리 97
4. 문화·여가 102

제3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중기목표치

1. 선택 항목 중기목표치 설정 104
2. 선택 항목 중기목표치 달성 106

제4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08
2. 사업 개요 112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5

표 차례

제1장

<표 1-1> 강원도 선택 항목 지표 선정	82
<표 1-2> 강원도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84

제2장

<표 2-1> 교육여건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현황(2018)	89
<표 2-2> 교육여건 - 강원에듀버스 지원율	91
<표 2-3> 교육여건 -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	93
<표 2-4> 정주생활기반 - 석면슬레이트	96
<표 2-5> 경제활동·일자리 - 농촌경제활성화	101
<표 2-6> 문화·여가 - 영화관람	103

제 1 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선정¹⁾

1.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기본방침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한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지표를 선정하였음.
 - 국가차원에서 계획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나 추진사업은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강원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선택 항목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의 목표달성 등을 통해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이유임.

- 선택 항목 지표는 강원도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강원도가 추구하고자하는 장기비전을 반영하고자 함.

1)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선정의 내용은 기존 지표선정의 과정 및 내용이 기존 보고서인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보고서 (p.91~98)의 내용과 동일함.

- 강원도는 2011년 민선5기 발전전략과 실천의지를 담은 도정구호와 방침을 제시하였음. 도정구호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이며, 도정방침은 “인간의 존엄, 지역의 가치, 평화와 번영”임.
 - 이에 따라 강원도 농업·농촌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도정구호와 도정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강원도 농어촌서비스 선택 항목 역시 강원도 도정구호와 도정방침에 근거하여 선정하고자 함.
- 강원도 농어촌의 특성인 산간지역의 특성 반영
- 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 항목 중 일부는 도서·벽지지역을 위한 여객선 운항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강원도 산간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지표들임.
 - 농어촌 지역 간 물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선택 항목 지표로 추가 발굴하고자 함.
 - 선정된 선택 항목 지표는 강원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

2.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배경

2.1. 교육여건부문

- 학교교육부문
- 정부는 2015년 5월 13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주요내용은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 수 비율을 확대, 학생 수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 산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도입 등임
 - 강원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지역공동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음.

- 정부정책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강원도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이 황폐화 될 것으로 우려됨.
- 특히 학생 수 60명을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할 경우, 강원도는 2015년 기준 전체 학교 348개교 중 210개교(54.7%)가 폐교 대상임
-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음. 학교의 폐교는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작은 학교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유출을 방지하고 폐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함.

○ 평생교육부문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함.
- 평생교육법은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²⁾를 설치(지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권 내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강원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농어촌 교통수단의 부족, 평생학습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따라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원도 내 시·군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2)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기존 행복학습센터와 동일함. 법정명칭은 평생학습센터이며, 행복학습센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명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임.

침해지고 있어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시·군별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확대·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2.2.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며, 풍부한 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6차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
 - 강원도 농어업이 1차 산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6차 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만의 특성과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아 다양한 식품들이 생산되는 지역임. 식품생산의 형태는 농가형 생산에서 품목별 또는 마을단위 조직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임.
 - 최근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형태는 농림수산물의 1차 생산과 2차 가공을 접목하고 체험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어가고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작고 유통·관광 등의 측면에서는 미약한 상태임.
- 강원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강원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산업화의 우선적 추진이 필요함.
 - 농림 생산물의 2차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차 가공산업은 마을단위, 광역단위의 단지 및 거점화를 통한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3차 산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발효산업은 시식, 음식점, 체험, 유통, 관광 등과 연계하면서 6차 산업화 추진이 필요함.

- 강원도에서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산업화, 농상공연대, 향토산업 등의 농촌관련 부가가치 제고 사업들 중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지정 상황을 통해 강원도 내 농촌경제 활성화를 분석함.
- 또한 강원도는 기업형 새농촌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마들단위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지정 외에 기업형 새농촌 지정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상황을 통해서도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분석함.

2.3. 문화·여가 부문

-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영화상영관이 없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음.
- 강원도 내 시·군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영화 상영을 통해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 영화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작은 영화관을 넘어, 복합상영관 설치를 통해 최신 개봉영화도 상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시·군별로 최신 개봉영화 상영이 가능한 작은영화관이 최소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를 선택항목 지표로 선정함.

3. 선택 항목 지표 선정

〈표 1-1〉 강원도 선택 항목 지표 선정

부문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1. 교육여건	1) 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강원에듀버스 운영 - 시·군에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 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를 확대한다.
	2) 평생교육여건 기반조성	시·군별로 평생교육도시 지정, 평생교육사배치, 행복학습센터설치지원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정주생활 기반	3)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 '13.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대비
3. 경제활동·일자리	4) 농촌경제활성화	기업형새농촌,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4. 문화·여가	5) 문화격차 해소	모든 시·군에 영화관을 설치·운영하여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4.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최초 선정한 선택 항목 지표들 중 평생교육여건 기반조성, 주거환경개선, 문화격차해소와 관련된 지표는 유지하되, 그 외 교육여건, 경제활동·일자리 관련 지표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함.
- 교육여건 부문에서 기존(2015년)에 제시한 희망만들기 학교 지표를 2016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지표를 2018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기존(2015): (희망만들기 학교 / 대상학교) × 100
 - 변경(2016): (희망만들기 교육과정 운영학교 / 대상학교) × 100
 - 변경사유

- 시범사업으로 학교별로 운영되던 희망만들기 학교가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운영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지표의 변경사유 발생
 -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1학교 1개 교육과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존재
- 기존(2015년) 교육여건 부문에 강원에듀버스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2018년 현재 변경된 지표를 유지하고 있음.
- 기존(2015): $(\text{강원에듀버스 운영 시·군 수} / \text{총 시·군 수}) \times 100$
 - 추가(2016): $(\text{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 수} / \text{강원도 초중고등학교 수}) \times 100$
 - 추가사유
 - 기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에듀버스가 2015년말 기준 강원도 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되어 운영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새로운 목표치의 추가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비 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 비율을 새로운 지표로 제시함.
- 2015년 제시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6차 산업화 지표를 2016년 변경하였으며, 2018년 현재 변경된 지표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2016년부터 강원도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기업형새농촌’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표산출공식의 새농어촌건설운동마을을 기업형새농촌 마을로 변경하였음.
 - 기존(2015): $\{ \text{현재년도 6차산업화인증사업자수} / (\text{전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마을 수} + \text{전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수}) \} \times 100$
 - 변경(2016): $(\text{현재년도 해당마을 수}^3) - \text{전년도 해당마을 수} / \text{전년도 해당마을 수} \times 100$

- 변경 사유

- 분모인 새농어촌우수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증가율이 분자인 6차 산업화인증사업자 증가율보다 높아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기존 지표를 3개 부분 합계의 증가율로 변경하여 제시

〈표 1-2〉 강원도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부문	선택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교육여건	1) 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	(희망만들기 교육과정운영 학교 / 대상학교) × 100	교육청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협조 자료
		(강원에듀버스 운영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교육청: 강원에듀버스 사업	협조 자료
		(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 수 / 강원도 초중고등학교 수) × 100	교육청: 강원에듀버스 사업	협조 자료
	2) 평생교육여건 기반조성	시·군별로 평생교육도시(지정=1, 미지정 0), 평생교육사(배치=1, 미배치=0), 행복학습센터(설치지원=1, 미지원=0)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협조 자료
2. 정주생활기반	3) 주거환경개선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 교체 주택수 /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 주택수) × 100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 지자체 조사	협조 자료
3. 경제활동·일자리	4) 농촌경제활성화	(현재년도 해당마을 수-전년도 해당마을 수) / 전년도 해당마을 수 × 100	강원농촌융복합지원센터	협조 자료
4. 문화·여가	5) 문화격차 해소	(영화관 설립된 시·군 수 / 총 시·군 수)×100	지역균형발전사업	협조 자료

3) 현재년도 해당마을 수 = 6차산업화인증사업자수 + 기업형새농촌마을 수 + 농촌체험휴양마을 수

※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기업형새농촌으로 명칭 변경

제 2 장

강원도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1. 교육여건

1.1.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 강원도 교육지원청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은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의 3가지 유형이 존재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창의적 교육과정운영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사회와 소통, 인성교육·지역사회와 학교의 만남 등을 위해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음악, 체육, 문화 등 다양한 특성화 교육 병행을 통해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 추진하는 강원도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임.

-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사업의 목적은 작은학교의 특성화(문화·예술·체육·외국어 등) 선도모델 확산, 특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업혁신과 학습공동체 활성화임.
 - 해당 사업은 2013년 시작하여 3년간 모델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15년 68개교(희망학교 25교, 선도학교 43교)를 운영하였음.
 - ‘희망학교’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컨설팅으로 2015년 이후 모든 작은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집중 컨설팅 대상학교임.
 - ‘선도학교’는 희망학교 미지정 학교 중,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 시설을 갖춘 학교로 1~2가지의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로 최대한의 성과를 볼 수 있는 학교임.
 - 희망학교와 선도학교는 2016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환하였으며, 81개교에서 운영하였음. 또한 2017년 작은학교 사업선택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음.

-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의 목적은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 및 일반화와 학교간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재구성 및 일체화임.
 - 해당 사업은 2015년 시범학교로 14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16년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으로 73개교를 운영하였음.
 - 2017년 작은학교 사업선택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음.

- 공동교육과정의 목적은 작은학교 간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고, 학교간 수업혁신과 학습공동체 지향으로 새로운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임.
 - 2015년 시범학교로 25연합 61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16년 51개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
 - 2017년 이후 공동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있음.

- 강원도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강원도는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초·중학교 수가 249개(초등학교 181개, 중학교 68개)로 전체 초·중학교(546개교)⁴⁾의 45.60%임.
 -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의 통폐합 대상⁵⁾ 기준 학생 수 임.
 - 강원도는 2015년부터 통폐합 대상학교를 대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희망학교와 선도학교는 2015년 본격운영하면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학교,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학교로 세분화되어 확대 운영되었음.
 -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이행실태는 기존 희망학교 및 선도학교에서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
 - 특성화 교육과정: 작은학교의 선도모델 육성 및 확산
 -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 및 일반화
 - 공동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시범운영 및 일반화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의 적용대상학교는 2016년까지 60명 이하 초·중학교였으나,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적용대상학교를 100명 이하 학교로 확대하였음.
 - 이에 따라 대상학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대상학교의 수와 실제 운영학교의 수가 증가하였음.
 - 기존 60명 기준에 따르면 대상학교 수가 255개교이나 대상학교를 100명

4) 초등학교 380개교, 중학교 166개교

5) 2015년 5월 13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기준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상학교 수가 319개교로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표를 산출하여 측정함
 - 교육과정은 학교별로 중복 운영되는 사례가 존재하나, 1개교 1개 교육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현황을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316개 대상학교 중 중복 포함 323개 학교가 최소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대상학교 중 교육과정 도입율 100% 이상을 달성하였음.
 - 특성화 교육과정은 316개 대상학교 중 20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은 316개 대상학교 중 77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 공동 교육과정은 316개 대상학교 중 3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 작은학교간 공동 교육과정은 초-초, 초-중, 중-중 공동 교육과정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함.
- 이 중 초-중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은 삼척시와 홍천군이며, 홍천군 화촌초등학교의 경우 초-초 공동 교육과정과 초-중 공동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2개 유형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화촌초등학교는 1개교로 계산하였음.
- 강원도 내 시·군별로는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양양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이 100% 이상⁶⁾을 달
-
- 6) 100% 이상을 도입한 지역은 대상학교 모두가 최소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1개 대상학교가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임

성하였으며, 화천군과 인제군이 각각 80.00%로 도입율이 가장 낮음.

- 도입율 100.00% 미만인 지역은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인제군임
- 본 자료는 강원도 교육지원청 자료로 속초시와 양양군은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2-1〉 교육여건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현황(2018)

구분	대상학교			희망 만들기 학교									도입율 (%)	
	합계	초	중	합계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계	초	중	계	초	중	계	초		중
강원도	316	236	80	323	208	158	50	77	48	29	38	22	16	102.22
춘천시	20	13	7	18	12	8	4	6	3	3	0	0	0	90.00
원주시	24	18	6	26	14	11	3	10	7	3	2	2	0	108.33
강릉시	21	18	3	21	13	11	2	6	5	1	2	2	0	100.00
속초시 양양군	23	20	3	24	15	13	2	5	4	1	4	4	0	104.35
동해시	4	3	1	4	3	2	1	1	1	0	0	0	0	100.00
태백시	10	7	3	10	8	6	2	2	1	1	0	0	0	100.00
삼척시	24	15	9	29	19	11	8	4	3	1	6	3	3	120.83
홍천군	34	25	9	33	23	17	6	7	4	3	3	2	1	97.06
횡성군	22	15	7	21	18	13	5	3	0	3	0	0	0	95.45
영월군	24	15	9	27	12	8	4	8	3	5	7	2	5	112.50
평창군	18	14	4	18	13	11	2	5	3	2	0	0	0	100.00
정선군	23	16	7	23	15	12	3	4	1	3	4	1	3	100.00
철원군	11	11	0	11	6	6	0	3	3	0	2	2	0	100.00
화천군	15	13	2	12	8	8	0	4	3	1	0	0	0	80.00
양구군	12	8	4	15	10	6	4	2	2	0	3	1	2	125.00
인제군	15	12	3	12	8	5	3	3	3	0	1	1	0	80.00
고성군	16	13	3	19	11	10	1	4	2	2	4	2	2	118.75

자료: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홈페이지 및 강원도 교육지원청 내부자료

■ 강원에듀버스 운영

- 강원도는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 중 강원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 강원에듀버스는 각 학교별로 관리하던 학교버스를 교육지원청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노선별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학차량 공동 활용 제도임.
- 2014년 현재 강원에듀버스는 18개 시·군 중 6개 시·군에서 운영되었음. 구체적으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등이 운영하였으며, 2015년부터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임.
 - 이에 따라 기존 제시한 에듀버스 운영 시·군 확대 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기존의 선택 항목 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2016년 선택 항목 점검·평가에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에듀버스 지원학교의 비율을 새로운 지표로 제시하였음.
 - 에듀버스지원율(%) = $\frac{\text{지원학교수}}{\text{초·중·고등학교수}} \times 100$
- 2018년 현재 강원도 670개 초·중·고등학교 중 에듀버스 지원학교는 378개교로 지원율 56.42%를 달성함.
 - 에듀버스 지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월군(137.4%)이며, 정선군(91.43%), 화천군(95.65%), 양구군(94.74%)이 90% 이상의 지원율을 달성하였음.
 - 반면, 춘천시(26.92%), 원주시(30.34%), 강릉시(37.10%), 동해시(14.29%) 등 다수의 시 지역은 에듀버스 지원율 40%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시 지역은 시내버스의 노선이 다양하고 운행횟수가 많아 에듀버스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본 자료는 강원도 교육지원청 자료로 속초시와 양양군은 하나의 교육 지원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2-2〉 교육여건 - 강원에듀버스 지원율

구분	2017년				2018년			
	도입	초중고 학교수	지원 학교수	지원율	도입	초중고 학교수	지원 학교수	지원율
강원도	18	673	367	54.53	18	670	378	56.42
춘천시	1	78	21	26.92	1	78	21	26.92
원주시	1	89	24	26.97	1	89	27	30.34
강릉시	1	62	23	37.10	1	62	23	37.10
속초시·양양군	2	44	20	45.45	2	44	22	50.00
동해시	1	28	4	14.29	1	28	4	14.29
태백시	1	25	6	24.00	1	25	11	44.00
삼척시	1	43	26	60.47	1	41	25	60.98
홍천군	1	47	29	61.70	1	47	29	61.70
횡성군	1	36	23	63.89	1	35	24	68.57
영월군	1	35	48	137.14	1	35	47	134.29
평창군	1	32	26	81.25	1	32	26	81.25
정선군	1	35	32	91.43	1	35	32	91.43
철원군	1	26	21	80.77	1	26	21	80.77
화천군	1	23	22	95.65	1	23	22	95.65
양구군	1	19	16	84.21	1	19	18	94.74
인제군	1	28	19	67.86	1	28	19	67.86
고성군	1	23	7	30.43	1	23	7	30.43

자료: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홈페이지 및 강원도 교육지원청 내부자료

1.2. 평생 교육 여건 기반 조성

- 고령화, 조기은퇴 등으로 제2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강원도 역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음.
- 강원도 내 평생학습도시는 2018년 현재 11개 시·군임.
 - 기존 지정된 10개 시·군 외에 2018년 춘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새로이 지정되었음.
 - 이에 따라 강원도는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등 11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음.
- 강원도 내 평생학습도시는 2015년 9개 시·군, 2016년 10개 시·군, 2017년 10개 시·군, 2018년 11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임.
- 2018년 현재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군은 13개 시·군임.
 - 평생교육사는 2015년 10개 시·군에 배치되었으며, 2016년 평생교육사가 배치된 시·군이 13개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평생교육사의 추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16년 평생교육사가 새로 배치된 지역은 춘천시, 태백시, 영월군임.
- 2018년 현재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군은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임.
- 강원도의 평생학습센터는 2018년 현재 12개 시·군으로 2017년과 동일함
 - 2017년 6개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새로이 지정되었으나, 2018년에는

신규 지정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없음.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2018년 현재 1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선정된 6개 시·군(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인제군)은 계속 지원되고 있으며, 2017년 6개 시·군(춘천시,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이 추가로 설치되었음.

〈표 2-3〉 교육여건 -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

구분	2017년			2018년		
	평생학습도시 (지정=1, 미지정 =0)	평생교육사 배치 (배치=1, 미배치 =0)	평생학습센터 (지원=1, 미지원 =0)	평생학습도시 (지정=1, 미지정 =0)	평생교육사 배치 (배치=1, 미배치 =0)	평생학습센터 (지원=1, 미지원 =0)
강원도	10	13	12	11	13	12
춘천시	0	1	1	1	1	1
원주시	0	0	0	0	0	0
강릉시	1	1	1	1	1	1
동해시	1	1	1	1	1	1
태백시	0	1	1	0	1	1
속초시	0	0	0	0	0	0
삼척시	1	1	1	1	1	1
홍천군	1	1	1	1	1	1
횡성군	1	1	0	1	1	0
영월군	1	1	1	1	1	1
평창군	1	1	1	1	1	1
정선군	0	1	1	0	1	1
철원군	1	1	1	1	1	1
화천군	1	1	1	1	1	1
양구군	0	0	0	0	0	0
인제군	1	1	1	1	1	1
고성군	0	0	0	0	0	0
양양군	0	0	0	0	0	0

2. 정주생활기반

■ 주거환경개선사업

-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 환경과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시범사업 당시 강원도의 슬레이트 주택은 49,908동으로 파악되었으나, 2017년 2월 재조사를 통해 강원도 슬레이트 주택은 50,279동으로 증가하였음.
 - 재조사 결과, 강원도 양구군의 슬레이트 주택이 기존 479동에서 850동으로 증가하였음.
- 2018년 현재 전체 슬레이트 주택 50,279동 중에서 15,378동을 처리하였으며, 잔여 슬레이트 주택은 34,901동이 남았음.
 - 슬레이트 주택은 2017년 대비 1,254동이 추가 철거되었음.
 - 2018년 기준 슬레이트 주택이 가장 많이 철거된 지역은 홍천군으로 1,397동이 철거되었으며, 다음으로 태백시 1,322동, 춘천시 1,308동, 강릉시 1,207동, 횡성군 1,089동, 영월군 1,054동, 고성군 1,005동 순임.
- 2017년 재조사된 슬레이트 주택 수(50,279동)를 기준으로 2018년 현재 강원도 내 슬레이트 주택 교체율은 30.59%임.
 -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횡성군(82.88%)과 양구군(80.35%)으로 80% 이상 교체되었음.
 - 다음으로 춘천시(68.02%), 홍천군(62.31%), 화천군(61.92%)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이 높은 수준임.

-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정선군(15.55%), 동해시(15.66%), 삼척시(16.00%), 원주시(18.33%)로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철거율이 16.39%로 강원도 평균 철거율의 절반 수준임.
- 강원도 슬레이트 주택 평균 철거율인 30.59%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18개 시·군 중 8개 시·군으로 10개 시·군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의 높은 철거율로 인해 평균 철거율이 상승되었음.
-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이 가장 높은 횡성군과 가장 낮은 정선군의 편차는 67.33%로 평균 철거율의 수치를 상회하고 있음.
- 강원도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은 전년 대비 2.50%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철거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초자치단체는 양구군(9.41%)임.
- 반면, 동해시(0.34%), 삼척시(0.85%), 정선군(0.87%)은 전년 대비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강원도의 전년 대비 평균 증가율 2.50%보다 증가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8개이며, 나머지 10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보다 낮음.
 - 전반적으로 주택 철거 진척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주택 철거 사업의 진행속도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 놓여촌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의 시·군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강원도 주거 여건의 개선을 위해 철거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슬레이트 주택 개선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표 2-4〉 정주생활기반 - 석면슬레이트

구분	슬레이트 주택수	2017년			슬레이트 주택수	2018년		
		처리수	잔여 슬레이트 주택수	달성률 (%)		처리수	잔여 슬레이트 주택수	달성률 (%)
강원도	50,279	14,124	36,155	28.09	50,279	15,378	34,901	30.59
춘천시	1,923	1,189	734	61.83	1,923	1,308	615	68.02
원주시	4,446	669	3,777	15.05	4,446	815	3,631	18.33
강릉시	5,837	989	4,848	16.94	5,837	1,207	4,630	20.68
동해시	3,302	506	2,796	15.32	3,302	517	2,785	15.66
태백시	2,655	1,228	1,427	46.25	2,655	1,322	1,333	49.79
속초시	1,862	391	1,471	21.00	1,862	430	1,432	23.09
삼척시	5,076	769	4,307	15.15	5,076	812	4,264	16.00
홍천군	2,242	1,349	893	60.17	2,242	1,397	845	62.31
횡성군	1,314	1,028	286	78.23	1,314	1,089	225	82.88
영월군	3,857	1,000	2,857	25.93	3,857	1,054	2,803	27.33
평창군	2,892	583	2,309	20.16	2,892	644	2,248	22.27
정선군	3,775	554	3,221	14.68	3,775	587	3,188	15.55
철원군	1,474	611	863	41.45	1,474	682	792	46.27
화천군	969	556	413	57.38	969	600	369	61.92
양구군	850	603	247	70.94	850	683	167	80.35
인제군	2,547	635	1,912	24.93	2,547	694	1,853	27.25
고성군	3,694	961	2,733	26.02	3,694	1,005	2,689	27.21
양양군	1,564	503	1,061	32.16	1,564	532	1,032	34.02

주: 강원도는 2017년 2월 석면슬레이트 현황을 재조사하였으며, 양구군이 기존 479동에서 850동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전체 슬레이트 주택 수는 2016년 49,908동이었으나, 2017년부터 50,279동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표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3. 경제활동·일자리

■ 농촌경제 활성화

- 기존 지표(2015년)는 전년도의 새농어촌우수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대비 현재년도의 6차산업화인증사업자 비율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새농어촌우수마을이 기업형 새농촌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해당 마을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르면 분모의 증가 속도가 분자의 증가 속도를 초월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음.
- 새농어촌우수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인증사업자 모두 지정과 지정탈퇴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변화율의 평균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새농어촌우수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인증사업자의 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지표를 새로이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지표는 새농어촌우수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인증사업자 합계의 증가율로 산정함.
- 단, 2016년부터 새농어촌우수마을이 기업형 새농촌으로 변경되어 추진됨에 따라 2017년부터 지표의 구성 요소인 새농어촌우수마을 수를 기업형 새농촌 마을 수로 변경하여 산출하였음.
 - 농촌경제 활성화 증가율의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음.

$$\text{증가율} = \frac{\text{현재년도 해당마을 수} - \text{전년도 해당마을 수}}{\text{전년도 해당마을 수}} \times 100$$

- 강원도는 자체 농촌개발사업으로 1999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 기업형 새농촌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선정된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마을은 210개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90개,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는 143개임.
 - 기업형 새농촌은 2017년 대비 65개 증가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2017년 대비 4개 증가하였음.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는 2017년 대비 7개 감소하였음.

■ 기업형 새농촌 지정 현황

- 2018년 현재 기업형 새농촌 지정마을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홍천군(25개), 횡성군(25개), 평창군(22개)임. 반면, 태백시(5개), 속초시(2개), 양구군(3개), 고성군(5개)은 5개 이하로 기업형 새농촌 지정마을 수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임.
- 시·군 평균 기업형 새농촌 지정마을 수는 11.67개이며, 8개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지정마을 수를 초과하고 있음.
 - 지정마을 수가 가장 많은 횡성군과 가장 적은 속초시의 격차는 23개임
 - 기업형 새농촌에 있어서 지역 간 분포는 상대적으로 고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지정마을은 평균 44.83% 증가하였으며, 기업형 새농촌 지정마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해시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음(2017년 3개 → 2018년 6개).
 - 이 외에 태백시(66.67%), 홍천군(66.67%), 평창군(69.23%), 고성군(66.67%)의 증가율이 높음.

- 반면, 속초시는 기업형 새농촌 지정마을의 수가 2017년과 동일함.

■ 농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 2018년 현재 강원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90개임. 인제군(20개), 평창군(19개), 춘천시(18개)가 가장 많으며 동해시(2개), 태백시(2개), 고성군(2개), 속초시(3개)가 가장 적음.
- 시·군 평균 농촌체험휴양마을 수는 10.56개이며, 12개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마을 수를 초과하고 있음.
 -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가장 많은 인제군과 가장 적은 동해시·태백시·고성군의 격차는 18개임.
- 강원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하였음.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영월군(22.22%), 홍천군(20.00%), 정선군(20.00%)임.
 - 반면, 강릉시는 2017년 16개에서 2018년 13개로 3개 마을이 감소하였으며, 평창군은 2017년 20개에서 2018년 19개로 1개 마을이 감소하였음.
 - 농촌체험휴양마을 수의 변동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이며, 11개 기초자치단체는 변동이 없음.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현황

- 2018년 강원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는 143개소로 2017년 대비 7개소가 감소하였음. 인증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평창군으로 22개소임. 그 외 원주시(16개소), 홍천군(15개소), 횡성군(13개소), 영월군(13개소), 정선군(10개소)이 인증사업자 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임.
- 강원도 시·군 평균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수는 7.94개이며, 7개 기초자치단

체가 평균을 상회하고 나머지 11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보다 낮음.

- 전년 대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수가 감소한 지역은 춘천시(-2), 강릉시(-3), 횡성군(-2), 영월군(-3), 철원군(-1), 화천군(-1), 인제군(-4), 양양군(-3)으로 8개 시·군에서 19개 인증사업자가 인증 탈락하였음.
 - 반면, 원주시(1개소), 태백시(1개소), 홍천군(2개소), 평창군(5개소), 정선군(3개소)의 5개 시·군에서 12개소가 추가 인증되었음.
- 강원도 평균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증감율은 -4.67%임. 인증사업자 탈락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릉시(-60.00%)이며, 인증사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정선군(42.86%)임.

■ 전체 유형 지정 현황 종합

- 2018년 현재 강원도 농촌경제활성화 지표인 3가지 유형 지정 수의 증가율은 12.89%임. 6차산업화 인증자가 감소하였으나, 기업형 새농촌 지정마을이 급증하여 전체적인 증가율은 목표치인 8.00%를 초과함.
- 3가지 유형 합계 지정 수의 강원도 평균은 30.17개임. 지정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홍천군(52개), 횡성군(53개), 평창군(63개)이며, 동해시(9개), 속초시(7개)가 가장 적은 지역임.
-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해시이며 전년 대비 50.00% 증가하였음. 그러나 전반적인 지정 수는 강원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릉시이며 전년 대비 10.71% 감소하였음. 강릉시는 전년도 28개에서 25개로 3개 감소하였음.
-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은 지정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홍

천군 14개, 횡성군 7개, 평창군 13개, 정선군 9개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증가율이 증가한 반면, 2개 기초자치단체는 전년과 동일(춘천시, 속초시)하고 2개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감소(강릉시, 인제군)하였음.

〈표 2-5〉 경제활동·일자리 - 농촌경제활성화

구분	2017년				2018년				증가율 (%)
	계	기업형새 농촌마을	농촌체험 휴양 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계	기업형새 농촌마을	농촌체험 휴양 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강원도	481	145	186	150	543	210	190	143	12.89
춘천시	38	12	17	9	38	13	18	7	0.00
원주시	35	10	10	15	39	13	10	16	11.43
강릉시	28	7	16	5	25	10	13	2	-10.71
동해시	6	3	2	1	9	6	2	1	50.00
태백시	8	3	2	3	11	5	2	4	37.50
속초시	7	2	3	2	7	2	3	2	0.00
삼척시	24	9	10	5	26	10	11	5	8.33
홍천군	38	15	10	13	52	25	12	15	36.84
횡성군	46	16	15	15	53	25	15	13	15.22
영월군	33	8	9	16	36	12	11	13	9.09
평창군	50	13	20	17	63	22	19	22	26.00
정선군	28	11	10	7	37	15	12	10	32.14
철원군	21	6	11	4	22	8	11	3	4.76
화천군	21	6	7	8	23	9	7	7	9.52
양구군	18	2	8	8	19	3	8	8	5.56
인제군	39	8	20	11	38	11	20	7	-2.56
고성군	9	3	2	4	11	5	2	4	22.22
양양군	32	11	14	7	34	16	14	4	6.25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4. 문화·여가

■ 문화격차 해소

- 작은영화관은 중소 시·군 지역의 문화 향유 기본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극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전국 동시 개봉하는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을 건립하는 사업임.
- 강원도 농어촌 지역은 도농복합시 및 시지역을 제외하면 개봉관이 없어 최신 영화를 보기 위해 인근 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이와 같은 번거로움과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강원도 작은영화관 추진사업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로 15개 시·군에 대형 멀티플렉스 및 작은영화관이 건립·운영되고 있음.
 - 2016년 기준 멀티플렉스 및 작은영화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11개였으나 2년간 4개 지역에 작은영화관이 추가로 설치되었음.
 - 2018년 현재 11개 군 지역 중 9개 군 지역에 작은 영화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2018년 신규 건립·운영된 작은영화관은 횡성군, 양구군, 인제군에 위치하고 있음.
- 강원도에서 작은영화관 등 영화관이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임.
 - 태백시는 2019년 작은영화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고성군은 자체적으로 ‘여유로운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신 영화를 동시 개봉하는 작은영화관은 건립되지 않은 상황임.

- 양양군은 2019년 초 개관을 목표로 작은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작은영화관 수탁운영자 공개모집을 시작하였음.

〈표 2-6〉 문화·여가 - 영화관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영화관 설치 운영시·군 (설치=1, 미설치 0)	영화관 설치 운영시·군 (설치=1, 미설치 0)	영화관 설치 운영시·군 (설치=1, 미설치 0)
강원도	11	12	15
춘천시	1	1	1
원주시	1	1	1
강릉시	1	1	1
동해시	1	1	1
태백시	0	0	0
속초시	1	1	1
삼척시	1	1	1
홍천군	1	1	1
횡성군	0	0	1
영월군	1	1	1
평창군	1	1	1
정선군	0	1	1
철원군	1	1	1
화천군	1	1	1
양구군	0	0	1
인제군	0	0	1
고성군	0	0	0
양양군	0	0	0

제 3 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중기목표치

1. 선택 항목 중기목표치 설정

- 강원도는 4개 부문 5개 선택 항목 7개 지표를 선정하고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였음.
- 교육여건 부문의 지표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과정 운영은 2016년 목표치를 80%로 설정하였으며, 매년 1% 증가를 목표치로 제시하였음.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과정 운영은 이미 상당수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어 향후 증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목표치를 설정
- 강원에듀버스 운영은 시·군별 도입 지표와 에듀버스 지원학교 비율 지표의 2개로 구성되어 있음.
 - 에듀버스는 2016년 18개 시·군에 모두 도입되어 기존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 지표로 지원학교 비율을 추가하였음.
 - 지원학교 비율은 2016년 48%를 목표치로 제시하였으며, 매년 2% 증가를 목표로 제시하였음.

- 평생교육여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교육사 배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의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2019년까지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 받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음.
 - 평생교육사 배치는 2019년까지 12명의 평생교육사를 시·군별로 배치하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음.
 - 평생학습센터는 2019년까지 10개 설치하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음.
- 정주생활기반-주거환경 개선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실적을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2019년까지 28% 개량하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음.
- 농촌경제활성화는 기업형새농촌,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인증사업자 합계의 증가율이며 매년 전년 대비 8% 증가를 목표치로 제시하였음.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영화관 설치·운영은 2019년까지 12개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상영관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음.

부문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목표치			
			'16	'17	'18	'19
교육 여건	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과정 운영	80%	81%	82%	83%
		강원에듀 버스운영	시·군별 도입	100% (달성)	100% (달성)	100% (달성)
	전체학교 대비 에듀버스 지원학교 비율		48%	50%	52%	54%
	평생교육 여건 기반조성	시·군별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교육 사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도시: 10 -교육사 : 10 -센터: 8	-도시: 10 -교육사 : 11 -센터: 8	-도시: 10 -교육사 : 11 -센터: 9	-도시: 11 -교육사 : 12 -센터: 10

부문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목표치			
			'16	'17	'18	'19
정주생활 기반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	20%	22%	25%	28%
경제활동 ·일자리	농촌경제 활성화	기업형새농촌,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 산업화 인증사업자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전년대비 8% 증가	전년대비 8% 증가	전년대비 8% 증가	전년대비 8% 증가
문화·여가	문화격차 해소	시·군별 영화관 설치·운영	9개소	10개소	11개소	12개소

2. 선택 항목 중기목표치 달성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과정 운영은 2018년 목표치가 82.00%였으나 100.00%로 18.00% 초과 달성하였음.
- 에듀버스 시·군별 도입은 18개 시·군에 100% 도입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에듀버스 지원학교 비율은 2018년 목표치 52.00%를 4.42% 초과 달성하여 56.42% 지원하였음.
- 평생교육여건 기반 조성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10개 시·군, 평생교육사 배치 시·군 11개,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군 9개를 2018년 목표치로 제시하였음. 2018년 현재 평생교육도시 지정 시·군 11개, 평생교육사 배치 시·군 13개,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군 12개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

7) 개량 대상 석면 슬레이트 총량은 2013년 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수치에서 2017년 2월 재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였음.

- 농어촌주택 석면 슬레이트 개량은 2018년 목표치인 25% 개량을 5.59% 초과한 30.59%를 개량하였음.
-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형새농촌,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인증사업자 증가율은 목표치인 전년 대비 8% 증가율을 4.89% 초과하여 12.89% 증가하였음.
- 시·군별 영화관 설치·운영은 2018년 목표치 11개 시·군 설치를 초과하여 15개 시·군에 설치·운영하고 있음.

부문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2018년 목표치	2018년 달성
교육여건	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과정 운영	82%	100%
		강원 에듀 버스 운영	100% (달성)	100%
		시·군별 도입 전체학교 대비 에듀버스 지원학교 비율	52%	56.42%
	평생교육 여건 기반조성	시·군별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도시: 10 -교육사: 11 -센터: 9	-도시: 11 -교육사: 13 -센터: 12
정주생활 기반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 ⁸⁾	25%	30.59%
경제활동·일자리	농촌경제 활성화	기업형새농촌,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전년대비 8% 증가	전년대비 12.89% 증가
문화·여가	문화격차 해소	시·군별 영화관 설치·운영	11개소	15개소

8) 개량 대상 석면 슬레이트 총량은 2013년 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수치에서 2017년 2월 재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였음.

제 4 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 지역사회 소외계층 영양관리 서비스(소통밥상) 사례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1. 사업의 필요성

■ 결식 아동 수의 증가

- 저소득층 아동은 시간, 공간, 공적지원체계에 따라 밥에 대한 경험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 밥은 먹을거리 이상의 의미로서 어린 시절의 총체적 박탈경험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표적 의미를 가짐⁹⁾.
- 아동에게 ‘밥’은 가정 내 돌봄이 결여되어 있고, 영양가 있는 먹을거리의 부족,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의 부재 등 총체적인 결핍 순환구조 속에서 ‘배고픔’과 같이 전적인 박탈감으로 인지됨.

9) 서상희, 정진주, 2014, 저소득층 아동의 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결식경험을 중심으로

- 반면, 학교급식이나 지역아동센터 급식과 간식은 공동식사로서의 즐거움, 맛보는 즐거움, 영양가 신뢰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남.¹⁰⁾
- 2017년 기준 정부 추산의 결식아동 수는 40여만명에 달하며, 결식아동 대부분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족, 보호자 가출 가정 등의 취약계층임. 지자체는 ‘결식아동 지원 급식카드’를 보급하고 있으나 실제 식사비용에 미치지 못하며, 해결방식 역시 아동 스스로가 선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대두됨¹¹⁾.

■ 노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

- 결식의 문제는 아동층만의 문제는 아님.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일수록 건강관리 취약하고 영양섭취의 관리가 매우 필요함.
- 강원도의 경우 고령인구가 2015년 기준 전체인구의 17.2%에 달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4순위에 오르며 빠른 고령화 진행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노인의 건강상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 37%, 그저 그렇다 34.6%로 만족하는 25.9%를 크게 상회하며 도내 노인층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나타냄..

■ 지속적인 ‘영양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영양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 자립 노력 필요

10) 상계서

11) MBN 뉴스, 2017.05.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결식아동은 갈수록 증가한다’

- 영양결핍과 결식에 대한 정책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무료급식, 시설이용아동에 대한 급식(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과 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특정계층(영유아, 임산부, 질환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지도, 영양식 지원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 민간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무료도시락, 이동밥차 등의 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특정기간의 행사성으로 추진되는 한계도 발견되어 ‘올바른 식사’로 인한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영양적인 자립을 지원할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을 추진함.
- 기존의 영양사업과 같은 급식, 식품 지원의 형태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공간을 바탕으로 함께 밥을 먹고 돌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본인의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부가하였음.
- 특히 지역사회 돌봄을 표방하고, 함께 밥을 먹는 지역주민간의 결속과 지지를 서비스 제공의 비전으로 하여 개인의 영양관리는 물론 지역사회내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에 기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임.

■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유도를 위한 별도 서비스 개발 필요

- 사회서비스의 발전전략으로 대두되는 사회적경제와의 협업이라는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서비스의 경우 강원도내의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진입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님(강원도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대부분 재화의 생산, 가공, 유통 또는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임).
-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는 법률의 등록기준상 전문자격, 학력,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지역주민이 서비스 공급

자로 진입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 요구되며 전문인력의 수급 및 고용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이 예상된다.

- 이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별도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많은 활동경험과 인력양성의 경험이 있는 자활영역에의 시범적 참여를 유도함.
-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이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강원도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육성·발전함을 기대해볼 수 있음.

1.2. 사업의 목적

- 스스로 안전한 식자재를 관리,섭취하기 어려운 아동, 1인 중장년층, 노인층을 대상으로 식사지도, 식자재관리교육, 영양섭취지도 등의 영양·신체건강 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양관리 취약계층의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소셜다이닝(Social Dining)으로 지역사회내에서 소외된 1인가구, 결식아동 등이 함께 식사하고 안부를 물으며 ‘돌봄’의 관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2.1.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 추계

- 55세 이상 1인 가구 및 미취학·초등학생 결식아동 수 추정
 - (55세 이상 1인가구 수 추정) 533,687 명 * 31.2% = 166,510명
 - (미취학·초등학생 결식아동 수 추정/ 5~18세 기준) 221,021명 * 30% = 66,306명
- ※ 주) 55세 이상 1인가구 수는 55세 인구수에 강원도 1인가구 비율(2015년)을 곱한 값임
- ※ 주) 미취학·초등학생 결식아동 수는 5~14세 아동인구에서 국가통계 결식율 30%를 곱한 값임
- ※ 자료 :강원통계연보, 2017,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제외)

■ 선정 기준

- 연령기준: 만 5세~ 18세 아동청소년과 만 55세 이상 장년 및 노인층
- 가구특성
 - 아동청소년의 경우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장애인부모가정
 - 55세 이상의 경우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모두 1인가구로 확인되는 1인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기타사항

-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용가정(타 가구원이 이용할 경우)은 서비스 동시이용 불가
-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서비스 동시이용 불가
- 시설입소자, 의료기관입원자의 경우 입소 및 입원기간 중 서비스 이용 불가

2.2.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지역 내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이용자 집단에 맞게 서비스 제공 가능
 - 단, 안전 관리를 위하여 「2. 공동식사 서비스」를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관방문, 집단활동형으로만 제공 가능
- 「2. 공동식사서비스」의 경우 식사그룹의 특성을 반영하여 식단 구성이 원칙
- 집단활동형의 경우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 한정(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 불가)
 - 읍면동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에서 확보가능한 유희공간이 있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이 있는 주무부서의 시설사용승인이 필요(승인 후 활용)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집단 규모	제공방식
1. 사전검사	- 식습관 형태 파악 - 섭취장애요인 분석 - 건강상태(체력, 인바디 등) 파악 - 우울감 또는 자존감 평가 *서비스 최초월에 2.3의 서비스 1회기 대체·병행 가능	월1회 (최초 월) 60분 이상	1:1	재가방문 기관방문 집단활동
2. 공동식사 (소셜 다이닝)	- 제공인력은 매회 식사의 주제, 구성원, 준비과정별 분담체 계, 식사진행시의 대화진행 전담 - 구성원간의 네트워크, 소통이 기반된 식사와 섭취과정 지 도 프로그램 구성 필수 - 가급적 읍면동 기준의 지역단위로 집단을 구성함을 권고 - 식사는 매회 주제가 있는 식사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영양과 저작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예시) 봄날 향사를 이기는 영양식/ 근골격을 지키는 영양 식/ 조상들의 건강법상 등 ※ 화기 등을 활용한 조리나 노동의 형태로 보이는 설거지 등은 제외 ※ 단순도시락 배달, 무료급식 형태 제공 불가 ※ 친환경·안전 안심 식자재 활용 권고	월8회 (주1회이상 권고) 60분 이상	1:3~1:8 이하	기관방문 집단활동 (재가방문 불가)
3. 식지도 및 교육	- 가정내 식자재 구입, 관리방법 안내 - 대상자 질함, 가구 특성에 맞는 조리법 교육 - 식자재, 조리상황의 안전관리 지도 - 저작, 삼킴 등 식사방법 및 행위 지도 등 - 가정통신문 반드시 매회 제공 - 2)공동식사 서비스와 같은 날짜에 제공 가능	월4회 60분 이상	1:1~1:8 이하	재가방문 기관방문 집단활동
4. 사후검사	- 자가 영양관리 점검 (식자재, 관리, 식사준비 등 자립이행 점검 중심) - 우울감 또는 자존감 평가*서비스 마지막월에 2.3의 서비스 1회기 대체·병행 가능	월1회 (마지막월) 60분 이상	1:1	재가방문 기관방문 집단활동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의 소득등을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
- 2단계: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실시
- 3단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 4단계 : 이용자별 사전검사 실시

- 5단계: 8명 이하의 이용자 그룹 형성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6단계: 반기별 이용자 만족도 평가
- 7단계: 이용자별 사후검사 실시
- 8단계: 종료 상담 및 이용자별 서비스 효과 측정, 서비스 구매 욕구 조사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대상지역은 18개 시·군 전체로 계획하나, 실제 지역별 자활센터, 자활기업의 상황에 따라 2019년 최초 시작에 모든 시·군이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음.
- 2017년 기준 양구군의 경우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 지역자활센터 설립 시 사업대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계
- 2019년에는 3개 지역으로 한정하여 우선 실시하고(시범사업 형태), 서비스 성과나 사업계획의 현실적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점차 지역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구상
- 지역자활 관련 외 기관의 진입 요청 가능성
 - 2019년 시범 운영 후, 제공인력육성과정 교육기관(강원도광역자활센터)와 협의하여 자활의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 확대 유도

2018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원 광 회 수석연구위원
최 은 희 연 구 위 원

차 례

제1장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123
- 2. 연구내용 124

제2장 선택 항목 지표

- 1. 정주환경기반 125
- 2. 경제활동·일자리 128
- 3. 보건·복지 129
- 4. 안전 131

제3장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정주환경기반 134
- 2. 경제활동·일자리 138
- 3. 보건·복지 139
- 4. 안전 140

제4장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정책제언

- 1. 이행실태 점검결과 143
- 2. 정책제언 147

제5장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우수사례 148

표 차례

제2장

<표 2-1> 충청북도 선택 항목 및 목표	133
-------------------------------	-----

제3장

<표 3-1> 시군별 석면슬레이트 현황	135
<표 3-2> 시·군별 시내버스 운행마을 현황	136
<표 3-3> 시·군별 행복택시 운행마을 현황	137
<표 3-4>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138
<표 3-5> 시·군별 노인자살률 현황	140
<표 3-6> 시·군별 마을(행정리) CCTV 현황	141
<표 3-7> 충청북도 서비스기준 실적	142

제4장

<표 4-1> 주거환경 정비 현황	144
<표 4-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현황	144
<표 4-3> 마을기업 현황	145
<표 4-4> 노인자살률 현황	146
<표 4-5> HD급 CCTV 현황	146

그림 차례

제5장

<그림 5-1> 옥천살림협동조합 조직도	151
-----------------------------	-----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의 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농어촌지역은 활력을 잃고 쇠퇴위기에 처함.
 - 농어촌지역의 축소는 농어촌 주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생활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를 가져오며, 도농 간 공공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발생함
 -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할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을 의미함.
 - 7개 부문 17개 핵심 항목과 지자체 자율관리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검, 평가하고 있음.
 - 핵심 항목은 ‘국가 최소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며 ‘선택 항목’은 지역 여건과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함.

- 충북은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삶의 질 정책 추진 필요에 따라 제3차 삶의 질 향상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과 연동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실행력과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 간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의 운용실태를 통해 충북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변화를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더 나아가 각 지자체의 수범사례 발굴을 통해 정책을 확산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 이행 실태 점검·평가
 - 석면슬레이트,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마을기업, 노인자살률, 방범 CCTV 설치
- 충청북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제 2 장

선택 항목 지표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부합하는가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현황과 도정의 목표 및 정책 검토가 필요함.
- 선택 항목의 일관성을 위한 2015년 이래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6년~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함.

1. 정주환경기반

1.1. 석면슬레이트

■ 선정배경

- 우리나라 농촌에는 아직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으며, 약 8년 이상된 석면슬레이트는 석면 분진을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석면 분진은 미국산업 안전 보건청(OSHA)이 선정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로

인체에 들어오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누적되어 암을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밝혀지면서 현재는 사용이 전면 중지된 상황임.

- 그러나 아직도 농어촌지역에서는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을 우선 철거대상으로 2021년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계획하에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내용

농·산·어촌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 점검방법

$$\frac{(\text{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해당주택수})}{(\text{총슬레이트 주택수})} \times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충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 7기
석면슬레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 농어촌 교량자 등 취약계층 주거 여건개선 	-

1.2.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 선정배경

-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이 취약하여 주민들은 기본적인 교통권을 보장받기 어려움.
- 대중교통서비스 소외지역은 주로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음. 삶의 질 저하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점검을 통해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내용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
 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수단을 공급한다

■ 점검방법

$$\frac{(\text{시·군 전체마을 수}) - (\text{마을과 버스정류장거리가 } 700m \text{ 이상인 마을})}{(\text{시·군 전체 마을(행정리)수}} \times 100$$

* 주: 자료의 미비에 따라 마을과 버스정류장거리가 700m이상인 마을=행복택시운영마을로 대체. 행복택시운영마을수가 증가할 경우 시내버스운행률이 감소함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충청북도 '시골마을 행복택시'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충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 7기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학생 통학여건개선 -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확대

2. 경제활동·일자리

■ 선정배경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이윤추구가 아닌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사회적 관계의 회복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을 의미함.
-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기반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농어촌 이익활동에 도움을 준다

■ 점검방법

$$\frac{\text{각 유형별 단체수}}{\text{총 시·군의 읍·면수}} \times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현황(사람과 경제 제공)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충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 7기
마을기업 (유형별 단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 활성화 지원 -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시도입을 통한 농민 삶의 질 향상 - 서민경제 지원 -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3. 보건·복지

■ 선정배경

-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해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같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입을 실천하고 있음.
- 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은 53.3명(보건복지부, 2018)로 OECD 평균 노인 자살률 18.4명의 3배 수준에 이룸

- 노인자살은 사회적 네트워크 붕괴에 따른 상실감에 따른 마지막 선택으로 충북도는 자살·고독사 전담조직 신설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제시함.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보다 정교한 노력을 위해 현황을 진단하는 기준이 필요함.

■ 내용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킨다

■ 점검방법

$$\frac{\text{시·군 60세 이상(노인) 자살사망자수}}{\text{시·군 전체연령 자살사망자수}} \times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자료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충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 7기
노인자살률	- 지역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자살·고독사관리 전담조직 신설 - 경로당 지키미 사업

4. 안전

■ 선정배경

- CCTV는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죄사각지대를 제거하여 시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입
- CCTV는 산불방지, 쓰레기 불법투기, 범인용의자 색출, 교통·통제, 범죄의 억제와 예방 등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활용됨.
- CCTV는 일정 수준 설치된 상태이므로 이제는 해상도를 고화질로 변경하였는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 내용

CCTV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설치된 방범용 CCTV를 HD급 이상으로 개선한다.

■ 점검방법

$$\frac{HD급\ CCTV설치대수}{총\ CCTV설치대수} \times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충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 7기
HD급 CCTV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표 2-1〉 충청북도 선택 항목 및 목표

구분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점검방법	점검지표	17년 실적			목표치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19년	
1. 장주 생활 기반	석면슬레이트	농산어촌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을 매년5% 이상 감소시킨다.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호수 / 총 슬레이트주택 수) × 100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호 수, 총 슬레이트 주택 수	3.47%	5.61%	5%	5%	
	대중교통취약 지역지원사업	농촌교통복지모델을 발굴·운영한다	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수단 공급한다	(시군 전체마을수) - (행복택시운행마을 수) / (시군전체마을) × 100	시내버스 운행마을 수,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수	92.52%	93.03%	93.9%	96%	
2. 경제활동/ 일자리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농어촌 이인활동에 도움을 준다	37지 유형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단체를 읍·면 당 2개소 이상 운영 되도록 한다	각 유형별 단체 수 / 총 읍·면 수 × 100	마을기업 단체 수, 사회적기업 단체 수, 협동조합 단체 수	2.41개소	3.46개소	2개소	2개소	
3. 보건복지	자살률	노인자살비율을 감소시킨다	노인자살률은 30%이하로 감소시킨다	(각 시군의 60세이상 노인인구 자살자수/시군전체연령 자살사망자수) × 100	60세이상 자살자수, 총자살자수	36.9%	38.4%	32%	29%	
4. 안전	방범설비	CCTV설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범용 CCTV를 HD급이상으로 개선했다	HD CCTV로 100% 교체한다	(HD급 CCTV 설치개수 / 총 CCTV 설치개수) × 100	HD급 CCTV 설치개수, 총 CCTV 설치 개수	90.0%	90.5%	100%	100%	

제 3 장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정주환경기반

1.1. 석면슬레이트

■ 목표: 감소율 매년 5%씩 달성

- 충청북도는 4,697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슬레이트 지붕 1,398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 한 동당 3.36백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함.
- 충청북도의 주거용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은 2017년 43,586호이며 2017년도 총 1,965동을 철거하여 4.51%의 감소율을 나타냄.
- 각 시·군별 개선율은 괴산 9.73%, 진천 8.80%, 음성 6.91%, 증평 6.29%, 제천 5.65%, 청주 5.08%로 총 6개의 시군에서 목표치인 5% 이상을 달성함.
- 반면, 5% 미만 감소율을 보인 지역은 충주를 제외한 초고령화지역(보은, 옥천, 영동, 단양)으로 나타남.

〈표 3-1〉 시군별 석면슬레이트 현황

(단위: 호, %)

구분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해당 주택수 (A)	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 현황						개선율 (B/A)
		배정물량			추진실적			
		2018	2017	2016	2018 (예정)	2017 (B)	2016	
청주	6,511	268	270	330	286	331	364	5.08
충주	5,597	120	120	120	126	200	194	3.57
제천	3,029	120	120	110	55	171	171	5.65
보은	3,293	110	110	150	82	140	200	4.25
옥천	6,686	150	150	180	183	273	320	4.08
영동	5,857	130	130	180	198	199	231	3.40
증평	1,018	50	50	80	46	64	76	6.29
진천	1,432	100	100	11	76	126	167	8.80
괴산	2,004	150	150	210	133	195	238	9.73
음성	2,678	130	130	140	150	185	180	6.91
단양	5,481	70	70	90	63	81	118	1.48
전체	43,586	1,398	1,400	1,700	1,398	1,965	2,259	4.51

자료: 충청북도 도청 내부자료

주1: 석면슬레이트 현황과 개선사업 해당 주택수는 2018년도에 새로 파악한 현황자료로 변경함.

주2: 2018년도 추진실적은 아직 사업년도가 완료되지 않아 예정된 수치임

주3: 개선사업으로 인한 감소율은 2017년 자료를 활용함

1.2.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 목표: 대중교통 수혜마을 비율 95%로 상승

- 충청북도의 시내버스는 총2,852개의 행정리 중 2,620개 리를 운행 하고 있으며 운행되지 않는 소외지역은 232개리로 나타남.
- 충북의 지자체 중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은 충주 46개, 진천 39개, 음성 35개의 순으로 많으며, 옥천은 모든 마을에 버스가 운행중임.

〈표 3-2〉 시·군별 시내버스 운행마을 현황

(단위: 마을, 세대, 명)

구분	전체 마을수 (A)	시내버스운행 마을수 (B)	행복택시 운행마을	시내버스 운행률 (B/A)
청주	596	570	26	95.64
충주	337	291	46	86.35
제천	157	140	17	89.17
보은	247	232	16	93.93
옥천	220	220	20	100.00
영동	131	105	32	80.15
증평	108	106	2	98.15
진천	292	253	39	86.64
괴산	282	263	19	93.26
음성	331	296	35	89.43
단양	151	144	7	95.36
전체	2,852	2,620	259	91.87

주1. 전체마을수 = 행정리

주2. 시내버스운행마을수= 전체마을수 -행복택시운행마을

- 시내버스 정류장과 700m 이상 떨어진 마을회관까지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교통수요가 적은 오지마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따른 대안으로 충청북도에서는 농촌 낙후지역 대중교통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교통 오지마을에서 버스가 다니는 면이나 읍내 마을까지 버스요금만을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일반 택시회사에서 기사별로 순번을 정하여서 교통 오지마을 주변 마을이나 택시 대기소에서 대기하다가 주민이 호출을 할 시에 오지마을의 마을회관으로 가서 주민을 태우고 환승이 가능한 정류장에 내려주는 체계
- 2017년 12월 기준 행복택시 운행마을은 259개로 총 6,173세대, 11,919명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음.

- 행복택시 운행 수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주 1,284세대, 2,675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증평 39세대, 56명으로 나타남.

〈표 3-3〉 시·군별 행복택시 운행마을 현황

(단위: 마을, 세대, 명)

구 분	운행마을수			운행세대수 (’18년 1월)	이용주민수 (’18년 1월)
	’17년 1월	’17년 7월	’17년 12월		
청주	17	23	26	592	1,177
충주	38	46	46	1,284	2,675
제천	16	16	17	299	633
보은	16	16	16	372	688
옥천	13	13	20	215	389
영동	30	31	32	886	1,941
증평	2	2	2	39	56
진천	22	37	39	967	1,698
괴산	17	17	19	462	851
음성	25	35	35	978	1,654
단양	6	6	7	79	157
전체	202	242	259	6,173	11,919

주: 세대수, 주민수는 ’18년 1월 기준으로 작성, 운행마을수는 ’17년도를 기준으로함.

자료: 충청북도 도청 내부자료

2. 경제활동·일자리

■ 목표: 각 읍면동 1개에 유형별 단체 2개 이상

- 충청북도에 설립된 사회적 경제조직은 마을기업 79개소, 사회적기업 130개소, 협동조합 436개소로 각 1개 읍면동당 4.22개소의 조직이 설치됨.
- 마을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영동 14개소, 사회적 기업은 청주 62개소, 협동조합은 청주 215개소임. 평균 단체 수는 증평이 7.5개소로 가장 높고, 청주 6.70개소, 영동 4.64개소의 순으로 나타남.

〈표 3-4〉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읍면동 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각 1개 읍,면,동 단체 수
청주	43	11	62	215	6.70
충주	25	6	10	53	2.76
제천	17	5	20	45	4.12
보은	11	6	5	15	2.36
옥천	9	6	7	12	2.78
영동	11	14	6	31	4.64
증평	2	4	3	8	7.50
진천	7	6	6	9	3.00
괴산	11	12	4	15	2.82
음성	9	3	3	22	3.11
단양	8	6	4	11	2.63
전체	153	79	130	436	4.22

주: 각 1개 읍, 면, 동 단체 수는 개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100을 곱하지 않음

3. 보건·복지

■ 목표: 노인 인구의 자살비율을 30%로 감소

- 충청북도 자살자는 2017년 447명으로 2016년 보다 70명 감소함.
- 노인자살률은 2015년 38.36%, 2016년 38.49%, 2017년 39.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지역별로 2017년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은 진천 66.67%이었으며, 옥천 53.33%, 음성 51.72%, 괴산 50.00% 순으로 나타남.
- 노인자살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단양 14.29%, 증평 25.00%, 청주 33.99%의 순임.
- 노인자살률은 진천, 괴산, 단양과 같은 지역은 매년 변동성이 큰 것을 특징으로 함.

〈표 3-5〉 시·군별 노인자살률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60대 이상		전체	60대 이상		전체	60대 이상	
		N	%		N	%		N	%
청주	212	75	35.38	255	81	31.76	203	69	33.99
충주	57	24	42.11	73	29	39.73	62	27	43.55
제천	54	22	40.74	42	18	42.86	42	16	38.10
보은	20	14	70.00	12	7	58.33	15	7	46.67
옥천	19	7	36.84	20	11	55.0	15	8	53.33
영동	19	9	47.37	24	11	45.83	26	11	42.31
증평	14	5	35.71	10	4	40.0	16	4	25.00
진천	24	5	20.93	25	5	20.0	24	16	66.67
괴산	17	6	35.29	15	11	73.33	8	4	50.00
음성	29	9	31.03	31	14	45.16	29	15	51.72
단양	12	7	58.33	10	8	80.0	7	1	14.29
전체	477	183	38.36	517	199	38.49	447	178	39.82

자료: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자료

주: 본 지표에서 노인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설정

4. 안전

■ 목표: HD급 CCTV로 100% 교체

- 충청북도에 설치된 CCTV는 9,938대이며 이 중 HD급 CCTV는 9,406대로 94.65%임.
- HD급 CCTV가 100.0% 설치된 곳은 11개 시군 중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3개 지역이며 제천시 99.88%, 충주시 98.54%, 영동군 96.20% 순으로 충북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인 곳은 괴산 86.68%임.

〈표 3-6〉 시·군별 마을(행정리) CCTV 현황

(단위: 대, %)

구 분	CCTV 설치 현황		HD급 CCTV 비율
	전체 CCTV 설치	HD급 CCTV	
청주	3,374	3,035	89.95
충주	1,099	1,083	98.54
제천	1,700	1,698	99.88
보은	368	349	94.84
옥천	395	380	96.20
영동	398	379	95.23
증평	235	235	100.0
진천	803	744	92.65
괴산	473	410	86.68
음성	773	773	100.0
단양	320	320	100.0
총계	9,938	9,406	94.65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

주: HD CCTV 는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정

〈표 3-7〉 충청북도 서비스기준 실적

구분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점검방법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실적	목표치
							19년
1. 정주 생활 기반	석면슬레이트	농산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호수 / 총 슬레이트주택 수) × 100	3.47%	5.61%	4.51%	5%
	대중교통취약 지역지원사업	농촌형교통복지모델을 발굴·운영한다	(시군 행정리)-(행복택시운행마을수) / (시군행정리) × 100	92.52%	93.03%	91.2%	96%
2. 경제활동/일자리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농어촌 이익활동에 도움을 준다	각 유형별 단체 수 / 총 읍·면 수) × 100	2.41개 소	3.46개 소	4.08개소	2개소
3. 보건복지	자살률	노인자살비율을 감소시킨다	(각 시군의 60세이상 노인인구자살자수 / 시군전체연령 자살사망자수) × 100	36.9%	38.4%	39.82%	29%
4. 안전	방법설비	CCTV설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법용 CCTV를 HD급이상으로 개선한다	(HD급 CCTV 설치개수 / 총 CCTV 설치개수) × 100	90.0%	90.5%	94.65%	100%

제 4 장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정책제언

1. 이행실태 점검결과

■ 석면슬레이트

- 석면슬레이트 지붕 감소율은 군지역 5.62%, 시지역이 4.77%로 군지역의 개선사업으로 인한 감소율이 시지역보다 1.11%p 높음.
- 개선사업으로 인한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괴산군 9.73%로 충청북도 전체 평균인 4.51%의 2배 이상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단양군 1.48%로 나타남.
- 괴산군과 단양군의 개선을 격차는 6배 이상 발생함.

〈표 4-1〉 주거환경 정비 현황

(단위: %, 호)

지표	구분	석면슬레이트 주택수	개선율	최댓값	최솟값
주거환경 정비 현황	전체	43,586	4.51	9.73 (괴산군)	1.48 (단양군)
	시 지역	15,137	4.77	5.65 (제천시)	3.57 (충주시)
	군 지역	28,449	5.62	9.73 (괴산군)	1.48 (단양군)

■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 정주환경기반 개선사업의 하나로 대중교통 정비 현황을 보면 대중교통 보급률은 91.22%로 시 지역 91.83%, 군 지역 90.87%로 나타남.
 - 대중교통은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0.96%p 더 많이 보급됨.
- 대중교통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증평군으로 98.15%, 가장 낮은 지역은 영동군 86.09%로 12.06%p의 격차가 발생함.
- 시 지역간 격차는 9.29%p, 군 지역은 12.06%p로 군 지역간 격차가 더 높게 발생함.

〈표 4-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현황

(단위: %, 마을)

지표	구분	시내버스 운행률	시내버스 운행마을	최댓값	최솟값
대중교통 정비 현황	전체	91.22	2,693	98.15(증평군)	86.09(영동군)
	시 지역	91.83	1,001	95.64(청주시)	86.35(충주시)
	군 지역	90.87	1,692	98.15(증평군)	86.09(영동군)

■ 마을기업

- 1개 읍면동 당 마을기업은 4.22개소가 운영 중
- 총 마을기업은 645개이며 시 지역 427개, 군 지역 218개로 시지역이 209개 더 많이 설치되었음.
- 시군별로 청주시가 288개로 가장 많으며, 가장 적은 곳은 증평군이 15개소로 같은 군 지역인 영동군의 30% 수준임.

〈표 4-3〉 마을기업 현황

(단위: 개)

지표	구분	마을기업 수	각 1개 읍면동 단체수	최댓값	최솟값
마을기업 현황	전체	645	4.22	288 (청주시)	15 (증평군)
	시 지역	427	5.02	288 (청주시)	69 (충주시)
	군 지역	218	3.21	51 (영동군)	15 (증평군)

■ 노인자살률

- 노인자살자는 시 지역 112명, 군 지역 66명 총 178명임.
- 노인자살률은 전체 자살인구의 39.82%로 시 지역 36.48%, 군 지역 47.14%임.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10.66%p 더 높음.
-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진천군 66.67%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단양군 14.26%로 두 지역 간 격차는 52.41%p로 나타남.

〈표 4-4〉 노인자살률 현황

(단위: 명, %)

지표	구분	노인 자살자	평균	최댓값	최솟값
노인 자살비율 현황	전체	178	39.82	66.67 (진천군)	14.26 (단양군)
	시 지역	112	36.48	43.55 (충주시)	33.99 (청주시)
	군 지역	66	47.14	66.67 (진천군)	14.26 (단양군)

■ 방법설비

- HD급 CCTV 보급률은 94.65%이며 군 지역 95.35%, 시 지역 94.22%로 군 지역의 설치율이 다소 높음.
- 3개 군 지역에서는 100.0%가 설치되었으며 진천군이 86.68% 설치되어 13.32%p의 격차를 보임.

〈표 4-5〉 HD급 CCTV 현황

(단위: %, 대)

지표	구분	CCTV 설치현황	HD급 CCTV 비율	최댓값	최솟값
HD급 CCTV	전체	9,938	94.65	100 (음성군, 증평군, 단양군)	86.68 (청주시)
	시 지역	6,173	94.22	99.88 (제천시)	89.95 (청주시)
	군 지역	3,765	95.35	100 (음성군, 증평군, 단양군)	86.68 (진천군)

2. 정책제언

■ 데이터 수집의 한계

- 5개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충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는 개선되고 있는 지표 2개(마을기업, 방범설비), 악화된 지표 2개(대중교통취약지역지원사업, 자살률), 노력중인 지표(석면슬레이트)로 나타남.
- 대중교통취약지역지원사업의 시내버스운행마을수 및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700m이상 마을 수에 관한 지표 구득이 어려워 지표를 다소 변환하여 사용함에 따라 악화된 지표로 나타남.
- 평가의 가장 기초는 데이터 수집에 기반하므로 해당지표에 대한 데이터 생성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함.

■ 악화된 지표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 노인자살률과 같은 통계는 공식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어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철저한 원인 파악과 촘촘한 개입을 필요로 함.
-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행률이 낮은 지표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필요함.

제 5 장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우수사례

[옥천살림협동조합]

- 옥천살림협동조합은 지역의 환경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옥천 내 모든 어린이집과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 등을 수행

■ 설립목적

- 농업을 중심으로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
- 로컬푸드의 전망을 제시하고 친환경학교급식센터의 역할을 함.
-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도, 교육, 생산비절감, 가공, 유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협업하는 친환경생산자회를 활성화시킴.

■ 옥천살림의 지향

- **밥상살림:** 농약과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건강을 지켜내려 함.
 -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먹을거리 나눔
 - 건강한 밥상차림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 먹을거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참여 활동

- **농업살림:** 생명이 살아 있는 농업을 실천하며 우리 농업과 농촌 공동체가 지속되게 힘쓰고 도시 회원들은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농촌 회원들을 응원하며 생명농업을 위해 함께 함.
 -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 생태적인 지역농업 유지, 육성하기 위한 기금 운영
 - 도농 공동체를 위한 교류와 협력활동

- **생명살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명세상을 위해 노력
 - 생명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연구 출판
 - 자연과 하나 되어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기 위한 생활실천 운동

■ 옥천살림 연혁

- 2002년 농민회 회원 중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30여 명의 농민이 모여 ‘사단법인 흙살림’ 설립
- 2007년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친환경 급식 자재 유통업체 필요
- 2008년 농민회 소속 영농조합 법인 대표 6명이 모여 ‘옥천살림영농조합’ 결성
- 2008년 옥천 초중고, 어린이집 무농약 백미 공급
- 2009년 10월 옥천살림 우리콩 두부 제조
- 2010년 1월 옥천지역 어린이집 27개소에 무상 급·간식 식재료 공급
- 2011년 9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2012년 5월 향수꾸러미 사업 시작
- 2012년 6월 충북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
- 2012년 7월 두부공장 확장 및 개선 등 시설 정비
-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 2015년 옥천살림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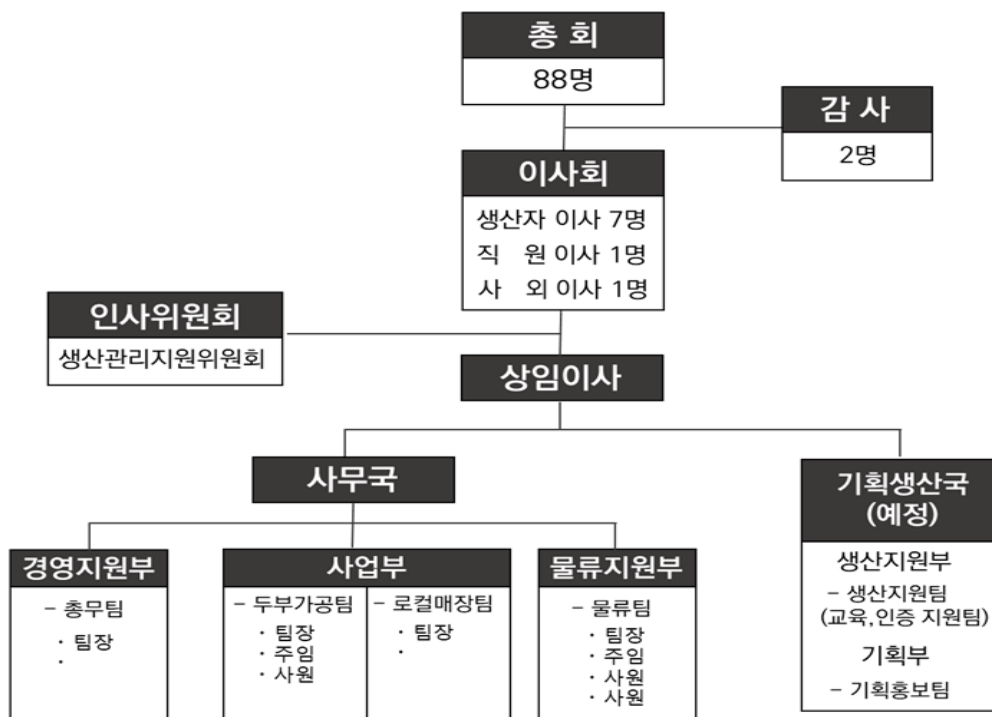
- 옥천살림은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 모두의 편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
- 생산자조합원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유통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였고, 소규모농가도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
- 소비자 조합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식자재를 저렴하게 이용

- 2018년 옥천군 푸드유통센터 수탁

■ 옥천살림 조직

- 직원: 12명
- 조합원: 88명
- 조직도: 2국 3부(사무국, 기획생산국, 경영지원부, 사업부, 물류지원부)

〈그림 5-1〉 옥천살림협동조합 조직도



자료: 옥천살림협동조합 내부자료

■ 옥천살림 주요사업

- **친환경 급식 식자재 유통사업:** 사업 시작부터 운영까지 옥천살림이 주도했고,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확장하는 계기가 됨.
- **향수꾸러미사업 :** 지역농산물을 옥천지역 일반가정에 납품하는 사업. 지정된 날짜에 맞춰 제철 농산물, 찬거리를 일반가정에 꾸러미로 보내줌 .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생산자 조합원들은 고정수입을 보장 받음.
 - 주요품목: 두부, 유정란, 콩나물, 쌀·보리·밀가루 등, 양념류, 절임류, 말린나물, 장류, 제철과일 기타 옥천에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 **로컬푸드 매장운영사업:** 옥천읍 내에 실온보관이 가능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냉장시설을 확충하고 POS 등 기자재를 구입하여 체계화하고 판매물품을 다양화하고 있음.

■ 옥천살림의 지역사회 기여

- 지역 주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
-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보장
- 지역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정착
- 옥천의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개방적인 협의구조 정착: 생산자, 근로자 대표, 소비자 등
-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 조성

<p>건강한 초·중·고등학교급식! 중복매비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옥천살림이 함께 하였습니다.</p>  <p><그림 3> 친환경급식 자료: 옥천살림협동조합(www.oksalim.co.kr)</p>	 <p><그림 4> 향수꾸러미 자료: 옥천살림협동조합(www.oksalim.co.kr)</p>
<p>친환경 급식 식자재</p>	<p>향수꾸러미</p>
 <p><그림 5> 로컬푸드 직매장 자료: 협동조합 공식블로그(blog.naver.com/coop_2012)</p>	 <p><그림 6>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자료: 충청일보 (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150)</p>
<p>로컬푸드 직매장</p>	<p>로컬푸드 거점 가공센터</p>

 <p>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서로 나누고 배우는 옥천시장</p> <p>옥천살림 농민장터</p> <p>7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 오후 7시</p> <p>옥천푸드직매장 앞 (충북 도립대 테니스장 도로변)</p> <p>문의 043.735.6238 / 070.8833.6238</p>	 <p>두 번째 옥천군 로컬푸드축제</p> <p>옥천로컬푸드 가을걷이 한마당</p> <p>상기 고문 배낭을 모십니다. 종해, 낭비, 기증, 직영, 옥우의 농정마련 이거네고 가을의 감성을 맞이합니다. 해리 굵어 낼 울린 김밥의 농부의 그 뜻을 알아주는 이웃 사람들의 열려 바랍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소통과 나눔의 친치마당을 완성스릴게 준비했습니다. 한 리 농사를 지은 하늘과 농민에게 감사하고 소중한 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푸드 님이해서서 로컬푸드 - 공공급식의 지역농업의 희망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p> <p>일 시: 2018년 10월26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장 소: 옥천푸드유통센터(향수안터타운 5번) (옥천읍 가회길 1가) 주최 주관: 옥천살림협동조합, 옥천로컬푸드생산자회, 옥천군</p> <p>주최 주관: 옥천살림협동조합, 옥천로컬푸드생산자회, 옥천군</p>
---	---

2018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윤 정 미 연구위원
한 승 석 연구원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161
- 2. 연구의 범위 163

제2장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충청남도 선택 항목 지표 및 목표치 설정 164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167
- 3. 이행실태 점검 결과 169
- 4.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별 특성 분석 175
- 5. 점검 평가의 종합 193

제3장 삶의 질 관련 우수사례

- 1. 충남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196

표 차례

제2장

<표 2-1> 충청남도 선택 항목 현황	165
<표 2-2>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치	166
<표 2-3> 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 지표	168
<표 2-4> 주거환경 정비 현황	169
<표 2-5> 진료서비스 접근성 평가결과	170
<표 2-6> 면 지역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171
<표 2-7>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	172
<표 2-8> 구조구급기관 접근성	173
<표 2-9> 2018년 행복경로당 운영	174
<표 2-10> 시·군별 법정리 및 행정리 현황	175
<표 2-11> 시·군별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현황	178
<표 2-12> 주거환경 개선 빈도	180
<표 2-13> 주거환경 개선 비율	181
<표 2-14> 시·군별 의료시설 수	182
<표 2-15> 시·군별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183
<표 2-16> 진료서비스 평가결과(면 지역)	184
<표 2-17> 의료시설 접근성지표 평가결과(면 지역)	185
<표 2-18>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평가결과(면 지역)	186
<표 2-19> 시·군별 구조구급기관 시설 수	187
<표 2-20> 면 지역 구조구급기관 접근성	188
<표 2-21> 시·군별 행복경로당 운영 현황	190
<표 2-22> 행복경로당 운영	192
<표 2-23> 당초 목표의 달성 정도	194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범정동리 및 행정리	177
---------------------------	-----

제3장

<그림 3-1>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시행 절차도	199
--------------------------------------	-----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
 - 그러나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부족
 - 또한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핵심 항목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지자체 차원의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행점검 필요
 - 지자체 지역 상황에 맞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웠음

- 2015년 시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 2015년 시도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을 도출하여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하여 2016년 현재 지자체별로 선택 항목을 공식 확정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19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
 -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점검,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생성하는 행정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이 필요함.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및 공유 필요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관련된 수범사례를 발굴
 - 이를 확산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2.1.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지표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으로 범위를 선정하여 과업 수행
- 시간적 범위는 2018년 당해에 대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이행 점검 및 평가를 수행

2.2. 내용적 범위

- 2015년 확정된 선택 항목에 대해서 2018년 이행실태 점검·평가
 - 충청남도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
 - 선택 항목의 제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2015-19)동안 달성해야 할 중기목표치 제시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의 수범사례 발굴

제 2 장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충청남도 선택 항목 지표 및 목표치 설정¹⁾

- 2018년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4개 부문의 4개 항목으로 선정됨.
 - 기준에 의해 충청남도 2015년 선택 부문은 주거부문, 의료부문, 안전부문, 복지부문 4개 부문의 4개 선택 항목이 최종 선정됨.
 - 그러나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위해 2016년 목표치의 일부가 수정되었음.
 - 주거부문: 주거환경
 - 의료부문: 진료서비스 접근성
 - 안전부문: 구조구급 접근성
 - 복지부문: 노인복지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216~218. 재작성

〈표 2-1〉 충청남도 선택 항목 현황

부문	선택 항목	2015년 세부내용	2016년 ~2018년 세부내용(현재)
주거	주거환경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의료	진료서비스 접근성	면지역 의료시설 접근성이 40% 이상으로 하고, 어려운 지역은 순회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	면지역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한다.
안전	구조구급 출동	구조구급신고 발생시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	노인복지	읍면동별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택 항목 선정 기준은 목표 적합성, 지속성, 관리가능성 대표성 시급성 5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지표를 1차 선정
- 선정된 지표를 대상으로 자료의 구득 가능성, 농식품부 공통지표 중복성(차별성)을 검토
-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선택 항목 선정
- 또한 충남 농어촌 복지팀과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항목의 적합도 판단, 지표별로 중복성이 있는 경우 대체 지표를 통해 유사 지표를 통합함.
 - 목표 적합성: 삶의 질, 농어촌서비스 기준 목표에 적합하여야 함.
 - 관리가능성: 충남에서 지표 이행제고를 위해 노력 가능성
 - 대표성: 지역을 대표하는 지표
 - 시급성: 빠르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
 - 지속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점
 - 구득 가능성: 통계자료 구득 가능
 - 차별성: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지표와의 중복성 배제

〈표 2-2〉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치

구분	항목	내용	점검방법	'15년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주거	1)주거환경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사업추진 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 × 100	7.2%	11.7%	14.0%	16.9%	19.8%	
의료	2)진료 서비스접근성	면지역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한다.	1차이상 의료시설 혜택받는 법정리 비율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 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 × 100	22.1%	23%	24%	25%	25%
			(보완지표)의료취약 마을에 보안적인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행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 / 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 × 100	5.6%	5.6%	6.4%	7.2%	8.0%
안전	3)구조구급 출동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받을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 도착가능한 행정리 수/총 행정리 수) × 100	84.4%	85%	86%	87%	88%
복지	4)노인복지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 수/노인복지시설 미입지된 읍·면 수) × 100	81.2%	85%	85%	90%	95%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218.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²

2.1. 주거부문

○ 주거환경

- 건강 및 환경 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 환경 개선을 90% 이상으로 함.
- 환경부가 실시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전수조사와 충청남도에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정비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총 석면 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 중 2011년부터 시작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누적 사업량의 비율을 분석함.

2.2. 의료부문

○ 진료서비스 접근성

- 면 지역 의료시설 접근성 40% 이상으로 함.
- 1차 이상의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한 면 지역 법정리 수/총 면 지역 법정리 수 비율을 분석함.
- 보완지표로는 충청남도 자체 사업인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는 면 지역 법정리 수 / 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법정리 수 비율 분석함.
- 최종 진료서비스 접근성은 총 면 지역 법정리 중 1차 이상의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한 면 지역 법정리 또는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는 면 지역 법정리 수의 비율을 분석함.

²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377~380 재작성

2.3. 안전부문

○ 구조구급출동

-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10분 이내 모든 면 지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
- 구조구급시설 접근성은 면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구조구급센터 5km 범위 내 위치한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비율’로 계산

2.4. 복지부문

○ 노인복지

-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 읍·면·동 수 / 총 읍·면·동 수 비율로 계산

〈표 2-3〉 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 지표

구분	항목	내용		점검방법	기준 연도	구축 자료	조사 범위	지표특성
주거	주거 환경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사업추진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100	2018년	충남도 내부자료	읍면동	H/W
의료	진료 서비스 접근성	면지역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한다.	1차 이상 의료시설 혜택받는 법정리 비율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 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100	2018년	충남도 내부자료	면지역 법정리	H/W
			(보완지표)의료취약 마을에 보안적인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행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100	2018년	충남도 내부자료	면지역 법정리	S/W
안전	구조 구급 출동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5km 이내 도착가능한 면지역 행정리 수/ 총 면지역 행정리 수)×100	2018년	충남도 내부자료	행정리	접근성
복지	노인 복지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 수/노인복지시설 미입지 된 읍·면 수)×100	2018년	충남도 내부자료	읍면동	S/W

3. 이행실태 점검 결과

3.1. 주거부문 이행실태

3.1.1. 주거환경

$$\text{(사업 추진 수 / 전체 주택 슬레이트 정비 사업 대상 수)} \times 100$$

-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된 노후슬레이트 정비 비율은 충청남도 전체 평균 16.3%로 전년도에 비해 약 2.3%정도가 개선되었음.
- 지역별 구분에 따른 시 지역은 11.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은 22.6%가 개선되어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
- 2017년과 비교하였을 때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정비 평균은 약 2% 정도가 개선되었음.

〈표 2-4〉 주거환경 정비 현황

지표	구분	평균		총 정비사업 대상 수		노후 슬레이트 정비 현황		최대값	최소값
		2017 ³	2018	2017	2018	2017	2018		
주거환경 정비 현황	전체	14.0%	16.3%	68,765	좌동	9,631	11,231	홍성군 (45.9%)	서산시 (5.7%)
	시 지역	9.1%	11.0%	37,147	좌동	3,396	4,093	천안시 (25.1%)	서산시 (5.7%)
	군 지역	19.7%	22.6%	31,618	좌동	6,235	7,138	홍성군 (45.9%)	부여군 (10.0%)

3 2017년 행정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수치 조정

3.2. 보건의료부문 이행실태

3.2.1. 진료서비스 접근성

$$\frac{\text{의료시설이 양호한 면지역 법정리 수(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 지역과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 수)}}{\text{총 면 지역 법정리 수}} \times 100$$

- 의료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법정리와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를 합하여 진료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한 면 지역 법정리를 조사함.
-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 지역 법정리와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고 있는 면 지역 법정리의 비율은 충남 전체 32.6%이고, 시 지역은 34.6%, 군 지역은 30.6%로 나타남.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충남 전체적으로는 2.2%, 시 지역은 3.0%, 군 지역은 1.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2-5〉 진료서비스 접근성 평가결과

지표	구분	비율	총 면 지역 법정리 수	법정리 수 (양호+혜택)	최대값	최소값
의료 시설 접근성	전체	32.6%	1,637	533	47.8% (태안군)	26.6% (홍성군)
	시 지역	47.8%	813	281	39.8% (보령시)	27.3% (공주시)
	군 지역	26.6%	824	252	47.8% (태안군)	26.6% (홍성군)

※ 참고

■ (본 지표)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 면 지역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 지역 접근성은 전체 평균 22.5%이고, 시 지역은 24.1%, 군 지역은 20.9%로 나타남.
- 2017년과 비교할 때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 지역 접근성은 전체적으로 -0.5%로 감소하였고, 시 지역에서는 -0.6%, 그리고 군 지역에서는 -0.5% 감소하였음.
- 민간부문 의료시설들의 쏠림 현상으로 면지역 의료시설 접근성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마을주치의제와 같은 공공부문 의료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2-6〉 면 지역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지표	구분	비율	총 면지역 법정리 수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법정리 수	최대값	최소값
1차이상 의료시설 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전체	22.5%	1,637	368	태안군 (32.6%)	금산군 (17.5%)
	시 지역	24.1%	813	196	아산시 (28.0%)	공주시 (19.6%)
	군 지역	20.9%	824	172	태안군 (32.6%)	금산군 (17.5%)

※ 참고

■ (보완 지표)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받는 법정리

-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보완 지표로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조사함.
- 우리마을주치의제는 의료취약지에 한 달에 3번 의사 혹은 간호사가 방문 하여 건강검진 및 건강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을 받는 면 지역 법정리 대비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면 지역 법정리 수 비율을 평가함.
-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없는 면 지역 법정리 중에서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고 있는 면 지역 법정리의 평균 비율은 13.0%로 나타남. 시 지역에서는 13.8%이고, 군 지역은 12.3%로 나타났으며,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3.4%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표 2-7〉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

지표	구분	접근성 낮은 면 지역 법정리 수	우리마을주치의 혜택받는 면 지역 법정리 수	비율
우리마을 주치의제	전체	1,184	165	13.0%
	시 지역	575	85	13.8%
	군 지역	609	80	12.3%

3.3. 안전부문 이행실태

3.3.1. 구조구급출동

(구조구급센터로부터 5km 이내 면 지역 행정리 / 총 면 지역 행정리)×100

- 2018년 현재 구조구급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면 지역 행정리 비율은 충청남도 평균 84.0%이고 시 지역은 89.3%, 군 지역 78.3%로 나타남.
-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4.6%가 개선되었고, 시 지역은 5.1% 개선되었으며, 군 지역은 4.0%가 개선됨.

〈표 2-8〉 구조구급기관 접근성

지표	구분	비율	총 행정리 수	접근성 양호한 행정리 수	최대값	최소값
구조구급기관 접근성	전체	84.0%	3,331	2,797	계룡시 (100.0%)	청양군 (51.0%)
	시 지역	89.3%	1,718	1,534	계룡시 (100.0%)	보령시 (81.0%)
	군 지역	78.3%	1,613	1,263	서천군 (97.3%)	청양군 (51.0%)

3.4 복지부문 이행실태

3.4.1 노인복지

$$(\text{행복경로당 조성 운영 읍·면·동 수} / \text{시·군 총 읍·면·동 수}) \times 100$$

- 2018년 현재 행복경로당은 충청남도 전체 읍·면·동 207개 중에서 173개에서 운영 중으로 약 83.6%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시 지역에서는 74.0%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7년의 78.0%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 지역에서는 98.8%로 2017년 대비 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에 비해 2018년 전체적으로는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시와 군 지역을 비교한 결과 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2018년 행복경로당 운영

지표	구분	비율	총 읍면동 수	행복 경로당 운영 중인 읍면동 수	최대값	최소값
행복경로당	전체	83.6%	207	173	태안군 (112.5%)	공주시 (25.0%)
	시 지역	74.0%	127	94	아산, 서산, 논산 (100.0%)	공주시 (25.0%)
	군 지역	98.8%	80	79	태안군 (112.5%)	부여군 (75.0%)

4.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별 특성 분석

4.1. 충청남도 선택 항목 지표 조사 범위 및 분석 방법

4.1.1. 선택 항목 지표 조사범위

■ 조사범위 선정 기준

- 공간 접근성지표의 조사 범위는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구득할 수 있는 가장 세밀한 공간 범위인 법정리를 최소 단위로 하고, 해당 지표 및 관련 자료의 특성에 따라 법정리 단위까지로 확대해 적용함.
- 공간 접근성지표 외에는 조사 범위를 시·군 단위로 함.

■ 조사범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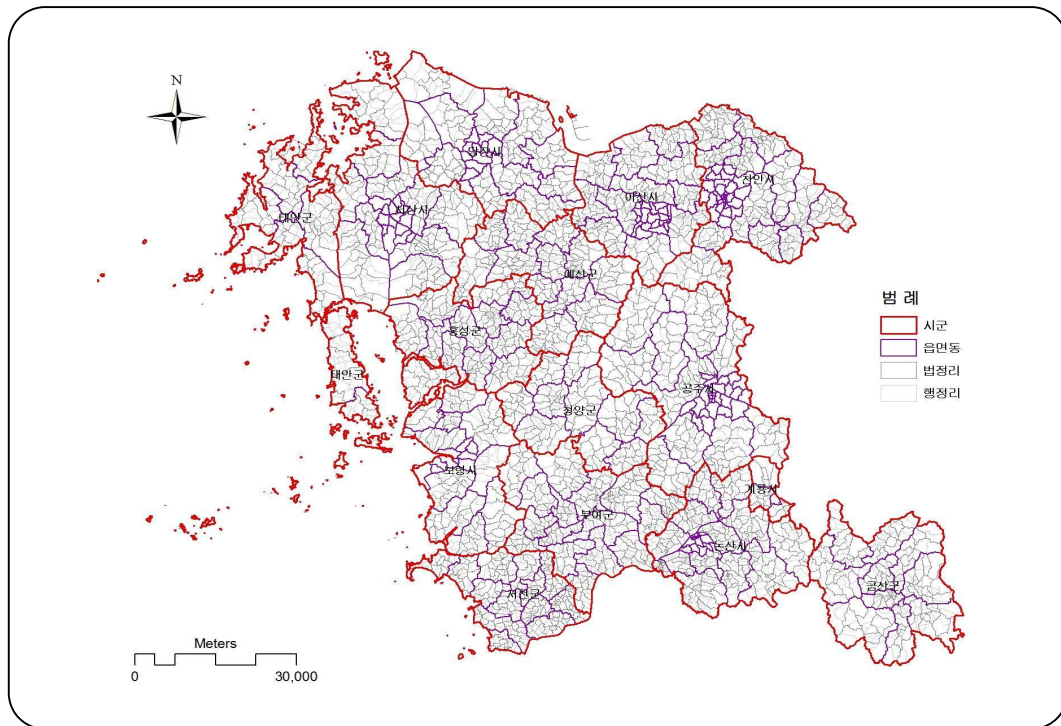
〈표 2-10〉 시·군별 법정리 및 행정리 현황

구분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동)리
전체	전체	283	2,094	4,417
	읍 지역	24	335	964
	면 지역	137	1,637	3,331
	동 지역	122	122	122
시 지역	전체	203	1,126	2,390
	읍 지역	13	191	550
	면 지역	68	813	1,718
	동 지역	122	122	122
군 지역	전체	80	968	2,027
	읍 지역	11	144	414
	면 지역	69	824	1,613

구분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동)리
천안시	전체	42	178	457
	읍 지역	4	63	203
	면 지역	8	85	224
	동 지역	30	30	30
공주시	전체	37	188	272
	읍 지역	1	18	32
	면 지역	9	143	213
	동 지역	27	27	27
보령시	전체	21	111	245
	읍 지역	1	13	35
	면 지역	10	88	200
	동 지역	10	10	10
아산시	전체	30	163	417
	읍 지역	2	26	100
	면 지역	9	118	298
	동 지역	19	19	19
서산시	전체	24	138	278
	읍 지역	1	10	29
	면 지역	9	115	236
	동 지역	13	13	13
논산시	전체	24	185	435
	읍 지역	2	26	86
	면 지역	11	148	338
	동 지역	11	11	11
계룡시	전체	4	15	54
	면 지역	3	14	53
	동 지역	1	1	1
당진시	전체	22	148	232
	읍 지역	2	35	65
	면 지역	9	102	156
	동 지역	11	11	11
금산군	전체	10	106	255
	읍 지역	1	9	39
	면 지역	9	97	216
부여군	전체	16	191	433
	읍 지역	1	22	53
	면 지역	15	169	380

구분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동)리
서천군	전체	13	173	316
	읍 지역	2	24	52
	면 지역	11	149	264
청양군	전체	10	115	183
	읍 지역	1	11	26
	면 지역	9	104	157
예산군	전체	12	141	311
	읍 지역	2	25	83
	면 지역	10	116	228
홍성군	전체	11	177	342
	읍 지역	2	34	90
	면 지역	9	143	252
태안군	전체	8	65	187
	읍 지역	2	19	71
	면 지역	6	46	116

〈그림 2-1〉 법정동리 및 행정리



4.2. 주거환경 지표 특성 분석

4.2.1. 지표 평가 기준 자료

■ 주택 슬레이트 정비

- 주거환경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충남도청 건축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정보를 활용하였음.

〈표 2-11〉 시·군별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현황

구분	슬레이트 사업대상 건물 수	2017년까지 누적 사업추진 수	2018년 사업추진 수
전체	68,765	9,631	1,600
시 지역	37,147	3,396	697
군 지역	31,618	6,235	903
천안시	3,073	711	60
공주시	6,252	380	83
보령시	5,432	386	80
아산시	6,932	444	100
서산시	4,413	209	42
논산시	6,080	650	200
계룡시	147	27	7
당진시	4,818	589	125
금산군	6,446	2,658	293
부여군	9,841	816	165
서천군	6,571	1,037	178
청양군	2,124	638	67
예산군	2,473	351	50
홍성군	819	293	83
태안군	3,344	442	67

4.2.2. 주거환경 특성 분석

■ 전체 특성분석

- 충남의 노후 슬레이트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비율을 살펴본 결과 16.3%로 조사되었음.
- 시 지역에서는 천안(25.1%)과 계룡이(23.1%)를 보여 20%를 넘었고 당진(14.8%), 논산(14.0%)로 10%를 넘겨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조사되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서산시(5.7%)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군 지역에서는 금산군(45.8%)과 홍성군(45.9%)로 40% 넘는 개선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청양군(33.2%)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여군(10.0%)로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남.
- 세부적인 2017년 대비 2018년 충남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비율은 군 지역이 약 3%가 개선되었고 시 지역은 약 2%가 개선되어 군 지역에서의 주거환경 개선이 활발히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 시 지역의 개선이 필요한 건물의 평균수는 4,643동이었으며 군 지역은 4,517동으로 절대적인 상수는 시 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인구의 거주 비율을 고려할 때 군 지역에 절대적으로 많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된 평균을 도출한 결과 시 지역의 평균은 512회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은 1,020회로 나타나 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2〉 주거환경 개선 빈도

구분	대상 건물 수	사업추진 수	대상 건물 평균	사업추진 평균
전체	68,765	11,231	-	-
천안시	3,073	771	4,643	512
공주시	6,252	463		
보령시	5,432	466		
아산시	6,932	544		
서산시	4,413	251		
논산시	6,080	850		
계룡시	147	34		
당진시	4,818	714		
금산군	6,446	2,951		
부여군	9,841	981		
서천군	6,571	1,215		
청양군	2,124	705		
홍성군	2,473	401		
예산군	819	376		
태안군	3,344	509		

■ 세부 특성분석

- 각 시 지역별, 군 지역별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 비율을 살펴 본 결과 홍성군에서 45.9%로 가장 높게 개선되었으며 서산시에서 5.7%로 가장 낮게 개선되었음.
- 시 지역에서는 천안이 가장 높은 개선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빈도수는 논산시가 850회로 가장 많았으며 계룡시는 34회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군 지역에서는 금산군이 총 2,951회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천군 1,215회를 시행하였고 반면에 홍성군은 376회로 가장 적은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비율에서는 홍성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부여군은 개선대상이 되는 건물이 충남에서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점차 개선되고 있음.

〈표 2-13〉 주거환경 개선 비율

구분	사업추진 수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11,231	-	16.3%	45.9%	5.7%
천안시	771	25.1%	11.0%	25.1% (천안시)	5.7% (서산시)
공주시	463	7.4%			
보령시	466	8.6%			
아산시	544	7.8%			
서산시	251	5.7%			
논산시	850	14.0%			
계룡시	34	23.1%			
당진시	714	14.8%			
금산군	2,951	45.8%	22.6%	45.9% (홍성군)	10.0% (부여군)
부여군	981	10.0%			
서천군	1,215	18.5%			
청양군	705	33.2%			
홍성군	401	16.2%			
예산군	376	45.9%			
태안군	509	15.2%			

4.3. 진료서비스 접근성 지표 특성 분석

4.3.1. 지표평가 기준자료

■ 의료시설 지표평가 기준자료

- 의료시설은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main.do>)에서 관리하는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함. 의료시설은 보건기관을 포함한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함.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병원의 기준을 갖춘 보건소)을 포함함.

〈표 2-14〉 시·군별 의료시설 수

구분	의료시설 수	면 지역 의료시설 수	접근성 양호한 법정리 수(면 지역)
전체	2,613	610	368
시 지역	1,978	361	196
군 지역	635	249	172
천안시	752	46	21
공주시	155	32	28
보령시	135	28	24
아산시	318	86	33
서산시	186	39	24
논산시	191	51	38
계룡시	46	34	3
당진시	195	45	25
금산군	85	31	17
부여군	100	50	39
서천군	84	35	27
청양군	46	26	22
예산군	115	40	26
홍성군	123	46	26
태안군	82	21	15

■ 우리마을주치의제

- 우리마을주치의제는 의료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월 3회 이상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보건 서비스 제공, 생명 사랑 행복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독자 사업임.

〈표 2-15〉 시·군별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구분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마을 수	면 지역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수
전체	176	165
시 지역	95	85
군 지역	81	80
천안시	14	10
공주시	11	11
보령시	12	11
아산시	12	11
서산시	12	11
논산시	15	15
계룡시	2	2
당진시	17	14
금산군	10	10
부여군	16	16
서천군	13	13
청양군	10	10
예산군	12	12
홍성군	12	12
태안군	8	7

4.3.2. 진료서비스지표 특성 분석

- 의료시설접근성이 양호한 지역과 보완 지표인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지역을 포함한 충청남도 면 지역 진료서비스 접근성 평균은 32.6%로 조사되었고, 시 지역은 34.6%, 군 지역은 30.6%로 나타남.
- 시 지역에서는 보령(39.8%), 당진(38.2%), 아산(37.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산과 공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군 지역에서는 태안(47.8%), 부여(32.5%), 예산(32.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서천과 홍성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시설 접근성은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서 조금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2017년에 비해서 충남 전체적으로 진료 접근성은 2.2% 개선되었고, 시 지역은 3.0%, 그리고 군 지역은 1.4% 개선되었음.

〈표 2-16〉 진료서비스 평가결과(면 지역)

구분	총 법정리 수 (면 지역)	면 지역 법정리 수 (양호+혜택)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1,637	533	-	32.6%	47.8%	26.6%
찬안시	85	31	36.5%	34.6%	39.8% (보령시)	27.3% (공주시)
공주시	143	39	27.3%			
보령시	88	35	39.8%			
아산시	118	44	37.3%			
서산시	115	35	30.4%			
논산시	148	53	35.8%			
계룡시	14	5	35.7%			
당진시	102	39	38.2%			
금산군	97	27	27.8%	30.6%	47.8% (태안군)	26.6% (홍성군)
부여군	169	55	32.5%			
서천군	149	40	26.8%			
청양군	104	32	30.8%			
예산군	143	38	32.8%			
홍성군	116	38	26.6%			
태안군	46	22	47.8%			

※ 참고

■ (본 지표)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 면 지역 의료시설 접근성지표는 면 지역 전체 법정리 수에 대한 1차 이상의 의료(진료)시설이 있는 법정리 수의 비율로 평가함.

〈표 2-17〉 의료시설 접근성지표 평가결과(면 지역)

구분	총 법정리 수 (면 지역)	접근성 양호한 법정리 수(면 지역)	비율
전체	1,637	368	22.5%
시 지역	813	196	24.1%
군 지역	824	172	20.9%
천안시	85	21	24.7%
공주시	143	28	19.6%
보령시	88	24	27.3%
아산시	118	33	28.0%
서산시	115	24	20.9%
논산시	148	38	25.7%
계룡시	14	3	21.4%
당진시	102	25	24.5%
금산군	97	17	17.5%
부여군	169	39	23.1%
서천군	149	27	18.1%
청양군	104	22	21.2%
예산군	143	26	22.4%
홍성군	116	26	18.2%
태안군	46	15	32.6%

- 의료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충남 전체 22.5%이고, 시 지역은 24.1%, 군 지역은 20.9%로 나타남.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서 의료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 (보완 지표)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받는 법정리

- 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완 지표로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 우리 마을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있는 법정리를 포함함.
- 의료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는 총 165개로 전체 13.0%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모두 의료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법정리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설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과 비교할 때, 우리마을주치의 혜택을 받는 면 지역 법정리 수는 44 곳이 증가하였고, 비중은 3.4% 증가함.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 비율은 시 지역(13.8%)이 군 지역(12.3%)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8〉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평가결과(면 지역)

구분	접근성 낮은면 지역 법정리 수	혜택 법정리 수	비율(%)
전체	1,184	165	13.0%
시 지역	575	85	13.8%
군 지역	609	80	12.3%
천안시	61	10	15.6%
공주시	107	11	9.6%
보령시	58	11	17.2%
아산시	82	11	12.9%
서산시	87	11	12.1%
논산시	102	15	13.6%
계룡시	7	2	18.2%
당진시	71	14	18.2%
금산군	80	10	12.5%
부여군	119	16	12.3%
서천군	119	13	10.7%
청양군	75	10	12.2%
예산군	78	12	13.3%
홍성군	110	12	10.3%
태안군	28	7	22.6%

4.4. 구조구급출동 지표 특성 분석

4.4.1. 지표평가 기준자료

가. 면 지역 구조구급기관

- 충청남도 인력 배치 된 구조구급센터 및 구조구급 기능이 가능한 지역대 수는 전체 142개소이고, 이 중 면 지역에 구조구급기관 수는 72개소임. 면 지역 구조구급기관 중 시 지역은 41개소, 군 지역 31개소임.

〈표 2-19〉 시·군별 구조구급기관 시설 수

구분	구조구급기관	면 지역 구조구급기관
전체	142	72
시지역	89	41
군지역	53	31
천안시	20	5
공주시	10	5
보령시	9	4
아산시	11	6
서산시	11	5
논산시	10	4
계룡시	5	5
당진시	13	7
금산군	7	4
부여군	7	6
서천군	9	5
청양군	4	1
홍성군	7	5
예산군	10	5
태안군	9	5

4.4.2. 구조구급출동 지표 특성 분석

- 구조구급기관 접근성지표는 전체 면 지역 행정리 수에 대한 구조구급기관로부터 5km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면 지역 행정리 수의 비율로 평가함.
- 구조구급기관 접근성이 양호한 면 지역 행정리의 평균은 84.0%로 조사되었고, 시 지역은 89.3%, 군 지역은 78.3%로 나타남.

〈표 2-20〉 면 지역 구조구급기관 접근성

구분	총 면지역 행정리 수	접근성 양호한 면지역 행정리 수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3,331	2,797	-	84.0%	100.0%	51.0%
시				89.3%	100.0% (계룡시)	81.0% (보령시)
천안시	224	200	89.3%			
공주시	213	175	82.2%			
보령시	200	162	81.0%			
아산시	298	265	88.9%			
서산시	236	206	87.3%			
논산시	338	325	96.2%			
계룡시	53	53	100.0%			
당진시	156	148	94.9%			
군				78.3%	97.3% (서천군)	51.0% (청양군)
금산군	216	178	82.4%			
부여군	380	261	68.7%			
서천군	264	257	97.3%			
청양군	157	80	51.0%			
예산군	228	158	69.3%			
홍성군	252	229	90.9%			
태안군	116	100	86.2%			

- 시 지역에서는 계룡(100.0%), 논산(96.2%), 당진(94.9%)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군 지역에서는 서천(97.3%), 홍성(90.9%)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4.6%가 개선되었고, 시 지역은 5.1% 개선되었으며, 군 지역은 4.0%가 개선되었음.

4.5. 노인복지 지표 특성 분석

4.5.1. 지표평가 기준자료

- 노인복지 지표를 살펴보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경로당 운영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충청남도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음.
- 행복경로당은 2018년 현재 충청남도 전체 19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시 지역은 106개소, 군 지역은 8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노인들의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행복경로당이 운영되는 읍·면·동 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173개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시 지역은 94개, 군 지역은 79개의 지역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수치는 2017년 조사되었던 행복경로당 운영 읍·면·동 수 조사에서 나타났던 181지역, 시 지역 99, 군 지역 82와는 약 8개의 읍·면·동 지역이 감소한 결과임.
 - 행복경로당의 수는 증감하지 않았으나 읍·면·동의 수가 감소한 것은 행복경로당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1개 지역에 중복되어 조성된 것으로 사료됨.

〈표 2-21〉 시·군별 행복경로당 운영 현황

구분	전체 읍·면·동 수	행복경로당	행복경로당 운영 읍·면·동 수	
			2017	2018
전체	207	190	181	173
시지역	127	106	99	94
군지역	80	84	82	79
천안시	30	24	20	21
공주시	16	4	7	4
보령시	16	23	15	14
아산시	17	17	17	17
서산시	15	15	15	15
논산시	15	15	16	15
계룡시	4	2	3	2
당진시	14	6	6	6
금산군	10	15	11	10
부여군	16	12	13	12
서천군	13	13	14	13
청양군	10	10	11	10
홍성군	11	12	11	12
예산군	12	13	13	13
태안군	8	9	9	9

4.5.2. 노인복지 특성 분석

- 충청남도 전체의 행복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지역은 전체의 83.6%로 조사되었으며 시 지역에서는 74.0%가 군 지역에서는 98.8%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7년 대비 2018년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 지역에서는 99개의 읍·면·동에서 운영되던 것이 94개로 줄었으나 군 지역에서는 76개에서 79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행복경로당이 100%의 읍·면·동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으로 나타났으며 100% 이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홍성군(109.1%), 예산군(108.3%), 태안군(112.5%)로 나타남.
 - 이는 한 개의 읍·면·동 지역에 1개의 행복경로당이 아닌 그 이상의 행복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2017년과 2018년의 행복경로당 운영 읍·면·동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료를 구득한 충남도청 확인결과 행복경로당의 운영을 타 경로당으로 이전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1개의 읍·면·동 지역에 2개 이상의 행복경로당이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음.
- 행복경로당이 가장 적게 조성된 곳은 공주시와 계룡시, 당진시로 행정구역에 비해 50% 이하의 행복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음.
-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비교한 결과 군 지역에서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98.8%의 읍·면 지역에서 행복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시 지역에서는 이보다 적은 74%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었음.
- 상대적으로 노령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군 지역의 수요로 인해 행복경로당이 시 지역에 비해 많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인 노인복지 부문에서 행복경로당의 목표치는 2018년의 경우 90%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전체적인 평균은 아직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군 지역의 읍·면 지역에서는 98.8%를 이미 달성하여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표 2-22〉 행복경로당 운영

구분	총 읍·면·동 수	행복경로당 운영 읍·면·동 수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207	173	-	83.6	112.5%	25.0%
천안시	30	21	70.0	74.0	100.0%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25.0% (공주시)
공주시	16	4	25.0			
보령시	16	14	87.5			
아산시	17	17	100.0			
서산시	15	15	100.0			
논산시	15	15	100.0			
계룡시	4	2	50.0			
당진시	14	6	42.9			
금산군	10	10	100.0	98.8	112.5% (태안군)	75.0% (부여군)
부여군	16	12	75.0			
서천군	13	13	100.0			
청양군	10	10	100.0			
홍성군	11	12	109.1			
예산군	12	13	108.3			
태안군	8	9	112.5			

5. 점검 평가의 종합

5.1. 당초 목표의 달성 정도

- 충남의 당초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선택 항목에 대한 2018년의 목표는 주거 환경이 16.9%, 진료서비스 접근성 중 1차 이상 의료시설 혜택은 25%, 우리 마을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7.2%, 구조구급출동 87%, 노인복지 90%로 설정되어 있음.
 - 주거환경의 경우 당해 연도의 목표치인 16.9%에 약간 못 미치는 16.3%로 목표치에 0.6% 미치는 수치임.
 - 노인복지의 경우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의 수에 대한 비율은 90%로 설정되어 있으나 83.6%를 기록하여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하지만, 군 지역의 읍·면 지역의 경우 98.8%를 달성한 상태임.
- 주거환경의 경우 전체 목표에 대비해 96.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100%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군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133.7%를 달성하였음.
- 노인복지의 목표에 대한 달성률은 92.9% 달성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역시 군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는 109.8%를 달성하였음.
- 달성된 실적을 살펴보면, 주거환경이 16.3%, 진료서비스 접근성 중 중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비율이 22.5%,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비율이 13.0%, 구조구급출동이 84.0%, 그리고 노인복지가 83.6%로 나타남.
- 목표달성율을 살펴보면, 주거환경이 96.4%, 진료서비스 접근성 중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 지역 비율이 90.0%,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비

율이 162.5%, 구조구급출동이 96.6%, 그리고 노인복지가 92.9%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대체적으로 당초 목표치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구조구급활동의 경우, 당초 실적의 수치와 2017년 평가의 수치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2015년 실적수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표 2-23〉 당초 목표의 달성 정도

항목	지표내용	'18년 목표	'18년 실적	목표 달성율
주거 환경	(사업추진 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100	16.9%	16.3%	96.4%
진료 서비스 접근성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 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100	25.0%	22.5%	90.0%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100	8.0%	13.0%	162.5%
구조 구급 출동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 도착가능한 행정리 수/총 행정리 수)×100	87.0%	84.0%	96.6%
노인 복지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 수/노인복지시설 미입지된 읍·면 수)×100	90.0%	83.6%	92.9%

5.2. 2017년 대비 개선사항

- 2017년 대비 각 지표별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주거환경은 2.3% 개선되었고, 진료서비스 접근성 중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비율은 2.2%,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비율은 3.4%, 구조구급출동이 4.6%, 그리고 노인복지는 -0.9% 개선되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의 농어촌서비스 개선은 지속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향후 목표 달성

율이 낮은 1차 이상 의료시설 혜택을 받는 법정리 비율과 구조구급활동에 초점을 두어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거환경에서 원래 목표하였던 수치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17년 대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음.
 - 충남도 확인 결과 2018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7년 3월 예산확보를 위하여 환경부 사업신청시 2,597동의 개선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선정 1,600동으로 확정되어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함.
 - 2018년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주거환경 개선은 총 1,600동으로 확보된 예산과 능력의 범위에서 모든 사업을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의 분야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함.

- 노인복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복경로당 현황자료를 구득한 결과, 경로당의 총량은 증감이 없으나 해당 읍·면·동의 지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시행되어야 함.
 - 만약, 행복경로당의 지정이 이동하였다면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더불어 전체적인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군 지역의 목표치 달성 정도를 볼 때, 시 지역에서도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는 행복경로당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보다 지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 3 장

삶의 질 관련 우수사례

1. 충청남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⁴

1.1. 배경 및 목적

-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어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1.2. 시책 추진방향

- 수도작·과수·원예·축산 등 농작업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가 요구되는 마을 선정

⁴ 충청남도, 2018, 농정국 내부자료

-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여성 농업인 단체가 조직되어 운영되는 마을
- 마을회관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 농업인 중심의 공동급식을 위한 공동급식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마을
-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등
- 지원 대상 및 규모: 도내 15개 시·군, 150개소

1.3. 사업내용

1.3.1. 지원대상

-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마을회관 등)을 갖추고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조직이 활성화되어 공동급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로써 마을대표(이장, 통장 등)가 동 사업을 신청하는 마을
 - 1개 마을 선정기준: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0명 이상인 마을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해당 시군 동일마을이어야 함.
- 다만, 여러 마을로 이루어진 마을사업을 하거나 주변마을과 매우 인접하고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부족할 경우 한 곳의 급식 장소에서 2~3개 마을 지원 가능

1.3.2. 지원계획

- 사업기간: 2018. 1 ~ 2018. 12(1년간)

- 총사업비: 225,000천원(도비 67,500, 시·군비 157,500)
 - 보조비율: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도내 13개 시·군, 150개소 ※ 붙임 2: 시군별 지원 계획
 -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0명 이상인 마을(마을대표 신청)

- 지원내용: 마을별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급(개소당 최대 150만원)
 - 1일 지원 기준단가 50,000원 지원(30일 한도)
 - 마을별 농작물 재배, 농작업 시기 등을 감안하여 마을에서 급식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간 2회 분할 운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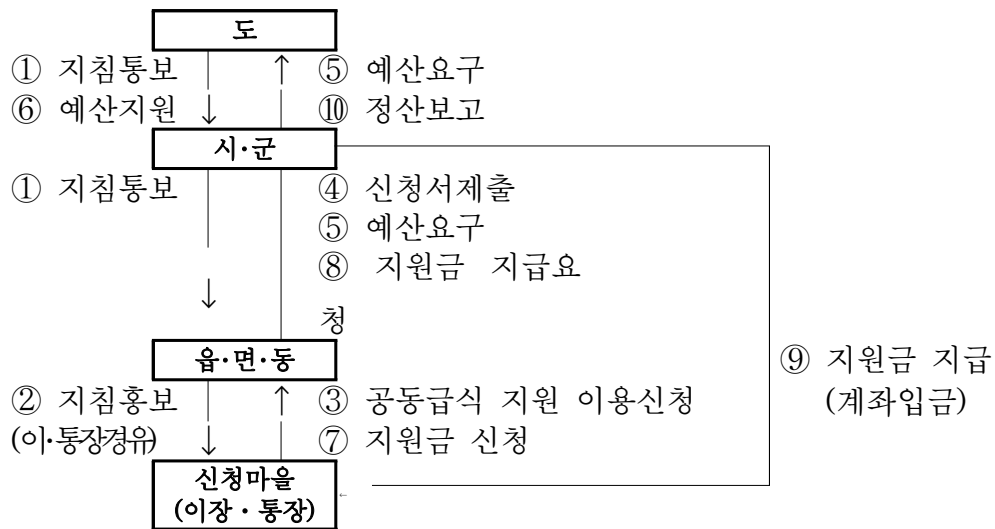
1.3.3. 추진체계

- 도지사: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비(량) 배정, 시·군 지도 감독

- 시장·군수: 사업내용 홍보,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읍·면·동 지도감독

-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 및 타당성 조사, 사업 신청서 (시군) 제출, 마을 공동급식 추진상황 보고 및 지도점검, 시군에 지원금 지급요청 등

〈그림 3-1〉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시행 절차도



2018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차 례

제1장 서론

- 1.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 필요성 207
- 2.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 목적 208

제2장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1. 선택 항목 선정 개요 209
- 2.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211
- 3.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217

표 차례

제2장

<표 2-1>	2018년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210
<표 2-2>	독거노인 돌봄	218
<표 2-3>	독거노인 돌봄 비율(시부·군부)	219
<표 2-4>	노인치매 돌봄	221
<표 2-5>	노인치매 돌봄 비율(시부·군부)	223
<표 2-6>	어울림 학교	225
<표 2-7>	어울림 학교 비율(시부·군부)	227
<표 2-8>	그룹홈	229
<표 2-9>	그룹홈 비율(시부·군부)	230
<표 2-10>	노인일자리 현황	232
<표 2-11>	노인일자리 현황(시부·군부)	233
<표 2-12>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235
<표 2-13>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시부·군부)	236
<표 2-14>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	237
<표 2-15>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시부·군부)	239
<표 2-16>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변화	240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방법	209
<그림 2-2> 독거노인 돌봄 비율	219
<그림 2-3> 노인치매 돌봄 비율	222
<그림 2-4> 어울림 학교 비율	226
<그림 2-5> 그룹홈 비율	229
<그림 2-6> 노인일자리 비율	232
<그림 2-7>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235
<그림 2-8>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	238

제 1 장

서 론

1.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 필요성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

- 전라북도의 경우도 정부의 계획에 부응하여 2015년도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삶의 질 향상 계획과 연계하여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설정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전라북도 농어촌 현실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농어촌 주민의 수요와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 기준 항목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2.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 목적

- 정부는 2015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맞추어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개편하였으며, 2015년 개편안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
 - 핵심 항목은 ‘국가 최소 기준’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며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에도 필수항목으로 포함
 - 7개 부문 17개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점검(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 선택 항목은 지역 여건과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적인 선택 항목으로서 각 지자체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핵심 항목의 점검방법을 참조하여 각 지자체별 여건과 선택 항목 기준에 맞게 점검방법을 정해서 운용
- 전북은 전라북도 관련 정책 검토, 지표의 지속성, 자료확보 가능성 등을 통해 2016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평가
- 기존 연구(이민수·이정희, 2016)에서 선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평가하고 최근 3년간 변화된 농어촌서비스 실태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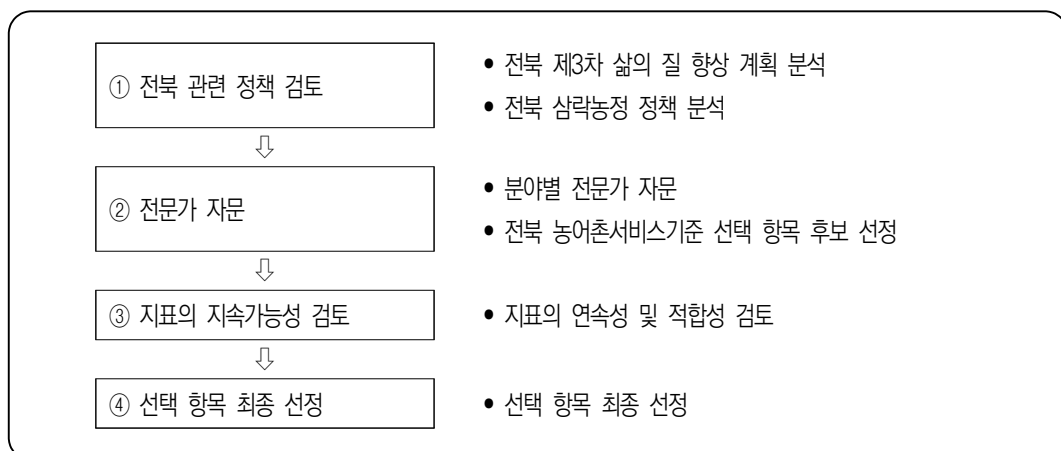
제 2 장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1. 선택 항목 선정 개요

- 2016년 선정 지표는 전북의 특성 반영, 농어촌 주민의 체감도, 국가 농어촌 서비스기준 부합성, 지표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6대 분야 7개 지표 선정
- (보건복지) 독거노인돌봄, 노인치매돌봄, (교육) 어울림학교, (정주생활) 그룹홈, (문화여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동호인, (안전) 어업인 안전

〈그림 2-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방법



- 2017년 지표는 2016년 지표를 기반으로 선정하되, 지표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의 변동이 없는 안전분야의 어업인 안전을 제외하고, 정부의 국정기조와 부합하는 일자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제·일자리 분야의 노인일자리표 지표에 포함시켜 최종 6대 분야 7개 지표 선정
 - (보건복지) 독거노인돌봄, 노인치매돌봄, (교육) 어울림학교, (정주생활) 그룹홈, (경제·일자리) 노인일자리, (문화여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동호인
- 2018년 지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 2017년 지표를 활용
 - 단, 그룹홈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기초자치단체 자료가 불확실하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년도 분석

〈표 2-1〉 2018년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구분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비고
보건 복지	독거노인돌봄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치매돌봄	시군 내에서 치매극복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 여건	어울림학교	읍면지역 초중학교는 어울림학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주 생활 기반	그룹홈	주거 및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그룹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경제·일자리	노인일자리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대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문화·여가	통합문화이용권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동호인	문화동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2.1. 독거노인돌봄

■ 선정배경

- 전라북도의 농어촌 노인은 전체 인구의 18%에 이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년 약 34.6만명에서 '25년 45.0만명, '30년 53.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라북도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 이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함.
- 독거노인의 경우 거동이나 소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북 농어촌 독거노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내용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은 지역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혜택자 / 독거 노인수) ×100

2.2. 노인치매돌봄

■ 선정배경

- 전라북도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의 치매환자('18년)는 79,604명으로 전체 노인 269,847명 중 29.5%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치매노인 중 돌봄서비스 혜택자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 각지대에 해당하는 치매노인은 5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치매노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치매노인의 많은 경우가 주변에서 돌봄을 담당할 가족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북 농어촌 치매독거노 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해야 함.

■ 내용

농어촌지역의 중증 치매노인은 시군 내에서 치매극복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치매돌봄 서비스 혜택자 / 중증 치매환자 노인수) ×100

2.3. 어울림학교

■ 선정배경

- 전라북도에서 학생 수 5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는 전체 학교의 약 30%에 이르며, 이 중 90% 이상은 농어촌 학교임.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는 다문화 가정 학생 수와 저소득층이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도시와 차별되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어촌학교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으로 농어촌학교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내용

읍면지역 초·중학교 어울림학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한다.

■ 점검방법

- (어울림학교지정 초·중학교 / 읍면 초·중 학교수) ×100

2.4. 그룹홈

■ 선정배경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주요 사회복지이용시설을 살펴보면, 시부가 총 31개소로 전체 이용시설의 72.1%를 차지하고 있고, 군부는 12개소로 27.9%에 불과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부족한 노인복지인프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로당을

활용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가 중요함.

■ 내용

주거 및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읍면 내에서 그룹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그룹홈 수/ 경로당 수) ×100

2.5. 노인일자리

■ 선정배경

- 노인생활실태조사 원자료(보건복지부, 2015) 분석시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수요는 전체 노인 중에서 현재 경제활동 참여노인을 제외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은 약 5만여명으로 향후 약 5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농어촌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빈곤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일자리가 필요한 농어촌지역 노인은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text{노인일자리 수} / \text{일자리 필요 노인수}) \times 100$

2.6. 통합문화이용권

■ 선정배경

- 농어촌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은 문화향유 기회가 적고, 도시에 비해 질 높은 문화향유 접근성도 부족함.
- 특히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으므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내용

농어촌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은 문화관람 향유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text{통합문화이용권 이용금액} / \text{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금액}) \times 100$

2.7. 문화동호인

■ 선정배경

- 농어촌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은 문화향유 기회가 적고, 도시에 비해 질 높은 문화향유 접근성도 부족함.
- 전라북도는 농어촌지역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서 문화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따라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가 필요함.

■ 내용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최소한 1개 이상의 문화동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점검방법

- $(\text{농어촌지역 문화동호인수} / \text{농어촌인구수}) \times 100$

3.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3.1. 독거노인돌봄

■ 서비스기준

-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은 지역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점검방법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혜택자 / 독거 노인수) ×100

■ 자료원

- 독거 노인수: 통계청(KOSIS)
 - 시군별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 돌봄서비스 혜택자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
 - 돌봄서비스 혜택자 수 =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이용자 수 + 그룹홈 경로당 이용노인 수(1개소당 10명으로 추정)

■ 점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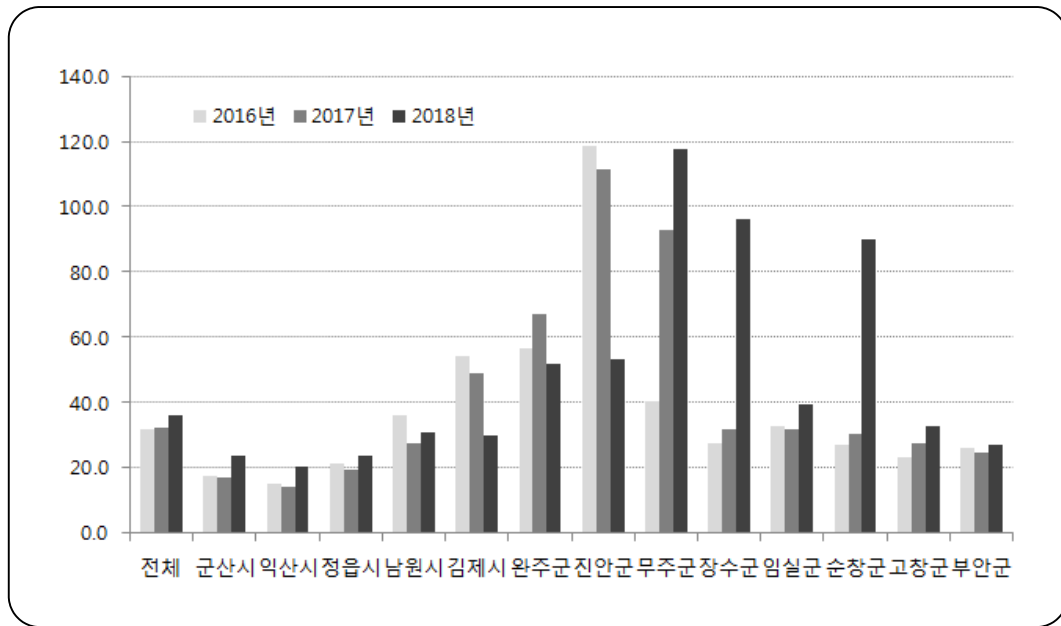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의 2018년 말 독거노인 수는 64,114명으로 이 중 돌봄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36.0%인 23,063명으로 나타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24.6%의 독거노인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남원시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혜택율이 30.7%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가 20.1%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 지역의 경우는 도농통합시에 비해 15.6%p 정도 높은 51.6%의 독거노인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군 지역의 경우 무주군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혜택율이 117.8%로 가장 높았고, 부안군이 26.9%로 가장 낮았음.

〈표 2-2〉 독거노인 돌봄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독거 노인수	돌봄서비스 혜택자 수	비율(%)	비율(%)	비율(%)
전체	64,114	23,063	36.0	32.1	31.5
군산시	8,960	2,094	23.4	16.6	17.5
익산시	10,770	2,162	20.1	13.8	15.0
정읍시	7,562	1,772	23.4	19.1	21.2
남원시	5,506	1,693	30.7	27.5	36.1
김제시	6,944	2,058	29.6	49.0	54.1
완주군	4,240	2,189	51.6	67.0	56.4
진안군	1,700	900	52.9	111.5	118.7
무주군	2,056	2,421	117.8	92.7	40.1
장수군	1,853	1,780	96.1	31.9	27.3
임실군	2,288	894	39.1	31.9	32.8
순창군	2,428	2,186	90.0	30.3	26.8
고창군	5,003	1,623	32.4	27.5	23.3
부안군	4,804	1,291	26.9	24.7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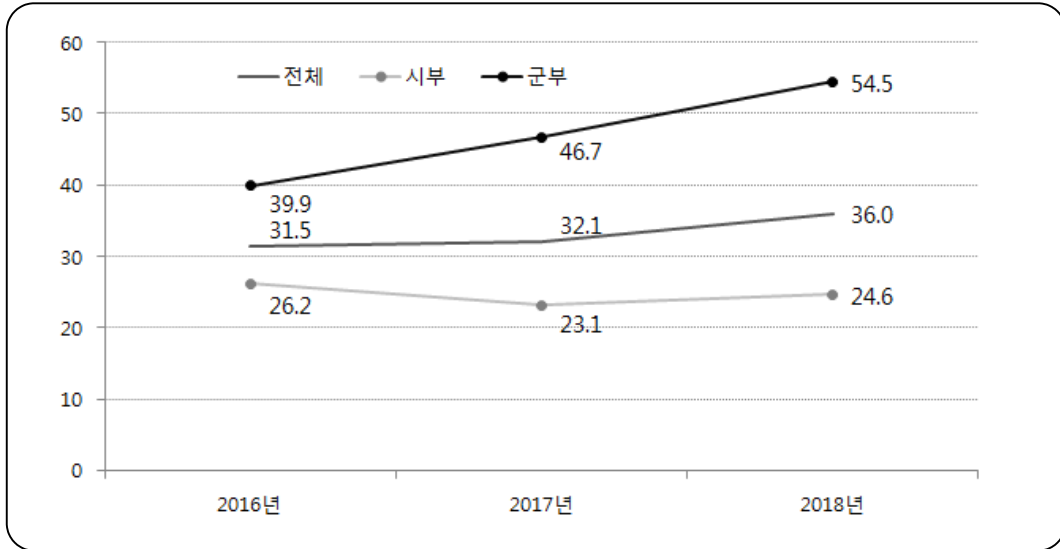
〈그림 2-2〉 독거노인 돌봄 비율



- 최근 3년간 독거노인 돌봄 비율은 ('16년) 31.5%에서 ('18년) 36.0%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군부 지역의 독거노인 돌봄 비율이 ('16년) 39.9%에서 ('18년) 54.5%로 크게 향상 되었음.
-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격차('16년→'18년)는 13.7%, 23.6%, 29.9%로 군 지역의 독거노인 돌봄 비율이 시 지역에 비해 높고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음.

〈표 2-3〉 독거노인 돌봄 비율(시부·군부)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독거노인수	돌봄서비스혜택자 수	비율(%)	비율(%)	비율(%)
전체	64,114	23,063	36.0	32.1	31.5
시부	39,742	9,779	24.6	23.1	26.2
군부	24,372	13,284	54.5	46.7	39.9



3.2. 노인치매돌봄

■ 서비스기준

- 농어촌지역의 중증 치매노인은 시군 내에서 치매극복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점검방법

- $(\text{치매돌봄 서비스 혜택자} / \text{중증 치매환자 노인수}) \times 100$

■ 자료원

- 치매노인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
 - 2014년 시군별 치매유병률을 기초로 하여 2018년 치매노인 수를 추정함.
 - 치매노인 수 = 중증치매(SCI) 노인 + 경증치매(MCI) 노인

- 치매돌봄서비스 혜택자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
 - 치매돌봄서비스 혜택자 수 = 장기요양서비스 등급내자 +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자

■ 점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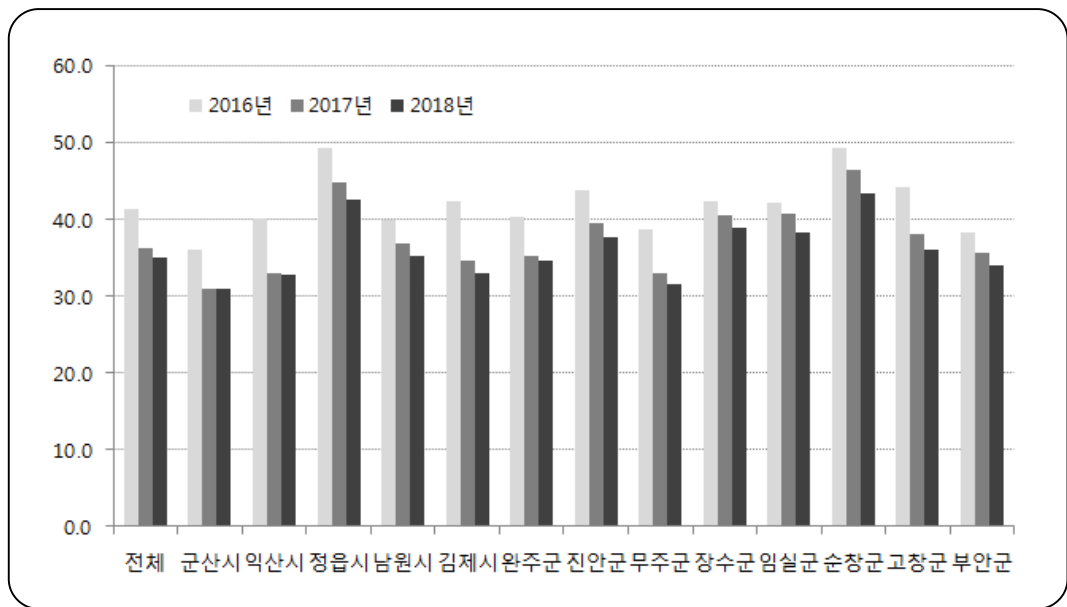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8년 치매노인 수는 79,604명으로 이 중 치매돌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41.3%인 32,882명으로 나타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40.9%의 치매노인이 치매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정읍시의 치매노인 돌봄서비스 혜택율이 49.3%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36.0%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 지역의 경우는 도농통합시에 비해 1.2%p 정도 높은 42.1%의 치매노인이 치매돌봄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군지역의 경우 순창군의 치매노인 돌봄서비스 혜택율이 49.3%로 가장 높았고, 부안군이 38.4%로 가장 낮았음.

〈표 2-4〉 노인치매 돌봄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치매 노인 수	돌봄서비스 혜택자 수	비율(%)	비율(%)	비율(%)
전체	79,604	32,882	41.3	36.2	35.0
군산시	13,544	4,875	36.0	31.0	30.9
익산시	15,204	6,112	40.2	33.0	32.7
정읍시	8,497	4,193	49.3	44.7	42.5
남원시	6,326	2,521	39.9	36.8	35.2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치매 노인 수	돌봄서비스 혜택자 수	비율(%)	비율(%)	비율(%)
김제시	7,450	3,152	42.3	34.6	33.0
완주군	5,835	2,356	40.4	35.3	34.6
진안군	2,489	1,088	43.7	39.6	37.6
무주군	2,276	880	38.7	32.9	31.5
장수군	2,123	901	42.4	40.5	38.9
임실군	2,882	1,212	42.1	40.8	38.2
순창군	2,737	1,350	49.3	46.5	43.4
고창군	5,332	2,359	44.2	38.2	36.1
부안군	4,908	1,883	38.4	35.6	33.9

〈그림 2-3〉 노인치매 돌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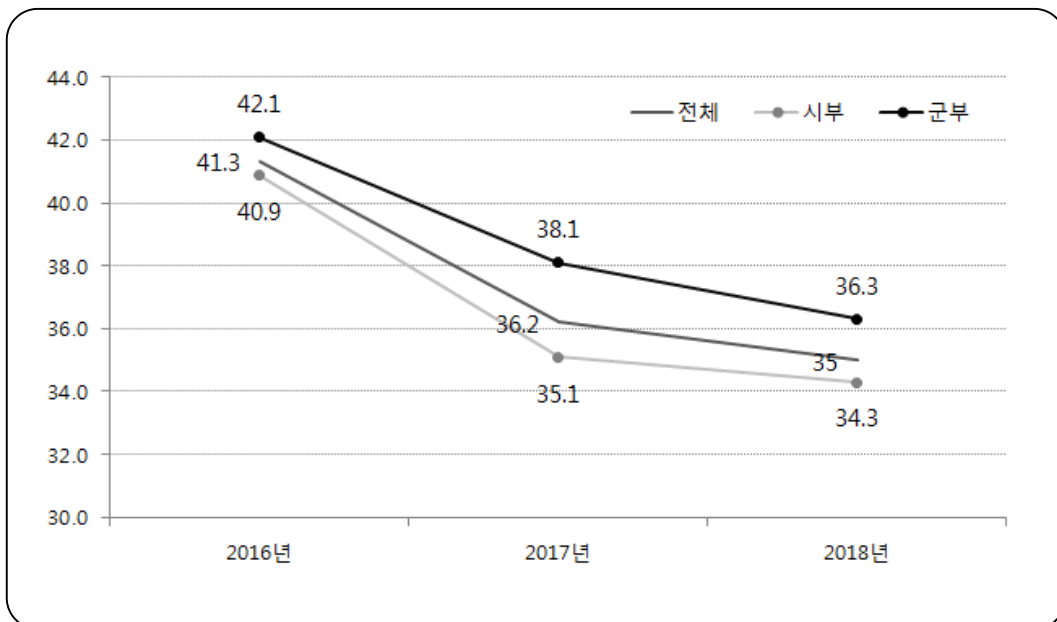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노인 치매돌봄 비율은 ('16년) 35.0%에서 ('18년) 416.3%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시부와 군부 지역 모두 독거노인 돌봄 비율이 크게 향상 되었음.

-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독거노인 돌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격차('16년→'18년)는 2.0%, 3.0%, 1.2%로 최근들어 격차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

〈표 2-5〉 노인치매 돌봄 비율(시부·군부)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독거 노인수	돌봄서비스 혜택자 수	비율(%)	비율(%)	비율(%)
전체	79,604	32,882	41.3	36.2	35.0
시부	51,021	20,853	40.9	35.1	34.3
군부	28,582	12,029	42.1	38.1	36.3



2.3. 어울림학교

■ 서비스기준

- 읍면지역 초·중학교 어울림학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함.

■ 점검방법

- (어울림학교 지정 초·중학교 / 읍면 초·중학교 수) ×100

■ 자료원

- 어울림학교 초·중학교 수: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자료
 - 전라북도 교육청(2018), 2018년도 학교현황
 - 2018년 지정된 어울림학교 초·중학교 수
- 읍면 초·중학교 수: 전라북도 교육청 통계자료
 - 전라북도 교육청(2018), 시군별 학교현황
 - 2018년도 전라북도 읍면에 소재하는 초·중학교 수

■ 점검결과

- 전라북도 읍면지역의 2018년 초·중학교 383개 중에서 어울림학교로 지정된 학교 비율은 27.2%인 104개임.
 - 2018년 어울림학교 지정 비율을 전년 대비 약 1.2%p 정도 증가하고, 초등학교는 전체 읍면 초등학교 수 262개 중 91개의 학교가 어울림 학교로 지정됨.
 - 중학교는 전체 읍면 중학교 수 121개 중 13개의 학교가 어울림 학교로 지정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36.2%의 읍면 초·중학교가 어

울림학교로 지정되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김제시의 어울림학교 지정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25.0%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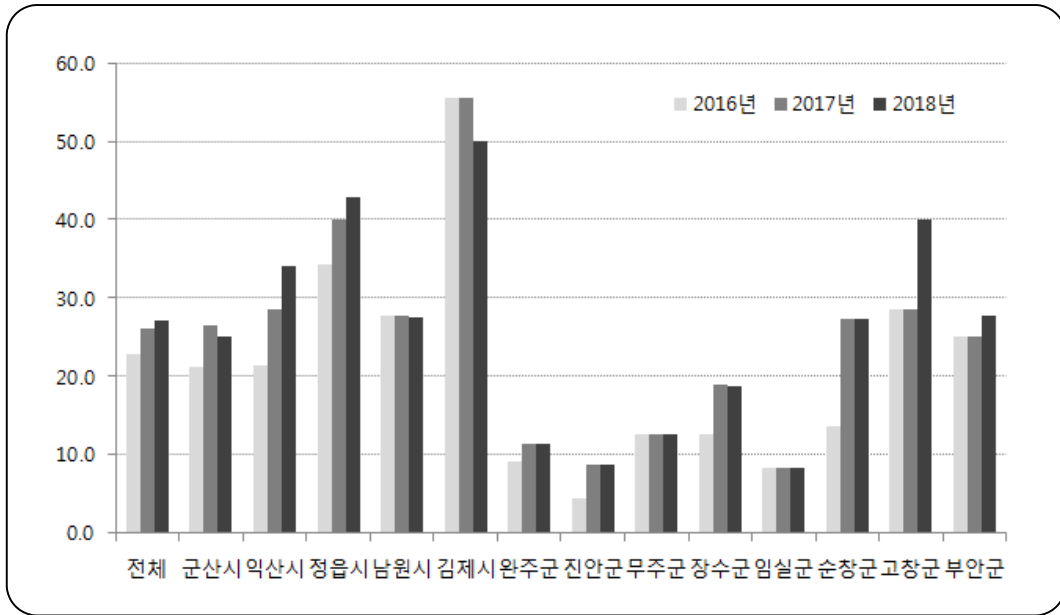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의 경우는 도농통합시에 비해 16.8%p가 낮은 19.4%의 초·중학교가 어울림학교 혜택을 받고 있음.

- 군지역의 경우 고창의 비율이 40.0%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이 8.3%로 가장 낮았음.

〈표 2-6〉 어울림 학교

구분	2018년						비율 (%)	2017년 비율 (%)	2016년 비율 (%)
	읍면 학교수			어울림학교수					
	초등 학교	중학교	전체	초등 학교	중학교	전체			
전체	262	121	383	91	13	104	27.2	26.0	22.8
군산시	28	8	36	8	1	9	25.0	26.5	21.2
익산시	29	12	41	13	1	14	34.1	28.6	21.4
정읍시	22	13	35	11	4	15	42.9	40.0	34.3
남원시	19	10	29	8	0	8	27.6	27.6	27.6
김제시	28	8	36	18	0	18	50.0	55.6	55.6
완주군	30	14	44	5	0	5	11.4	11.4	9.1
진안군	13	10	23	2	0	2	8.7	8.7	4.3
무주군	10	6	16	2	0	2	12.5	12.5	12.5
장수군	9	7	16	2	1	3	18.8	18.8	12.5
임실군	15	9	24	2	0	2	8.3	8.3	8.3
순창군	15	7	22	5	1	6	27.3	27.3	13.6
고창군	21	4	25	8	2	10	40.0	28.6	28.6
부안군	23	13	36	7	3	10	27.8	25.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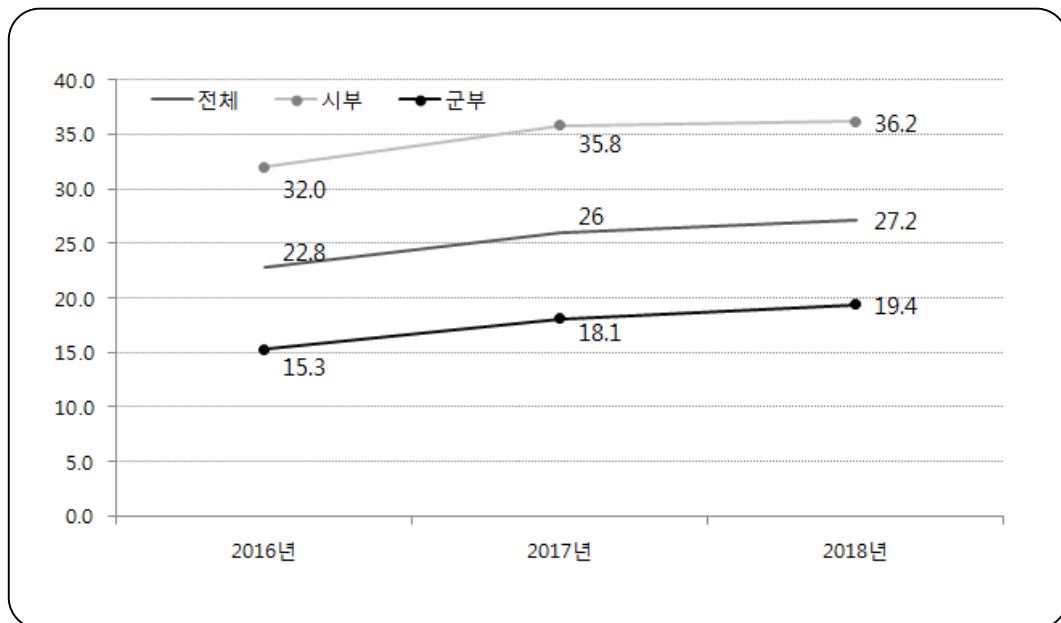
〈그림 2-4〉 어울림 학교 비율



- 최근 3년간 어울림학교 비율은 ('16년) 22.8%에서 ('18년) 27.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시부와 군부 지역 모두 어울림학교 비율이 향상되고 있음.
-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격차('16년→'18년)는 16.7%, 17.7%, 16.8%로 시 지역의 어울림학교 비율이 군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7〉 어울림 학교 비율(시부·군부)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읍면 학교수			어울림학교수			비율 (%)		
	초등 학교	중학교	전체	초등 학교	중학교	전체		비율 (%)	비율 (%)
전체	262	121	383	91	13	104	27.2	26.0	22.8
시부	126	51	177	58	6	64	36.2	35.8	32.0
군부	136	70	206	33	7	40	19.4	18.1	15.3



3.4. 그룹홈

■ 서비스기준

- 주거 및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읍면 내에서 그룹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점검방법

- $(\text{그룹홈 경로당 수} / \text{경로당 수}) \times 100$

■ 자료원

- 그룹홈 경로당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전라북도(2018), 그룹홈 경로당 현황)
- 경로당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전라북도(2018), 경로당 현황)

■ 점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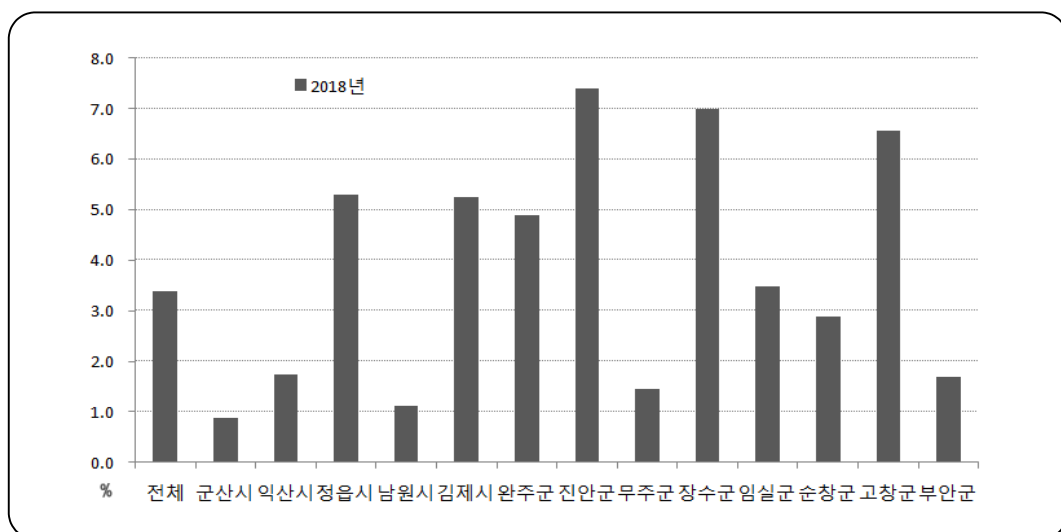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8년 경로당은 6,159개소로 이 중 그룹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3.4%인 209개소 나타남(전라북도 지원 그룹홈 기준).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2.5%의 경로당이 그룹홈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정읍시의 그룹홈 서비스 혜택율이 5.3%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0.9%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의 경우는 도농통합시에 비해 1.7%p 높은 4.2%의 경로당이 숙식이 제공되는 그룹홈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군 지역의 경우 진안군의 그룹홈 서비스 이용률이 7.4%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의 그룹홈 경로당이 4개소로 이용률이 가장 낮은 1.5%로 나타남.

〈표 2-8〉 그룹홈

2018년			
구분	경로당 수	그룹홈 경로당 수	비율(%)
전체	6,159	209	3.4
군산시	676	6	0.9
익산시	694	12	1.7
정읍시	491	26	5.3
남원시	622	7	1.1
김제시	437	23	5.3
완주군	327	16	4.9
진안군	270	20	7.4
무주군	275	4	1.5
장수군	343	24	7.0
임실군	372	13	3.5
순창군	590	17	2.9
고창군	472	31	6.6
부안군	590	10	1.7

〈그림 2-5〉 그룹홈 비율



〈표 2-9〉 그룹홈 비율(시부·군부)

2018년			
구분	경로당 수	그룹홈 경로당 수	비율(%)
전체	6,159	209	3.4
시부	2,920	74	2.5
군부	3,239	135	4.2

3.5. 노인일자리

■ 서비스기준

- 일자리가 필요한 농어촌지역 노인은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점검방법

- $(\text{노인경제활동 참여자 수} / \text{일자리 필요 노인 수}) \times 100$

■ 자료원

- 노인일자리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분석 참조
 - 2018년 현재 소득이 있는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수
- 일자리 필요 노인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4),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전북추출)
 - 일자리 필요 노인 수 = 노인경제활동참여자 수 + 노인경제활동 미참여자 중 일자리 의사가 있는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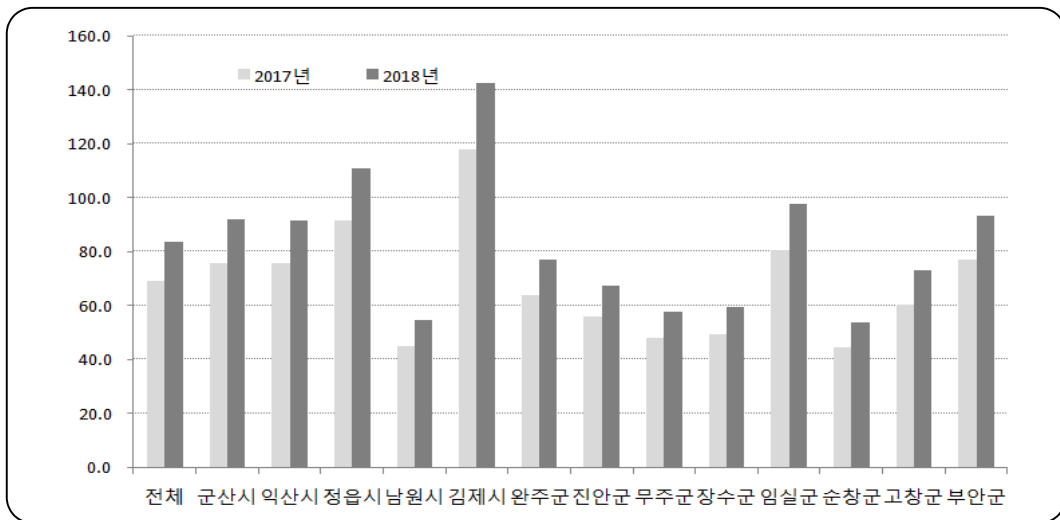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8년 경제활동 참여 의사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수를 추정하면 120,602명으로 이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참여자 비율은 83.7%인 100,921명으로 나타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일자리 필요 노인 중 91.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의 경우는 경제활동참여 희망자 중 일자리에 참여하고 노인의 비율이 72.7%로 나타남.
 - 군지역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의사가 있는 노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으로 973.6%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순창군으로 53.9%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참여의사가 있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은 공공일자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지역으로는 농촌지역이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함.

〈표 2-10〉 노인일자리 현황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노인수	경제활동참여 의사 노인수	노인경제활동 참여자수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69,847	120,602	100,921	83.7	69.1	-
군산시	45,913	18,667	17,171	92.0	76	-
익산시	51,541	21,065	19,276	91.5	75.6	-
정읍시	28,804	9,723	10,773	110.8	91.5	-
남원시	21,444	14,707	8,020	54.5	45.1	-
김제시	25,257	6,624	9,446	142.6	117.8	-
완주군	19,780	9,574	7,398	77.3	63.8	-
진안군	8,435	4,664	3,155	67.6	55.9	-
무주군	7,715	4,977	2,885	58.0	47.9	-
장수군	7,198	4,506	2,692	59.7	49.4	-
임실군	9,770	3,743	3,654	97.6	80.7	-
순창군	9,279	6,439	3,470	53.9	44.5	-
고창군	18,076	9,244	6,760	73.1	60.4	-
부안군	16,635	6,669	6,221	93.3	77.1	-

〈그림 2-6〉 노인일자리 비율



- 최근 2년간 노인일자리 현황은 ('17년) 69.1%에서 ('18년) 83.7%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시·군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였음.
-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격차('17년→'18년)는 15.5%, 18.7%로 시 지역의 노인 일자리 참여 비율이 군 지역에 비해 높고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

〈표 2-11〉 노인일자리 현황(시부·군부)

구분	2018년			2017년
	노인수	노인경제활동 참여자수	비율(%)	비율(%)
전체	269,847	100,921	83.7	69.1
시부	172,959	64,686	91.4	75.5
군부	96,888	36,235	72.7	60.0

3.6. 통합문화이용권

■ 서비스기준

- 농어촌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은 문화관람 향유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점검방법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금액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금액) × 100

■ 자료원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금액: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8),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성과보고서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금액: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8),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성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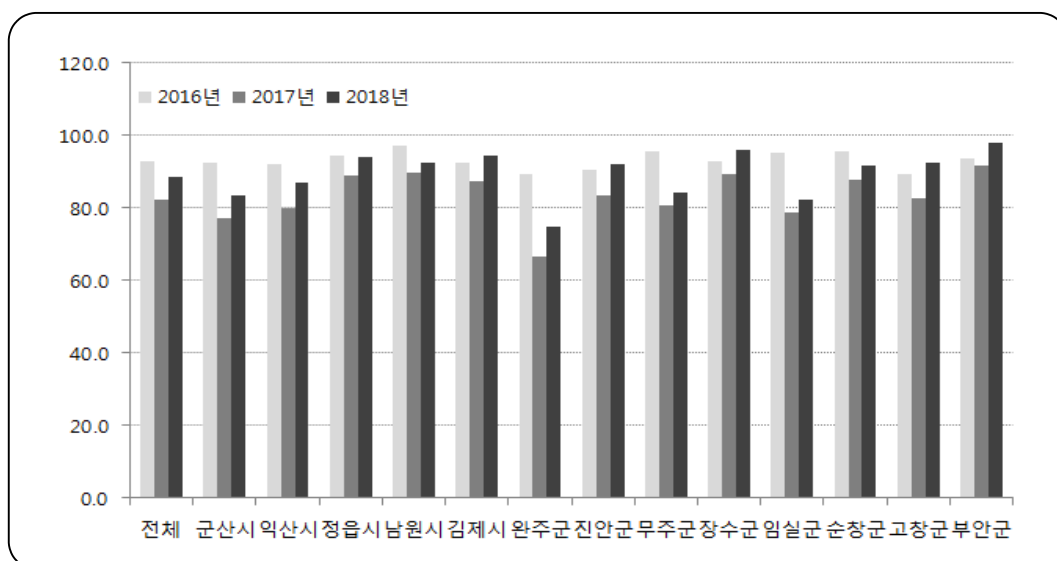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 통합시와 군지역의 2018년 통합문화권 발급액은 4,936,540천원으로 이 중 문화이용권이 이용된 비율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92.6%로 총 이용액은 4,571,960천원으로 나타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문화이용권 발급액 중 92.6%가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농통합시의 경우 남원시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 94.8%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91.3%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의 경우는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은 도농통합시에 비해 0.1%p 낮은 92.5%로 시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군지역의 경우 무주군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 95.7%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89.2%로 가장 낮았음.

〈표 2-12〉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발급자수	발급액 (천원)	이용액 (천원)	이용률(%)	이용률(%)	이용률(%)
전체	70,522	4,936,540	4,571,960	92.6	82.3	92.9
군산시	13,376	936,320	854,424	91.3	77.1	92.6
익산시	16,409	1,148,630	1,056,240	92.0	80.0	92.0
정읍시	7,601	532,070	496,423	93.3	88.8	94.5
남원시	5,557	388,990	368,659	94.8	89.7	97.0
김제시	7,256	507,920	479,814	94.5	87.3	92.4
완주군	4,923	344,610	316,532	91.9	66.7	89.2
진안군	1,403	98,210	89,972	91.6	83.4	90.7
무주군	1,584	110,880	101,789	91.8	80.5	95.7
장수군	1,400	98,000	87,114	88.9	89.4	93.0
임실군	1,959	137,130	126,410	92.2	78.6	95.4
순창군	1,429	100,030	94,328	94.3	87.8	95.6
고창군	3,989	279,230	258,072	92.4	82.7	89.4
부안군	3,636	254,520	242,183	95.2	91.7	93.5

〈그림 2-7〉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표 2-13〉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시부·군부)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발급자수	발급액 (천원)	이용액 (천원)	이용률(%)	이용률(%)	이용률(%)
전체	70,522	4,936,540	4,571,960	92.6	82.3	92.9
시부	50,199	3,513,930	3,255,560	92.6	82.9	93.2
군부	20,323	1,422,610	1,316,400	92.5	80.8	92.0

3.7. 문화동호인

■ 서비스기준

-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최소한 1개 이상의 문화동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점검방법

- $(\text{농어촌지역 문화동호인 수} / \text{농어촌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 농어촌지역 문화동호인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8), 문화예술과 업무편람
 - 2018년에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 등록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원 수
- 농어촌인구수: 통계청(KOSIS) 자료
 - 전라북도 시군별 20~64세 인구 수

■ 점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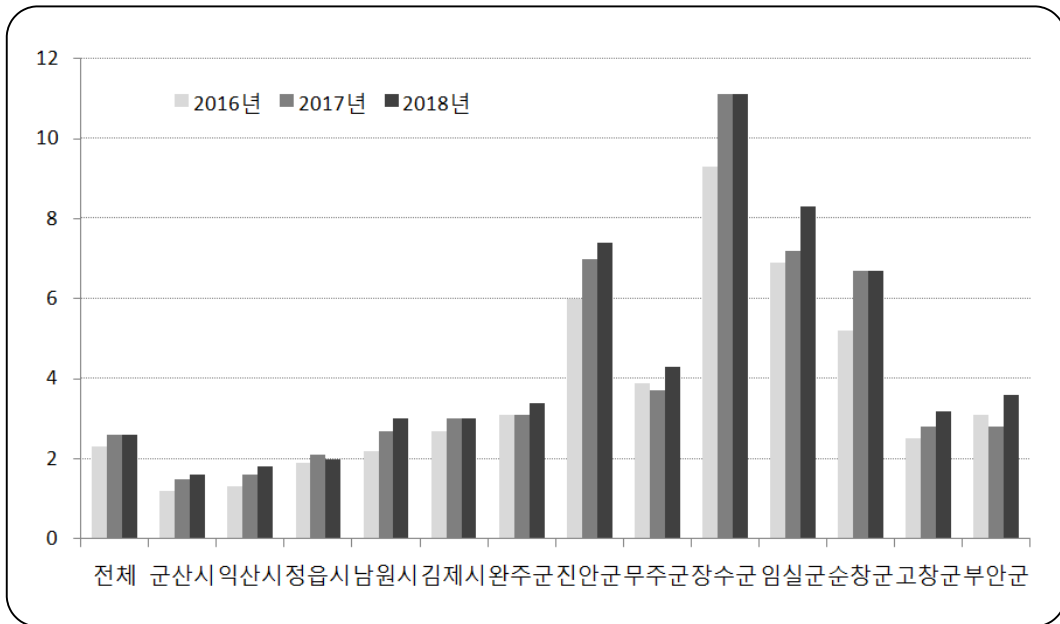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8년 20~64세의 인구수는 715,226명으로 이 중 생활문화예술 동호인에 등록된 인구비율은 2.6%인 18,601명으로 나타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20~64세 인구 중 2.0%가 생활문화예술 동호인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농통합시 경우, 김제시의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이 3.0%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1.6%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의 경우는 도농통합시에 비해 3.0%p 높은 5.0%가 생활문화예술 동호인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 지역의 경우 장수군의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이 11.1%로 가장 높았고, 고창군이 3.2%로 가장 낮았음.

〈표 2-14〉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인구(20세~64세)	동호인수(명)	가입률(%)	가입률(%)	가입률(%)
전체	715,226	18,601	2.6	2.6	2.3
군산시	173,856	2,848	1.6	1.5	1.2
익산시	188,617	3,435	1.8	1.6	1.3
정읍시	65,230	1,302	2.0	2.1	1.9
남원시	47,409	1,432	3.0	2.7	2.2
김제시	48,234	1,469	3.0	3.0	2.7
완주군	57,392	1,966	3.4	3.1	3.1
진안군	14,189	1,056	7.4	7.0	6.0
무주군	13,553	579	4.3	3.7	3.9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인구(20세-64세)	동호인수(명)	가입률(%)	가입률(%)	가입률(%)
장수군	12,838	1,424	11.1	11.1	9.3
임실군	16,512	1,366	8.3	7.2	6.9
순창군	15,684	1,045	6.7	6.7	5.2
고창군	31,093	1,006	3.2	2.8	2.5
부안군	30,619	1,095	3.6	2.8	3.1

〈그림 2-8〉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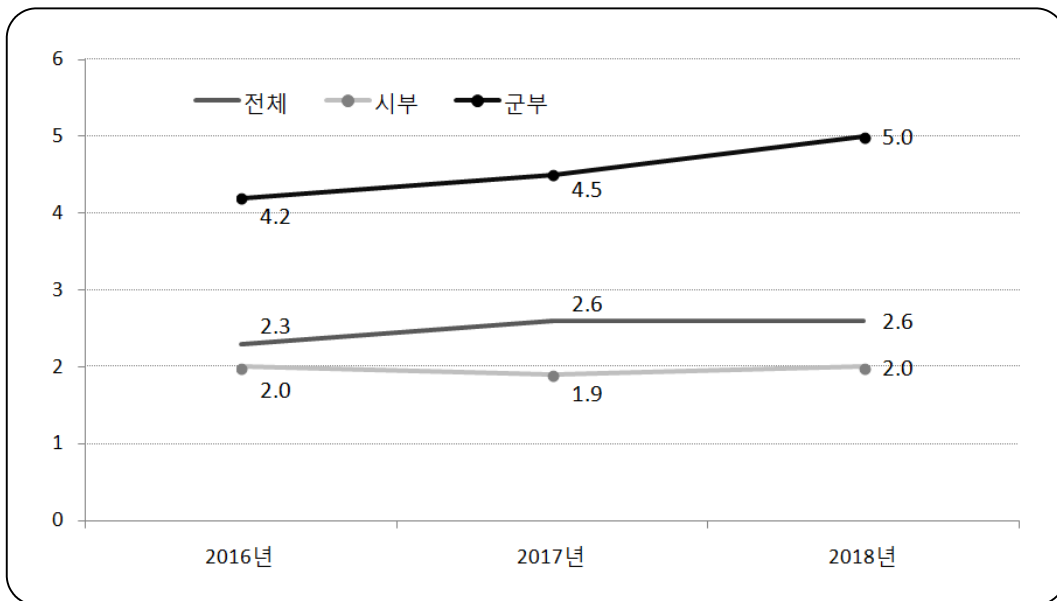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은 ('16년) 2.3%에서 ('18년) 22.6%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시부는 큰 변화가 없으나 군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향상되고 있음.

〈표 2-15〉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시부·군부)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인구(20세-64세)	동호인수(명)	가입률(%)	가입률(%)	가입률(%)
전체	715,226	18,601	2.6	2.6	2.3
시부	523,346	10,486	2.0	1.9	2.0
군부	191,880	9,537	5.0	4.5	4.2

○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격차('16년→'18년)는 2.2%, 1.6%, 2.5%로 군 지역의 가입률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6〉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변화

분야	세부지표	2018년			2017년			2016년		
		전체	시	군	전체	시	군	전체	시	군
보건 복지	독거노인 돌봄	36.0	24.6	54.5	32.1	23.1	46.7	31.5	26.2	39.9
	노인지매 돌봄	41.3	40.9	42.1	36.2	35.1	38.1	35.0	34.3	36.3
교육 여건	어울림 학교	27.2	36.2	19.4	26.0	35.8	18.1	22.8	32.0	15.3
정주 생활기반	그룹홈	3.4	2.5	4.2	-	-	-	-	-	-
경제 일자리	노인 일자리	83.7	91.4	72.7	69.1	75.5	60.0	-	-	-
문화·여가	통합문화 이용권	92.6	92.6	92.5	82.3	82.9	80.8	92.9	93.2	92.0
	문화 동호인	2.6	2.0	5.0	2.6	1.9	4.5	2.3	2.0	4.2

2018 전라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조 상 필 선임연구위원

차 례

제1장 서론

- 1.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247
-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현황 249
- 3.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개념 및 평가기준 252

제2장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1. 선택 항목 선정 개요 257
- 2.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266
- 3.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268

제3장 요약 및 제언

- 1. 이행실태 평가 결과의 요약 286
- 2.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291

제4장 삶의 질 우수사례 - 교통오지마을 100원택시 확대 운영

- 1. 사례 개요 295
- 2. 정책지원 내용 299
- 3. 주요성과 300

참고문헌 306

부 록 307

표 차례

제1장

<표 1-1> 국가관리 핵심 항목	253
<표 1-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방법	254
<표 1-3> 지자체의 자율관리 “선택 항목” 예시	256

제2장

<표 2-1> 전국 석면 지붕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261
<표 2-2>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265
<표 2-3>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서비스 기준	266
<표 2-4>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서비스 기준	266
<표 2-5>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기준	267
<표 2-6>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서비스 기준	267
<표 2-7>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이행실태 점검 방법	268
<표 2-8> 전남 농어촌 읍·면지역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실태(2017년) ..	270
<표 2-9> 전남 시·군별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현황(2017년말)	271
<표 2-10>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 이행실태 점검 방법	272
<표 2-11> 전남 시·군별 슬레이트 지붕 비율	274
<표 2-12> 전남 시·군별 연도별 슬레이트 지붕 지원사업 추진실적	275
<표 2-13> 전남 시·군지역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달성률	276
<표 2-14> 전남 시·군지역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달성률 변화	277
<표 2-15>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점검 방법	278
<표 2-16> 전남 큰 섬 및 모도 현황	280
<표 2-17> 전남 도서지역 시·군별 헬기 이·착륙장 설치·운영 현황	280
<표 2-18> 전남 대상도서지역 시·군별 헬기 이·착륙장 설치·운영 실태 ..	281

<표 2-19>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이행실태 점검 방법	282
<표 2-20> 전남 시·군지역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달성률	284
<표 2-21> 전남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점검·평가 결과(2017년) ..	284

제3장

<표 3-1>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최종 항목	287
<표 3-2> 전남 농어촌 읍·면지역 공중목욕탕 서비스 이행실적 변화 ...	288
<표 3-3> 전남 시·군지역 슬레이트 지붕개량 서비스 이행실적 변화 ...	288
<표 3-4> 전남 도서지역 시·군별 이·착륙장 설치·운영 이행실적 변화 ..	289
<표 3-5> 전남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률 이행실적 변화	290
<표 3-6>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당초 목표 달성 정도 ..	291

제4장

<표 4-1> 전남 100원 택시 운행현황(2017년)	298
<표 4-2> 전남 연도별 「100원 택시」 예산현황	301
<표 4-3> 전남 연도별 「100원 택시」 이용횟수	302
<표 4-4> 전남 2018년도 「100원 택시」 운행실적(6월말 기준)	303
<표 4-5> 전남 2018년도 「100원 택시」 운행 계획	304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과정	259
<그림 2-2> 전남 100원 택시 운영 체계	265

제 1 장

서 론¹⁾

1.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복지, 교육 등 서비스 공급 및 삶의 질 격차가 여전하고, 농어촌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음.
 -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여건변화와 특수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채 일률적인 투자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효율성과 효과의 극대성이 저하되어 왔음.
 - 즉, 수요자인 농어촌 주민들의 고려보다는 공급자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체감도가 낮은 실정임.

- 이에 중앙정부는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대, 도농간의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도입함.
 -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도농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529~537에서 일부 수정하여 작성

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임.

- 선진국들 역시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공급도 주요 정책의제로 선정하고 있음.
 - 독일은 2차대전 이후 확립한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조건 확립’이라는 일반원칙하에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정책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은 2000년 「농어촌 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a Fair Deal for Rural England)」를 발간하여 농어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어떤 지역이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OECD 역시 2008년 농어촌 발전 포럼을 통해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10가지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²⁾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는 2010년 이후 「삶의 질 향상 특별법(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

-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전남의 여건과 실정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전남지역민의 수요와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 수준의 평가가 필요함.
 - 전남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설정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2) 김광선 외 2인, 2014, 「2014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2.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현황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2010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규정하고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2011년 1월부터 동 법을 시행하면서 시행령에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그 ‘세부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1-5호)로 발표함.
- 한편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해 농어촌 서비스기준 협의회 및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등 추진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해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업무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5년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항목별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점검평가는 공표통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내부자료, 지자체 행정조사 등을 통해 각 항목별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농어촌 서비스기준 점검통계에 의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 서비스기준 점검통계를 지수화 하여 지역별, 부문별로 목표달성

- 정도를 비교·평가(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지수에 의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점검·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2013년 부터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8개부문 32개 항목을 9개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2013. 9. 9.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기존의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의 8개 부문에 ‘안전’ 부문을 추가하고 세부 항목으로 ‘경찰순찰’ 항목을 추가하여 개편·운용하고 있음.
- 또한 2013년도의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문화 부문에 대한 부문별 심층연구를 수행하였음.
- 농어촌 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부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영 실태와 향후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음.
 - 이 외에도 특별추진업무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2014년도에는 새롭게 수립·시행되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더불어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개편방안은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음.
 - 핵심 항목은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모든 농어촌 시·군이 적용하는 ‘국가 최소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국가적인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2015~19) 동안 달성할 중기 목표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선택 항목은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과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항목임.
 - ※ 핵심 항목의 수는 대폭 감소시키고, 대신 선택 항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운용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농어촌서비스기준 간 부문 구성을 매칭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즉,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보건·복지, 교육, 생활권 기반, 문화·여가, 일자리 창출, 환경·경관, 안전 등 7개 부문 구성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계획의 핵심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관련 사업 및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보완하여 기준 달성을 지원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노력에 대한 평가·포상 체계를 마련하고 기준 목표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관계부처별 관련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목표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핵심 항목 중 일부를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시·군 자율편성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기준 목표달성을 위한 시·군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음.
- 2015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맞추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편함.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2014년에 종료하고, 새로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2015년에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면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함.
- 핵심 항목은 ‘국가 최소 기준’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며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에도 필수항목으로 포함하여 추진

- 선택 항목은 지역 여건과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3.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개념 및 평가기준

-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할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을 의미함.
 - 7개 부문 17개의 국가관리의 핵심 항목<표 1-1참조>과 지자체 자율관리의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17개 핵심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방법은 <표 1-2>와 같음.
 - 지자체 자율관리의 선택 항목은 7대 부문 24개 항목<표 1-3참조>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외의 평가항목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핵심 항목은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임.
 - 핵심 항목에서는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국가 장기 목표와 함께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2015~2019) 동안 달성할 중기 목표도 제시함.
 - 7개 부문 17개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점검함(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 지자체 자율적인 선택 항목은 지역의 현황과 여건,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용함.

- 선택 항목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선택 항목으로서 각 지자체에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핵심 항목의 점검방법을 참조하여 각 지자체별로 선택 항목 기준에 맞게 점검방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표 1-1〉 국가관리 핵심 항목

부 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Base line(%)	'19년 목표(%)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76.8	80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1.8	97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4.1	8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71.0	80
2. 교육여건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98.1	100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21.1	40
3. 정주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88.3	95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62.9	82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50.8	70
	10)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90.4	100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77.3	90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00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92.0	100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9.4	85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32.7	60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0	100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45.4	55

〈표 1-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방법

부 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일반 병의원, 한방병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i)전국사업체조사(읍·면단위 제공) ii)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공식통계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	행정조사
	2) 응급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방재청: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협조자료
	3)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수)}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용현황 포함)	공식통계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행정조사
	4)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i)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 데이터) ii)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식통계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협조자료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협조자료
	6)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협조자료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통계청 협조자료	협조자료
	8)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공식통계
	9)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한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자료
	1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공식통계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행정조사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수 / 총 가구 수) × 100	방송통신위원회: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협조자료	

부 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4. 경제 활동· 일자리	12)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 육	시·군별 관련 서비스센터 운영 및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행정조사
5.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 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협조자료
		(공연프로그램 공연 횟수 + 전시프로그램 전시 일수) / 12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 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 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조자료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 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협조자료
6. 환경· 경관	14) 하수도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시·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통계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 리 수) × 100	경찰청: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협조자료
	16) 경찰 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1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경찰청: 시·군별 CODE 1 건별 출동소요시간	협조자료
	17) 소방 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방재청: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 시간	협조자료

〈표 1-3〉 지자체의 자율관리 “선택 항목” 예시

부 문	선택 항목(예시)	세부 내용(예시)
1. 보건복지	1) 순회방문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의 80% 이상의 마을에서 월 1회 이상 운동·영양·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변화를 돕는 전문팀의 순회방문을 받을 수 있다.
	2) 알코올중독 예방 및 상담	모든 시·군에서 음주문화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며 알코올중독자의 단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 청소년	모든 시·군에 학대 및 성폭력 등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센터 및 그룹홈을 1개소 이상씩 확충 한다.
		모든 시·군에 학교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모든 읍·면에 사회복지담당을 2명 이상 배치한다.
	5) 자살예방	노인 자살시도 발생시 1년 동안 주1회 사례관리를 방문하여 실시한다.
6) 정신건강	모든 시·군에 정신보건센터를 1개소 설치·운영한다.	
2. 교육여건	7)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8) 방과후학교	농어촌 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면지역 방과후학교 강사에 교통비를 지급한다.
	9) 교사임용	학교·지역단위 임용제를 통한 교원 임용을 확대한다.
	10) 교사배치	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행정 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한다.
11) 평생교육	(농어촌 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문맹자에게 면단위 문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정주생활 기반	12) 석면 슬레이트	농어촌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전면 개량한다. * '13.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대비
	13) 공동목욕탕	읍·면별로 공동목욕탕을 운영한다.
	14) 도서지역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5. 경제활동·일자리	15) 지역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읍·면별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공급 및 매개하는 일자리를 1인 이상 배치·운영한다.
	16)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지원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5가지 이상 운영한다.
	17) 귀농·귀촌인 창업지원 및 구인구직 서비스	시·군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18) 농산어촌 산업 융복합화를 위한 기업인 포럼	시·군 내외의 기업인들끼리 정보 제공 및 융복합화를 시도하는 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포럼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4. 문화·여가	19) 문화향유	전문 문화시설(예: 문예회관, 미술관, 소극장)에서 개최되는 문화 프로그램에 월 1회 이상 참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및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20) 생활체육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1) 영화관람	모든 시·군에서 언제나 최신개봉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22) 문화여가 인력	모든 읍·면에 문화여가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 주민수요에 맞는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환경·경관	23) 생활쓰레기 수거	모든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진다.
7. 안전 (생활안전)	24) 경찰순찰	읍·면별로 파출소를 설치·운영하며, 범죄취약마을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

제 2 장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³⁾

1. 선택 항목 선정 개요

1.1. 목적 및 원칙

-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주민생활에 따라 삶터, 일터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제고에 관련된 주민 체감형 지표를 선정함.
- 또한 농어촌지역에 제공되어야할 최소한의 서비스 중 주민 체감형 서비스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이용하고 체감하는 삶의 질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민 행복을 지향토록 함.
 - 지역민의 공감대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부합하는 체감형 삶의 질 지표 도출
 - 특히, 지역민의 공감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업무담당자(전문가 협의체 구성),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남에 가장 적합하

3)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541~554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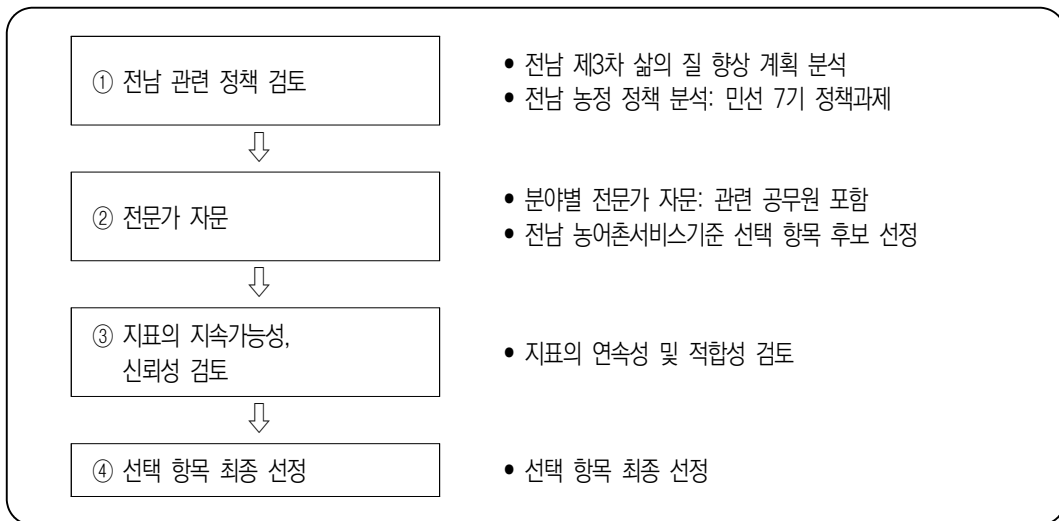
다고 판단되는 항목 4가지를 선정함.

- 선택 항목 지표는 지표의 대표성, 자료 확보 용이성, 지표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농어촌 주민수요에 맞춘 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효율성을 담보토록 함.
-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개량과 공동목욕탕 등의 지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이 높은 지표로서 지속적인 사업투자가 필요한 분야임.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지표는 ‘섬주민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주민의 의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함.
 - 전남지역의 의료·보건 서비스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 특성상 도서벽지의 응급의료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준 항목을 선정함.
 - ※ 2017년 전남지역 의료기관은 전국 대비 3.6%, 전문의는 전국 대비 3.2%에 불과하며, 2018년 4월 현재 15년 이상 노후 된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일반장비 32.4%, 진단용 방사선 장비 13.7%, 특수 장비 13.4%).
 - ※ 전남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입원환자 비율은 높은 반면,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입원환자 비율은 낮음.
 -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지표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교통오지마을(버스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여건 개선(민선 6~7기 핵심 공약)을 위한 도민 체감형 복지 정책임.
 - 교통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는 도민 체감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준 항목으로 선정함.

1.2. 선택 항목 선정 과정

- 선택 항목의 선정은 전남 민선 7기 관련정책의 검토, 지표의 지속성, 자료 확보 용이성, 지표의 신뢰성이 담보된 지표를 선정함.<그림 2-1 참조>.

<그림 2-1>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과정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 246에서 수정 작성

1.3 선택 항목 선정 배경

■ 공중목욕탕

- 공중목욕탕은 농·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청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 복지 시설 중 하나임.
 - 공중목욕탕은 관절염 및 퇴행성 질환 등 농부증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생활시설로 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중 하나임.
 - 공중목욕탕 건립 지원사업은 전라남도가 '06년부터 추진한 농어촌지역 복지시책중 하나로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전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12년 한겨레 신문이 주관하는 지역복지 우수시책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

※ 전통적인 농도인 전남은 일손부족과 고령화로 대부분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부분이 관절염 및 퇴행성 질환 등 소위 농부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모색이 필요함.

-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치료 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농어촌 지역 기초 생활단위인 읍·면에 1개소 이상의 공중목욕탕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 '05년 당시 면지역의 약 70%가 공중목욕장이 없어 목욕을 위해 읍이나 인근 도시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등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의 한계로 인해 목욕탕이 없는 농어촌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 정책 추진을 기획하던 '05년말 전남 농어촌지역 약 70% 면지역에 공중목욕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7년 말 현재도 읍·면에 18.3%가 공중목욕탕 미 설치됨.
- 농어촌서비스 기준 관련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결과 농어촌지역 공중목욕탕 설치·운영을 지자체 선택 항목으로 반영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렴함.

■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

○ 농어촌 주민의 주거서비스 질 제고 및 주민의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서비스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환경부가 실시한 석면 지붕 건축물 전수 조사 결과, 전남에는 전국의

16.9%인 238,682동의 석면 지붕 건축물이 분포함.

- 전남의 석면 지붕 건축물은 주택 99,954동, 공장 1,408동, 창고 107,621동, 축사 12,327동, 시설 8,445동, 기타 8,927동으로 창고와 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1〉 전국 석면 지붕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구분	계(동, %)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전국	1,409,867 (100.0)	733,377	20,807	442,420	76,462	51,462	85,339
전남	238,682 (16.9)	99,954	1,408	107,621	12,327	8,445	8,927

주: 석면 지붕 현황은 환경부가 2013년 8월에 조사한 자료가 최근자료임. 현재 환경부에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2013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출함.

- 석면슬레이트 지붕 노후화 및 부식에 따라 석면검출이 진행되며, 폐암, 폐기종 유발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석면슬레이트 지붕 정비에 대한 일원화된 지표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실천이 필요함.
- 특히,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 관련 사업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정책 필요성’ 등 농어촌 서비스 기준 관련 지표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자자체 선택 항목으로 선정함.
- 또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농어촌지역에 석면 지붕이 많이 남아 있어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2019년부터 재추진하여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개량·철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에 지원하고 있음.
 - 슬레이트지붕 개량, 주택 집수리 등에 지원하고 있음.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 전남은 섬이 많고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나 의료서비스 기반이 취약하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함.
 -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취약한 의료기반으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은 각종 질병과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이송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
 - 전라남도의 296개 유인도서 중 134개 섬은 의료인이 전혀 없는 의료취약 지역으로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헬기가 절실한 상황임.
 - 전남도는 선박(나르미선) 150여척을 활용한 섬지역 응급환자 이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생활 안전보장 및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나, 선박을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는 병원까지 이송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상악화 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추진 정책으로 365생활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응급의료기관은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도달하도록 인구 비율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응급출동은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남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닥터헬기를 도입하여 주간에 운항하고 있음.
 - 거점병원인 권역외상센터(목포한국병원)를 기준으로 반경 100km 이내 15개 시·군에 217개소의 착륙장을 갖추고 100만여 주민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음.
 - 그러나 닥터헬기가 운항하지 못하는 일몰 이후 또는 원거리 섬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은 소방항공대와 해경 헬기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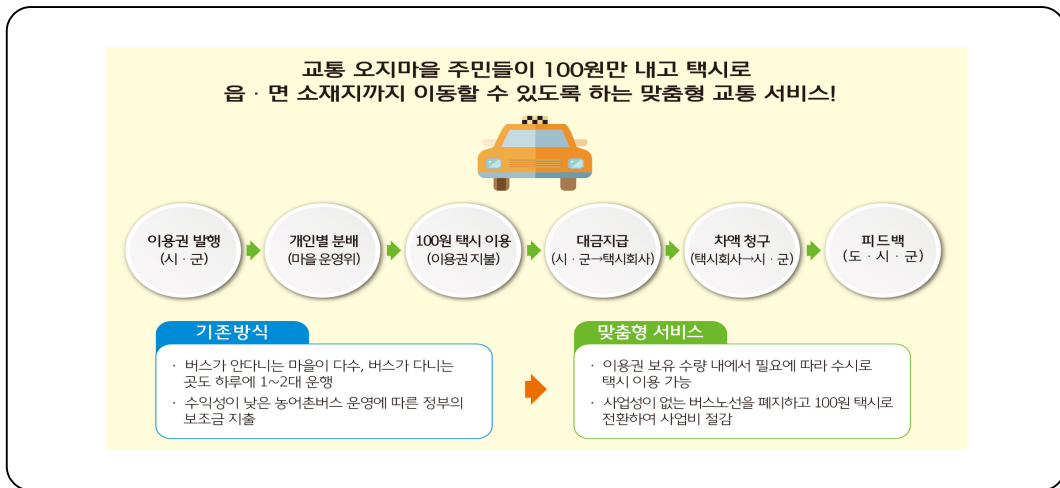
- 응급의료전용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도서지역의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이·착륙장의 안전 및 설치기준이 좀 더 엄격함.
 - ※ 소방항공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헬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착륙장의 개소수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이착륙장의 안전관리도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음.
 - ※ 헬기장이 없는 섬에는 응급환자 인계점이 마련돼 있지만, 이마저도 전남 전체 유인도의 73%인 219곳에 불과함.
- 2015년 3월 13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헬기 착륙장이 없는 가거도에 출동하였으나, 가거도항 방파제에 착륙하던 해경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특히,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도서벽지 응급 서비스가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정책 필요성’ 등 농어촌 서비스 기준 관련 지표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지자체 선택 항목으로 선정함.
- 전남 섬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착륙장 설치 유·무를 점검하여 섬지역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고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 전남도 내 6,650개 농어촌 마을 중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교통오지마을(버스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2015년에 316 마을을 본격 운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9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645개 마을에 운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741개 마을, 2018년도에는 804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 병원 치료가 어렵고 및 생필품 구입에 지장을 받는 마을에 정주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전남 민선 6~7기 핵심공약사항으로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을 확대 도입하여 추진 중임.

- 교통 취약지역 오지마을 주민이 택시를 불러 버스가 닿는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시·군에서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과 현금 100원을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
- 택시 이용권은 마을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매월 마을운영위원회에 배부되고, 이용객이 지불한 100원 외의 택시요금은 도와 시·군 예산으로 택시업체에 보전하고 있음.
- 2014년 10월 21일 보성군을 시작으로 화순군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73개 마을, 5,049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함.
- 2015년에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군 362개 마을(11,076명)로 확대 운영
- 2016년에는 19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645개 마을 19,891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 있음.
- 2017년도에는 목포시를 제외한 전남도내 12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741개 마을(21,622명), 2018년에는 목포시 4개 마을을 추가 운영하여 전남 도내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804개 마을에서 24,939명이 이용하고 있음.
- 적은 비용으로 교통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아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농어촌서비스 기준 관련 업무담당자 면담 결과,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을 전남 선택 항목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렴함.
- 교통오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 기준을 선정함.

〈그림 2-2〉 전남 100원 택시 운영 체계



〈표 2-2〉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구 분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정주생활기반	공동목욕탕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석면슬레이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정비사업을 매년 전남 총량대비 10%이상을 추진한다
	100원 택시 운행	전남도내 모든 버스노선이 없는 교통오지마을의 교통편의를 증진한다
안 전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전남도내 모든 큰 섬 및 모도에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2.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2.1. 공중목욕탕

-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선택 항목
 - 각 읍·면별 공중목욕탕 1개소 이상 설치·운영을 서비스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표 2-3〉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서비스 기준

부 문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3. 정주생활기반	13) 공중목욕탕	읍·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중목욕탕을 설치·운영한다.

2.2.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

-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률
 - 전남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정비사업’을 전남 총량대비 10% 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표 2-4〉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서비스 기준

부 문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3. 정주생활기반	석면 슬레이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정비사업을 매년 전남 총량대비 10% 이상을 추진한다.

2.3.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 전남 도내 모든 큰 섬⁴⁾ 및 모도(母島)⁵⁾에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표 2-5〉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기준

부 문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7. 안전 (생활안전)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전남도내 모든 큰 섬 및 모도에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2.4.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선택 항목

- 전남도내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교통오지 마을(버스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표 2-6〉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서비스 기준

부 문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3. 정주생활 기반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전남도내 모든 버스노선이 없는 교통오지마을의 교통편의를 증진한다.

- 4) 큰 섬: 상시거주 인구 2,000명 이상이거나, 부속도서를 7개 이상 지니고 있는 섬지역
 5) 母島: 정기여객선의 운항횟수가 비교적 많고, 주민의 기초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공기관과 일정한 교육, 의료, 생활편의 시설을 갖추어 주변의 작은 섬에 생활기능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중심 섬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섬

3.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3.1. 공중목욕탕

■ 공중목욕탕 이행실태 점검방법

- 전라남도 전체 읍·면 중 공중목욕탕이 설치·미설치된 읍·면수 파악
 - 단일기준 항목으로 이행실태는 ‘(공중목욕탕 설치 읍·면 수 / 전체 읍·면 수) × 100’으로 점검하였음.
 - 전체 읍·면중 공중목욕탕이 설치된 읍면수 비율을 전라남도 평균(기준)으로 설정하고 각 시·군의 공중목욕탕 설치·운영현황을 비교하였음.
 - * 서비스기준 점검 대상이 시·군. 읍·면·동, 행정리, 시설수 등으로 다양하나 농어촌지역 공중목욕탕의 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읍·면을 기준으로 점검하였음.
 - * 농어촌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시(市)지역의 동(洞)은 점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실태는 각 시·군에서 발표하는 공식통계(2017년 시·군 통계연보)와 전라남도의 자체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점검함.
 - 사설목욕탕: 시·군 통계연보상 공중위생영업소(목욕장업)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설치 읍·면을 파악하였음.
 - * 통계연보와 전남도 파악자료가 상이한 경우 해당 읍·면 확인을 거쳐 수정함.
 - 공설목욕탕: 전라남도의 협조를 받아 시·군별 공중목욕탕 건립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설치 읍·면 파악하였음.

〈표 2-7〉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이행실태 점검 방법

부 문	선택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3. 정주 생활 기반	13) 공중목욕탕	공중목욕탕 설치 읍·면 수 / 전체 읍·면 수) × 100	i)시·군통계연보: 공중위생영업소(목욕장업) ii)전라남도: 시·군별 공중목욕탕 건립 지원현황	공식통계 협조자료

■ 공중목욕탕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 전라남도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읍·면에 최소 1개소 이상의 공중목욕탕 설치를 목표로 공중목욕탕 건립 및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음.
 - '06년 부터 추진된 전라남도의 공중목욕탕 건립 지원사업은 '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작은목욕탕 사업(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으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선택 항목 점검 기준

시·군 각 읍·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중목욕탕을 설치·운영한다.

- 공중목욕탕 운영 이행실태 점검은 전남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목욕탕 설치 읍·면 수 / 전체 읍·면 수) × 100을 통해 산출되었음.
- 각 시·군의 2017년 통계연보와 전라남도 행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전체 읍·면의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개 시·군⁶⁾ 229개 읍·면 중 공중목욕탕이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187개 읍·면으로 조사되었음(달성률 81.7%).
 - 도농복합시 지역은 전체 38개 읍·면 중 34개 읍·면에 목욕탕이 설치되어 89.5%의 달성률을, 군지역은 전체 191개 읍·면 중 153개 읍·면에 목욕탕이 설치되어 80.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표 2-8 참조>.
 - ※ 사설 공중목욕탕(공중위생관계업소 목욕장업)은 77개 읍·면에서 총 18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설목욕탕(전라남도 또는 기타 지원)은 총 121개 면에 건립·운영중임.

6) 농어촌지역이 없는 시지역인 목포시 제외

- 전남 농어촌 시·군 중 모든 읍·면지역에서 공중목욕탕이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되어 서비스 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21개 시·군 중 7개 시·군으로 조사되었음.
- 군지역은 전체 17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고, 도농복합시 지역은 4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서비스 기준을 달성하였음.
 - 군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사설목욕탕의 폐지로 인하여 2015년에 비하여 달성 시·군수가 감소하고 있음.
 - 도농복합시 지역에서는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가 전체 읍·면에 1개소 이상 공중목욕탕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며(달성률 100%), 순천시 11개 읍·면 중 7개 지역에 공중목욕탕이 설치되어(달성률 63.6%) 시 지역 중 미설치 읍·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군지역에서는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함평군 등 4개 지역이 100%의 달성률을 보였고, 광주와 인접해 있는 장성군(36.4%)과 담양군(50.0%)의 공중목욕탕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기 지정된 온천지구로 인해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구례군도 전체 8개 읍·면중 4개 지역에만 공중목욕탕이 설치(설치율 50%)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2-9 참조>.

〈표 2-8〉 전남 농어촌 읍·면지역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실태(2017년)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목욕탕 설치율)	서비스기준 달성지역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지역	100.0	36.4	80.1	4 / 17	23.5
도농복합시	100.0	63.6	89.5	3 / 4	75.0
전남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36.4	81.7	7 / 21	33.3

〈표 2-9〉 전남 시·군별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현황(2017년말)

(단위: 개, %)

시·군		전체 읍·면수	목욕장 설치 읍·면 수	미설치 읍·면 수	달성률
시지역	여수시	7	7	-	100.0
	순천시	11	7	4	63.6
	나주시	13	13	-	100.0
	광양시	7	7	0	100.0
	소 계	38	34	4	89.5
군지역	담양군	12	6	6	50.0
	곡성군	11	11	0	100.0
	구례군	8	4	4	50.0
	고흥군	16	16	0	100.0
	보성군	12	8	4	66.7
	화순군	13	13	0	100.0
	장흥군	10	9	1	90.0
	강진군	11	7	4	63.6
	해남군	14	12	2	85.7
	영암군	11	9	2	81.8
	무안군	9	8	1	88.9
	함평군	9	9	0	100.0
	영광군	11	9	2	81.8
	장성군	11	4	7	36.4
	완도군	12	9	3	75.0
	진도군	7	6	1	85.7
	신안군	14	13	1	92.9
	소 계	191	153	38	80.1
	시·군 합계		229	218	42

3.2.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

■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 이행실태 점검방법

- 2013년 8월, 환경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구축된 석면 건축물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음.
 - 매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정비 사업 추진 실적을 조사하였음.
 - * 전남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음.

〈표 2-10〉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 이행실태 점검 방법

부 문	선택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3. 정주생활 기반	석면 슬레이트	(매년 정비(철거포함)하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수(동) / 전남 슬레이트 지붕 주택 총수(동)) × 100	i)당해연도 슬레이트 지붕 주택 개량 실적 ii)슬레이트 지붕 주택 총 수
			시·군 행정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 전남 농어촌 주민의 주거서비스 질 제고 및 주민의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정비”를 주거서비스 선택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석면슬레이트 지붕 노후화 및 부식에 따라 석면검출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폐암과 폐기종 유발 등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석면슬레이트 지붕 정비에 대한 일원화된 지표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선택 항목 점검 기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정비사업’을 매년 총량 대비 10% 이상 추진한다.

-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률’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전남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left(\frac{\text{매년 정비(철거포함)하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수(동)}}{\text{전남 슬레이트 지붕 주택 총수(동)}} \right) \times 100$ 을 통해 산출함.
- 2013년 8월 기준, 전남의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총 수는 99,954(호)로 파악되었음.
 - 전남의 총 단독주택수 476,354(호) 대비 21.0%를 차지하고 있음.
 - 시·군별 단독주택수 대비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은 진도(46.6%), 강진(39.2%), 완도(33.75), 화순(31.1%) 순으로 나타남<표 2-11 참조>.

〈표 2-11〉 전남 시·군별 슬레이트 지붕 비율

(단위: 호, %)

시·군	단독주택수	슬레이트 지붕 주택수	슬레이트지붕 비율
계	476,354	99,954	21.0
목포시	27,606	1,180	4.3
여수시	40,400	12,171	30.1
순천시	33,158	8,921	26.9
나주시	31,080	2,919	9.4
광양시	21,823	4,915	22.5
담양군	18,678	1,381	7.4
곡성군	13,214	1,731	13.1
구례군	9,945	1,205	12.1
고흥군	31,460	5,751	18.3
보성군	21,908	6,418	29.3
화순군	23,124	7,197	31.1
장흥군	16,893	2,423	14.3
강진군	15,895	6,224	39.2
해남군	27,361	7,643	27.9
영암군	17,563	2,302	13.1
무안군	19,339	1,632	8.4
함평군	16,719	3,576	21.4
영광군	20,471	1,817	8.9
장성군	15,060	935	6.2
완도군	18,330	6,183	33.7
진도군	14,886	6,938	46.6
신안군	21,441	6,492	30.3

주) 단독주택수는 2016 전남통계연보 자료, 슬레이트 지붕 주택수는 2013년 환경부 조사자료임.

- 전남은 2011년부터 주택개량사업, 빈집처리사업 등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고 있음.
 - 주택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주택을 정비하는 업무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해당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2011년 463(호), 2012년 1,697(호), 2013년 2,757(호), 2014년 2,781(호), 2015년 4,409(호), 2016년 3,624

(호), 2017년 4,573(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2-12 참조>.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지역은 총 20,304호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였음.

〈표 2-12〉 전남 시·군별 연도별 슬레이트 지붕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호)

시·군	합계	2017			2016			2015			비고
		계	물 환경과	건축 개발과	계	물 환경과	건축 개발과	계	물 환경과	건축 개발과	
계	17,177	4,573	3,019	1,554	3,624	3,513		4,490	3,263	1,227	
목포시	254	59	59		45	45		75	75		
여수시	521	131	91	40	116	84	32	137	87	50	
순천시	1,275	327	283	44	286	286		331	278	53	
나주시	849	255	144	111	196	143	53	199	130	69	
광양시	576	177	134	43	109	83	26	145	82	63	
담양군	1,410	346	272	74	280	280		392	304	88	
곡성군	1,067	226	149	77	263	263		289	289		
구례군	400	81	81		125	125		97	97		
고흥군	593	146	92	54	91	91		178	108	70	
보성군	748	192	132	60	130	130		213	124	89	
화순군	974	376	178	198	138	138		230	164	66	
장흥군	342	114	89	25	62	62		83	68	15	
강진군	803	223	114	109	124	124		228	118	110	
해남군	840	189	84	105	245	245		203	73	130	
영암군	1,090	340	320	20	324	324		213	213		
무안군	787	216	124	92	137	137		217	126	91	
함평군	538	142	116	26	146	146		125	85	40	
영광군	908	342	78	264	88	88		239	163	76	
장성군	1,623	262	228	34	469	469		446	416	30	
완도군	493	124	94	30	89	89		140	104	36	
진도군	666	173	100	73	111	111		191	101	90	
신안군	420	132	57	75	50	50		119	58	61	

자료: 전남도청 물환경과와 건축개발과 내부자료(환경부 정산결과)

- 2013년 환경부의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이후, 지붕을 개량한 주택수는 2016년도에 3,624(호), 2017년도에는 4,573호로 개량률은 각각 3.6%와 4.7%에 달함.
 - 2017년을 기준으로 군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률은 5.4%, 시지역의 개량률은 3.2%로 나타남<표 2-13 참조>.
 - 시·군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지역에서 서비스기준 10%를 달성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지역은 6개 지역이 서비스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률이 10%를 초과하는 지역은 장성군(56.2%), 담양군(31.4%), 영광군(19.7%), 영암군(17.2%), 곡성군(15.4%), 무안군(14.5%)으로 서비스기준 달성률은 2017년 말 현재 27.3%임.

〈표 2-13〉 전남 시·군지역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달성률

(단위: %, 개)

구 분	최대값	최소값	슬레이트지붕 개량률 (평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56.2	2.0	5.4	6/17	35.3
시	9.4	1.1	3.2	0/5	0.0
전남 시·군	47.9	0.8	4.7	6/22	27.3

- 2016년부터 2017년에 서비스 기준 달성률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1.1%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2개 시·군별로 달성률이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은 <표 2-14>와 같음.
 - 전라남도 내부자료를 통해 2개년도 서비스기준(슬레이트 지붕 개량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지역에서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 5개시가 전부 달성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군지역에서는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군의 달성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6~2017년을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영광군(15.0%p), 담양군(11.1%p), 무안군(6.2%p), 장성군(6.0%p)순이고, 감소세를 보인 지역은 구례군(-2.9%p), 해남군(-0.6%p)로 나타났음<표 2-14 참조>.

〈표 2-14〉 전남 시·군지역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달성률 변화

(단위: 호, %, %p)

시·군	슬레이트 지붕 주택수		슬레이트 지붕 개량 주택수		슬레이트 지붕 개량(정비) 비율		서비스기준 달성률 변화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변화율	추세
목포시	1,180	1,135	45	59	3.8	5.2	1.4	/
여수시	12,171	12,055	116	131	0.95	1.1	0.15	/
순천시	8,921	8,635	286	327	3.2	3.8	0.6	/
나주시	2,919	2,723	196	255	6.7	9.4	2.7	/
광양시	4,915	4,806	109	177	2.2	3.7	1.5	/
담양군	1,381	1,101	280	346	20.3	31.4	11.1	/
곡성군	1,731	1,468	263	226	15.2	15.4	0.2	/
구례군	1,205	1,080	125	81	10.4	7.5	-2.9	\
고흥군	5,751	5,660	91	146	1.6	2.6	1.0	/
보성군	6,418	6,288	130	192	2.0	3.1	1.1	/
화순군	7,197	7,059	138	376	1.9	5.3	3.4	/
장흥군	2,423	2,361	62	114	2.6	4.8	2.2	/
강진군	6,224	6,100	124	223	2.0	3.7	1.7	/
해남군	7,643	7,398	245	189	3.2	2.6	-0.6	\
영암군	2,302	1,978	324	340	14.1	17.2	3.1	/
무안군	1,632	1,495	137	216	8.3	14.5	6.2	/
함평군	3,576	3,430	146	142	4.1	4.1	0.0	=
영광군	1,817	1,729	88	342	4.8	19.7	15.0	/
장성군	935	466	469	262	50.2	56.2	6.0	/
완도군	6,183	6,094	89	124	1.4	2.0	0.6	/
진도군	6,938	6,827	111	173	1.6	2.5	0.9	/
신안군	6,492	6,442	50	132	0.7	2.0	1.3	/

주) 서비스기준 변화 추세는 달성률이 증가한 경우 /, 하락한 경우 \, 변화가 없는 경우 = 로 표기함.

3.3.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점검방법

- 전남 지역 도서 중 큰 섬과 모도(母島)의 수는 전남 통계연보와 시·군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파악하였음.
 - 전라남도 통계연보와 시·군 통계연보를 통해 전남 시·군별 큰 섬과 모도의 수 파악
- 전남도 내부자료 및 시·군 협조를 통해 섬지역 헬기 이착륙장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을 파악하여 이행실태 점검하였음.
 - 이행실태는 ‘(큰 섬과 모도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수 / 큰 섬·모도의 수) × 100’으로 점검

〈표 2-15〉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점검 방법

부 문	선택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7. 안전 (생활안전)	도서 벽지 응급서비스	(큰 섬과 모도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수 / 큰 섬·모도의 수) × 100	i)시·군 통계연보, 전남 통계연보: 큰 섬과 母島의 수 ii)지자체: 섬지역 헬기 이착륙장 설치 현황 iii)지자체: 섬지역 헬기 이착륙장 설치 계획	공식 통계 지자체 자료 협조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 전남은 전국에서 도서지역이 가장 많고 인구 고령화도 가장 높은 지역임. 이러한 지역의 특성상 도서지역은 의료서비스 기반이 취약하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전남 296개 유인도서 중 45.3%에 달하는 134개 섬은 전문 의료인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임.
-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취약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목포한국병원과 인천광역시 가천의대 길병원이 최종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 헬기를 운영하고 있음.
- 선택 항목 점검 기준

전남도내 모든 큰 섬 및 모도에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설치·운영’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전남도내 24개의 큰 섬과 모도를 대상으로 ‘(큰 섬과 모도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수 / 큰 섬·모도의 수) × 100’을 통해 산출하였음.
 - 이때 큰 섬은 ‘상시거주 인구 2,000명 이상이거나 부속도서를 7개 이상 지니고 있는 섬’으로 정의하였음.
 - 또한, 모도는 ‘정기여객선의 운항횟수가 비교적 많고, 주민의 기초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공기관과 일정한 교육, 의료, 생활편의 시설을 갖추어 주변의 작은 섬에 생활기능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중심 섬’으로 정의하였음.
 -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은 15개로 이중

- 큰 섬 및 모도는 여수시,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6개 시·군 24개 섬으로 분석되었음(2017 전라남도 통계연보)<표 2-16 참조>.
- 전남 도내 도서지역의 주간 헬기착륙장(해군 헬기장 포함)은 영광군 3개소, 신안군 19개소, 진도군 13개소, 완도군 13개소, 여수시 12개소, 고흥군 4개소 등 총 6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전라남도 소방본부와 식품의약과 내부자료).

〈표 2-16〉 전남 큰 섬 및 모도 현황

시·군	대상 도서명	비고
계		24개소
영광군	상낙월도	1개소
신안군	압해도, 안좌도, 임자도, 자은도, 비금도, 도초도, 암태도	7개소
진도군	하조도, 관매도, 서거차도, 가사도, 대마도	5개소
완도군	평일도, 노화도, 신지도, 청산도, 고금도, 약산도, 소안도, 보길도	8개소
고흥군	외나로도, 거금도	2개소
여수시	금오도	1개소

〈표 2-17〉 전남 도서지역 시·군별 헬기 이·착륙장 설치·운영 현황

시·군	도서명	설치 수
계		64개소
영광군	상낙월도, 안마도, 송이도	3
신안군	병풍도, 임자도, 자은도, 비금도, 우이도, 가거도, 다물도, 흑산도(해군헬기장), 하의도, 신익도, 장산도, 안좌도, 자라도, 팔금도, 암태도, 흥도, 만재도, 옥도, 수치도	19
진도군	금호도, 관매도, 내병도, 맹골도, 가사도, 창유도, 대마도, 거차도, 성난도, 나배도, 옥도, 청등도, 하조도	13
완도군	평일도, 노화도, 흑일도, 대모도, 여서도, 청산도, 소안도, 금당도, 보길도, 생일도, 총도, 금일도, 완도읍	13
고흥군	사산도, 대도, 지죽도, 사양도	4
여수시	거문도(해군헬기장), 초도, 월호도, 낭도, 개도, 화태도, 연도, 안도, 금오도, 대경도, 손죽도, 연도	12

주: 헬기 이·착륙장은 소방과 보건의료용을 전부 포함한 자료임.

○ 전라남도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점검 결과

- 전남도 6개 시·군 24개의 큰 섬 및 모도에는 총 19개의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달성률 79.2%의 달성률을 보임.
- 시·군별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 영광군은 1개 대상 도서인 낙월도에 1개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어 달성률 100%임.
 - 신안군은 7개 큰 섬과 모도에 전부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어 달성률은 100%임.
 - 진도군은 5개 대상 도서 중에서 5개소에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어 달성률 100%임.
 - 완도군은 8개 대상 도서 중에서 5개소에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어 달성률 62.5%임.
 - 여수시는 큰 섬과 모도인 금오도에는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어 달성률 100.0%임.
 - 그러나 고흥군은 총 2개의 대상도서에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달성률이 0%로 조사되었음<표 2-18 참조>.

〈표 2-18〉 전남 대상도서지역 시·군별 헬기 이·착륙장 설치·운영 실태

(단위: 개, %)

시·군	큰 섬과 모도 대상 도서수	큰 섬과 모도에 헬기착륙장 설치 도서		헬기착륙장 미설치 도서		달성률
		도서명	도서수	도서명	도서수	
전남 전체	24	-	19	-	5	79.2
영광군	1	낙월도	1	-	-	100.0
신안군	7	임자도, 자은도, 비금도, 안좌도, 암태도, 압해도, 도초도	7	-	-	100.0
진도군	5	관매도, 가사도, 대마도, 거차도, 하조도	5	-	-	100.0
완도군	8	평일도, 노화도, 청산도, 소안도, 보길도	5	신지도, 고금도, 약산도	3	62.5
고흥군	2	-	-	외나로도, 거금도	2	0
여수시	1	금오도	1	-	-	

3.4.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이행실태 점검방법

- 전남 지역 교통오지마을의 현황은 시·군 관계 부서의 자료를 협조받아 파악하였음.
- 또한 전남도 2015년 100원 택시 추진 실적 등 내부자료 및 시·군의 협조를 통해 각 교통오지마을 중 100원 택시 운행에 따른 수혜 마을 수를 파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이행실태는 ‘(시·군별 100원 택시 운행 수혜자 마을 수 / 시·군별 교통오지 마을의 수) × 100’으로 점검하였음.

〈표 2-19〉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이행실태 점검 방법

부 문	선택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3. 정주생활기반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시·군별 100원 택시 운행 수혜 마을수 / 시·군별 교통오지 마을의 수) × 100	i)지자체: 교통오지 마을 현황 ii)지자체: 2017년 100원 택시 추진 실적(수혜자 현황 파악)	지자체 자료 협조

■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 전남도내 자연마을(부락) 8,963개 중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교통오지마을은 472개 마을에 달하고 있음.
 -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으로 정주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이러한 교통오지마을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는 민선 6기와 민선7에 핵심 공약사항으로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을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음.

* 민선7기에는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운행을 확대하여 전남 22개 시·군 전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음.

- 2014년에는 보성군과 화순군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4개 시·군, 2016년도에는 19개 시·군 2017년도에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2017년말 현재 741개 마을에서 21,622명이 이용하였음. 2018년 6월말 현재 100원 택시 이용실적은 564,983명으로 1일 평균 3,104명이 이용하고 있음.

※ 이용목적은 병원(43.5%), 시장(28.0%), 여가활동(10.9%)순으로 나타남.

○ 선택 항목 점검 기준

전남도내 모든 버스노선이 없는 교통오지 마을의 교통편익을 증진한다.

-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전남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100원 택시 운행 수혜 마을 수 / 시·군별 교통오지 마을의 수) × 100’을 통해 산출하였음.

○ 전라남도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이행실태 점검 결과

- 2017년말 현재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이행률 달성군은 16개 군이며, 시는 3개 시이며, 군단위 평균 달성율은 99.6%, 시단위는 97.9%임 <표 2-20 참조>.
- 2017년 12월 현재 시·군별 이행실태를 보면, 21개 시·군 472개 대상마을 중 100원 택시 운행의 수혜를 보고 있는 마을은 741개 마을로 파악되어 10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광양시와 함평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의 달성률은 100%로 나타남.
 - * 광양시의 경우 12개 대상마을 중 100원 택시 운행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마을은 11개로 91.7%의 달성률을 나타냄.

- * 함평군의 경우에는 36개 대상마을 중 100원 택시 운행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마을은 34개 마을로 94.1%의 달성률을 나타냄<표 2-21 참조>.
- 전남도는 2018년 전남 도내 22개 시·군 804개 마을 24,949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목포시는 버스정류장에서 0.4km 이상인 마을 4개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임.

<표 2-20> 전남 시·군지역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달성률

(단위: %)

구 분	최대값	최소값	100원 택시 운영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94.1	99.6	16/17	94.1
시	100.0	91.7	97.9	3/4	75.0
전남 시·군	100.0	91.7	100.0	19/21	90.5

<표 2-21> 전남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점검·평가 결과(2017년)

(단위: 개, %)

시·군	교통오지 마을의 수	100원 택시 운행 수혜 마을 수	달성률	비고
목포	-	-	-	18년 시행 예정
여수	9	9	100.0	
순천	24	24	100.0	
나주	56	137	100.0	
광양	12	11	91.7	
담양	28	28	100.0	
곡성	27	32	100.0	
구례	18	18	100.0	
고흥	10	27	100.0	
보성	12	41	100.0	
화순	37	74	100.0	
장흥	10	18	100.0	
강진	17	27	100.0	

시·군	교통오지 마을의 수	100원 택시 운행 수혜 마을 수	달성률	비고
해남	31	41	100.0	
영암	24	63	100.0	
무안	24	32	100.0	
함평	36	34	94.1	
영광	12	23	100.0	
장성	20	20	100.0	
완도	7	10	100.0	
진도	2	14	100.0	
신안	56	58	100.0	
합계	472	741	100.0	

자료: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내부자료

제 3 장

요약 및 제언

1. 이행실태 평가 결과의 요약

1.1.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 전남지역의 농어촌서비스 선택 항목은 샅터, 일터에서 요구되는 안정성, 쾌적성, 편리성 제고에 관련된 주민체감형 지표를 선정함.
 - 농어촌지역에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중 주민체감형 서비스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선택 항목의 지표는 지표의 대표성, 자료 확보 용이성, 지표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자체의 자율관리 선택 항목 7대 부문 24개 선택 항목 중에서 2대 부문 4개의 선택 항목을 선정함.
 - 2대 부문은 정주생활기반과 안점부문이며, 정주생활기반 중에서 세부 선택 항목은 공동목욕탕, 석면슬레이트, 100원택시 운행이고, 안전부문은 도서벽지 응급서비스의 항목을 선정함.

〈표 3-1〉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최종 항목

부 문	선택 항목	2015년		2018년	
		항목선정	최종선정	항목선정	최종선정
정주생활 기반	공동목욕탕	○	○	○	○
	석면슬레이트	○	○	○	○
	100원 택시 운행	○	○	○	○
문화여가	영화관람	×	×	○	×
안 전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	○	○	○

1.2.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평가 결과

■ 공동목욕탕

- 전남 농어촌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공동목욕탕 운영의 이행실적은 2017년에 33.3%로 2015년에 비하여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인구가 감소하여 사설 목욕탕의 경우는 운영이 곤란하여 폐쇄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한다면 공동 목욕탕의 설치·운영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군지역의 공동 목욕탕 설치·운영비율은 2017년도에 80.1%로 2015년 79.1%에 비하여 1.0%p 증가하였으며,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2017년도에 89.5%로 2015년 86.8%의 2.7%p 증가하였음.
 - 최소 읍·면당 1개소 이상 공동목욕탕을 설치한 이행 실적을 보면, 군지역은 23.5로 2015년 29.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도농복합시는 75%로 2015년에 비하여 25.0%p가 증가하였음<표 3-2 참조>.

〈표 3-2〉 전남 농어촌 읍·면지역 공중목욕탕 서비스 이행실적 변화

(단위: %)

구 분	2015년	2017년	변화추세
전 체	33.3	33.3	=
시 부	50.0	75.0	↗
군 부	29.4	23.5	↘

■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

- 전남 농어촌 주민의 주거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의 10%를 달성한 이행실적을 보면, 2017년에 27.3%로 2015년 13.6%에 비하여 13.7%p가 증가하였음.
 - 군지역의 이행실적은 35.3%로 2015년 17.6%에 비하여 17.7%p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시지역의 이행실적은 0%로 나타남<표 3-3>.
 - 슬레이트 지붕개량율은 2017년에 4.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3〉 전남 시·군지역 슬레이트 지붕개량 서비스 이행실적 변화

(단위: %)

구 분	2015년	2017년	변화추세
전 체	13.6	27.3	↗
시 부	0.0	0.0	=
군 부	17.6	35.3	↗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인 헬기 이·착륙장 설치·운영 비율은 2017년도에 79.2%로 2015년 66.7% 대비 12.5%p 증가하여 다소 개선되었음.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인 헬기 이·착륙장 설치·운영은 2015년에 57개소에서 2017년에는 64개소로 7개소가 증가하여 서비스 비율이 개선된 결과임.
 - 헬기 이·착륙장 설치로 인한 환자 이송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156회

에서 2018년도에는 193회로 증가하고 있음.

- 헬기 이·착륙장 설치·운영은 2015년도에 비하여 2017년도에 진도군 5개소, 여수시 2개소가 증가하였음<표 3-4 참조>.

〈표 3-4〉 전남 도서지역 시·군별 이·착륙장 설치·운영 이행실적 변화

(단위: 개소)

구 분	2015년	2017년	변화추세
전남 계	57	64	↗
영광군	3	3	=
신안군	19	19	=
진도군	8	13	↗
완도군	13	13	=
고흥군	4	4	=
여수시	10	12	↗

■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률은 2017년말 현재 100.0%로 2015년 99.5% 대비 0.5%p 증가하여 운행율은 다소 개선됨.
 -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률은 2017년부터 교통오지마을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버스노선이 없는 마을로 확대 운영하면서 주민의 교통이동권을 확보하고 있음.
 - * 특히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은 민선 6기와 7기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중앙정부(국토부, 농식품부) 주관 전국으로 확대 운행되고 있음.
 - 전남 전체적으로는 100원 택시 운행률이 2015년에 비하여 2017년에는 증가하였으며, 시부 역시 3.1%p가 증가하였음<표 3-5 참조>.
 - 그러나 군부는 동 기간에 0.4%p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오지마을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확대되었기 때문임.

〈표 3-5〉 전남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률 이행실적 변화

(단위: %)

구 분	2015년	2017년	변화추세
전 체	99.5	100.0	/
시 부	93.9	97.0	/
군 부	100.0	99.6	\

1.3. 당초 목표 달성 정도

-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당초 계획에서 제시한 2017년의 목표치를 보면 다음 <표 3-6>과 같음.
 - 공중목욕탕 설치·운영의 목표치는 90.0%,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33.6%, 도서벽지 응급서비스인 헬기 이·착륙장 설치·운영률이 75.0%,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률이 100%로 설정하였음.
 - 달성된 실적을 보면,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비율이 81.7%,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 비율은 27.3%, 도서벽지 응급서비스인 헬기 이·착륙장 설치·운영비율이 79.2%,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비율이 100.0로 나타남.
 - 2017년도 목표 달성률을 보면, 공중목욕탕이 90.8%,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81.3%, 도서벽지 응급서비스가 105.6%,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이 10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전남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은 당초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됨.
 - 다만 공중목욕탕과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는 정책의 사업 추진률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표 3-6〉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당초 목표 달성 정도

(단위: %)

항 목	지표내용	2017년 목표	2017년 실적	목표달성률
공중목욕탕	• (공중목욕탕 설치 읍·면 수 / 전체 읍·면 수) × 100	90.0	81.7	90.8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	• (매년 정비(철거포함)하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수(동) / 전남 슬레이트 지붕 주택 총수(동)) × 100	33.6	27.3	81.3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 (큰 섬과 모도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수 / 큰 섬·모도의 수) × 100	75.0	79.2	105.6
교통오지마을 100원택시	• (시·군별 100원 택시 운행 수해 마을수 / 시·군별 교통 오지 마을의 수) × 100	100.0	100.0	100.0

주: 2017년 목표는 기존에 제시한 전라남도 선택 항목의 중기목표(2015~2019)치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

2. 전남 농어촌서비스기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 지자체 자율관리 선택 항목의 통일된 중앙정부차원에서 통계자료 생성 필요

- 지자체 자율관리 선택 항목인 7대 부문 24개 선택 항목의 통계자료 신뢰성 확보 필요
 - 이 중에는 폐교, 교사임용, 교사배치, 도서지역 여객선, 농산어촌 산업 융복합을 위한 기업인 포럼, 생활체육 등의 항목은 지자체에서 생성하기 곤란한 항목임.
 - 또한 석면 슬레이트,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등의 항목들은 2개 이상 부처에서 정리된 자료를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통계자료 생성 필요
- 지자체 자율관리 선택 항목의 통계자료는 국가관리 핵심 항목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통계와 행정조사자료를 제공하면 더 신뢰성 있고 정합성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통계자료 실적자료 구축시점 통일 필요

- 계획대비 실적자료 구축을 위한 시점이 각 항목별로 차이가 있어서 통일된 이행실태 평가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
 - 각 실과에서 제시한 자료는 2017년말 자료와 2018년 상반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명확한 시점에서의 평가가 곤란함.
 - 따라서 통계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2017년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침 마련 필요
- 통계자료가 1년씩 늦게 통합·정리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2017년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는 내용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분석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내용을 각 시·도별로 보면 어떤 시·도에서는 2016년말 자료를, 어떤 시·도에서는 2017년말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통계자료의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에 의문점이 듬.
 - 따라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분석은 통계자료의 실적 자료를 기점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통일된 기준 제시 필요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분석은 통일된 선택 항목으로 매년도 분석 필요

- 각 시·도별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를 분석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에 대표적인 통일 항목으로 비교·분석 필요
 - 각 시·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항목의 선택은 연구자에 의하여 매년 선택 항목이 변화되어 실제적인 삶의 질 변화를 분석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음.
 - 따라서 매년마다 동일한 선택 항목으로 어느 정도 지역민의 삶의 질이

변화되었는가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 선택 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또한 매년마다 새롭게 측정·평가할 수 있어 달성 노력 및 이행실태의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변경하거나 대안적인 점검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7).

■ 평가와 모니터링의 정책적 환류 기능 강화

- 각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책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평가 이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결과를 활용하여 달성률이 저조한 항목의 지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행실태분석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과(전남도는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각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와 모니터링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로 환류하는 과정 필요

■ 선택 항목별 추진전략과 방법의 재검토 필요

- 전남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선택 항목인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현재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만 지원하고 있어 서까래 노후에 따른 지붕개량비 부담으로 인해 철거를 기피하고 있음.
 - 또한 지원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창고, 축사의 오래된 슬레이트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의 추진전략과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7) 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 177.

-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서까래 교체비용 지원과 슬레이트 주택 우선 철거 후 축사와 창고 철거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내용과 방법의 전환 필요
 - 전남지역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대상자 연령, 소득수준, 주택 노후정도를 토대로 주택뿐만 아니라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도 포함하여 추진가능하도록 지원 내용과 방법의 수정 필요

제 4 장

삶의 질 우수사례 -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확대 운영

1. 사례 개요

- 전남지역은 2010년 이후 연평균 0.78%씩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율도 가장 높으며,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취약지역이 많은 지역임.
 - 이러한 전남지역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민의 교통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함.
 - 또한 민선 7기에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어 100원 택시 운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 * 2017년도 말 전남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도 전체인구의 21.5%인 40만 7천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
-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6기에 전라남도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제일 먼저 시작한 공약실천사업으로 '100원 택시 운행'을 시행하고 있음.
 - 민선7기에는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교통오지마을 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 최소 1km 이상 떨어진 마을까지 운영을 요구하여 지역여건

을 고려하여 저항감 없이 도보할 수 있는 권역 밖의 마을까지 100원 택시를 확대 운영함.

- 전남에는 고령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고,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472개(행정리)에 달하고 있음.
-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생필품 구입을 위해 시장에 가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주여건이 취약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 도입을 민선 6~7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 이 시책은 '14년 6. 4. 지방선거 당시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에서 전국 최고 공약으로 선정되었음.
- * 또한 최근에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18년부터 중앙정부(국토부, 농식품부) 주관의 전국 확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의 기본방향

- 지역별 여건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제도를 점진적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로 대체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대상시군: 도내 22개 전 시·군
 - ※ 시 단위: 공공형 택시(국토부 주관)/군 단위: 농촌형 교통모델(농식품부 주관)

○ 사업 추진과정

-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를 '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수요응답형 항목 신설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14년 8월 26일에는'100원 택시' 운영을 위한 시·군 공무원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또한 '14년 9월에는 시행지침 마련 및 시·군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음.
-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권을 최대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 (14년) 2개 군 시범실시 → (15년) 14개 시군 → (16년) 19개 시군 → (17년) 21개 시군 → (18년) 22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

○ 추진실적

- 2014년 시범 추진: 2개 군(보성, 화순), 73개 마을(1,010명), 69백만 원
 - 2015년 본격운영: 14개 시·군, 362개 마을(11,076명), 1,863백만 원
 - 2016년 1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645개 마을(19,891명), 2,919백만 원
 - 2017년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21개 전 시·군 운영: 741개 마을(21,622명), 4,306백만 원<표 4-1 참조>
 - 2018년 목포시(4개마을, 271명) 추가 운영으로 도내 22개 전 시·군 운영: 804개마을, 24,939명
- 이 사업은 '17년말 현재 21개 시·군에서 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 어르신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84.4%로(이용자의 11% 조사 결과) 매우 높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표 4-1〉 전남 100원 택시 운행현황(2017년)

(단위: 명/ 백만 원)

시·군	사 업 계 획					운 행 개시일	명 칭	요 금
	마을수	이용자	예 산 액					
			계	도비	시군비			
21개	741	21,622	4,306	1,050	3,256			
여수	9	734	100	50	50	'16. 6.13	100원 택시	100원
순천	24	535	183	50	133	'15.10.20	마중택시	100원
나주	137	6,126	770	50	720	'15. 1. 1	100원 택시	100원
광양	11	905	100	50	50	'15. 5.13	100원 택시	100원
담양	28	315	126	50	76	'16. 6. 7	100원 택시	100원
곡성	32	1,165	200	50	150	'15. 1. 1	효도 택시	면 100원 읍 1,200원
구례	18	715	100	50	50	'16. 6. 1	100원 택시	100원
고흥	27	1,352	329	50	279	'15. 2. 1	100원 택시	100원
보성	41	1,007	300	50	250	'15. 1. 1	행복 택시	100원
화순	74	1,301	300	50	250	'15. 1. 1	효도 택시	면 100원 읍 1,200원
장흥	18	394	110	50	60	'15. 5. 1	100원 택시	100원
강진	27	741	100	50	50	'15. 5. 1	100원 택시	100원
해남	41	835	228	50	178	'15.7. 1	해남사랑택시	100원
영암	63	1,920	250	50	200	'15. 1. 1	100원 택시	100원
무안	32	644	300	50	250	'17. 1. 1	행복 택시	100원
함평	34	370	100	50	50	'15.7.24	100원 택시	100원
영광	23	583	140	50	90	'15. 3. 9	군민 행복택시	100원
장성	20	611	110	50	60	'16. 4. 1	행복택시	100원
완도	10	807	120	50	70	'15.3.23.	희망택시	100원
진도	14	134	110	50	60	'17. 1. 1	100원 택시	100원
신안	58	428	230	50	180	'16.1.13	드림택시	100원

자료: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내부자료

2. 정책지원 내용

○ 운영 방식

-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 오지마을 주민이 택시를 불러 버스가 닿는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고, 시·군에서 운임차액 재정보전
- 100원 택시 이용자는 시·군에서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과 현금 100원을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택시 이용권은 마을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매월 마을운영위원회에 배부되고, 이용객이 지불한 100원 외의 택시요금은 도와 시·군 예산으로 택시업체에 보전해 주고 있음.

○ 재원분담

- 사업비 분담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하되 국비 50백만원, 도비 1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사업 추진과정 총사업비는 5,078백만원(국비 1,100, 도비 330, 시군비 3,648)으로 도비보조사업(도비 50%, 시·군비 50%), 농식품부공모사업(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국토부공모사업(공공형택시사업)으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음.
-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표 4-2>와 같음.

3. 주요성과

- 전남지역의 100원 택시 운영은 처음으로 2014년 10월 21일 보성군에서 첫 시행된 후 10개월 여만에 291,908명, 2015년에는 389,963명, 2016년 848,672명, 2017년에는 1,039,302명, 2018년 6월말 현재 564,983명의 도민이 이용해 하루 평균 1,717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4-3 참조>.
 - 2018년 6월말 기준 이용실적은 564,983명(1일 평균 3,104여명 이용)<표 4-4 참조>
 -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 병원방문 43.5%, 시장 28.0%, 여가활동 10.9%, 친인척 방문 4.2% 등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병원 방문, 시장 등 꼭 필요한 경우만 택시를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분끼리 함께 합승을 해, 예상했던 것보다 도나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음.

〈표 4-2〉 전남 연도별 「100원 택시」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시군	2015년(14개 시·군)			2016년(19개 시·군)			2017년(21개 시·군)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1,863	625	1,238	2,919	858	2,061	4,306	1,050	3,256
여수	-	-	-	32	16	16	100	50	50
순천	92	25	67	120	50	70	183	50	133
나주	152	50	102	584	50	534	770	50	720
광양	100	50	50	90	45	45	100	50	50
담양	-	-	-	55	28	27	126	50	76
곡성	147	50	97	128	50	78	200	50	150
구례	-	-	-	60	30	30	100	50	50
고흥	212	50	162	185	50	135	329	50	279
보성	210	50	160	248	50	198	300	50	250
화순	250	50	200	283	50	233	300	50	250
장흥	100	50	50	98	50	48	110	50	60
강진	100	50	50	98	50	48	100	50	50
해남	100	25	75	91	50	41	228	50	178
영암	150	50	100	227	50	177	250	50	200
무안	-	-	-	-	-	-	300	50	250
함평	50	25	25	81	40	41	100	50	50
영광	100	50	50	127	49	78	140	50	90
장성	-	-	-	83	50	33	110	50	60
완도	100	50	50	113	50	63	120	50	70
진도	-	-	-	-	-	-	110	50	60
신안	-	-	-	216	50	166	230	50	180

자료: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내부자료

〈표 4-3〉 전남 연도별「100원 택시」이용횟수

('18년 6월말 현재, 단위: 회)

시군명	2015년 (14개 시군)	2016년 (19개 시군)	2017년 (21개 시군)	2018년 (22개 시군)	합계
합계	389,963	848,672	1,039,302	564,983	2,842,920
목포				526	526
여수		9,872	19,421	10,507	39,800
순천	4,352	29,605	28,311	27,798	90,066
나주	41,703	270,656	273,528	138,575	724,462
광양	12,901	24,351	23,153	25,988	86,393
담양		5,072	21,352	21,985	48,409
곡성	23,662	27,656	32,467	15,168	98,953
구례		7,995	16,208	8,482	32,685
고흥	44,121	51,852	72,958	37,797	206,728
보성	54,828	56,467	61,214	31,152	203,661
화순	39,474	66,634	73,643	38,563	218,314
장흥	7,853	13,915	12,532	6,585	40,885
강진	26,004	35,496	57,350	33,070	151,920
해남	29,107	48,222	44,811	17,451	139,591
영암	49,966	70,561	71,217	35,999	227,743
무안			60,256	38,011	98,267
함평	10,411	16,120	21,352	10,755	58,638
영광	30,657	37,589	38,437	19,164	125,847
장성		21,448	35,336	8,754	65,538
완도	14,924	25,765	26,245	13,980	80,914
진도			19,070	9,260	28,330
신안		29,396	30,441	15,413	75,250

자료: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내부자료

〈표 4-4〉 전남 2018년도 「100원 택시」 운행실적(6월말 기준)

시군	이용대상		운행차량(대)				이용인원	성별		연령별			이용형태			
	마을수	주민수	계	개인	일반	운행횟수		남	여	50세 이하	51-64세	65세 이상	병원	시장	친인척 방문	기타
합계	804	24,949	3,439	1,936	1,503	334,841	564,983	208,922	356,061	48,696	109,980	394,547	228,932	198,324	32,705	105,026
목포	4	271	1,548	926	622	6,596	526	251	275	33	52	177	107	98	7	50
여수	9	760	5	4	1	7,132	10,507	5,151	5,356	2,348	2,410	5,749	3,502	1,718	510	4,777
순천	24	421	21	17	4	16,745	27,798	11,024	16,774	2,801	6,747	18,250	9,709	9,600	1,383	7,106
나주	151	7,611	123	67	56	63,405	138,575	51,052	87,523	21,980	28,042	79,553	70,765	45,895	14,776	7,409
광양	19	1,420	411	230	181	14,812	25,988	9,132	16,856	447	2,537	22,944	2,256	21,012	882	1,838
담양	36	401	58	24	34	15,452	21,985	10,259	11,726	-	-	21,985	9,738	6,974	1,483	3,790
곡성	34	1,475	62	37	25	7,550	15,168	6,067	9,101	1,870	6,067	7,231	6,067	8,343	-	758
구례	18	720	68	42	26	4,229	8,482	2,185	6,297	1,086	2,419	4,977	3,383	3,532	753	814
고흥	32	1,431	99	34	65	23,447	37,797	15,809	21,988	2,184	14,443	21,170	16,183	16,449	1,374	3,789
보성	41	1,004	118	77	41	20,072	31,152	11,876	19,276	3,823	4,345	22,984	12,838	9,811	1,125	7,378
화순	74	1,300	136	70	66	15,425	38,563	15,425	23,138	-	-	38,563	8,870	14,268	1,928	13,497
장흥	21	567	42	27	15	3,545	6,585	2,633	3,952	1,318	1,973	3,294	2,791	2,634	253	907
강진	42	1,048	68	33	35	22,427	33,070	12,236	20,834	2,315	8,598	22,157	4,718	4,959	1,732	21,661
해남	41	787	62	17	45	14,823	17,451	5,235	12,216	872	3,490	13,089	7,329	8,376	-	1,746
영암	66	1,961	74	36	38	18,270	35,999	12,600	23,399	1,800	11,520	22,679	17,712	9,900	1,476	6,911
무안	32	702	81	71	10	18,761	38,011	10,644	27,367	375	544	34,656	22,046	12,162	41	3,762
함평	36	423	85	54	31	9,147	10,755	3,925	6,830	-	229	10,526	5,569	2,731	776	1,679
영광	23	592	55	29	26	10,585	19,164	5,077	14,087	1,385	6,546	11,233	5,241	6,947	1,102	5,874
장성	20	611	30	27	3	9,328	8,754	3,694	5,060	1,754	2,952	4,048	3,253	2,856	1,264	1,381
완도	11	932	212	66	146	11,115	13,980	3,830	10,150	1,676	4,200	8,104	6,112	2,869	631	4,368
진도	14	91	25	8	17	8,159	9,260	3,677	5,583	629	1,740	6,891	3,600	3,577	261	1,822
신안	56	421	56	40	16	13,816	15,413	7,140	8,273	-	1,126	14,287	7,143	3,613	948	3,709

자료: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내부자료

- 전라남도는 향후 도내 모든 교통오지마을 주민들이 100원 택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 시·군을 확대할 계획으로 2018년에는 전남의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임<표 4-5 참조>.

〈표 4-5〉 전남 2018년도「100원 택시」운행 계획

시·군 (22개)	전체 사업 계획								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 내역		
	대상마을 선정기준	마을 수	행정리 수	이용자 수	예 산 액(백만 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마을 수	행정리수	이용자 수
계		804	594	24,949	5,078	1,100	330	3,648	472	405	12,768
목포	정류장에서 0.4km 이상 마을	4	4	271	100	50	15	35			
여수	정류장에서 1km 이상 마을	9	7	760	100	50	15	35	9	7	760
순천	정류장에서 1km 이상 마을	24	20	421	200	50	15	135	24	20	421
나주	정류장에서 0.5km 이상 마을	151	86	7,611	821	50	15	756	56	44	2,275
광양	정류장에서 0.7km 이상 마을	19	13	1,420	200	50	15	135	12	10	943
담양	정류장에서 0.5km 이상 마을	36	29	401	270	50	15	205	28	20	315
곡성	정류장에서 0.7km 이상 마을	34	29	1,475	200	50	15	135	27	27	974
구례	정류장에서 1km 이상 마을	18	11	720	120	50	15	55	18	11	720
고흥	정류장에서 0.8km 이상 마을	32	17	1,431	350	50	15	285	10	9	364
보성	정류장에서 0.8km 이상 마을	41	30	1,004	276	50	15	211	12	10	265
화순	정류장에서 0.5km 이상 마을	74	60	1,300	300	50	15	235	37	36	529
장흥	정류장에서 0.3km 이상 마을	21	17	567	120	50	15	55	10	8	194
강진	정류장에서 0.3km 이상 마을	42	29	1,048	340	50	15	275	17	14	383
해남	정류장에서 1km 이상 마을	41	31	787	228	50	15	163	31	31	662
영암	정류장에서 0.7km 이상 마을	66	41	1,961	250	50	15	185	24	21	688
무안	정류장에서 0.8km 이상 마을	32	32	702	300	50	15	235	24	24	589
함평	정류장에서 1km 이상 마을	36	34	423	115	50	15	50	36	34	423
영광	정류장에서 0.8km 이상 마을	23	16	592	140	50	15	75	12	10	288
장성	정류장에서 1km 이상 마을	20	16	611	150	50	15	85	20	16	611
완도	정류장에서 0.5km 이상 마을	11	11	932	145	50	15	80	7	4	932
진도	정류장에서 0.5km 이상 마을	14	14	91	108	50	15	43	2	2	11
신안	정류장에서 1km 이상 마을	56	47	421	245	50	15	180	56	47	421

자료: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내부자료

○ 기대효과

-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권을 확보하여 정주여건 개선
-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통서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실현

참고문헌

- 김광선 등. 2014.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C2014-6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 록

전남 각 읍·면별 공중목욕탕 설치·운영 현황(2017년 말 현재 작성)

시·군	설치현황			읍면	사설 ¹⁾	공설 ²⁾	기타 ³⁾
	전체 읍면수	설치 읍면수	미설치 읍면수				
여수시	7	7	-	돌산읍	1	○	○(GS건립기부)
				소리면	2		-
				울촌면		○	-
				화양면		○	-
				남면		○	-
				화정면		○	-
				삼산면		○	-
순천시	11	7	4	승주읍		-	-
				주암면	1	-	○(탐지원사업)
				송광면		○	-
				외서면	1	-	-
				낙안면	1	-	-
				별량면	1	○	-
				상사면		-	-
				해룡면	2	○	-
				서면		-	-
				황전면		○	-
나주시	13	13	-	남평읍	1	-	-
				세지면		○	-
				왕곡면		○	-
				반남면		○	-
				공산면	1	-	○(마사회지원)
				동강면		○	-
				다시면		○	-
				문평면		○	-
노안면		○	-				

시·군	설치현황			읍면	사설 ¹⁾	공설 ²⁾	기타 ³⁾
	전체 읍면수	설치 읍면수	미설치 읍면수				
				금천면		○	-
				산포면		○	-
				다도면		○	-
				봉황면		○	-
광양시	7	7	0	광양읍	12	-	-
				봉강면		○	-
				옥룡면		○	-
				옥곡면		○	-
				진상면	1	○	-
				진월면		○	-
				다압면		○	-
담양군	12	6	6	담양읍	4	-	-
				봉산면		-	-
				고서면		-	-
				남면	8	-	-
				창평면		-	-
				대덕면		○	-
				무정면		-	-
				금성면	1	-	-
				용면		-	-
				월산면		-	-
				수북면		○	-
				대전면	1	○	-
곡성군	11	11	0	곡성읍	4	-	-
				오곡면		○	-
				삼기면		○	-
				석곡면		○	-
				목시동면		○	-
				죽곡면		○	-
				고달면		○	-
				옥과면	1	-	-
				입면		○	-
				겸면		○	-
오산면		○	-				

시·군	설치현황			읍면	사설 ¹⁾	공설 ²⁾	기타 ³⁾
	전체 읍면수	설치 읍면수	미설치 읍면수				
구례군	8	4	4	구례읍	5	-	1
				문척면		-	-
				간전면		-	-
				토지면	1	-	-
				마산면	2	-	-
				광의면		-	-
				용방면		-	-
				산동면	5	-	-
고흥군	16	16	0	고흥읍	5	-	-
				도양읍	4	-	-
				풍양면		○	-
				도덕면		○	-
				금산면		○	1
				도화면	1	-	-
				포두면		○	-
				봉래면	1	-	-
				동일면		○	-
				점암면		○	-
				영남면		○	-
				과역면	1	-	-
				남양면		○	-
				동강면	1	-	-
				대서면		○	-
두원면		○	-				
보성군	12	8	4	보성읍	3	-	-
				별교읍	5	-	-
				노동면		-	-
				미력면		-	-
				겸백면		-	○(수자원공사)
				올아면		○	-
				복내면		○	-
				문덕면		-	○(수자원공사)
				조성면	1	-	-
				득량면		-	-
				화천면	1	-	○(수자원공사)
				웅치면		-	-

시·군	설치현황			읍면	사설 ¹⁾	공설 ²⁾	기타 ³⁾
	전체 읍면수	설치 읍면수	미설치 읍면수				
화순군	13	13	-	화순읍	7	-	-
				한천면		○	
				춘양면		○	
				청풍면		○	
				이양면		○	
				능주면		○	
				도곡면	4	-	
				도암면		○	
				이서면		○	
				북면	2	-	
				동북면		○	
				남면		○	
				동면	1	○	-
장흥군	10	9	1	장흥읍	6	-	-
				관산면	1	-	-
				대덕면	1	-	-
				용산면	1	○	-
				안양면	2	-	-
				장동면	1	○	-
				장평면	1	○	-
				유치면		○	-
				부산면		-	-
				화진면	1	○	-
강진군	11	7	4	강진읍	4	-	-
				군동면	2	-	-
				칠량면		○	-
				대구면		-	-
				마량면	2	-	-
				도암면	1	-	-
				신전면		○	-
				성전면		-	-
				작천면		-	-
				병영면		○	-
				음천면		-	-

시·군	설치현황			읍면	사설 ¹⁾	공설 ²⁾	기타 ³⁾
	전체 읍면수	설치 읍면수	미설치 읍면수				
해남군	14	12	2	해남읍	2	-	-
				삼산면		-	-
				화산면		○	-
				현산면		○	-
				송지면		○	-
				북평면		○	-
				북일면		○	-
				옥천면		○	-
				계곡면		○	-
				마산면		○	-
				황산면	1	-	-
				산이면		○	-
				문내면		○	-
				화원면		-	-
영암군	11	9	2	영암읍	3	-	-
				삼호읍	4	-	-
				덕진면		-	-
				금정면		○	-
				신북면	1	-	-
				시종면		○	-
				도포면		-	-
				군서면	1	-	-
				서호면		○	-
				학산면	1	-	-
				미암면	1	-	-
무안군	9	8	1	무안읍	4	-	-
				일로읍	1	-	-
				삼향읍	2	-	-
				몽탄면		○	-
				청계면	1	-	-
				현경면		○	-
				망운면		-	-
				해제면	1	-	-
운남면		○	-				

시·군	설치현황			읍면	사설 ¹⁾	공설 ²⁾	기타 ³⁾
	전체 읍면수	설치 읍면수	미설치 읍면수				
함평군	9	9	0	함평읍	4	-	-
				손불면	3	○	-
				신광면		-	○(군자체 건립)
				학교면	1	○	-
				염다면		○	-
				대동면		○	-
				나산면		○	-
				해보면		-	1
				월아면		○	-
영광군	11	9	2	영광읍	7	-	-
				백수읍	1	○	-
				홍농면	2	-	-
				대마면		-	-
				묘량면		○	-
				불갑면		○	-
				군서면		-	-
				군남면		○	-
				염산면		○	-
				법성면	2	-	-
				낙월면		○	-
장성군	11	4	7	장성읍	4	-	-
				진원면		-	-
				남면		-	-
				동화면		-	-
				삼서면		-	-
				삼계면	1	-	-
				황룡면	2	-	-
				서삼면		-	-
				북일면		-	-
				북이면		○	-
북하면		-	-				
완도군	12	9	3	완도읍	11	-	-
				금일읍		-	-
				노화읍		○	-
				군외면		-	-

시·군	설치현황			읍면	사설 ¹⁾	공설 ²⁾	기타 ³⁾
	전체 읍면수	설치 읍면수	미설치 읍면수				
				신지면	1	○	-
				고금면		○	-
				약산면		○	-
				청산면		○	-
				소안면		○	-
				금당면		○	-
				보길면			-
				생일면		○	-
진도군	7	6	1	진도읍	5	-	-
				군내면		○	-
				고군면		-	-
				익산면	1	-	-
				임회면		○	-
				자산면		○	-
				조도면		-	○(이랜드)
신안군	14	13	1	지도읍	1	○	○
				압해읍	1	○	-
				증도면	1	-	-
				임자면		○	○
				자은면		○	○
				비금면		○	○
				도초면		○	○
				흑산면		○	○
				하의면		○	○
				신의면		○	-
				장산면		○	○
				안좌면		○	○
				팔금면		-	○
암태면		-	-				

- 주: 1) 민간이 건립 운영 중인 목욕탕(공중위생관계업소 목욕장업)
 2) 전라남도 공중목욕탕 건립지원을 통해 건립된 목욕탕
 3) 기타 기업 지원 및 시·군 자체예산 등을 통해 건립된 목욕탕

2018 경상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차 례

제1장 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319
- 2. 연구 내용 321

제2장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1. 복지 통합시스템 323
- 2. 교육 다양성 325
- 3. 교통정보 327
- 4. 귀농·귀촌 329
- 5. 농업 일자리 정보 330
- 6. 생활체육 332

제3장 점검·평가 결과

- 1. 복지 통합시스템 337
- 2. 교육 다양성 340
- 3. 교통정보 344
- 4. 귀농·귀촌 346
- 5. 농업 일자리 정보 348
- 6. 생활체육 351

제4장 지역 우수사례: 경북행복씨앗마을사업

- 1. 개요 353
- 2. 추진경과 357
- 3. 주요 마을 사업 사례 360

표 차례

제1장

<표 2-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323
---------------------------------	-----

제3장

<표 3-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결과	335
<표 3-2>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 설정	337
<표 3-3> 복지 통합시스템 이행실태 점검·평가	339
<표 3-4> 교육 다양성 이행실태 점검·평가	341
<표 3-5> 시군별 교육시설 및 서비스 현황	342
<표 3-6> 교통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345
<표 3-7> 귀농·귀촌 이행실태 점검·평가	347
<표 3-8> 농업 일자리 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350
<표 3-9> 생활체육 이행실태 점검·평가	352

제4장

<표 4-1> 경북 행복씨앗마을사업 최종 선정 결과	358
------------------------------------	-----

제 1 장

개 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계획과 집행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에서 수립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점검과 평가 필요

-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삶의 질 정책 추진 강화
 - 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 일부 항목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점검지표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실태 파악이 미흡
 -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도입하여 지역에 맞

는 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표의 활용성을 강화

- 농어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지표로서 도입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질적 발전을 도모

■ 연구 목적

-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실시
 - 2015년 시도연구원과 함께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도출하고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는 공동연구를 수행
 - 2016년에는 2015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들을 공식 확정하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19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
 -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2019년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추진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및 공유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점검·평가와 더불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수범사례를 발굴·공유
 -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과 관련된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정책 개선에 기여

2. 연구 내용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2018년)

- 2018년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2015년 연구에서 확정한 점검 및 평가방식에 따라 2018년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및 조사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중기 목표 점검 및 시사점 도출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의 도달 가능 여부 점검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 달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수범사례 발굴

-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지역 수범사례 발굴
 - 선택 항목 이행실태가 양호한 지역 사례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 우수 정책 사례 등

제 2 장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선택 항목 선정

- 경북에서는 경북 삶의 질 현황 검토, 관련 정책 사업 검토, 전문가 자문회, 적합도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선정
 - ‘경북 삶의 질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경북 삶의 질 계획을 반영한 실용적 지표’를 원칙으로 선택 항목 선정

- 삶의 질 정책의 총 7개 부문 중 환경·경관과 안전을 제외한 5개 부문에서 경북의 선택지표를 선정
 - 복지 통합시스템(보건복지), 교육 다양성(교육), 교통 정보(정주생활 기반), 귀농·귀촌(경제활동·일자리), 농업 일자리 정보(경제활동·일자리), 생활 체육(문화·여가)

〈표 2-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구분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보건복지	복지 통합시스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교육	교육 다양성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 기반	교통 정보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제활동·일자리	귀농 귀촌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농업 일자리정보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화·여가	생활체육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복지 통합시스템

■ 선정배경

- 현장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복지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 기능까지 동시에 담당하는 일이 빈번
 - 교수, 연구자, 현장 실무자 등 경북의 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통합적·종합적 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
- 농어촌 인구 고령화, 과소화 마을 증가 등 변화하는 농어촌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복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경북 농어촌 지역에서는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보다 대상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더욱 적합
-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경북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 도모

■ 내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점검방법

-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¹⁾

$$\left[\frac{\{(a) \times 0.5\} + \left\{ \left(\frac{(c) \times 1.2}{a} + \frac{(d) \times 1.0}{b} \right) \times 0.3 \right\} + \left\{ \left(\frac{(e)}{a} \times 0.2 \right) \right\}}{f \text{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right] \times 100$$

- ㉠ 사례관리가구: 읍면동, 시군구에서 선정한 사례관리가구 실적
- ㉡ 서비스연계가구: 읍면동, 시군구에서 선정한 서비스연계가구 실적
- ㉢ 사례관리가구 대상 서비스제공 건수: 읍면동,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 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연계 건수
- ㉣ 서비스연계가구 대상 서비스제공 건수: 읍면동,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되어 지원한 서비스연계 건수
- ㉤ 사례회의 건수: 읍면동, 시군구에서 수행한 사례회의 개최 건수

- 1)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매뉴얼의 통합사례관리 실적 지표 산식이 변경됨에 따라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도 변경된 산식을 적용

- 변경 전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2017년)

$$\frac{\{(a) \times 0.5\} + \{(b) \times 0.5\} + \{(c) \times 0.1\}}{f \text{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times 100$$

- ㉠ 사례관리 실적: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선정한 사례관리가구 실적
- ㉡ 서비스연계 건수: 읍면동,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 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연계건수
- ㉢ 단순서비스연계 건수: 읍면동, 시군구에서 지원한 단순서비스연계 건수
-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시, 군, 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가구
충족기준: 시군별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 50 이상

- ⑥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시군구별 국민기초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자(중지자)
- 충족기준: 시군별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 1.5 이상
- 2017년 이후 지표값 산출 공식이 달라져 경북 평균인 1.5를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
- 행정자료: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행복e음 사례관리시스템 자료)(보건복지부)

■ 관련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복지 통합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새마을 조성 사업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 없는 복지시스템 구축

2. 교육 다양성

■ 선정배경

- 농어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다양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기 부족. 정규교과 이외에도 특히 문화, 체험, 특기 적성, 진로·적성 교육 등 다양한 학습 기회 부족이 심각
- 교육 문제는 농어촌 인구 유출의 요인 중 하나로 특히 젊은 계층의 인구

유입을 저해

-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와 경북 농어촌 지역의 교육 다양성 불평등 문제 해소 필요
 - 경북에서는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영어 수업, 진로체험 버스 등 다양한 교육 사업 개발에 노력

■ 내용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지표: (교육서비스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시군별 교육서비스 제공 충족 기준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이상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미만일 경우 교육 프로그램 5개 이상
- 교육 서비스 유형
 - 교육시설 및 조직: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립된 상시적 교육 시설 혹은 조직
 - 적성교육: 원어민 교사, 청소년 오케스트라, 특기적성 교육 과정,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상시 교육 지원 서비스
 - 진로교육: 진학지도 컨설팅, 맞춤형 입시 상담, 진로체험센터 등 진로 관련 상담 및 교육 서비스
 - 체험교육: 여름과학캠프, 영어체험센터, 찾아가는 이동천문대 등 일주일 이내의 이벤트성 체험 교육 서비스

■ 점검수단

- 행정자료: 교과부, 지자체
- 행정조사: 시군별 교육서비스 사업 수

■ 관련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교육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민 영어수업 지원 -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 경진대회 개최 - 방과 후 학교 운영 - 농촌전원학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문화복지사다리 구축 - 어린선비(경북혼) 교실 운영

3. 교통정보

■ 선정배경

- 농어촌의 접근성 문제는 도시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 노령화와 과소화가 심각한 농어촌에서 도시의 기준으로 교통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은 효율성 문제 야기 가능
- 하지만 효율성 문제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교통 서비스 공급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이미 진행 중
 - 수요응답형 버스, 마중택시 등 농어촌 맞춤형 서비스 공급 방안
- 특히 농어촌의 특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 서비스 공급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

■ 내용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점검방법

- 지표: (교통정보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시군별 교통정보 제공 충족 기준: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2개 이상
-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 교통정보 홈페이지, 교통정보 제공 앱, 전광판, 기타(상담인력 운영, 안내 책자 등)

■ 점검수단

- 행정조사: 시군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 관련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교통정보	-	-

4. 귀농·귀촌

■ 선정배경

- 고령화되고 과소화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귀농·귀촌의 중요성 증가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등 향후 귀농·귀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북에서도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역점

■ 내용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 점검방법

- 지표: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가능 시·군수 / 총 시·군수)×100
- 충족기준: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1개 이상
-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 귀농인 정착금 지원, 농촌 인력 지원센터,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귀농귀촌 교육, 귀농인의 집 등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행정조사: 귀농·귀촌 관련 사업 시행 현황

■ 관련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귀농·귀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정착금 지원 -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5만명 유치

5. 농업 일자리 정보

■ 선정배경

-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문제 발생
- 농업·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 여건과 정보 부족으로 농촌·농업 노동 여건의 개선과 함께 농업 노동력 수요와 공급 간의 원활한 정보 공급 필요
- 좋은 일자리 창출은 민선 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농업 일자리 정보과 관련한 정책 사업도 더욱 확대할 예정

■ 내용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지표: (일자리 공급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충족기준: 일자리 공급 서비스 1개 이상
- 일자리 공급 서비스 예시
 -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 일손 돕기 중개창구 등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행정조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사업 범위

■ 관련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농업 일자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 경상북도 Smart 두레공동체일자리 창출 	

6. 생활체육

■ 선정배경

- 고령자 증가, 은퇴자의 귀농·귀촌 등 농어촌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도시보다 자연환경이 양호한 농어촌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미진
-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원하는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여건을 강화
- 하드웨어 기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교실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농어촌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

■ 내용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점검방법

- 지표: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행정조사: 체육교실 운영 읍면 현황

■ 관련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생활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확충 - 생활체육교실 운영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제 3 장

점검·평가 결과

■ 점검·평가 방법

- 경상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를 위해 경북도청 내부 행정자료와 시군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
 - 복지 통합시스템 항목 점검은 경북도청 내부 행정자료를 활용
 - 교육 다양성, 교통정보, 귀농·귀촌, 농업 일자리 정보, 생활체육 항목 점검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는 있으나 점검·평가 결과를 엄격한 시군 간 비교 등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항목별 시설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응답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설문조사의 한계 존재

■ 점검·평가 결과

- 2018년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결과 교육 다양성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지표값 및 충족 시군 비율이 증가
 - 2018년 복지 통합시스템의 충족 시군 수는 14개(60.9%)로 2017년에 비해 6개 시군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표값 산출 공식의 변화로 인한 것

으로 엄밀한 연도별 비교는 어려움.

- 교육 다양성의 충족 시군 수는 18개(78.3%)로 2017년에 비해 1개 시군이 감소
- 교통 정보의 충족 시군 수는 19개(82.6%)로 2017년에 비해 1개 시군이 증가
- 귀농·귀촌의 충족 시군 수는 20개(87.0%)로 2017년에 비해 1개 시군이 증가
- 농업 일자리정보에서는 2017년과 동일한 11개(50.0%)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울릉군은 섬 지역의 특성상 지표 산정에서 제외)
- 생활체육의 충족 시군 수는 16개(69.6%)로 2017년에 비해 2개 시군이 증가

〈표 3-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결과

부문	선택 항목	총 시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충족 시군	비율 (%)	충족 시군	비율 (%)	충족 시군	비율 (%)	충족 시군	비율 (%)
보건복지	복지 통합시스템	23	5	21.7	5	21.7	8	34.8	14	60.9
교육	교육 다양성	23	15	65.2	13	56.5	19	82.6	18	78.3
정주생활기반	교통 정보	23	11	47.8	16	69.6	18	78.3	19	82.6
경제활동·일자리	귀농·귀촌	23	16	69.6	17	73.9	19	82.6	20	87.0
	농업 일자리정보	23	6	27.3	11	50.0	11	50.0	11	50.0
문화·여가	생활체육	23	15	65.2	17	77.3	14	60.9	16	69.6

- 교통정보, 귀농귀촌, 농업 일자리 정보, 생활체육 등 대부분 항목의 지표값이 개선
 - 교통정보 지표값은 2017년 78.3%에서 2018년 82.6%로 개선. 홈페이지, 교통앱, 전광판 등 기본적인 교통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시군이 증가
 - 귀농귀촌 지표값은 2017년 82.6%에서 2018년 87.0%로 개선. 시군별로 활성화 정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종합적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
 - 생활체육의 지표값은 2017년 60.9%에서 2018년 69.6%로 개선되었으나,

설문조사의 한계로 자료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 지표 점검방법 및 수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복지 통합시스템의 지표값 개선은 2018년 산출 공식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엄밀한 연도별 비교는 어려우나, 사례가구와 서비스 연계가구를 구분하는 등 복지 통합시스템 관리가 개선된 측면이 있음.
- 2018년 농업 일자리 정보의 지표값은 2017년과 동일하며, 교육다양성의 지표값은 약간 하락
 - 2018년 농업 일자리 정보의 충족 시군은 2017년과 차이가 있으나, 그 수는 동일하며 군 지역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군 간 연계 등 정책적 고민 필요
 - 교육 다양성 지표값은 2017년 82.6%에서 2018년 78.3%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경북 전체의 교육시설 및 조직과 교육 서비스 수는 증가. 지역별 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목표치 설정

- 농업 일자리정보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2017년에 설정한 2019년 목표치를 유지
 - 복지 통합시스템에서는 2018년 47.2의 지표값을 2019년 50까지 증대
 - 교육 다양성에서는 2018년 78.3%의 지표값을 2019년 100%까지 증대하여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 교통정보 항목에서는 2018년 82.6%의 지표값을 2019년 100%까지 증대하여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 귀농귀촌에서는 2018년 87.0%의 지표값을 2019년 100%까지 증대하여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 농업 일자리 정보에서는 2018년 50.0%의 지표값을 2019년에도 50.0%로

유지하되, 군 지역의 기준 충족을 유도하여 도시 지역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시, 칠곡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 생활체육에서는 2018년 체육시설 84.3%, 체육교실 53.3%의 지표값을 2019년 각각 93.6%, 66.7%까지 증대하도록 목표를 설정

〈표 3-2〉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 설정

구분	선택 항목	점검결과				목표	
		'15	'16	'17	'18	'18	'19
보건복지	복지 통합시스템	41.2	41.2	47.2	1.50	-	2.00
교육	교육 다양성	65.2%	56.5%	82.6%	78.3%	88.0%	100%
정주생활기반	교통정보	47.8%	69.6%	78.3%	82.6%	82.6%	100%
경제활동·일자리	귀농·귀촌	69.6%	73.9%	82.6%	87.0%	90.0%	100%
	농업 일자리정보	27.3%	50.0%	50.0%	50.0%	50.0%	50.0%
문화·여가	생활체육	83.6%	88.2%	77.3%	84.3%	90.2%	93.6%
		56.7%	31.5%	49.8%	53.3%	63.3%	66.7%

1. 복지 통합시스템

■ 점검방법 변경

-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매뉴얼의 통합사례관리 실적 지표 산식이 변경됨에 따라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도 지표값 산출 공식을 변경
 - 2017년까지 사용한 산출 공식 적용을 위한 통계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연도별 비교가 어려움에도 부득이하게 점검 방법 변경
- 경북 평균인 1.5를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
 - 적절한 기준점을 찾기가 힘들어 경북 평균인 1.5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2019년 목표값으로 2.00을 적용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

■ 경북은 기준 충족, 14개 시군에게 기준 충족

- 2018년 경북의 복지 통합시스템 지표값은 1.5로 기준값을 충족
 - 경북의 통합사례관리중점대상자는 148,809명이며, 사례관리가구는 4,455호, 서비스 연계가구는 2,398호, 사례관리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건수는 22,193건, 서비스 연계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건수는 2,800건, 사례회의 건수는 7,710건
- 2018년 경북에서 복지 통합시스템 항목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은 14개 (60.9%)
 -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에서 지표값이 1.5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

■ 2019년 목표치 설정

- 2019년까지의 목표는 지표값 2.00을 달성하여 서비스기준을 초과하여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
- 시군에 따라 편차가 다소 커 지속적인 격차 해소 노력 필요
 - 최소 0.72에서 최대 3.35까지 시군별로 지표값 차이가 큰 편

〈표 3-3〉 복지 통합시스템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2018년 충족 여부	지표값 (2018)							2019년 목표
		㉞ 사례관리가 구	㉟ 서비스 연계가구	㉡ 사례관리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건수	㉢ 서비스연계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건수	㉣ 사례회의 건수	㉤ 통합사례관리 중점대상자		
경상북도	○	1.50	4,455	2,398	22,193	2,800	7,710	148,809	2.00
포항시	×	1.17	649	127	1,495	50	951	27,826	1.67
경주시	○	1.60	385	10	1,824	12	548	12,191	2.10
김천시	×	0.75	126	13	372	15	310	8,663	1.25
안동시	×	0.72	151	160	261	116	200	10,663	1.22
구미시	○	2.29	533	140	8,741	307	1,312	11,933	2.79
영주시	×	1.30	208	85	397	69	282	8,070	1.80
영천시	○	1.83	293	18	780	3	583	8,101	2.33
상주시	○	1.98	242	20	1,506	8	535	6,249	2.48
문경시	○	2.28	211	288	358	219	326	4,683	2.78
경산시	×	1.44	341	1,223	899	1,332	485	11,984	1.94
군위군	○	1.72	48	8	279	1	74	1,537	2.22
의성군	○	3.15	265	26	738	6	340	4,249	3.65
청송군	○	3.35	123	6	212	0	174	1,865	3.85
영양군	○	1.73	53	4	173	2	67	1,622	2.23
영덕군	×	0.84	62	5	292	9	89	3,997	1.34
청도군	×	0.72	46	40	41	21	76	3,299	1.22
고령군	○	2.85	126	5	751	7	338	2,323	3.35
성주군	○	2.08	112	6	85	1	217	2,723	2.58
칠곡군	×	1.09	102	183	2,029	605	128	5,451	1.59
예천군	○	1.98	132	1	306	1	127	3,394	2.48
봉화군	○	2.81	136	4	412	2	302	2,483	3.31
울진군	×	0.99	93	0	183	0	224	4,821	1.49
울릉군	○	1.55	18	26	59	14	22	682	2.05

주 1) 지표값 1.5 이상일 경우 충족으로 간주, 2017년 이후 지표값 산출 공식이 달라져 경북 평균인 1.5를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

2) 지표값 산출 공식

$$\left[\frac{\left\{ (a \times 0.5) \right\} + \left\{ \left(\frac{c \times 1.2}{a} \right) + \left(\frac{d \times 1.0}{b} \right) \right\} \times 0.3 + \left\{ \left(\frac{e}{a} \right) \times 0.2 \right\}}{f \text{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right] \times 100$$

3) 2018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4개(60.9%)

4) 2018년 1월에서 11월말까지의 자료를 사용

2. 교육 다양성

■ 18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78.3%)

- 2018년 경북의 교육 다양성 지표값은 78.3%로 18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5년 65.2%(15개), 2016년 56.5%(13개)에서 2017년 82.6%(19개)으로
지표값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2018년 78.3%(18개)로 다소 하락

■ 경북 전체의 교육 서비스는 개선

- 영덕군에서 2018년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경북 전체로 봤을 때
교육서비스 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 가능
 - 경북 전체의 교육시설 및 조직 수는 2017년 70개에서 2018년 81개로 증가
 - 경북 전체의 교육 서비스 수는 2017년 69개에서 2018년 90개로 증가

〈표 3-4〉 교육 다양성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지표값/충족여부				교육시설 및 조직	교육 서비스 합계				2019년 목표
	2015	2016	2017	2018		적성 교육	진로 교육	체험 교육		
경상북도	65.2%	56.5%	82.6%	78.3%	81	90	36	15	39	100%
포항시	○	○	○	○	4	7	2	3	2	○
경주시	○	×	○	○	4	3	2	1	-	○
김천시	×	×	×	×	2	3	3	-	-	○
안동시	○	○	○	○	5	2	-	-	2	○
구미시	○	○	○	○	4	3	2	1	-	○
영주시	○	○	○	○	5	1	1	-	-	○
영천시	○	○	○	○	5	1	-	-	1	○
상주시	○	○	○	○	6	1	1	-	-	○
문경시	○	○	○	○	8	1	1	-	-	○
경산시	○	○	○	○	4	1	-	-	1	○
군위군	×	×	○	○	3	1	-	-	1	○
의성군	○	○	○	○	3	9	5	1	3	○
청송군	×	×	×	×	2	1	1	-	-	○
영양군	○	×	○	○	1	5	2	-	3	○
영덕군	○	○	○	×	2	4	3	-	1	○
청도군	×	×	×	×	1	0	-	-	-	○
고령군	×	×	○	○	4	5	1	3	1	○
성주군	○	○	○	○	3	8	1	2	5	○
칠곡군	○	○	○	○	5	11	3	3	5	○
예천군	○	×	×	×	2	3	-	-	3	○
봉화군	×	○	○	○	2	8	4	1	3	○
울진군	×	×	○	○	3	5	2	-	3	○
울릉군	×	×	○	○	3	7	2	-	5	○

주 1) 지표: (교육서비스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2)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이상 혹은 교육 서비스 5개 이상일 경우 기준 충족 시군으로 간주

3) 2018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8개(78.3%)

■ 2019년 목표치 설정

- 2019년 목표는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지표값 100%를 달성하는 것
 - 2018년까지의 이행실태를 볼 때 2019년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교육 서비스 여건을 더욱 개선하는 한편,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표 3-5〉 시군별 교육시설 및 서비스 현황

시군명	교육시설 및 조직	교육서비스		
		적성 교육	진로 교육	체험 교육
포항시	석곡도서관,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학교 지원 원어민보조강사 지원	체험·진로교육과정 지원, 입시정보박람회 개최, 진로진학아카데미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캠프) 참가 중학생 실용 영어 캠프
경주시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어린이 영어 교육 지원 특기 적성 교육 과정	청소년 진로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의 집 경북 청소년 수련센터
김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경북 청소년 수련센터	심화 학습 프로그램, 전화영어회화 지원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사업		
안동시	안동청소년수련관, 안동청소년문화관, 퇴계학당, 안동영어마을, 청소년 어울림 마당 및 동아리			초등학생 영어체험 청소년 축제
구미시	방과 후 학교 지원,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농산어촌 명품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영주시	거점영어체험센터, 영주 진로체험지원센터, 영주 통합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서비스		
영천시	영천 영어타운, 인재양성원, 영천시립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입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영어체험학습 지원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영어체험센터, 발명교육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예술문화체험센터	어린이 영어캠프 및 전화영어		
문경시	문경시립중앙도서관, 문경시립모전도서관,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성보촌유스호스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어울림마당,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군명	교육시설 및 조직	교육서비스		
		적성 교육	진로 교육	체험 교육
경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 내 마을도서관, 경산시립도서관,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작은 독서회(북콘서트)
군위군	인재양성원,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			영어체험학습 지원
의성군	향토인재양성원운영, 엄마 품 은종일 돌봄교실, 의성 청소년 센터	원어민 화상영어, 방과후 영어심화학습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초중고걸림팀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영어캠프 지원 의성수학체험전 지원 초등학생 문화유산탐방 지원
청송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원어민 영어수업 지원		
영양군	(재)영양군 인재육성정학회	방과 후 학교 지원 심야학습 지원	중학생 여학연수 지원 카이스트 과학캠프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영덕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초등학교 중국어 원어민 교육 중학생 수도권 기숙형학원 위탁 교육 고교 방과 후 심화학습 운영 지원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 지원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고령군	대가야 교육원, 대가야 문화누리 체육센터, 문화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전화영어수업 지원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방송진로체험 아카데미, 중학교 진로진학캠프	어린이 영어 캠프
성주군	영어체험학습센터, 별고을교육원,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학교	진로체험활동 지원 청소년 진로 캠프 운영	영어체험학습, 새봄맞이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의 달 특별 체험, 토요프로그램, 고3 청소년페스티벌
칠곡군	창의체험 열린교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청소년수련관	어린이 방학특별강좌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사업	고3 수험생 사회적응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 교류 청소년 인성진로 아카데미	뮤지엄스토리, 꿈꾸는 작은 학교, 청소년문화체험캠프,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학교 밖 창의체험 수련 활동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 공공 도서관	정서지원프로그램,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학 특강, 도로명 주소 교육		
봉화군	봉화인재양성원, 청소년 센터	학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 중국어 체험캠프, 전화(화상) 영어교육	창의적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영어체험학습 지원, 영어말하기 대회 학생승마체험
울진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원어민강사 채용 지원 어린이 영어 회화 지원		특기 적성 체험학습, 영어체험학습, 영어심화학습
울릉군	영어 체험 학습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지역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 초중학생 영어회화학습 지원		영어체험학습, 스키 캠프, 눈썰매장, 맞춤형 눈썰캠프, 영어체험학습실

3. 교통정보

■ 19개 시군에서 기준 충족(82.6%)

- 2018년 경북의 교통정보 지표값은 82.6%로 19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5년 47.8%(11개), 2016년 69.6%(16개), 2017년 78.3%(18개)에서
2018년 성주군에서 새로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82.6%(19개)로 지표값이
개선

■ 시군별 교통정보 인프라 강화

- 시군별로 기본적인 교통정보 서비스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지표값이 점차
개선
- 홈페이지, 교통앱, 전광판 등 기본적인 교통정보 서비스 인프라 정비 시
군 증가

〈표 3-6〉 교통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지표값/충족여부				교통정보 서비스 합계					2019년 목표
	2015	2016	2017	2018	홈페이지	교통 앱	전광판	기타		
경상북도	47.8%	69.6%	78.3%	82.6%	67	16	9	13	29	100%
포항시	○	○	○	○	3	1	1	1		○
경주시	○	○	○	○	4	1	1	1	1	○
김천시	○	○	○	○	3		1	1	1	○
안동시	×	○	○	○	2	1			1	○
구미시	○	○	○	○	4	1	1	1	1	○
영주시	○	○	○	○	5	1	1	1	2	○
영천시	×	○	○	○	2	1		1		○
상주시	○	○	○	○	3	1			2	○
문경시	×	○	○	○	4	1			3	○
경산시	×	○	○	○	3	1	1	1		○
군위군	×	×	○	○	2	1			1	○
의성군	×	○	○	○	4	1		1	2	○
청송군	×	×	×	×	1				1	○
영양군	○	○	○	○	4	1	1	1	1	○
영덕군	○	○	○	○	3	1			2	○
청도군	×	×	×	×	1				1	○
고령군	×	×	×	×	1	1				○
성주군	×	×	×	○	2				2	○
칠곡군	○	○	○	○	6	1	1	1	3	○
예천군	○	○	○	○	3	1		1	1	○
봉화군	○	○	○	○	3			1	2	○
울진군	×	×	×	×	1				1	○
울릉군	×	×	○	○	3		1	1	1	○

주 1) 지표: (교통정보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2)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2개 이상일 경우 충족 시군으로 간주

3) 2018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9개(82.6%)

■ 2019년 목표치 설정

- 2019년까지의 목표는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지표값 100%를 달성하는 것
 -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울진군 등 미충족 시군은 대부분 낙후 지역으로 교통정보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

4. 귀농·귀촌

■ 20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87.0%)

- 2018년 경북의 귀농·귀촌 지표값은 87.0%로 20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5년 69.6%(16개), 2016년 73.9%(17개), 2017년 82.6%(19개)에서 2018년 87.0(20개)로 지표값이 개선
 - 울릉군에서 새롭게 귀농·귀촌 서비스를 시작

〈표 3-7〉 귀농·귀촌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지표값/충족여부				시설/서비스명	연이용객	귀농·귀촌인 수	2019년 목표
	2015	2016	2017	2018				
경상북도	69.6 %	73.9 %	82.6 %	87.0 %		7,712	13510	100%
포항시	×	×	○	○	귀농귀촌아카데미(교육)	140	1,100	○
경주시	×	×	×	×			130	○
김천시	×	×	○	○	신규농업인교육 및 귀농귀촌 투어	100	300	○
안동시	○	○	○	○	귀농의 집, 귀농귀촌학교	170	500	○
구미시	○	○	○	○	귀농귀촌 교육(11회)	35		○
영주시	○	○	○	○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35	315	○
영천시	○	○	○	○	귀농귀촌상담실, 귀농인의 집	549	623	○
상주시	○	○	○	○	상주공동체귀농지원센터	3,300	1,740	○
문경시	×	○	○	○	귀농인 보금자리	18	524	○
경산시	○	○	○	○	귀농귀촌학교	85	5,157	○
군위군	×	×	×	×				○
의성군	○	○	○	○	귀농귀촌정보센터	338	875	○
청송군	×	○	○	○	귀농귀촌정보센터	100	200	○
영양군	○	○	○	○	귀농귀촌정보센터	700	438	○
영덕군	○	○	○	○	귀농귀촌정보센터			○
청도군	○	×	○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서비스	20	115	○
고령군	○	○	○	○	귀농귀촌상담실	583	160	○
성주군	○	○	○	○	귀농귀촌정보지원센터	970	235	○
칠곡군	×	×	×	×				○
예천군	○	○	○	○	귀농귀촌 팜 투어	122	122	○
봉화군	○	○	○	○	귀농인의 집	420	840	○
울진군	○	○	○	○	귀농인의 집	7	131	○
울릉군	○	○	×	○	귀농귀촌상담실	20	5	○

주 1) 지표: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가능 시·군수 / 총 시·군수)×100

2) 귀농·귀촌인 수는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2018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20개(87.0%)

■ 2019년 목표치 설정

- 2019년까지의 목표는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지표값 100.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 경주시, 군위군, 칠곡군에서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준 충족 필요

5. 농업 일자리 정보

■ 11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50.0%)

- 2018년 경북의 농업 일자리 정보 지표값은 50.0%로 11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6년에는 2015년 27.3%(6개)에서 50.0%(11개)으로 지표값이 개선되었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2016년과 동일한 11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경북의 지표값은 동일하나 기준 충족 시군은 연도에 따라 변화가 발생
 - 2018년에는 영주시에서 농업 일자리 정보 관련 사업을 시작한 반면, 고령군에서는 사업을 중단

■ 지역에 따라 실적 차이가 큰 편

- 농업 일자리 정보 서비스 실적은 지역별로 실적 차이가 큰 편
 - 영덕군, 의성군, 포항시 포항시, 봉화군, 울진군 실적건수가 많은 반면 다른 시군에서는 다소 실적건수가 적은 편

- 시군 간 농업 정보 연계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 필요
 - 도농복합시에는 도시부의 유희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농업 인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군에서는 농업 인력으로 공급할 유희 노동력이 부족
 - 농업 일자리 정보는 몇 개 시군을 묶은 생활권 단위의 정책 설계 필요

■ 2019년 목표치 설정

- 2019년에는 도시 지역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시, 칠곡군)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
- 경북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농업 일자리 정보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기준 충족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등에서도 농업 일자리 정보 사업을 추진
 -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등 일자리 정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인근 군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도입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반영 필요

〈표 3-8〉 농업 일자리 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지표값/충족여부				시설/서비스명	실적건수	2019년 목표
	2015	2016	2017	2018			
경상북도	27.3%	50.0%	50.0%	50.0%		51,162	50.0%
포항시	×	×	○	○	농촌인력지원센터	8,939	×
경주시	×	×	×	×			×
김천시	×	○	○	○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	182	×
안동시	×	×	○	○	농촌인력증개센터	1,397	×
구미시	×	×	×	×			×
영주시	×	×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
영천시	×	×	×	×			×
상주시	×	○	○	○	농촌인력지원센터	1,032	×
문경시	○	○	×	×			×
경산시	×	×	×	×			×
군위군	○	○	×	×			○
의성군	×	○	○	○	농촌인력증개센터	9,048	○
청송군	×	○	○	○	일자리지원센터	100	○
영양군	○	○	○	○	영양 빛갈찬 일자리지원센터	6,042	○
영덕군	○	○	○	○	농촌인력지원센터	16,000	○
청도군	×	×	×	×			○
고령군	×	×	○	×			○
성주군	×	○	×	×			○
칠곡군	×	×	×	×			×
예천군	×	○	×	×			○
봉화군	○	○	○	○	농촌일자리창출지원사업	4,200	○
울진군	○	×	○	○	농촌인력지원단	4,222	○
울릉군	-	-	-	-			-

주 1) 지표: (일자리 공급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2) 울릉군은 섬 지역의 특성상 지표 산출에서 제외함

3) 2018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1개(50.0%)

6. 생활체육²⁾

■ 16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8년 경북의 생활체육 지표값은 체육시설이 84.3%, 체육교실이 53.3%
 - 체육시설 지표값은 2015년 83.6%, 2016년 88.2%, 2017년 77.3%에서 2018년 84.3%로 다소 개선
 - 체육교실 지표값은 2015년 56.7%, 2016년 31.5%, 2017년 49.8%에서 2018년 53.3%로 다소 개선
-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할 경우, 경북에서는 16개(69.6%)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9년 목표치 설정

- 2019년까지의 목표는 2017년 설정한 목표치를 유지하여, 체육시설은 93.6%, 체육교실은 66.7%의 지표값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2) 설문조사의 한계로 생활체육 이행실태 점검값들은 연도별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지표 점검방법 및 수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9〉 생활체육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지표값(%)								읍면 수			2019년 목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읍면	체육 시설	체육 교실	체육 시설	체육 교실
	체육 시설	체육 교실	체육 시설	체육 교실	체육 시설	체육 교실	체육 시설	체육 교실					
경상북도	83.6	56.7	88.2	31.5	77.3	49.8	84.3	53.3	255	215	136	93.6	66.7
포항시	84.6	15.4	84.6	15.4	100.0	42.9	100.0	42.9	14	14	6	94.6	25.4
경주시	91.7	91.7	100.0	100.0	58.3	58.3	83.3	25.0	12	10	3	100.0	100.0
김천시	100.0	86.7	100.0	0.0	100.0	22.7	100.0	22.7	22	22	5	100.0	96.7
안동시	100.0	7.1	100.0	0.0	100.0	100.0	100.0	100.0	14	14	14	100.0	17.1
구미시	100.0	37.5	100.0	37.5	100.0	37.5	100.0	25.0	8	8	2	100.0	47.5
영주시	100.0	100.0	50.0	0.0	100.0	0.0	100.0	40.0	10	10	4	100.0	100.0
영천시	81.3	81.3	68.8	31.3	81.3	12.5	68.8	12.5	16	11	2	91.3	91.3
상주시	38.9	-	38.9	-	38.9	-	100.0	83.3	18	18	15	48.9	-
문경시	77.8	66.7	100.0	55.6	100.0	100.0	64.3	21.4	14	9	3	87.8	76.7
경산시	100.0	8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	8	8	100.0	97.5
군위군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8			100.0	100.0
의성군	100.0	55.6	100.0	55.6	100.0	38.9	100.0	50.0	18	18	9	100.0	65.6
청송군	-	-	100.0	37.5	25.0	25.0	25.0	25.0	8	2	2	10.0	10.0
영양군	100.0	100.0	100.0	0.0	100.0	100.0	100.0	50.0	6	6	3	100.0	100.0
영덕군	100.0	100.0	100.0	22.2	100.0	100.0	100.0	100.0	9	9	9	100.0	100.0
청도군	22.2	66.7	88.9	0.0	22.2	77.8	33.3	100.0	9	3	9	32.2	76.7
고령군	100.0	37.5	100.0	0.0	100.0	100.0	100.0	100.0	8	8	8	100.0	47.5
성주군	60.0	60.0	60.0	20.0	60.0	60.0	100.0	30.0	10	10	3	70.0	70.0
칠곡군	87.5	100.0	100.0	100.0	87.5	100.0	100.0	50.0	8	8	4	97.5	100.0
예천군	100.0	8.3	100.0	41.7	8.3	8.3	25.0	25.0	12	3	3	100.0	18.3
봉화군	100.0	16.7	100.0	33.3	80.0	30.0	100.0	100.0	10	10	10	100.0	26.7
울진군	100.0	100.0	100.0	0.0	100.0	100.0	110.0	110.0	10	11	11	100.0	100.0
울릉군	100.0	33.3	100.0	0.0	100.0	33.3	100.0	100.0	3	3	3	100.0	43.3

주 1) 지표: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2)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

3) 2018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6개(69.6%)

제 4 장

지역 우수사례: 경북행복씨앗마을사업

1. 개요

■ 배경

-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농촌 정책 중요성 증가
 - 새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보다는 농업·농촌 보존에 초점을 맞춰 가족농,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농업 활동 지속과 삶의 유지를 위한 농촌 정책 지원 강화
- 지역 역량에 기반한 상향식 농정 거버넌스 강화 시급
 -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농정에서도 중앙정부 중심의 기존 정책 추진 방식을 벗어나 지역과 농어민의 농정 참여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
 -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의 역량 강화 시급
- 새로운 경북 농촌재생 전략으로 행복씨앗마을 사업 추진
 - 신정부 정책으로서 도시재생이 새로운 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주목

-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농촌 개발 전략 추진
- 도시재생 등 이른바 새로운 지역 개발 전략들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의 새로운 농촌재생 전략을 모색하고자, 경북 행복씨앗마을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으로 갈수록 황폐해져가는 농촌 삶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시범 공모사업
 - 사업명: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사업
 - 총사업비: 1,500백만 원(도비)
 - 사업기간: 2018년 8월 ~ 2019년 8월(1년 이내 원칙, 사업에 따라 연장 가능)
- 사업내용
 - 건축 개념이 아닌 옛 것을 유지·보존, 디자인하는 재생마을 의미
 - 문화적·역사적 지역자원 활용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
 - 수익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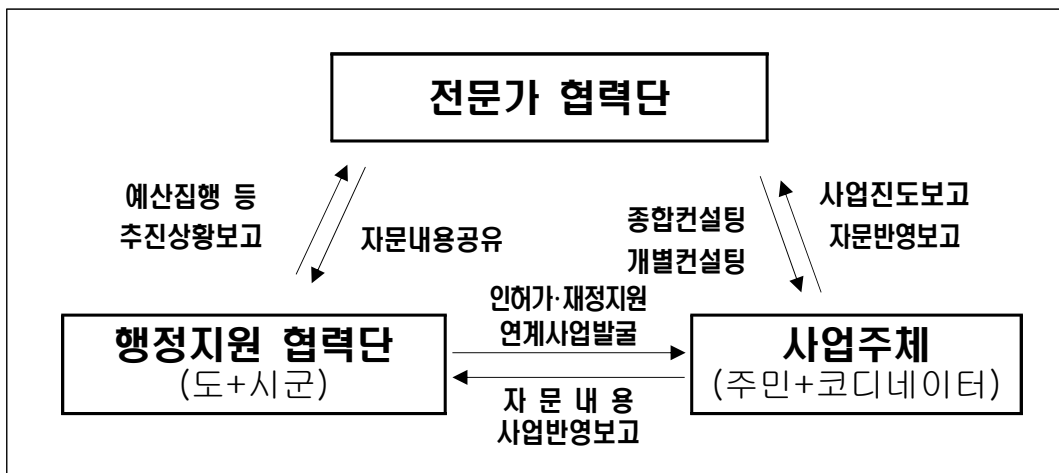
■ 사업분야

- 문화복지 확충: 빈집활용한 공동육아홈, 농촌청년 플랫폼, 청소년카페 등
- 문화예술 확충: 마을예술스튜디오, 마을미술관, 작은도서관, 커뮤니티북카페, 예술인촌
- 수익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마을특산품과 스토리텔링 접목, 공동판매 통한 이익공유

- 기 조성된 시설물을 재활용한 순수한 경상경비 성격의 사업도 가능

■ 전문가 협력단 운영

- (전문가 협력단)사업 유형 세분화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그룹핑
 - (소득창출)브랜드 개발, 특화상품, 전통시장
 - (체 험 형)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
 -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연계사업
 - (복 지 형)귀농귀촌, 주민복지서비스
 - (문화예술형)스토리텔링, 문화공간 조성 등
- (행정지원 협력단)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
 -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지원
 - 연계사업 발굴 등 사후운영 지원방안 강구
- 주체별 정보공유채널 구축하여 컨설팅 전과정 정보 공유
 - 진행상황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해결방안 피드백
 - 전문가 의견 최대한 반영하도록 수시보고 체계 확립



■ 단계별 추진일정

단계별	컨설팅 내용	시 기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단 착수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방향 공유, 멘토단 그룹핑 - 컨설팅 세부지침 검토·확정 ○ 종합컨설팅(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구축, 전담인력실태 등 	'18. 10월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씨앗마을사업 워크숍(11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코디, 사무장, 전문가협력단 ○ 컨설팅단 중간 회의(12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 문제점 파악 및 해결 	'18. 11월~12월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미진한 사업 중심 ○ 사업 중간 회의(3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 및 예산집행점검 	'19. 1월~ '19. 3월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컨설팅(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 실행과정 전반 - 조직운영 등 경영 멘토링 ○ 사업추진완료 점검(7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단, 담당공무원 현지실사 - 체크리스트 작성 등 	'19. 4월~ '19. 7월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최종평가 회의(8월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보고, 우수사례 선정 	'19. 8월
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모델 선정, 결과보고서 작성 ○ 컨설팅 결과 최종보고 ※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예정 	'19. 9월

2. 추진경과

■ 사업 마을 선정

- 1차 심사(서면심사)
 -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등 서면심사

- 2차 심사(현장실사)
 - 사업예정지 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면담
 - 공간확보 문제, 사업의지, 사후운영방안, 지자체 지원방안 등

- 3차 심사(발표심사)
 - 사업설명(7~8분이내) 및 질의응답(12~13분 이내)

- 17개 마을, 15억 원 사업 마을 선정

〈표 4-1〉 경북 행복씨앗마을사업 최종 선정 결과

연번	사업명	사업계획(위치, 지원액, 사업내용)
1	다육에 빠진 택전마을	◇ 포항 남구 택전마을, 80,000천원 ◇ 다육마을, 작품전시 및 체험판매, 인력 육성 등
2	함께 즐거운 꿈우라 마을 만들기	◇ 경주 산내면 구우리분교, 79,000천원 ◇ 문화프로그램 운영, 청년창업소 운영
3	선비순례길 문화쉼터	◇ 안동 도산면 맹개마을, 62,250천원 ◇ 공동체 문화쉼터 조성, 마을축제 등
4	어게인 1980, 구담시장	◇ 안동 풍천면 구담시장 일원, 66,000천원 ◇ 구담 리마켓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5	모레네 마을 예술한다네	◇ 구미 도개면 모레마을, 95,000천원 ◇ 마을스튜디오, 주민주도 축제운영
6	영주선비촌 활성화	◇ 영주 순흥면 영주선비촌, 120,000천원 ◇ 선비체험프로그램 운영(한복대여 등)
7	모동마을 문화활력소 "이음"	◇ 상주 모동면 구)농업기술센터 상담소, 110,000천원 ◇ 복합문화공간, 공유부엌, 소통프로그램 등
8	잘사는 우리마을 행복한 장군마을	◇ 군위 효령면 장군마을, 100,000천원 ◇ 고지바위권역센터내 마을공동 수익사업 개발 등
9	농부달장 행복씨앗키우기	◇ 의성 금성면 조문국박물관내, 86,000천원 ◇ 농부달장 통합브랜드 패키지개발 등
10	달리고 싶은 달팽이들의 작은 몸짓	◇ 청송 청송읍 구)청운초등학교내, 46,750천원 ◇ 커뮤니티카페, 마을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등
11	별별일 있는 별난 마을 만들기	◇ 영양 수비면 수하리 일원, 150,000천원 ◇ 별갈러리, 별관축전망대 등 산촌오지 체험마을 조성
12	우리마을 밥상공동체	◇ 영덕 관내 경로당, 60,000천원 ◇ 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공동취·식사
13	대심리 커뮤니티+아트마을 조성	◇ 예천 예천읍 대심정미소, 85,000천원 ◇ 마을 아카이브, 인생학교, 셀프스튜디오 등
14	천하명당 10승지 금당실 마을 초가이영학교	◇ 예천 용문면 상금곡리 초가이영 작업장내, 90,000천원 ◇ 초가이영학교 운영, 매뉴얼제작 등
15	꿈더하기 행복씨앗마을만들기	◇ 청도 화양읍 송금마을, 85,000천원 ◇ 문화광장 조성,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16	징검다리 체험장	◇ 고령 우곡면 도진분교내, 95,000천원 ◇ 스마트팜 체험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17	매화마을 활성화	◇ 울진 매화면 매화마을, 90,000천원 ◇ 이현세 만화테마 열차카페 운영, 돌레길 등

■ 현장컨설팅

- 목적: 현장여건 점검, 애로사항 파악, 컨설팅 방향 수립 등
- 방법: 사업유형별 전문가 협력단(2명) 매칭, 현장 방문(민-관 공동)
- 컨설팅 목표
 - 경북 행복씨앗마을사업의 목표와 사업 컨셉 인식 강화
 - 사업 추진 관련 마을 현장 실태 점검(문제점 및 과제 등)
 - 향후 컨설팅 방향 설정
- 점검 내용
 - 마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에서는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가?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 사업 추진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앞으로의 컨설팅 방향은?
 -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 공동워크숍

- 목적: 행복씨앗마을간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공유 및 마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을, 도 및 시·군, 전문가 협력단 합동 워크숍 개최
 - 행복씨앗마을 참여 마을 간의 네트워크 구축
 - 행복씨앗마을 추진 동력 강화
 - 마을 사업 추진의 문제점 공유 및 해결 방안 모색
- 주요 내용
 - 1차 현장컨설팅 결과 및 추진상황 점검

- 세부 단위사업 실행 자문
- 마을별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정보공유 등

3. 주요 마을 사업 사례

3.1. 꿈 더하기 행복씨앗마을 만들기(청도군)

■ 청도와인터널과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로 주민 소득 향상

- 송금마을은 8년 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되어 마을 사업을 진행. 하지만 현재는 체험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설도 유휴시설로 방치
- 청도와인터널의 효과가 마을 주민들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필요
 - 교통 혼잡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으나, 상점 운영 외 혜택 미흡
- 청도와인터널 방문객이 예전 100만명에서 최근 50만명으로 줄어들면서 관광객 유입 방안 필요
 - 방문객들도 와인터널만 방문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 체류시간 증대 및 수입 향상 방안 필요

■ 주요전략과 방안

- 문화광장 조성 및 축제 개최를 통한 방문객 증대
 - 문화광장을 만들어 축제를 통해 방문객을 유입하고 체류시간을 증대하는 것이 핵심 사업 내용

■ 추진주체

- 공무원 출신의 귀촌인이 사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 수익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정비 필요
 - 음식료 판매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 필요

■ 예상문제

- 상인과의 갈등 문제
 - 현재 청도와인터널 입구에서 감 가공품,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청도와인터널과의 협력 문제
 - 청도와인터널과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필요
- 사업 계획의 차별성 및 스토리 부족
 - 행복씨앗마을 사업계획이 다소 급조하여 작성한 측면이 있음. 차별적인 축제 컨셉 마련 필요

■ 개선 방안

- 주민 조직화
 - 선진지 견학, 주민 논의 활성화 등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조직화 과정 추진
 - 마을 생산 농산물과 축제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 추진
- 사업 추진 모델 보완(축제, 수익사업 등)
 - 축제가 핵심 사업이지만, 어떤 축제를 할 것인지 컨셉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차별성 있는 축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축제 계획 수립 필요

- ‘마을 감 생산 → 마을 감 수매 → 청도와인터널 방문객 판매’ 등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 개발 필요
- 청도와인터널, 상인, 마을주민, 농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논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 추진 기반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3.2. 함께 즐거운 꿈우라마을 만들기(경주)

■ 공동체 형성: 지역과 청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만들기

- 사업 신청 조직인 꿈우라마을은 비영리단체로 마을 내 폐교를 이용하여 농촌학교를 운영 중. 4년 정도 되었음.
 -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매출이 높지는 않지만 폐교 임대료 등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음.
- 청년들과 지역이 함께 공존·상생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던 중 행복씨앗마을 사업을 신청
 - 꿈우라마을은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내면 내에서 빵집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 ‘마을과 함께 살자’를 목적으로 꿈우라마을에서 주도하여 마을에 접근 시도

■ 주요전략과 방안

- 마을박물관, 느림보 꾸러미, 내 안의 리틀포레스트를 찾아서, 마을 생태정원 가꾸기 등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복씨앗마을 사업 계획
 - 폐교의 실내외 공간을 마을박물관 등으로 정비하여 활용 계획
 - 마을 주민들이 졸업한 우라분교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
 - 주민 소득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느림보 꾸러미 사업을 구상
 - 마을 박물관, 느림보꾸러미, 마을생태정원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을 끌어들이려고 시도

■ 추진 주체

- 비영리단체인 꿈우라마음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 꿈우라마음이 주체이며,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 경주시청에서 행정적 지원
 - 향후 본격적인 수익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 정비 필요

■ 예상 문제

- 마을박물관의 활용성 문제
 - 다른 지역에서 설치한 마을박물관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시설로 방치되는 경우 다수
 - 박물관의 기능은 갖추되 다양한 행사와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 활용 필요
- 제한된 예산, 기간, 인력에 비해 과다한 사업 계획
 - 제한된 자원과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을 계획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컨셉만 갖춰진 사업들이 있음.
 - 특히 꾸러미사업은 충분한 준비 작업과 자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역

량으로는 추진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상품의 물량 및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마을 농업 생산 구조에 대한 분석과 변화 필요

- 꿈우라마울에서 추구하는 이상이 마을 주민들과 달라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마을과 융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존재
 - 사업내용이 너무 많으며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부족

■ 개선 방안

- 행복씨앗마을 사업의 선택과 집중
 - 예산에 비해 사업 내용이 많아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논의를 통해 시급하고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필요
-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 보완 및 정보 제공
 - ‘마을과 함께 살자’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보려는 마을로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지원 필요
 -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마을에서 해결하되, 큰 그림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정보 제공 필요
 - 공동체 기반 상향식 정책 공모 사업 정보 제공
 - 다양한 기관, 매체를 이용하여 보다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컨설팅
- 마을과의 연계 강화
 - 마을과 꿈우라마울의 연계를 강화하여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과 논의하며 함께 문제 등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유도

- 유연한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박물관 계획 보완
 - 폐교 활용에 대한 선진사례로 당진 아미미술관 등을 참고

3.3. 다육에 빠진 택전마을(포항)

■ 공동체 형성: 다육이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

- 택전마을에 자리잡은 사회적협동조합 ‘숲과 사람’에서 마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사업을 추진
 - 사회적협동조합 ‘숲과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산림치유 교육 전문 조직. 포항시 해도동에서 2018년 1월 태전마을로 이전
 - 다육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려 함
 - 택전마을은 아파트 단지 등 도시화 지역과 인접한 농촌 마을로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과 특성 보유
- ‘숲과 사람’과 마을이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나, 아직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은 없는 상황. 소득 창출, 경관 개선, 주민 문화 생활 향상 등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없는 상황
 - 숲과 사람: 분위기 조성, 역량 강화 등 지원
 - 마을: 소득 창출이 가장 큰 요구, 경관 개선 등도 기대하고 있음.
- 다육이를 매개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면서 마을주민의 단합을 꾀함과 동시에 마을 관광화를 추진

■ 주요전략과 방안

- 다육공원조성, 팜파티, 다육아트 체험 및 판매, 인력양성 등을 추진
 - 숲과 사람에서는 체험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 자원을 활용. 마을숲에

다녀온 후 체험장에서 체험 행사를 진행. 하지만 아직 행사 수가 많지 않고 마을과의 연계도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

- 11월~12월에는 학습 및 역량 강화 사업에 집중할 계획. 마을 스토리를 만들어 전체 사업에 활용할 예정
- 공동체에 기반한 정부 정책 사업 추진 경험 없음

■ 추2진주체

- 사회적 협동조합 숲과 사람 및 택전리의 이장 및 주민들이 사업주체이고 행정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 ‘숲과 사람’이 중심적 역할
 - 마을에서는 마을부녀회가 주요 활동 주체

■ 예상 문제

- 마을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속가능성 위협
 - 사회적 협동조합 숲과 사람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숲과 사람은 숲해설 및 숲관련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이고, 택전리의 주민들은 저마다 농업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형편임
 - 다육이 재배와 판매가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우려
- 숲과 사람에서 마을 주민이 생산한 다육이를 판매해 주거나, 체험에서 사용하는 다육이를 마을에서 구입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현재 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육이를 마을 외부에서 구입 중
 - 숲과 사람에서도 행복씨앗마을사업이 바로 소득으로 연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숲과 사람에서는 택전마을에 대한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여 택전마을 다육이를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음.

- 사업 경영과 관련한 계획 부족
 - 숲과 사람에서 소비하는 다육이 양, 체험객 등에게 판매할 수 있는 다육이 양, 마을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다육이 양 등을 파악하여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석 필요
 - 추진주체인 숲과 사람과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너무 많음

■ 개선 방안

- 마을 주민과의 연계 강화
 - 마을과 숲과 사람의 협력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각 주체별 역할, 기능, 협력 내용, 경영 관계 등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역량 강화 활동
 -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만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역량 강화 필요
 - 사업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더욱 중요. 주민들의 역량과 참여를 이끌어내서 실제화 시킬 수 있는 노력 필요
- 구체적 목표 수립
 -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을 함께 해보자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논의를 통해 협력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 수립 필요
 - 초기에 달성 가능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지원이 없어도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불런티어 활동을 통한 택전리의 담장허물기 등 마을정비사업 추진, 다육이 생산을 통한 자립화 기반 마련, 다육이 아트제품 등의 판매, 도심청소 년들의 체험교육장 조성 등

- 다육이 관련 사업화 방안 마련
 - 체험 공간 조성 후 교육청 등을 방문하여 체험 학습 학생 요청
 - 제작한 다육아트를 시청에 의뢰하여 전시 판매 등

3.4. 종합평가 및 의의

■ 마을 공동체를 통한 지속적 발전 기반이 주요 목적

- 2018년 행복씨앗마을사업에 참여한 마을들은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구상
 - 마을공동체 활성화 8개 마을, 소득창출 7개 마을, 전통보전 1개 마을, 정주환경 개선 1개 마을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사업 추진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성과는 수치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고, 소득 창출도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

■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 발굴

- 경북행복씨앗마을 사업에 참여한 마을들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소득 증대,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세부목표와 추진전략 수립
 - 체험관광, 파머스마켓, 축제, 농촌학교, 작은도서관, 공동밥상 등
-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장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 필요

- 경북행복씨앗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마을 주민들의 창의적 사업 발굴과 혁신을 강조
- 창의, 혁신, 다양성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

■ 공공성 인식 부족과 지속가능성 대안 미흡

-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대부분 사업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
 - 지속가능성: 운영 및 경영계획 미흡, 수익모델의 불확실성, 비전문성 등
 - 공공성: 사업의 개인 사유화, 지역과의 연계 및 파급효과 부족 등
-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 계획 보완 필요

부 록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구분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점검방법	2019 목표치
보건복지	복지 통합시스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총족기준: 시군별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 50 이상 	50.0
교육	교육다양성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서비스 제공 기준 총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시군별 교육서비스 제공 총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이상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미만일 경우 교육 프로그램 5개 이상 	100%
정주생활 기반	교통 정보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정보 제공 기준 총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시군별 교통정보 제공 총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2개 이상 	100%
경제활동·일자리	귀농·귀촌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가능 시·군수 / 총 시·군수) × 100 총족기준: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1개 이상 	100%
	농업 일자리 정보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공급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총족기준: 일자리 공급 서비스 1개 이상 	54.5%
문화·여가	생활체육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총족으로 간주 	66.7%

부 록2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조사표

No.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 평가 대구경북연구원

■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 (개념)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교육·의료·안전·문화 등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활용) 매년 138개 농어촌 시·군을 기본단위로 기준달성 정도를 파악·분석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자원배분 및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 2015년부터 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국가관리 핵심 항목과 지자체 관리 선택 항목으로 개편
 - 국가관리 핵심 항목은 삶의 질 계획과 매칭하여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개편(기존: 9개 부문, 32개 항목)
 -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 자체 기준 마련 유도

2015년부터 삶의 질 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이 국가관리 핵심 항목과 지자체 관리 선택 항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6개의 선택 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18년 동안 6개 선택 항목의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목표 설정과 정책 사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선정한 6개 선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복지통합시스템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한 조사입니다.

(응답예시)

사업, 시설명	교육 내용	비고
원어민 영어수업 지원	초등학교 영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청소년 수련관	6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진로 상담 버스	연 2회 진로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교통정보

귀하의 시군에서 교통정보를 지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수단들이 있습니까?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사업(수단)	내용	사업(수단)	내용

(응답예시)

사업(수단)	내용	사업(수단)	내용
팜플렛	수요응답형 버스, 미중택시 등 대안적 교통수단 홍보 책자 발행	읍·면 사무소 상담인력 운영	읍·면 사무소에서 전화로 대중교통정보를 전달
교통정보서비스 모바일 앱 개발	대중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	교통정보 전광판	정류소에 대중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 설치

3. 귀농·귀촌

(1) 귀하의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경북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관련 사례

귀하의 시군에서 경북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과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 개선과 주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다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2018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 철 민 연구위원

차 례

제1장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 1. 연구 필요성 383
- 2. 연구 목적 385
- 3. 연구 추진 방법 386

제2장 경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선택 항목 선정 387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391

표 차례

제2장

<표 2-1>	경상남도 지자체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389
<표 2-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점검 수단	390
<표 2-3>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가임여성 진료실적(연인원)	392
<표 2-4>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임산부 진료실적(실인원)	393
<표 2-5>	경남 시·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률	394
<표 2-6>	찾아가는 산부인과 기준 이행실태(2017년 기준)	395
<표 2-7>	기초수급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 비율	397
<표 2-8>	대학생 멘토링 기준 이행실태(2018년 기준)	398
<표 2-9>	시·군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예산 현황	400
<표 2-10>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기준 이행실태(2017년 기준)	401
<표 2-1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현황과 달성률	403
<표 2-12>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기준 이행실태(2018년 기준)	404
<표 2-13>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	405
<표 2-14>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지원 비율	405
<표 2-15>	농가도우미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407
<표 2-16>	시·군별 공공 수영장 배치 현황	408
<표 2-17>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410

그림 차례

제3장

<그림 2-1>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추진 체계	391
----------------------------------	-----

제 1 장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¹⁾

1. 연구 필요성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년)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현실 반영 필요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 항목(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함.
 - 농어촌 지역 간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369~372 재작성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필요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관련된 수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도움

- 이 연구는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2년 차 연구로서 선택 항목 이행실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사업이나 정책의 실효성 평가 등 개선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선택 항목의 변경, 선정된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수정, 이행실태 점검 방법의 개선 그리고 각 선택 항목별 목표치에 대한 수정 등이 필요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격차가 큰 부분을 선정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목표치가 달성되고 격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다른 항목으로 변경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사업시행 초기와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
 - 이행실태의 점검 방법은 처음 적용하였던 것보다 더 쉽게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선택 항목을 포함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각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선택 항목 선정을 위해 ①삶의 질 전문가 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 협의체(경우에 따라 도청 관련 공무원 포함)를 구성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②지역주민의 수요조사 및 관련 전문가(도청 관련 공무원 포함)의 인터뷰를 통해 선택 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방법을 논의·확정함.
 - 시·군의 협조를 얻어 선정된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선택 항목의 제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2015~'19년)동안 달성해야 할 중기목표치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

3. 연구 추진 방법

■ 포괄적 의견수렴

- 담당자 인터뷰 조사 실시: 관련전문가(공무원 포함)의 인터뷰를 통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 자문회의 및 워크숍 실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방법 타당성 논의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논의

■ 행정기관 협조를 통해 자료 구득

-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자료 중, 공식통계를 제외한 내부 자료는 지자체 협조를 통해 자료 구득

■ 현장방문 조사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현장 조사(필요시) 및 수범사례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제 2 장

경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선택 항목 선정

1.1. 선택 항목 지표 선정

■ 목적 및 원칙

- 경상남도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과 지표를 선정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삶의 질과 관련한 농어촌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상남도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함.

- 경상남도의 선택 항목과 지표의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음.
 - ① 경남에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 ② 경남의 특색을 잘 반영하고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
 - ③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 ④ 경남의 각 시·군이 모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비교 평가가 가능한 사업
 - ⑤ 달성률 등 정량적으로 제시가 가능한 사업

■ 선정배경

- 선택 항목 지표 선정 방법
 - 경상남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 사업 분석
 - 경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검토
 - 경남 도정 복지보건 정책 분석
 - 담당자 인터뷰 내용 분석

- 수범사례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의 모범 사례 발굴

■ 선택 항목 선정

- 경상남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다음 표와 같이 선정 됨.

〈표 2-1〉 경상남도 지자체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부문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1. 보건복지	1)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임신부에게 산전관리 서비스와 출산을 돕는다.
2. 교육여건	2) 기초수급자 자녀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대상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주 1회 학생 개별 방문 지도를 제공한다.
	3) 서민자녀 교육지원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자원을 제공한다.
3. 정주생활 기반	4) 독거노인 공동생활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공동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한다.
4. 경제활동 일자리	5)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도우미를 지원한다.
5. 문화·여가	6) 실내수영장 설치	지역에서 수영활동이 가능한 실내수영장이 있고, 수영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 이행실태 점검 방법

○ 선택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방법과 점검 수단은 다음과 같음.

〈표 2-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점검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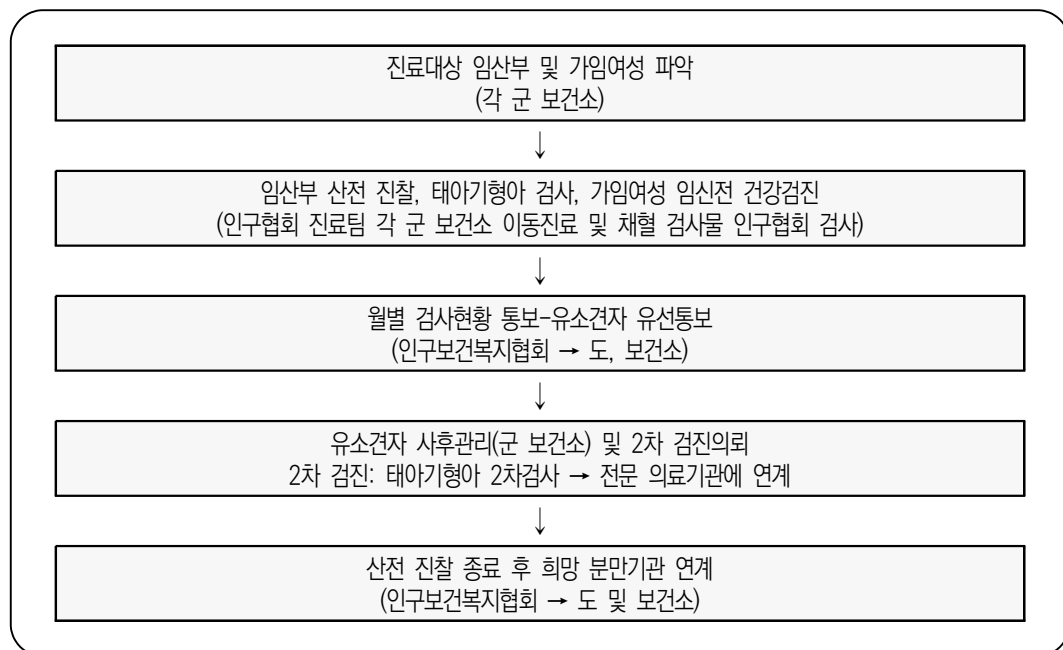
선택 항목	점검 방법	점검 수단	
1) 찾아가는 산부인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출산건수 / 그 지역의 출산 건수)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통계청 출생 자료	공식통계
2) 기초수급자 자녀 멘토링	(멘토링 지원학생 수 / 멘토링 지원대상 학생 수)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공식통계
3)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예산 증감액 / 전년도 사업예산)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4) 독거노인 공동생활	(공동생활 독거노인 수 / 공동생활을 원하는 독거노인 수)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시·군 조사	협조자료
5) 농가도우미	(농가도우미 지원 가구수 / 출산 여성농업인 수)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통계청 출생 자료	공식통계
6) 실내수영장	(지역의 수영장 수 / 전국의 평균 수영장수)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시·군 조사	협조자료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2.1. 임산부 관리(찾아가는 산부인과)

-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임산부의 산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경상남도는 2008년부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임산부에게 찾아가는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건강한 출산을 돕는 등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그림 2-1〉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추진 체계



- 경상남도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당초 산부인과가 없는 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합천의 6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2013년 합천에 산부인과가 개원되었고 2016년에 하동군에도 개원됨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4개 군 지역으로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진료를 위해 차량 1대를 이용하여 월 2~4회 순회검진을 실시함.
 - 운영인력: 6명(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요원, 운전원)
- 검진내용은 임신부 무료 산전 진찰, 가임기 및 비가임기여성 부인과 검진 등임.
 - 태아 초음파 등 산전 진찰(표준 산전 의료서비스 1인 총 13회)
 - 가임 및 비가임여성 부인과 검진 등
 - ※ 연간 평균 검진 횟수 150여 회, 검진건수 2,500여건(일반가정 2,000여건, 다문화 500여건)
 - ※ 이동검진차량: 1일 기준 평균 18명 정도 검진
-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실적은 가임 여성의 수나 출산율에 따라 증감하게 되는데 다음 표와 같음.
 - 가임여성을 진료한 연인원은 2012년 500명에서 2105년 32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 86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783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음.

〈표 2-3〉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가임여성 진료실적(연인원)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의령	83	49	48	224	202
고성	127	34	54	209	52
하동	155	129	71	-	-
산청	81	41	80	175	222
함양		26	75	257	307
계	446	279	328	865	783

- 임신부를 진료한 실인원 수는 2011년 693명이었으나 2013년 592명으로 감소하였고 5개 군지역을 진료한 2013년에는 402명으로 감소, 2014년 530명으로 증가하다 2016년 398명, 2017년 260명으로 감소함.

〈표 2-4〉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임신부 진료실적(실인원)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의령	74	69	60	107	54	75	58
고성	165	172	117	131	123	108	22
하동	144	114	81	121	58	-	-
산청	59	53	43	67	93	96	88
함양	126	133	101	104	91	119	92
합천	125	51	-	-	-	-	-
계	693	592	402	530	419	398	260

-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산부인과의 없는 지역의 임신부가 필요한 산전관리 서비스를 얼마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임.
 - 산부인과의 없는 지역의 임신부들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근지역 또는 대도시의 산부인과의를 이용하게 됨.
 - 산부인과의 없는 군지역 임신부의 절반인 50% 이상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설정함.

산부인과의 없는 군 지역 임신부의 50% 이상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혜택을 받는다.

-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행실태 점검은 산부인과의 없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임신부 실인원의 수 / 연간 출생아 수) × 100의 식을 통해서 이루어짐.

〈표 2-5〉 경남 시·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률

단위: 명, %

지 역	출생아 수(A)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출생 수(B)		이용률(B/A)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창원시	8,574	7,515	-	-	-	-
진주시	2,624	2,296	-	-	-	-
통영시	1,059	845	-	-	-	-
사천시	871	738	-	-	-	-
김해시	4,700	3,995	-	-	-	-
밀양시	638	627	-	-	-	-
거제시	3,233	2,614	-	-	-	-
양산시	2,901	3,005	-	-	-	-
시 합계	24,600	24,600	-	-	-	-
의령군	123	132	75	58	61.0	43.9
함안군	474	387	-	-	-	-
창녕군	389	385	-	-	-	-
고성군	273	229	108	22	39.5	9.6
남해군	140	125	-	-	-	-
하동군	228	188	-	-	-	-
산청군	207	191	96	88	46.4	46.1
함양군	178	160	119	92	66.9	57.5
거창군	352	294	-	-	-	-
합천군	174	123	-	-	-	-
군 합계	2,538	2,538	398	260	51.0	36.5
경남(계)	27,138	27,138	398	260	51.0	36.5

- 산부인과가 없는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임산부의 실인원 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연도별 군별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함.
- 2015년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출생아 수는 419명이었고 2016년에는 398명, 2017년 260명으로 감소하였음.
- 서비스기준(5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2015년에는 없었지만 2016년에는 의령군과 함양군의 2개 군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7년에는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용 출생아 수가 떨어짐에 따라 이용률도 2016년 51.0%에서 2017년 36.5%로 크게 떨어짐.
-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도 2016년 의령군과 함양군의 2개 지역에서 2017년에는 함양군 만이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음.

〈표 2-6〉 찾아가는 산부인과 기준 이행실태(2017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57.5	9.6	25.0	1/5	25.0	
도농복합시	-	-	-	-	-	
전체 경남	57.5	9.6	25.0	1/5	25.0	

2.2. 교육기회(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부모의 빈곤, 저학력, 결손 등으로 성장기에 다양한 경험, 조언·조력이 부족한 실정임.
 -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과 활력 있는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업 증진과 함께 건전한 사회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자녀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임.
 - 멘토 대학생의 자격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또는 졸업생도 포함
 - 멘토 대학생과 멘티를 동성조합으로 1:1로 매칭
 - 멘토가 선정된 멘티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1회 2시간) 개별 방문하여 지도하는데 월 1회는 문화체험을 하도록 함.
 - 멘토에게는 실비, 교통비, 문화체험비, 보험료, 교재비가 지급되고 멘티에게는 문화체험비, 보험료, 교재비가 지급됨.

멘토링 지원 대상자의 10% 이상이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지원을 받는다.

-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멘토링 지원 학생 수 / 시·군별 기초수급자 자녀 가운데 초6 ~ 고1 학생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멘토링 지원 인원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시·군별 멘토링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이용하여 산출함.

〈표 2-7〉 기초수급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 비율

단위: 명, %

지 역	대상 학생 수(A)		지원 멘티 수(B)		지원 비율(B/A)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창원시	2,582	2,341	115	115	4.45	4.91
진주시	1,283	1,172	0	0	0.00	0.00
통영시	561	541	15	14	2.67	2.59
사천시	406	373	20	18	4.93	4.83
김해시	1,671	1,568	80	72	4.79	4.59
밀양시	432	379	25	23	5.79	6.07
거제시	363	410	12	11	3.31	2.68
양산시	798	745	25	23	3.13	3.09
시 합계	8,096	7,529	292	276	3.61	3.67
의령군	71	64	3	3	4.23	4.69
함안군	176	175	10	9	5.68	5.14
창녕군	182	146	5	5	2.75	3.42
고성군	169	156	6	5	3.55	3.21
남해군	133	118	10	9	7.52	7.63
하동군	183	174	10	9	5.46	5.17
산청군	127	108	6	5	4.72	4.63
함양군	151	136	10	9	6.62	6.62
거창군	245	234	10	9	4.08	3.85
합천군	128	104	10	9	7.81	8.65
군 합계	1,565	1,415	80	72	5.11	5.09
경남(계)	9,661	8,944	372	348	3.85	3.89

○ 2018년 경상남도 기초수급자 자녀 초6~고1 학생의 수 8,944명의 3.9%인 372명이 멘토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나누면, 군 지역은 72명이 지원을 받아 5.1%, 도농복합시는 276명이 지원을 받아 3.7%의 달성률을 나타냄.

- 그러나 서비스기준(1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 대학생 멘토링 기준 이행실태(2018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8.65	3.21	5.1	0/10	0.0	
도농복합시	6.07	0.0	3.7	0/8	0.0	
전체 경남	8.65	0.0	3.9	0/18	0.0	

2.3.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바우처 사업) 사업으로 전액 도비를 이용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2)
- 서민자녀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시·군 자율 시행으로 시·군비로 추진
 - 사업 대상은 소득하위계층 3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임.
- 당초 서민자녀 교육지원 분야는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 교육여건과 학생안전 개선 등의 3개로 나누어 시작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세 종류로 나누어짐.
- 바우처 사업은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학습 수강, 보충학습 수강, 학습 및 참고도서 구입비 지원 등임.
 -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지원,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 서민자녀 특기 적
-
- 2)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제3장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우수사례, 3.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내용을 참고 바람.

성교육 지원 등으로 학기중 수시로 실시함.

-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루어짐.
-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사업의 만족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1인당 지원 액수를 증액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경상남도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의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데 2016년 말 조사결과 만족도가 98%로 높게 나타나 만족도를 서비스 기준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 사업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나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은 둘 다 사업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일정 수준까지의 사업예산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를 서비스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5% 이상 증액한다.

-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사업예산 증감액: 계획년도 시·군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전년도 사업예산) / 전년도 사업예산)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자료는 경상남도과 각 시·군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이용함.

〈표 2-9〉 시·군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 만원, %

지 역	2017	2018	증감율(%)
창원시	6,506	8,766	34.7
진주시	4,188	5,684	35.7
통영시	2,020	2,579	27.7
사천시	1,446	2,300	59.1
김해시	7,081	8,512	20.2
밀양시	1,969	2,290	16.3
거제시	1,565	2,579	64.8
양산시	4,397	5,350	21.7
시 합계	29,172	38,060	30.5
의령군	600	533	-11.2
함안군	1,424	1,137	-20.2
창녕군	994	1,073	7.9
고성군	1,022	1,196	17.0
남해군	812	826	1.7
하동군	972	1,039	6.9
산청군	668	731	9.4
함양군	763	861	12.8
거창군	1,276	1,428	11.9
합천군	878	896	2.1
군 합계	9,409	9,720	3.3
경남(계)	38,581	47,780	23.8

○ 경상남도 서민 자녀 예산지원액은 2016년 390억 원에서 2017년 386억 원, 2018년 478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시군 지역을 나누어 보면 시지역은 89억 원이 증가한 반면 군지역은 3억 원이 증가한데 그치고 있음.

- 서비스기준(사업예산 5% 이상 증액)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8개 도농 복합시 전부임. 시지역의 예산 증가액은 평균 31%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음.
 - 10개 군지역 가운데 의령군과 함안군은 예산액이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남해, 합천은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군지역은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기준 이행실태(2017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7.0	-20.2	3.3	6/10	60.0	
도농복합시	64.8	16.3	30.5	10/8	100.0	
전체 경남	60.7	-34.1	23.8	16/18	88.9	

2.4.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사업은 홀로어르신 생활편의 제공,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 거주를 통한 홀로어르신 소외감 극복, 정서적 안정감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 2007년 전국 최초로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만상, 용덕면 용소리 상용소의 2개소에서 시범실시 되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음.
 - 독거노인 5~10인 공동생활가정(숙식)
 - 도는 공공생활가정 시설보수비 지원 및 총괄 관리하고 시·군과 읍·면·동은 공동생활가정 시설보수 및 운영 지원과 건강관리, 생활지원, 노노케어, 자원봉사 연계 등을 추진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홀로어르신 가운데 공동생활을 원하는 분들의 일정 수준 이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홀로어르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공동생활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임.
 - 새로 도입되는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초기에 수요가 낮게 나타날 수 있고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현재 단계에서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서비스기준은 시·군 당 일정 수의 공동생활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함.
 -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생활가정을 홍보 수단으로 하여 점차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임.

〈표 2-1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현황과 달성률

단위: 개소, %

지 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A)	읍면동 수 (B)	달성률 (A/B)
창원시	3	1	0	1	0	5	62	8.1
진주시	1	1	1	0	0	3	32	9.4
통영시	1	1	1	1	1	5	15	33.3
사천시	1	1	1	0	2	5	14	35.7
김해시	1	0	0	0	0	1	19	5.3
밀양시	1	1	1	1	1	5	16	31.3
거제시	1	0	0	0	0	1	19	5.3
양산시	1	0	0	2	0	3	13	23.1
시 합계	10	5	4	5	4	28	190	14.7
의령군	1	6	3	2	5	17	13	130.8
함안군	1	1	2	1	0	5	10	50.0
창녕군	1	6	6	6	2	21	14	150.0
고성군	1	2	2	4	2	11	14	78.6
남해군	1	1	1	3	0	6	10	60.0
하동군	1	2	2	3	1	9	13	69.2
산청군	1	2	5	1	0	9	11	81.8
함양군	1	2	1	1	0	5	11	45.5
거창군	1	2	3	2	3	11	12	91.7
합천군	1	2	0	1	1	5	17	29.4
군 합계	10	26	25	24	14	99	125	79.2
경남계	20	31	29	29	18	127	315	40.3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을 시·군의 읍·면·동에 평균 1개 이상 설치한다.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의 수 / 시·군별 행정 읍·면·동 수) × 100의 식을 통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의 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시·군별 읍·면·동수는 경상남도의 통계자료를 이용함.
- 시·군의 읍·면·동에 평균 1개 이상 설치하는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2017년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창녕군 1개 군이었으나 2018년에는 의령군이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여 2개 군으로 늘어남.
 - 시지역은 군지역에 비해 공동가정 설치 필요성이 떨어져 달성률이 낮았음. 2018년 군지역은 창녕군이 150.0%의 달성률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함천군이 29.4%로 가장 낮았음.

〈표 2-12〉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기준 이행실태(2018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50.0	29.4	79.2	2/10	20.0	
도농복합시	35.7	5.3	14.7	0/8	0.0	
전체 경남	150.0	5.3	40.3	2/18	11.1	

2.5. 농가도우미

-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자 함. 농가도우미가 출산 여성의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도내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나 국제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임.
 - 지원내용은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90일 까지 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할 경우, 도우미 1일 기준 단가의 85%를 지원
 - 2004년까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429명 까지 지원하였으나 이후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2011년 286명, 2013년 173명, 2015년 127명, 2017년에는 98명을 지원하였음.

〈표 2-13〉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

단위: 명

지 역	2011	2012	2013	2104	2015	2016	2017
시 합계	66	63	37	36	30	30	32
군 합계	220	155	136	122	97	54	66
경상남도 합계	286	218	173	158	127	84	98

- 영농도우미 지원으로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음.

〈표 2-14〉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지원 비율

단위: 명, %

지 역	출생아 수(A)		지원 인원 수(B)		지원 비율(B/A)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창원시	8,574	7,515	.	0	0.02	0.00
진주시	2,624	2,296	11	17	0.65	0.74
통영시	1,059	845	.	0	0.09	0.00
사천시	871	738	6	3	0.80	0.41
김해시	4,700	3,995	.	1	0.02	0.03
밀양시	638	627	12	11	2.82	1.75
거제시	3,233	2,614	.	0	0.03	0.00

지역	출생아 수(A)		지원 인원 수(B)		지원 비율(B/A)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양산시	2,901	3,005	1	0	0.03	0.00
시 합계	24,600	21,635	30	32	0.20	0.15
의령군	123	132	2	2	8.13	1.52
함안군	474	387	1	0	0.21	0.00
창녕군	389	385	1	5	2.57	1.30
고성군	273	229	2	1	1.47	0.44
남해군	140	125	1	1	0.71	0.80
하동군	228	188	12	16	10.09	8.51
산청군	207	191	3	7	4.83	3.66
함양군	178	160	8	21	14.61	13.13
거창군	352	294	13	13	5.68	4.42
합천군	174	123	11	6	9.77	4.88
군 합계	2,538	2,214	54	66	4.81	2.98
경남(계)	27,138	23,849	170	98	0.63	0.41

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여성농업인의 20% 이상이 지원을 받는다.

- 농가도우미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수 / 시·군별 출산 여성농업인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시·군별 출산 여성농업인 수는 먼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에서 시·군별 출생수를 가져옴.
 - 다음으로 시·군별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자비율을 산출함.
 - 시·군별 전체 출생 수에 여자 농가인구의 비율을 곱하여 여성농업인의 출산 건수를 추정함.

- 2017년 경상남도 군지역 출생아 수 2,214명의 3.0%인 66명이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도농복합시는 0.2%의 달성률을 나타냄.
- 그러나 서비스기준(2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한 곳도 없었음.

〈표 2-15〉 농가도우미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3.1	0.0	3.0	0/10	0.0	
도농복합시	1.8	0.0	0.2	0/8	0.0	
전체 경남	13.1	0.0	0.4	0/18	0.0	

2.6. 공공체육시설(수영장)의 배치

- 사업개요
 - 공공체육시설이란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되고, 운영·관리되는 체육시설임.
 -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참가자가 적극적이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운동에 필요한 물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 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까지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음.
 - 반면, 협의의 개념으로는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공간적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음.

- 여기서는 여러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경상남도 시·군 수영장의 설치 개소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함.
 - 수영장은 수도권 지역과 대구,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간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불균형이 큰 체육시설의 하나임.
- 수영장은 서비스 거리 반경 5km로 분석했을 때 도시지역의 상당수가 시설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농어촌지역은 비혜택 인구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군 지역에 인구 4.5만 명당 1개소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다.

- 수영장 배치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수영장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수영장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7년 말 기준)”를 이용함.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조사하여 수영장의 설치 수를 평가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인구수로 대신함.

〈표 2-16〉 시·군별 공공 수영장 배치 현황

단위: 개, 명, %

지 역	수영장 수(A)		4.5만 명당 인구 수 (년 기준, 명)(B)		배치비율(A/B)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창원시	10	10	23.6424	23.4896	42.3	42.6
진주시	1	1	7.7053	7.7040	13.0	13.0
통영시	2	2	3.0702	3.0185	65.1	66.3
사천시	1	1	2.5536	2.5389	39.2	39.4

지 역	수영장 수(A)		4.5만 명당 인구 수 (년 기준, 명)(B)		배치비율(A/B)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김해시	1	1	11.7649	11.8252	8.5	8.5
밀양시	1	1	2.4079	2.3977	41.5	41.7
거제시	1	1	5.7152	5.6461	17.5	17.7
양산시	0	0	7.0453	7.5230	0.0	0.0
시 합계	17	17	63.9048	64.1430	26.6	26.5
의령군	1	1	0.6247	0.6189	160.1	161.6
함안군	0	0	1.5319	1.5157	0.0	0.0
창녕군	0	0	1.4218	1.4245	0.0	0.0
고성군	1	1	1.2156	1.2013	82.3	83.2
남해군	2	2	1.0029	0.9920	199.4	201.6
하동군	0	0	1.1027	1.0851	0.0	0.0
산청군	1	1	0.8022	0.8076	124.7	123.8
함양군	0	1	0.8942	0.8928	0.0	112.0
거창군	0	0	1.4068	1.3947	0.0	0.0
합천군	1	1	1.0672	1.0444	93.7	95.7
군 합계	6	7	11.0702	10.9771	54.2	63.8
경남(계)	23	24	74.9749	75.12009	30.7	31.9

- 2017년 말 기준 경상남도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은 전체 24개로 창원시에 10개소가 있는 등 주로 시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음.
 - 경남의 시 지역에서 수영장이 없는 시는 양산시 하나이고, 군 지역에서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이 수영장이 없는 지역이었으나 2017년 함양군에 수영장이 설치되었음.
 - 수영장이 없는 시·군은 이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수영장이 없는 지역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점차 숫자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서비스기준(100.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4곳으로 모두 군 지역에 있음.

〈표 2-17〉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201.6	0.0	63.8	4/10	40.0	
도농복합시	66.3	0.0	26.5	0/8	0.0	
전체 경남	201.6	0.0	31.9	4/18	22.2	

2018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 승 철 책임연구원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417
- 2. 연구의 목적 419
- 3. 연구의 범위 420

제2장 제주도 농어촌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점검방법

- 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421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428

제3장 제주도 농어촌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평가 분석

- 1. 선택 항목 점검 개요 429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431
- 3. 이행실태 평가 분석 448
- 4. 이행실태 평가 분석 종합 457

제4장 수범사례 발굴

- 1.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문화·여가) 458

표 차례

제2장

- <표 2-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목표 및 원칙 422
- <표 2-2> 제주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계획상 정책 및 사업 423
- <표 2-3> 2017년도 및 2018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비교 426
- <표 2-4> 2018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5개 부문 6개 항목) 427
- <표 2-5>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방법 및 목표치 ... 428

제3장

- <표 3-1> 지원기준 433
- <표 3-2> 연도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실적 433
-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437
- <표 3-4> 지원금액 및 기간 439
- <표 3-5> 연도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 지원 실적 440
- <표 3-6> 연도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현황 440
- <표 3-7> 2018년도 투자계획 442
- <표 3-8>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추진 실적 446
- <표 3-9> 2017년 제주지역 재해보험 가입실적 447
- <표 3-10> 연도별 제주지역 수입보장보험 가입실적 447
- <표 3-11> 2018년도 농어업인 자녀 교통비지원 현황(10월말현재) 449
- <표 3-12> 2018년 후계농 신규창업 지원 실적 451
- <표 3-13>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실적 451
- <표 3-14> 2018년도 추진실적(8월말 현재) 453
- <표 3-15> 재해보험 2018년 실적(2018년 10월말 현재) 455

<표 3-16> 수입보장보험 2018년 실적(2018년 10월말 현재) 456
<표 3-17> 2018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달성여부 457

제4장

<표 4-1> 행복바우처 지침 개정(2018년 2월) 460
<표 4-2> 2018년 행복바우처 카드지원 현황(8월말 현재) 460

그림 차례

제3장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 12개 읍면지역	430
---------------------------------	-----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도입 배경

- 최근 정부의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농어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여건변화와 특수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채 일률적인 투자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효율성과 효과의 극대성이 저하되어 왔음.
- 이에 중앙정부는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대, 도·농간의 공공서비스의 격차 완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도·농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임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삶의 질 정책 추진 필요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 항목(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함.
- 농어촌 지역 간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필요

- 2015년 이후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을 도출하여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음.
-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하여 2016년부터 지자체별로 선택 항목을 공식 확정하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19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더불어 지자체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현황에 대한 점검, 평가와 서비스 기준 관련 지자체에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례의 발굴·공유 등 지역 단위에서 삶의 질 계획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점검,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생성하는 행정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이 필요하고, 사례 조사와 관련해서도 지역의 여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자들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및 공유 필요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관련된 수범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도움

2. 연구의 목적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선정과 그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수범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그동안 점검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선택 항목을 일부 포함하여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선택 항목을 선정하고 선택 항목의 제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2015-19년)동안 달성해야 할 중기목표치 제시 및 그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제시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 수범사례 발굴하여 확산함.

3. 연구의 범위

3.1.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 2018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3.2. 내용적 범위

■ 제주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분석
- 제주도 읍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제 2 장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점검

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1.1. 선택 항목 선정 목적 및 원칙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핵심 항목을 보완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표는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의미함.
 - 농어촌서비스의 기준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고, 동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정책을 개선하여 나가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핵심 항목을 보완하여 농어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투입의 요구가 높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함.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 선정의 목표와 원칙을 정리하면 표 2-1. 과 같음.

〈표 2-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목표 및 원칙

구분		내용
지표 선정 목표		-수혜자: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 제공 -공급자: 정책 투입정도의 정확한 진단
지표 선정 원칙	부문	-전체의 부문이 아닌 핵심부문 및 항목을 선정하여 지표 설정
	영역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함.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내부자료 기초
	지자체 차별성	-지자체의 정책투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첫째,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의 정책투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함.
 - 제주도가 수립한 ‘제3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15. 4. 16.)상의 세부 추진과제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를 도출함.
 - * 이 계획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농촌지원 사업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되 H/W 중심이 아닌 S/W중심 지표를 선정함.
- 셋째, 점검 용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자료 기초로 획득 가능한 지표를 선정함.
- 넷째, 공급자의 노력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함.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평가의 목표는 제주도 농어촌 주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촌 복지체계를 확립하는 것임.

- 부문별 발전목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농어촌 맞춤형·밀착형 복지의료서비스 구현
 - 농어촌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 공교육서비스 및 인적역량 강화
 - 주민주도의 내발적 지역발전 및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 농어촌 소득의 다각화 및 상생경제 실현
 - 풀뿌리문화 여가 인프라 구축과 지역특성 문화활동 활성화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환경 기반구축 및 보전
 - 지역주민의 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계획 (2015~2019년)상의 부문별 정책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2-2. 참조)

〈표 2-2〉 제주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계획상 정책 및 사업

부문	정책	사업
보건 복지 증진	농어업인에 특성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50%경감 지원 지속 - 국민연금보험료 최대 50% 지원 -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15)49.1%→(’19)51.0%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지원 - 농작업 재해 원인규명 및 안전기술 개발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농어촌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기반구축 및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
	농어촌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보육시설 전읍면 시설 개보수 - 야간보육, 휴일운영 등 보육프로그램 - 보육교사에 특별근무수당 -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 출산시 영농대행 농어가도우미 지원 확대

부문	정책	사업
교육 여건 개선	농어촌특성 반영 교육단계별 공교육서비스 확충	-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 초등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확충, 지역 인재양성 지원	- 교원 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 선진화, 취업역량 강화 - 특성화고 교육력 제고 및 다문화교육 내실화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15)37개교→(‘19)40개교
	농어촌 학생의 교육복지 확대	- 읍면고교생 교통비 지원 - 고등학생 기숙사 운영 및 친환경농산물급식비 지원
생활권기 반	정주체계간 연계를 통한 지원	- 농어촌 육학지원 사업 추진 - 귀농귀촌 농촌정착지원 및 팜투어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주도 생활체감형 지역개발	-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육성 - 어촌체험관광 개발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 및 에너지 복지확대	-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 개량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 농어촌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 소형 LPG 소형탱크 및 도서지역 자가발전 사업 추진 - LPG인수기지 태양광 설치 및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 지원
	농어촌 고령자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 공동 홈(home), 공동급식시설 지원 -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
경제 활동·일자 리창출	농어촌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강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15)8개 마을→(‘19)12개 마을 -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15)8개 마을→(‘19)15개 마을 - 지역 농수협외 복지사업 내실화 및 서비스확대
	농어업인 창업촉진 및 역량 강화	-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 여성농 및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농어촌 관광 고도화 추진	- 제주의 대표 향토음식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자생식물원 조성 및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농어촌 인력 mismatch 해소	- 중고령자 취약계층 구인구직 만남 지원 -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 지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부문	정책	사업
문화·여가	생활 체험형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 작은도서관 및 아트빌리지 조성 - 실버아티스트 창작문화활동 위한 지역공동체 함양
	주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및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 확대	-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및 소외지역 문화예술 공연 - 동호회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유무형 농어촌 문화자원 발굴 전승	- 제주읍면 역사문화지 편찬 및 제주어 보존활동지원 - 향토문화 유산 정비 및 해녀문화 유산 전승
	문화전문 인력 육성 및 양질의 문화콘텐츠제공	-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환경·경관	주민주도의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활용	- 농어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추진 - 생태 우수마을 보전 및 정비 - 하천 및 습지 복원을 통한 생태문화 공원 조성 - 오름 곳자왈 자연환경보전 이용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가족분뇨 통합 관리 및 악취 방지 시스템 보급 - 조건불리지역 및 경관보전 직불금 지원 - 폐농약 폐비닐 수거처리 개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생산 환경 조성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 -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

1.2. 선정 절차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부서 담당자의 의견 수렴 및 연구책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2018년도 선택 항목을 조정·확정하였음.

- 선택 항목의 선정은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선택 항목 선정을 위한 관련부서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동안 점검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정주생활 기반 항목 2건을 신규로 포함하였음.
-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 이어 그동안 점검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선택 항목을 일부 포함하여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선택 항목을 선정

1.3. 선택 항목 선정

■ 2018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부문은 교육여건개선, 경제활동·일자리, 환경, 안전 등 4개부문임.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4개 부문, 5개 항목으로 최종 선정함.

- 교육여건개선부문에 1개 항목, 경제활동일자리부문에 2개 항목, 환경부문에 1개 항목, 안전부문에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항목을 보면 1) 농어업인 자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2) 여성농어업인 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3)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신규), 4)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 시스템 보급, 5) 재해보험료 지원임(표 2-3. 참조).

〈표 2-3〉 2017년도 및 2018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비교

2017년도		2018년도	
부문	선택 항목	부문	선택 항목
정주생활 기반	1)석면 슬레이트	경제활동· 일자리	1)농어업인 자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신규)
	2)대중교통취약지역 지원사업		2)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신규)
경제활동· 일자리	3)능가도우미	환경	3)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신규)
	4)마을기업		5)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 시스템 보급(신규)
문화·여가	6)행복바우처 카드(신규)	안전	6)재해보험료 지원(계속)
.안전	7)재해보험료 지원(신규)		

- 세부항목은 1) 농어업인 자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2)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3)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신규), 4)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 시스템 보급, 5) 재해보험료 지원이며, 이들 세부항목의 서비스기준은 표 2-4와 같음.

〈표 2-4〉 2018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5개 부문 6개 항목)

부문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 내용
1. 교육 여건 개선	1)농어업인 자녀학생 통합교통비 지원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업인 자녀의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	농어업인 자녀 중 통학 교통비를 신청하면 100% 지원한다/지원계획에 따라 900명에게 전부 지원한다.
2. 경제 활동·일자 리	2)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여성농어업인센터에 아동·여성·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농어업인센터 8개소에 아동·여성·노인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3)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농어촌 청년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을 준다.	농산업을 창업하려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3개사업을 100% 추진한다.
3. 환경	4)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 시스템 보급	환경과 공존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양돈 사육환경을 조성한다.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시스템 구축 8개 사업을 100% 집행한다.
4. 안전	5)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재해보험료 품목확대 및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한다.	농업인 재해보험료 가입자수를 매년 10,000명이상이 되도록 한다/재해보험 품목수를 확대한다.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치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은 표 2-5 와 같음.

〈표 2-5〉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방법 및 목표치

부문	선택 항목	점검방법	점검지표	목표치(%)		
				17	18	19
1. 교육여건 개선	1)농어업인 자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신규)	교통비지원 신청 학생수/사업계획	900명	100% (885명)	900명	900명
2. 경제활동· 일자리	2)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신규)	아동·여성·노인프로그 램 정상운영 센터수/사업계획	8개소	-	100%	100% (9개소)
	3)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신규)	청년 농산업 지원사업 수/ 사업계획(3개 사업)	3개 사업	100%	100%	100%
3. 환경	4)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 방제 시스템 보급(신규)	집행률/ 사업계획(8개사업)	8개사업	100%	100%	100%
4. 안전	5)재해보험료 지원	①재해보험 가입자수 /10,000명 ②재해보험 추가품목 수/재해보험 품목수	①10,000 농가수 ②100%이상	①3,000 농가 ②100% 이상	①10,000 농가 ②100% 이상	①10,000 농가 ②100% 이상

제 3 장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평가 분석

1. 선택 항목 점검 개요

1.1. 점검 방법

■ 목표치를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실태 정도를 점검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를 설정하여 매년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행 실태 정도를 파악함.
- 통계조사의 경우 공식통계와 지자체 행정 내부자료 활용
- 통계조사의 경우 공식통계뿐만 아니라 지자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노력으로 파악함.

1.2.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

■ 소프트웨어 특성을 지닌 지표를 많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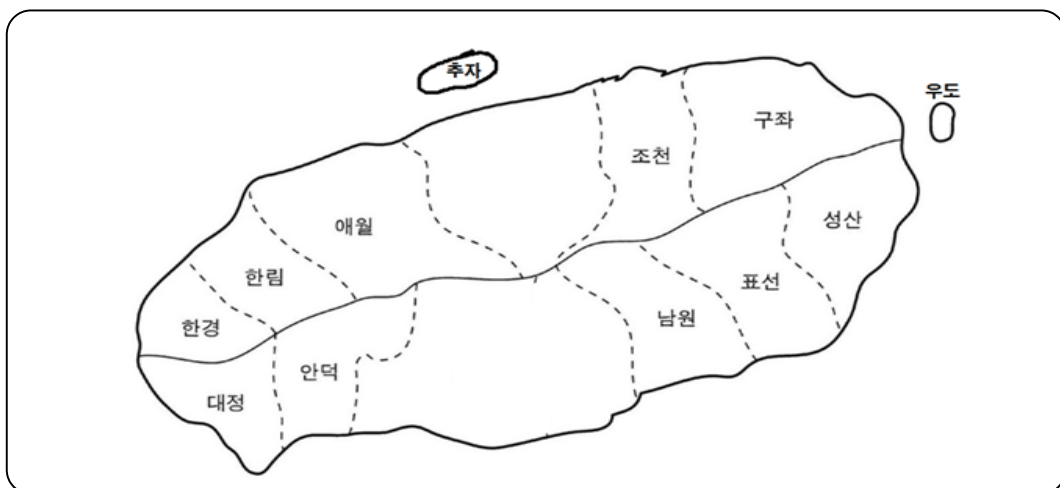
- 2018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5개 부문 6개 항목으로 구성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지자체 행정조사 6개 자료로 구축함.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특성을 살펴보면, 하드웨어 특성에 대한 지표 보다는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특성을 가진 지표가 많이 구축됨.

1.3.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 지역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 범위는 읍면지역으로 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 지역 범위는 12개 읍면으로 구성됨.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 12개 읍면지역



- 제주시관내 구좌읍,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등 4읍3면과 서귀포시관내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안덕면, 대정읍 등 3읍2면이 있음.
- 제주시지역 읍면지역 마을수는 7개 읍면, 96개 리이고, 서귀포시지역 읍면지역 마을수는 5개 읍면, 72개리가 있음.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2.1. 농어업인 자녀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 선택 항목 선정배경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어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자녀에 대한 통학 교통비를 지원,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 목적임.
 -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읍면지역 고등학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도농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자녀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통비 부담 해소
- 사업시행 근거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조례(2015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조례’로 개정된 바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해 교통비 지원대상을 농어업인 자녀 외에 저소득층까지 확대 추진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공감대 형성
-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실질적 도움과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통학생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저소득층 자녀 학생이 많음.
- 무상교육 실시 등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통학교통비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제주지역 농어촌서비스 선택 항목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및 점검방법

- 서비스기준: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업인 자녀의 통학교통비를 지원함.
-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padding: 5px;">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td> </tr> </table>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p>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업인 자녀의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 농어촌학교 교통비지원 수혜 학생수/ 지원 계획 대상자</p>	

■ 선택 항목 현황

- 도내 농어촌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통학편의 제공

- 지원내용: 통학구간별 왕복교통비 지원
- 예산액: 594백만 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기준: 통학거리별 청소년(중·고생)요금 적용

〈표 3-1〉 지원기준

구분(노선유형)		요금(카드)	
간/지선버스		850원×2회=1,700원	
급행 버스	기본요금(20km이하)		1,600원×2회=3,200원
	거리별 요금	25km이하	1,760원×2회=3,520원
		30km이하	1,920원×2회=3,840원
		35km이하	2,080원×2회=4,160원
		40km이하	2,240원×2회=4,480원
		40km초과	2,400원×2회=4,800원

○ 연도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3-2〉 연도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실적

(단위: 명,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집행액
509	111,000	470	240,000	472	280,000	861	356,000	885	381,691

- 2014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 2015년에 교통비 지원 대상은 472명으로 2억8000만원 지원함.
- 2016년도의 경우,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농어업인 자녀로서 교통비 지원을 받은 학생 수는 총 28개교에 861명으로 집계되었음. 2015년에 지원받은 학생수 472명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실적을 보임.
- 2017년도의 경우,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농어업인 자녀로서 교통비 지원을 받은 학생 수는 총 28개교에 885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였음.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및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 농어업인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어업인을 포함함.
 - ※ 지원제외: 도보통학, 무료통학버스 이용, 기숙사 생활, 국가 및 지방단체 재직자, 농수축협 임원, 부모소득이 4천만원이상(1자녀기준) *소득은 건강의료보험고지서, 근로소득영수증 등에서 확인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은 타 시도에는 없는 특수사업으로,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서비스 제공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2.2.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 선택 항목 선정 배경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시설에서 이용 아동·여성·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 내용임.
- 설치 및 운영 근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을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방과 후 학습, 부정기사업(다문화가정과함께하는문화교실, EM 활용교육, 로컬푸드 탐방, 농업농촌 지도교육, 도농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근 사설보육 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인구출산

을 저하 등으로 여성농업인 센터 필수사업인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 등 사업추진이 어려움.

- 운영사업비 개소당 118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센터운영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
-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종사원 최저임금제 반영, 보조금 회계검사수수료 반영이 필수적임.
-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취지에 맞게 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택 항목으로 선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및 점검방법

- 서비스기준: 여성농업인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센터에 아동·여성·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함.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여성농어업인센터에 아동·여성·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수/ 전체 여성농어업인센터 수) X100

- 점검수단과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센터 시설운영 담당 부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여성노인프로그램 등 필수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선택 항목 현황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센터 시설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조성
 - 제주시 관내 5개소, 서귀포시 관내 4개소 등 모두 9개소가 조성 운영되고 있음.
- 시설운영 지원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 도내 여성농어업인 센터 8개소(기존센터)
 - 사업내용: 아동, 여성, 노인 고충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개소당 118백만 원(도비 100%)
- 최근 농촌지역에 사설보육 시설이 들어서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인구출산율 저하 등으로 여성농업인 센터 필수사업의 수요가 부족하여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 등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운 실정임.
- 필수사업에 노인시설확보 프로그램 운영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종사원 최저임금제 반영, 보조금 회계검사수수료 반영한 예산을 편성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센터명	개원 년도	센터현황			종사자	프로그램
		위치	부지	건물		
9개소						
애월 여성농업인센터	'12.7.	애월읍 일주서로 5936, 2층	803㎡	154㎡ (지상2층)	2	고충 상담,방과 후 학습, 부정기사업(다문화가정과함께하는문화교실, EM 활용교육, 로컬푸드 탐방 등)
함덕 여성농업인센터	'02.5.	조천읍 함덕4길 60-9	371㎡	245.85㎡ (지상2층)	2	고충 상담,방과 후 학습, 부정기사업(친환경교육 및 선진지견학, 고추 장 및 맛장담그기 농어촌체험 등)
김녕 여성농업인센터	'06.5.	구좌읍 김녕로 7길 14	258㎡	272.94㎡ (지상1층)	2	고충 상담,방과 후 학습, 부정기사업(이주여성 한국요리배우기,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등)
한경 농협여성농업인센 터	'12.7.	한경면 두신로 87	12,305㎡	330㎡ (지상1층)	2	고충 상담,방과 후 학습, 부정기사업(여성농업인리더십향상교육,전통 음식체험 등)
한림 여성농업인센터	'14.10.	한림읍 한림리 1315-5번지 한림중앙상가 2층	-	158㎡	2	고충 상담,방과 후 학습, 부정기사업(여성농업인멘토링, 여성농업인리 더십 아카데미과정)
대정 여성농업인센터	'04.6.	대정읍 대화로 11	1,374㎡	382.25㎡ (지상.2층)	2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 부정기 사업(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역사기행 등)
성산 여성농업인센터	'02.10.	성산읍 고성오조로17	860㎡	439.60㎡ (지상2층)	2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 부정기 사업(농업농촌 지도교육, 도농교류 등)
안덕 여성농업인센터	'03.3.	안덕면 사계남로84번 길	704㎡	314.05㎡ (지상2층)	-	-
하원 여성농업인센터	'03.3.	구산봉로48	992㎡	274.38㎡ (지상2층)	1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 부정기 사업(컴퓨터 교육, 건강강좌 등)

- 이 중 안덕여성농업인센터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지원이 안 되어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2018년 연말에는 2019년 운영비 계속지원여부 평가 심사(8개소) 실시하고,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안덕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방안 검토 계획임.

2.3.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경제·일자리부문)

■ 선택 항목 선정 배경

- 제주지역 청년농산업 창원 지원사업에는 크게 청년 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후계농 신규창업 지원사업,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사업 등 3개사업이 있음.
- 청년 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나이 만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후계농을 선정하여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후계농 신규창업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사업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경영 및 신 농업지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 서비스기준: 농어촌 청년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을 줌.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농어촌 청년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을 준다
(청년 창업 지원 건 수/ 청년 창업 지원사업 계획)

- 점검수단은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별로 당초 사업계획 자료를 확보하여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함.

■ 선택 항목 현황

- 청년 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자: 나이 만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 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보료 323천원 이상)
 - 의무사항: 교육(160시간),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 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지원금액 및 기간(독립경영 연차별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차등 지원)

〈표 3-4〉 지원금액 및 기간

구 분	합 계 (천원)	지원 1년차 ('18.4 ~ '19.3)	지원 2년차 ('19.4 ~ '20.3)	지원 3년차 ('20.4 ~ '21.3)
독립경영 1년차	32,400	100만원/월	90만원/월	80만원/월
독립경영 2년차	20,400	90만원/월	80만원/월	-
독립경영 3년차	9,600	80만원/월	-	-

-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자산취득 제외)
- 후계농 신규창업 지원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자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경과자로서 50세 미만의 후계농이거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우수후계농임.
 - 지원한도 및 조건
 - 후계농: 최대 3억 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균등상환)

- 우수후계농: 최대 2억 원 한도, 연리 1%(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지원분야
 - 경종분야: 농지구입, 하우스 시설, 가공시설 등
 - 축산분야: 토지구입, 축사신축 및 기존시설 개보수 등
- 최근 5년간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3-5〉 연도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 지원 실적

(단위: 명, 천원)

구 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명	금 액	명	금 액	명	금 액
2017	55	11,792	11	1,820		
2016	89	8,173	2	400		
2015	94	3,596	17	1,050		
2014	92	8,687	18	1,021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 신규 및 예비 후계농업경영인
- 교육내용: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창업과 정착에 필요한 교육
 - 노무관리, 재무관리, 영농일지 작성, 판로 구축 등 역량강화 교육
- 사업내용: 강사수당 및 교육여비 등

〈표 3-6〉 연도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인원수	계	보조		자담	비 고 (교육기관)
			국비	도비		
합 계	326	114,431	55,321	44,477	14,633	
2014	64	13,811	6,217	4,974	2,62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5	118	31,176	14,561	11,895	4,720	"
2016	89	37,078	18,360	14,688	4,030	(사)한국농업연수원
2017	55	32,366	16,183	12,920	3,263	"

2.4.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 방제시스템 보급

■ 선택 항목 선정배경

-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업은 환경과 공존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양돈사육 환경조성 사업이 있음.
 - 이 양돈사육 환경조성 사업에는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미생물 사료첨가 시범사업, 냄새저감 모범농가 인증제,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모델 개발,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액비처리 연계 경종농가 상생시범사업,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8개 사업이 있음.
-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은 경종농가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분뇨처리 집중화 및 농가의 선 자구노력에 의한 양돈장 냄새를 저감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양돈산업의 제도약 기틀 마련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음.
- 청정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양돈사육으로 인한 냄새를 접하고, 양돈농가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시스템 구축을 선택 항목으로 선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함.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 서비스기준: 환경과 공존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양돈사육 환경을 조성함.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환경과 공존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양돈사육환경을 조성한다
(집행률/ 사업계획)X100

- 점검수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산업 담당 부서의 자료를 활용함.

■ 선택 항목 현황

-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미생물 첨가사료 공급을 통한 냄새저감으로 양돈악취에 따른 민원 사전 예방
 - 골프장 및 경종농가를 활용한 가축분뇨 액비 적정처리
 - 타 농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깨끗한 농장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 스마트 축산환경·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R&D)

〈표 3-7〉 2018년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투자계획				
	사업량	금액	재 원 별		
			국비	지방비	기타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1건	700	-	700	-
미생물 사료첨가 시범	34천톤	334	-	200	134
냄새저감 모범농가 인증제	5개소	100	-	60	40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모델 개발	1건	187	80	80	27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명시이월)	1식	1,000	400	300	300
액비처리 연계 경종농가상생 시범사업	5개소	167	-	100	67
냄새저감 미생물생산시설지원사업	1개소	670	-	400	270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증설	1개소	1,100	900	200	-

-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 냄새민원(당직실 또는 직원)접수 즉시 현장에서 탈취제 또는 미생물제제를 살포하여 악취저감 효과를 보고 있음.
- 냄새저감 미생물 사료첨가 시범사업
 - 냄새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와 운영을 하고 있는 모범농가를 선정하여 민원다발 농장에 대한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 및 모범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모델 개발
 - 축산악취 측정용 고정식/포터블 기기 셋트, 기상정보 및 악취농도 표시 전광판 설치 등 축산악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축산악취를 사전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농장, 축산단지, 공동자원화 시설 등의 적체된 고착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진공흡입준설차, 고액분리기, 탱크로리차량, 소형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신속히 반출처리함으로써 근원적 악취저감
- 액비처리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 경종농가 이동식 관수설비 및 골프장 관로설치 등 액비처리업체와 경종농가간 협업 계약을 통한 원활한 액비처리 확대 도모
- 냄새저감 미생물생산시설 지원 사업
 - 미생물 생산공장 신축 및 생산설비 및 장비등 지원으로 배합사료 미생물 첨가를 통해 단백질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발생 최소화

2.5. 재해보험료 지원

■ 선택 항목 선정배경

-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크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 농업재해보험과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두 가지로 나눔.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업 목적임.
 - 농업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농어업용 시설물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농업 경영의 안정 도모
 -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불안이 가중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 2015년부터 농업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
 -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및 가격하락 시 보험금 지급으로 농가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및 점검 방법

- 서비스 기준: 농업인 재해 보험료 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함.

서비스 기준 및 점검 방법

농업인 재해보험료 품목확대 및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한다.
(재해보험 가입농가수·재해보험 추가품목수/사업계획)

- 점검수단은 업무총괄 부서인 제주도청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담당 추진현황 자료를 활용함.

■ 선택 항목 현황

- 기후변화 대응 재해보험 지원 사업 개요
 - 기간: 2018. 1월 ~ 12월
 - 사업비: 12,857백만 원(도비 35%, 기타 65%;국비 50%, 자부담 15%)
 - 지원대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NH농협손해보험 대행)
 - 지원내용: 농가부담 보험료 50% 중 도비 35% 지원
 - 기대효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확대로 농업 경영의 안정화 도모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및 지도 → 홍보 팸플릿 제작 배포 등
 - 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예산 부족 시 추경예산 확보 지원

- 재해보험 가입대상: 61개품목
 - 전국 또는 제주(54개): 사과, 배, 감귤, 단감, 뽕은감, 참다래,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양배추, 자두, 매실, 옥수수, 마늘, 고추, 대추, 벼, 복숭아, 포도, 인삼, 버섯재배사, 표고, 느타리,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시설축각, 농업용시설, 양송이, 새송이, 메밀, 브로콜리, 적과전 종합위험(배, 사과)
 - 제주 제외(7개): 오디, 차, 복분자, 밀, 오미자, 무화과, 유자

- 사업추진 절차
 - ① 재해보험가입 안내 및 가입신청 접수(지역농협대행사무소) → ②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전체 보험료중 농업인 부담보험료) → ③ 청약사항 통보(대행 취급사무소 → 농협NH보험사) → ④ 청약사항 수합 가입 현황서 작성(농협NH보험사) → ⑤ 보험료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농협NH보험사 → 제주특별자치도) → ⑥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제주특별자치도) → ⑦ 보험료 정산(농협NH보험사) → ⑧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농협NH보험사) → ⑨ 보조사업 정산검사(제주특별자치도)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가입현황서, 사업자 통장사본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완료 후 14일 이내)서류;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 2015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3-8〉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추진 실적

(단위: 백만 원, ha)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농가수	보험료	면적	농가수	보험료	면적	농가수	보험료	면적
계	2,809	8,027	1,474	2,390	7,122	1,113	7,148	19,246	2,876
감 곡	58	12	45	29	8	23	1,563	344	747
콩	172	434	345	50	144	114	33	84	76
가을감자	29	70	26	16	87	27	90	640	117
원예시설	2,542	7,496	1,041	2,227	6,829	918	5,298	17,943	1,787
기 타	8	15	17	68	54	31	164	235	149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2015년에는 감곡, 단감, 뽕, 참다래, 가을감자, 원예시설, 콩 등 7개 품목에 2,809건에 1,474ha가 가입하였고,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보면, 2,390농가수에 면적은 1,114ha에 달함.
- 2017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보면, 7,148 농가 수에 2,876ha에 달하고, 지방비 지원 실적은 6,884백만 원에 달함(표 3-10. 참조)

3. 이행실태 평가 분석

3.1.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교육여건 개선 부문)

■ 목표: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900명에게 통학 교통비 지원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은 타 시도에는 없는 특수사업으로, 농어업인 자녀들의 통학 교통비 부담이 해소됨으로써 호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이 농어업인 고등학교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 학교를 육성하고, 농어업인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통학교통비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 2016년 이행목표치와 점검방법은 교통비를 신청한 학생 모두에 100%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2018년에는 2017년(885명) 수준인 900명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이행목표치 및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행목표치 및 점검방법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업인 자녀 900명에게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지원 신청 학생수/사업계획(900명))X100

■ 평가결과

- 2018년도의 경우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농어업인 자녀로서 교통비 지원을 받은 학생 수는 9월말 현재 총 28개교에 644명으로 집계되어 71.5%의 실적을 보임.

〈표 3-11〉 2018년도 농어업인 자녀 교통비지원 현황(10월말현재)

학교수	학교명 및 지원자수
28개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 8명, 대정고등학교 20명, 대정여자고등학교 18명, 서귀포고등학교 26명,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9명, 서귀포여자고등학교 29명, 성산고등학교 4명, 세화고등학교 45명, 애월고등학교 14명, 제주고등학교 27명,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17명, 제주제일고등학교 38명,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1명, 중문고등학교 11명, 표선고등학교 33명, 한국뷰티고등학교 27명, 한림고등학교 55명, 한림공업고등학교 55명, 함덕고등학교 18명, 남녕고등학교 28명, 남주고등학교 27명, 대기고등학교 17명, 삼성여자고등학교 24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1명, 영주고등학교 3명, 오현고등학교 18명, 제주여자고등학교 36명, 제주중앙고등학교 5명
합계	644명/277백만 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자료

- 이같은 실적은 2017년 885명/381백만 원의 지원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연말까지도 목표치 900명을 100%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2018년 통학 교통비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상교육 실시 등 여건이 변화되어 교통비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임.
 - 2018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그동안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업인 자녀 증명을 하던 것이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학교 행정실에서 농어업인 자녀 증명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임.
- 따라서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업무 추진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고, 농어업인 자녀 고등학생들의 통학교통비 수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3.2.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목표: 여성농어업인 센터 운영 프로그램 100%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에서 이용 아동·여성·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특히 인근 사설보육 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인구출산율 저하 등으로 여성농업인 센터 필수사업의 수요가 부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 등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
 - 2018년에는 제주지역 8개 센터에 개소 당 118백만 원 지원계획이었음.
-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행 목표치 및 점검방법 여성농어업인센터 8개소에 아동·여성·노인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아동·여성·노인프로그램 정상 운영/사업계획)X100
--

■ 평가결과

- 안덕여성농업인센터를 제외한 제주지역 8개 센터에 개소 당 118백만 원의 도비가 지원되어 아동, 여성, 노인 고충상담 및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필수사업에 노인시설확보 프로그램 운영 추가 운영하는 가하면, 2019년부터는 종사원 최저임금제 반영, 보조금 회계검사수수료 반영한 예산을 편성키로 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안덕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관리점검 강화 필요

3.3.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목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3개 사업 추진

- 청년 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2018 신규)
 -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67명(제주시 39, 서귀포시 28)
 -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현황: 67명·267백만 원
- 후계농 신규창업 지원현황은 표 3-9와 같음.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32명에 8,680백만 원,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 4명에 800백만 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40명에 7,470백만 원임.

〈표 3-12〉 2018년 후계농 신규창업 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2	8,680	4	800	40	7,470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성인지예산) 실적은 <표 3-13>과 같음.
 - 추진 사업량: 88명
 - 추진 사업비: 36,000천원(국비 18,000, 도비 14,400, 기타 3,600)

〈표 3-13〉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실적

(단위: 명, 백만 원)

인원수	계	보조		자담	비 고 (교육기관)
		국비	도비		
88	36,000	18,000	14,400	3,600	(주)국제그린컴퍼니

-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행 목표치 및 점검방법
농산업을 창업하려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청년 농산업 지원사업 수/ 사업계획(3개 사업))X100

■ 평가결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이 농산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 청년 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후계농 신규창업 지원사업,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사업 등 3가지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결과를 보면 청년 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67명에게 267백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후계농 신규창업 지원사업을 76명에 16,950백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88명에게 교육하였음.
- 결과적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3개 사업을 100% 추진한 것으로 평가됨.

3.4.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 방제시스템 보급(환경 부문)

■ 목표: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 방제시스템 사업 100% 집행

- 청정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양돈사육으로 인한 냄새를 접하고, 양돈농가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상황임.
- 지역주민으로부터 냄새민원(당직실 또는 직원)접수 즉시 현장에서 탈취제 또는 미생물제제를 살포하고, 민원인에게 방제 결과를 알려주는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환경과 공존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양돈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을 100% 집행한다
(집행률/ 사업계획(8개사업))X100

■ 평가결과

- 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제시스템 구축 관련 8개 사업을 점검할 결과, 8월말현재 4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말까지 100% 집행될 것으로 평가됨(표 3-14 참조).

〈표 3-14〉 2018년도 추진실적(8월말 현재)

(단위: 백만 원)

사업명	금액	집행액	집행률 (%)	'18년말 집행예산액	
				예산액	집행률(%)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700	700	100	700	100
냄새저감 미생물 사료첨가 시범사업	200	200	100	200	100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700	700	100	700	100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모델 개발	80	80	100	80	100
액비처리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100	0	0	100	100
깨끗한 축산농장 모범농가 인증제	60	0	0	60	100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400	0	0	400	10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1,100	300	33%	1,100	1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3.5. 재해보험료 지원(안전 부문)

■ 목표: 농업인 재해보험과 수익보장보험 10,000 농가 가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2018년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수요가 증대되어 10,000농가 이상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유도하여 농작물 재배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
-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은 기후변화 등에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2018년도에는 10,000농가가 가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 재해보험과 함께,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및 가격하락 시 보험금 지급으로 농가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 도모하는 농업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함.
-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10,000농가 이상이 되도록 적극 홍보 지원한다.

$$\begin{aligned} & (\text{재해보험 가입 자수}/10,000) \times 100 \\ & (\text{재해보험 추가품목수}/\text{재해보험 품목수}) \times 100 \end{aligned}$$

■ 평가결과

- 2018년 11월말 현재 농업인재해보험 가입농가수가 13,577농가를 달성하여 목표치인 10,000농가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됨.

〈표 3-15〉 재해보험 2018년 실적(2018년 10월말 현재)

(단위: 백만 원, ha)

구분	농가수	면적	보 험 료				보 험 금 지급	
			계	국비	도비	자부담	농가수	보험금
계	13,177	6,912.9	27,271	13,635.5	9,543.7	4,091.8	1,271	7,528
감 굴	3,723	2,077	1,126	563	394	169	224	980
단 감	1	0.4	0.5	0.25	0.2	0.05		
떨 은 감	1	0.6	3.6	1.8	1.3	0.5		
원예시설	8,346	2,997	22,529	11,264.5	7,885	3,379.5	967	5901
참 다 래	4	1.4	1.6	0.8	0.5	0.3		
콩	350	743	1,161	580.5	406	174.5		
표고버섯	1	0.4	3	1.5	1	0.5		
고추	1	0.1	0.3	0.15	0.1	0.05		
벼	1	8	1	0.5	0.3	0.2		
양배추	299	298	343	171.5	120	51.5	30	136
메밀	133	425	181	90.5	63	27.5		
가을감자	196	275	1,739	869.5	608.6	260.9	50	511
브로콜리	121	87	182	91	63.7	27.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 완화: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 자부담은 25%에서 15%로 낮추고 지방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재해보험 가입 수요가 증대된 것으로 평가됨.

-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농축산식품부 국비 조기 소진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체 가입 증가 및 수입보장보험 가입은 당초 목표 441농가 수에 미달하였음.
 - 2018년도 수입보장보험 가입 실적은 240농가에 333ha에 달하고, 실적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16〉 수입보장보험 2018년 실적(2018년 10월말 현재)

(단위: 백만 원, ha)

구 분	농가수	보험료	면적
계	240	666	338
콩	172	512	256
마늘(17 시범)	-	-	-
양배추(18 시범)	68	154	82

- 재해보험 품목수는 2017년 51개 품목에서 2018년 61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음.
- 기후변화 대응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이행실태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품목이 10개 이상 확대됐으며, 홍보강화 및 자부담을 완해해줌으로써 재해보험료 가입이 목표치를 훨씬 초과 달성함. 다만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조기에 국비가 소진됨으로 인해 제주지역 농가의 가입실적은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건의사항)최근 기후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피해가 잦아져 재해보험 가입 수요가 증대하고, 이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방비의 부담도 커지고 있음.
 - 지방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배보험의 사업비 부담비율에서 국비의 경우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함이 절실함.

4. 이행실태 평가 분석 종합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분석 종합하면, 선택 항목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등은 전년보다 집행실적이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여 모범사례로 꼽히는 반면,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은 절차상의 문제로 교통비 신청을 포기하거나 해당학교 행정실에 업무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표 3-17〉 2018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달성여부

부문	선택 항목	점검방법	목표치(%)	달성률 /달성 여부
1. 교육여건 개선	1)농어업인 자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신규)	교통비지원 신청 학생수/사업계획	900명	목표치 미달
2. 경제 활동·일자리	2)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신규)	아동·여성·노인프로그램 정상운영 센터수/사업계획	100% (8개소)	100% 목표치 달성
	3)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신규)	청년 농산업 지원사업 수/ 사업계획(3개 사업)	100%	100% 목표치 달성
3. 환경	4)가축분뇨 통합관리 및 악취방지 시스템 보급(신규)	집행률/ 사업계획(8개사업)	100% (8개사업)	100% 목표치 초과 달성
4. 안전	5)재해보험료 지원	①재해보험 가입자수/10,000명 ②재해보험 추가품목수/재해보험 품목수	-10,000 농가이상 가입 -전년 품목수 51개보다 확대	-재해보험 13,177농가가입 -재해보험 품목수 61개로 확대 목표치 달성

제 4 장

수범사례 발굴

1.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문화·여가)

1.1. 사례개요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제주 읍면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바우처 제도를 지원함.
 - 문화·여가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여행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함.
- 관련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0조(복지향상)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년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전·겸업 여성농업인(만20세 이상~만70세 미만)
- 카드 사용처는 문화·스포츠·여행 등 38개 업종임.
 - 문화의 경우,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사진관, 서점(인터넷서점 제외), 회원, 음반판매점, 문화/취미 기타(신문, 잡지 포함), 문화센터,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 스포츠의 경우 요가, 스포츠용품점,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 여행의 경우, 기타관광호텔(유스호스텔, 가족호텔 등), 펜션/민박, 기타숙박업(모텔/여관 등)
- 현재 행복바우처 신청 가능한 여성농업인 수는 6,300명(제주시 3,200명, 서귀포시 3,100명)으로 추정됨. 그러나 지금까지 활용실적이 절반도 안 되는 등 극히 저조
 - 농업경영체등록 전업농가 14,011명×60%(읍면지역)×75%(30~65세)≐ 6,300명
 - 2016년, 520명이 신청하여 행복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8.2% 실적을 보였음.
 - 2017년 사업비는 504백만 원에 달했으나 1,725명이 신청하여 34.2% 실적을 보였음.
- 2018년도에는 행복바우처 활성화 대책으로 대상자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최초 자부담을 폐지함(2017년까지는 20% 자부담).

- 2018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지침 개정(2018. 2월)
 - 대상자 확정절차 간소화(행정시장 → 읍면동장)
 - 전국최초 자부담 폐지(자부담 20% → 자부담 폐지)

〈표 4-1〉 행복바우처 지침 개정(2018년 2월)

구 분	2017년	2018년
사업비	• 504백만 원	• 630백만 원
자부담	• 20%	• 자부담 폐지
대상자확정	• 행정시장	• 읍면동장
카드발급처	• 농협은행 시지부(2개소)	• 농협은행 시지부(2개소) + 도내 지역단위농협(22개소)

- 2018년도 사업비 630백만 원(2017년도 504백만 원 1,725명 신청)
 - 1인당 사업비는 연간 10만원(자체재원 100%)

1.2. 성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에 630백만 원을 확보하여 2018년 8월말 현재 80%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5,922명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였음.

〈표 4-2〉 2018년 행복바우처 카드지원 현황(8월말 현재)

(단위: 명, 천원)

구 분	신청자수	지원액 (천원)		
		계	보조	자부담
합 계	5,922	592,200	592,200	-
제 주 시	2,346	234,600	234,600	-
서귀포시	3,576	357,600	357,600	-

- 따라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실적을 (행복바우처 신청수/ 신청가능 여성농업인수)×100에 의해 계산하면 8월말현재 94.0%의 실적을 보여 목표치 8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년 내에 신청 가능한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행복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2018년 수범사례로 평가됨.
- 민선7기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단계적 상향
- ('19) 13만원 → ('20) 15만원 → ('21) 17만원 → ('22) 20만원